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1호 2011. 3



# 차례

## 특집 ■ 만주국 시기의 인구 이동

한석정 ■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11

정안기 ■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 41

김기훈 ■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97

임성모 ■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화여행 - 네트워크와 제국의식 157

## 논문

홍승현 ■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191

李椿浩 ■ 五胡王朝의 胡人 지배방식과 그 성격

- 大單于의 任職과 單于臺의 설치를 중심으로 239

이왕무 ■ 대한제국기 순종의 西巡幸 연구 - 『西巡幸日記』를 중심으로 285

## 자료 소개

A. 오치르 / L. 에르덴볼드 ■ 몽골국 내 발해 고고유적 3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345

# Contents

## Special Issue The Population Movement at the Manchukuo Period

- Han, Sukjung | The Social Status of Koreans in the Manchukuo Period 11
- Joung, Anki |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and Seonman Colonization Co., Ltd. during Manchu State Period 41
- Kim, Gihun | A Study on the Discourses about Korean Migration during Manchukuo Period – Focusing on the Editorials of Chosun-ilbo 97
- Yim, Sungmo | School excursions to Manchuria in 1930s Japan: focused on the trip network and imperial consciousness 157

## Articles

- Hong, Senghyun |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inocentrism in Han Dynasty 191
- Lee, Chunho | The controlling mode for Hu nationality and its na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Sixteen Kingdoms: The appointment of DaChanYu and the founding of the ChanYuTai 239
- Lee, Wangmoo | A Study on the Emperor's Parade his Majesty of Sunjong(純宗) in Northern province of Daehan Empire(大韓帝國) 285

## Introduction to Historical Sources

- A. Ochir / L. Erdenebold | Archaeological Sites of Balhae in Mongolia 321

## 특집

만주국 시기의 인구 이동





## 서문

일본인들이 만주(중국 동북지역)에 세운 괴뢰국 만주국(1932~1945)은 오랫동안 그 기억이 국제적으로 억제된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현재에 심대한 영향을 준 존재이다. 특이점 하나는 엄청난 인구이동과 다민족의 공존이다. 20세기 전반 중국대륙과 조선, 일본 등 이웃 지역에서 만주로 수천만 명이 이동했는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아시아 사상 최대의 인구이동은 만주 사회에 심대한 인구학적·사회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

원래 만주는 청조(1644~1912)의 봉금정책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미개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청조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만주 진출을 맞이하여 정책을 완화, 만주 입주자들을 변강의 인적 방패로 삼고자 했다. 또한 하북과 산둥지역의 자연재해와 균벌 다툼으로 거대한 이민의 물결이 몰아닥치면서 봉금정책은 유명무실, 만주는 한족 이민자들에 의해 급격하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도 관리들의 수탈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부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일부 지역을 개간하면서, 인접 지역은 점차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여순과 대련을 기반으로 한 關東州를 조차하고 만주를 침식했다. 동유럽 지역으로부터도 러시아의 10월혁명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낀 白系 러시아인과 폴란드인, 유대인 등 상당수가 만주, 특히 하얼빈으로 피난을 와서 독특한 이민 사회를 형성했다. 근대 만주 사회는 다양한 민족의 공존으로, 아시아판 인종 전시장이 되었다.

만주국 시대는 이 모든 문제와 가능성을 이어받았다. 본 연구는 만주국 시기에 전개된 일부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은 오늘날 동북아의 국제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넷으로 나누어 당시 조

선인과 일본인들의 만주행 인적 흐름을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재만 조선인 인구나 사회적 지위,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 만주국 시기 조선인 만주 이민담론, 만주국 시기 만선 수학여행과 제국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첫 번째 연구는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중간 점검이다. 재만 조선인의 인구나 사회적 위치에 관한 기존의 자료는 다소 혼란스럽고 여러 한계(특히 1940년에 그치는)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만주국의 1935~1936년 센서스, 1940년 센서스, 1940년대의 만주국 정부공보를 찾아 만주국 전 역사에 걸쳐 조선인의 인구역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다가간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나 광복 후 유폐되었던 2등공민 담론과 달리,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국 전기에 주로 간도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도시의 유흥업에 집중했다가, 후기에 2·3차산업에 다소 진출한 소수자였다. 그러나 이 글은 중일전쟁 후 조선인 화이트칼라의 성장이라는 특이점을 지적한다. 중일전쟁의 충격, 즉 1940년대 일본인들의 배려, 혹은 공백으로 인한 조선인의 공적 부문과 전문직의 성장, 그리고 각 분야와 각 기회에 두루 지원, 포진한 遍在성 등의 요인을 짚어 본다.

두 번째 연구는 1936년 출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맡았던 두 회사, 즉 선만척식주식회사(조선의 경성 소재)와 만선척식주식회사(만주국의 수도 신경 소재)의 발족과 해산을 통해 일본제국의 원대한 조선인 만주 이주정책을 논한다. 조선인 이주에 대해 단일기업을 조명한 연구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것은 관동군이나 조선총독부 등 식민기관들이 벌인 대립, 이민정책의 성과, 두 회사의 발족과 해산 등을 통해 시기별로 조선인 이주의 역사적 의미를 본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1930년대 전반 관동군이 아닌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이민정책을 주도했고,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인 이민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1941년 두 회사의 새 회사(만주척식)로의 통폐합은 조선인 이주에 대한 관동군의 적극성, 혹은 조선인을 조선이 아닌 만주국의 구성원으로 보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원거리로 송출되는 조선인들의 운명과 일본 식민당국의 이주 계획과 힘겨루기(마치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과 같은) 등을 기업사를 통해 고찰한다.

세 번째 연구는 1930년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에 관한 조선 사회의 여론과 반응을 조선의 언론을 통해 본다. 이 연구는 당시 조선일보 사설들 중에서 이민과 관련된 세 담론을 도출했다. 그것은 이민이 정부의 보호가 있어야 안정된 정착이 가능하다는 보호안주론(당국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개척사업으로 간주, 이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척담론(고난의 극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민을 동시에 추진하라는(즉 만주 이주를 장려하면서 일본 도항을 억제하는 식민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南開北開論이다. 흔히 동서양 식민당국은 언론 등을 통해 담론적·패권적 지배를 구사했고, 일부 토착 언론은 이것에 저항했다. 이 연구는 당시 신문의 이주담론이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에 꼭 합치되지 않음을, 이주담론에 여러 층위가 존재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조선 지식인의 식민당국에 대한 단순한 협조 혹은 저항이 아닌, 만주를 조선의 연장으로 만들고 싶은 내면의 욕망을 지적한다.

마지막 연구는 일본의 만주행 흐름의 하나인 만주와 조선행 수학여행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학생들의 '만선 수학여행'이 민족으로서의 일본인의 업적을 확인하고, '日滿일체', '내선일체'의 제국의식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9세기 말 이래 일본의 수많은 학생이 조선과 만주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정이 러일전쟁 전적지 견학, 군부의 지원, 여행단의 군대식 조직 등의 공통점을 띠었다. 이 글은 수학여행의 시기별 변화(즉 1930년대까지 제국순례라는 정치형 수학여행에서, 1930년대 이후 제국신민으로서의 문화적 감수성을 획득하는 문화형으로 바뀜)와 그 의의('제국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주의의 핵심적 기제')를 지적한다. 아울러 수학여행을 국가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주입의 장으로 봄을 경계한다. 대신 이 글은 국가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괴리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만주를 둘러싼 인구 역동은 서서히 다문화, 이질성을 겪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 시사점이 될 것이다.

필자를 대표하여 한 석 정



#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한석정 | 동아대학교 부총장

## I. 머리말

본 연구는 광복 당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으나, 광복 후 그 존재가 억제 혹은 과장된<sup>1)</sup> 만주국 거주 조선인들의 지위를 살핀다. 동서양의 근대 식민국가들은 토착인들을 대상으로 통합(화폐 · 지역 · 언어상의), 혹은 분리<sup>2)</sup> 실험(의약 분야의),<sup>3)</sup> 조사와 분류 등을 행했다. 그리고 以夷制夷의 목적으로 일부 민족을 보호, 그 정체성 형성을 도와주기도 했다. 예컨대 영국인의 해외 파병을

※ 투고일: 2011년 1월 9일, 심사일: 2011년 2월 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 1) 한석정, 2008, 「만주의 기억」, 한일연대21 편, 『한일역사인식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272~274쪽.
- 2) 예컨대 하우스랜드(Hausaland)를 오늘날 니제르(Niger)와 나이지리아(Nigeria)로 분할한 경우. William Miles, 1994, *Hausaland Divided: Colonialism and Independence in Nigeria and Nig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42~46.
- 3) David Arnold, 1993, *Colonizing the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8~115.

돕기 위해 ‘용맹한’ 시크인들(Sikhs)이나 구르카인들(Gurkhas)이 만들어졌다.<sup>4)</sup> 재만 조선인들은 1920년대에 일본의 만주 침식을 위한 삼투적 팽창으로<sup>5)</sup> 인식되어 만주 군벌의 박해를 겪었지만 만주국 건국 후 공식 이념인 오족협화 속에서 일본 지배자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조선인들의 이주와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 근자에 중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sup>6)</sup> 공통적으로 1940년까지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간 재만 조선인의 거주 추계는 다소 혼란스런 상태에 있었다. 우선,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의 인용이 있다. 예컨대 리하이엔의 경우, 1944년치 인구는 중국 동베이[東北]의 항일 빨치산 지도자인 저우바오중[周保中]의 보고에 의존한다. 그 결과, 1940년 재만 조선인 인구(1,309,053명)가 만주국 센서스의 것(1,450,384명)과 약 14만 6천 명의 차이가 난다.<sup>7)</sup> 두루 인용되는 만주국 공식자료들도 신뢰할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예컨대 *Japan-Manchukuo Yearbook*<sup>8)</sup>은 1940년 만주국 인구를 센서스의 것보다 100만 명이나 적은 42,233,000명으로 기재했다. 조선인에 대해 만주국의 유일정당 격인 協和會가 펴낸 중앙본부의 자료도<sup>9)</sup> 1940년 센서스나 1940년 통계연감을 언급하지 않는다. 공식자료는 일본 외무성 자료, 만주국 민정부의 『統計年報』, 총무청 통계처의 『滿洲帝國年報』 등 부처별로 따로 발간되었는데, 이것들의 차이가 많다. 예컨대 1933년 연보는 일본인 인구를 317,646명, 조선인 인구를 582,143명으로 추정, 일본 외무성의 것(각 333,912명, 673,794명)과 큰 차이가 난다[滿洲國 國務院 總務廳(1934), 『滿洲帝國年報』(이하 『연보』), 52~53쪽].

4) Bernard Cohn, 1996, *Colonialism and Its Forms of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09.

5) Hyun-ok Par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58.

6)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등 참조.

7) 李海燕, 2002, 「第二次世界大戰後における中國東北地區居住朝鮮人の引揚の實態について」, 『一橋研究』 27卷 2號, 58쪽.

8) *Japan-Manchukuo Yearbook*(이하 *JMY*), 1940, Tokyo.

9) 滿洲帝國 協和會, 1943, 『國內における鮮系國民實態』.

1940년 센서스도 만주국 총인구를 페이지에 따라 달리 발표한다.<sup>10)</sup>

또한 지나친 의욕으로 정밀성이 희생된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방대한 만주국 내 민족 분포의 추이를 만들고자 했던 미야가와 겐조[宮川善造]의 것에 흠결이 더러 발견된다. 예컨대 1918년 조선인의 전년도비 인구 증가분(24,311명)이 이주인구(33,400명)보다 적다. 또한 1935~1936년 센서스를 무시, 1935년 신징[新京]의 조선인과 일본인 인구를 각 6,764명과 54,367명으로, 무려 두 배로 기재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각 3,807명과 22,129명이다.<sup>11)</sup> 여러 일본 자료를 통해 한국인 이민사를 다룬 현규환의 방대한 연구도 광복 직전 재만 조선인을 2,163,115명으로(혹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당시 만주국 인구를 3,500만 명으로 추정, 1940년 센서스의 수치(43,233,954명)와 무려 80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sup>12)</sup>

이런 자료들이 범람한 것은 오랫동안 만주에 관한 국외 원자료를 얻기 힘들었던, 그 결과 발견되기만 하면 무조건 신뢰하게 된 여건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이제 중국, 일본의 일부 만주 자료들이 국내 학자들에게 드러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글도 현존하는 총량적 자료만을 나열하는 기술적인(descriptive) 한계, 혹은 중간 점검의 성격을 띤다. 이 글은 그간 여과 없이 사용되었던 원자료들에 대한 판정과 함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만주국 후기까지로 넘어가보고자 한다. 1940년까지는 만주국의 센서스 두 가지(1935~1936년 것과<sup>13)</sup> 1940년의 것<sup>14)</sup>를, 그 이후는 만주국 정부공보를<sup>15)</sup> 사용한다. 인구역동과 사회적 지위

10) 43,233,954명(3쪽), 43,202,880명(7쪽)으로 표기.

11) 宮川善造, 1940, 「人口統計より見たる滿洲國の聯族複合狀態」, 建國大學研究院; 山下晉司·中生勝美·伊藤亞人·中村淳 編, 2002, 『アジア太平洋地域 民族誌選集, No. 30, 滿洲民俗考, 滿蒙民族誌(ほか)』, クレス出版, 39·72~73쪽.

12) 현규환, 1976, 『韓國流移民史』, 어문각, 3쪽.

13)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統計處, 1937, 『第1次 臨時人口調査報告書: 滿洲國 國務院 國勢調査報告』와 『第2次 臨時人口調査報告書: 滿洲國 國務院 國勢調査報告』를 이룸(이하 1935~1936년 센서스). 1차는 1935년 말 3대 도시를 포함, 인구 1만 명이 넘는 25개 지역을, 2차는 1936년 어무[額穆]현 등 53개 都邑(도회지)을, 도합 78개 지역(만주국 전체 인구의 약 10.6%)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은 재만 조선인 인구의 12.4%, 일본인 인구의 23.2%를 차지하는 도회 지역이다.

와의 관계, 즉 조선인의 거주 양식이 어떻게 사회적 지위에 반영되었으며, 특정 계기(중일전쟁) 이후 인구이동이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 II. 재만 조선인의 거주 특성

먼저 중일전쟁 이전 재만 조선인을 재만 일본인과 비교하면 비적의 침입에서 보호장치가 없는 농촌 지향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다음 표 1은 단일기관의 조사에 의한 재만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구이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이 만주 영사관의 조사를 취합한 것으로서 1910년에서 1936년까지 단일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인, 일본인 양 민족의 거주 양식의 중요 차이는 후자의 관동주[다롄(大連)과 그 주변], 만철부속지(만주국 내의 남만주철도 연변)(이 두 지역은 1937년까지 만주국의 치외법권 지역), 商埠地(자율적 개방지)의 인구비율이 꽤 높다는 것이다. 즉 일본 근경 보호하의 안전지역이라는 뜻이다. 省별 인구(표 1)에서도 일본인들은 가장 도회적인 평티엔[奉天省]과 關東州에, 특히 쾌적한 항구 다롄과 신징[新京]을<sup>16)</sup> 포함, 안전한 도시들에 밀집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약 90%의 도회 집중률은 국제적인 비교에서 본다면, 예컨대 20세기 초 도시 거주율이 약 7할이었던 알제리의 유렵인들(pied noirs)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sup>17)</sup> 조선인들의 경우, 도회지역 거주는 매우 낮고, 지엔타오

14)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統計處, 1942, 『康德7年 臨時國勢調査, 全國編』(이하 『1940년 센서스』)와 『康德7年 臨時國勢調査: 在滿洲國 日本人調査結果表, 全國篇』(이하 『1940년 센서스 일본인편』)을 이룸.

15)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40~1945, 『滿洲帝國政府公報』(이하 공보).

16) 1942년 신징의 공원녹지 비율은 12.2%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越澤明, 1988, 『滿洲國の首都計劃』,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42쪽.

17) Benjamin Stora (tr. by J. Todd), 2001, *Algeria: 1830~2000*, Ithaca: Cornell

〈표 1〉 중일전쟁 이전 재만 조선인, 일본인의 인구

연도	일본인				조선인					
	만주 전체	관동주	만주국	도회 비율 (%) <sup>*</sup>	만주 전체	관동주	만주국	도회 비율 (%)	지엔타오	지엔타오 거주 비율(%)
1915	101,586	50,197	51,389	83,5	282,070	65	282,005	0,3	198,492	70,4
1920	160,062	73,896	86,166	97,3	459,427	396	459,031	3,4	281,766	61,3
1925	187,988	90,542	97,446	98,3	531,973	834	531,139	6,9	346,194	65,1
1930	228,784	116,052	112,732	98,7	607,119	1,794	605,325	8,6	394,937	65,1
1931	233,320	119,770	113,550	98,7	630,982	1,747	629,235	10,1	409,412	64,9
1932	268,982	125,935	143,047	97,0	596,373	2,002	594,571 <sup>**</sup>	16,6	388,147	65,1
1933	333,912	139,016	194,896	93,6	673,794 <sup>#</sup>	2,259	671,535	15,1	415,458	61,7
1934	407,884	149,492	258,392	89,9	761,593 <sup>#</sup>	2,708	758,885	13,7 <sup>#</sup>	461,775	60,6
1935	492,604	159,599	333,005	90,8	826,570 <sup>#</sup>	3,251	823,319	15,3 <sup>#</sup>	469,461	56,8
1936	551,937	166,369	385,568	87,4	888,181	4,025	884,156	12,6	476,072	53,6

\* 만주국 내 만철부속지와 상부지 거주 인구 비율.

\*\*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엔타오 거주 조선인은 포함되지 않음.

# 특별시 인구 추가

출처: 日本 外務省 亞細亞局, 『滿洲國及中華民國在留本邦人及外國人統計表』; 木村健二·幸野保典 解題(2004), 『戰前期中國在留日本人統計』, 東京: 不二出版, 1卷 5회 24·25쪽, 7회 34쪽, 2卷 11회 表1 3쪽, 17회 表1 26쪽, 表2 64·65쪽, 3卷 19회 表1 30쪽, 21회 表1 32쪽, 表3 80쪽, 4卷 23회 表1 31쪽, 24회 表2 86쪽, 表3 90·91쪽, 5卷 26회 表4 110쪽, 6卷 29회 表9 1쪽, 7卷 28회 表1 1쪽, 表6 70쪽, 29회 表1 157쪽.<sup>18)</sup>

[間島], 혹은 농촌에 집중되었다.

또한 재만 조선인 像의 불확실성은 1930년대 대규모 만주행 이주 수치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 1930년대의 도만 인구에 대한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夫]의 연구(표 2)는 한국·일본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1940년 센서스의

University Press, p. 22.

18) 이 중 1930년대는 滿洲國 國務院 統計處, 『大同元年末現住戶口統計』(1933), 『第一次臨時人口調查報告書』(1937)를 수집한 것이다.

〈표 2〉 마쓰무라의 1930, 1940년대 조선인 해외 인구이동 추계

	1931~1940	1941~1945	합계
일본행	249,916	363,327	613,243
만주행	255,991	64,887	320,878
중국행	66,491	13,027	79,518
합계	572,398	441,241	1,013,639

출처: 松村高夫, 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洲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學會雜誌』 63卷 6號, 87쪽.

것(표 3 참조)과 무려 두 배의 차이가 난다.

1940년 센서스에 따르면 1930년대 도만 조선인은 약 70만 명에 이르며, 그 78%가 후반에 이루어져 당시 조선 사회를 강타했던 만주 붐을 실감나게 한다. 1940년 한 해에만 무려 약 17만 명이 만주로 갔다. 이 강력한 흐름은 만주국 후

〈표 3〉 1930년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도만 인구

연도	조선인	일본인
1931	11,383	5,888
1932	16,876	19,122
1933	19,937	30,213
1934	49,145	37,071
1935	57,757	41,047
1936	66,497	37,478
1937	84,071	50,542
1938	87,718	106,850
1939	141,284	142,899
1940	169,726	193,025
1936~1940 합계	544,796	520,794
1931~1940 합계	699,894	654,135

출처: 『1940년 센서스 일본인편』, 422쪽.

〈표 4〉 1940년 조선인 도만자의 도착지

첫 도착 지역(省)	이민 숫자	비율(%)
지린	25,774	15.2
룽장	1,250	0.7
베이안[北安]	9,346	5.5
허이허	447	0.3
싼장	3,783	2.2
둥안[東安]	3,865	2.2
무단장[牧丹江]	18,839	11.1
빈장	9,879	9.8
지엔타오	35,045	21.3
통화[通化]	11,193	6.6
안둥	9,791	5.8
쓰핑[四平]	6,089	3.6
펑티엔	18,791	11.1
진조우	4,653	2.7
러허	438	0.3
쌍안서	75	0.04
쌍안남	4,321	2.5
쌍안동	332	0.2
쌍안북	289	0.2

출처: 『1940년 센서스 일본인편』, 422쪽.

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일본인들의 도만도 상당한 규모(약 65만 명, 후반에 무려 약 80%)로 양국에 공통적인 만주 바람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에 이르러 조선인들의 도만 경로도 다양해졌다(표 4 참조). 조선인들이 첫발을 디딘 곳은 지엔타오성을 넘어 광범위한 곳이다. 지엔타오(21%), 지린성(15.2%), 펑티엔성(11.1%)에 이어 몽골 지역까지 펼쳐졌다.

〈표 5〉 만주국시대(1932~1945)의 조선인 인구

연도	인구	연도	인구
1930	602,495	1938	1,106,181
1931	623,048	1939	1,264,504
1932	650,072	1940	1,450,384
1933	680,898	1941	1,573,556
1934	745,116	1942	1,653,181
1935	818,566	1943	1,714,166
1936	901,152	1944	1,777,423
1937	1,002,021	1945	1,948,375

출처: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2호, 47쪽.

만주국 시대 조선인 인구도 정리할 시점에 왔다. 여러 연구 중에서<sup>19)</sup>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박경숙의 것이다. 그간 1945년 조선인 인구가 2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추계를 통해 이것을 200만 명 이하로 계산, 이 방면의 업적을 이루었다(표 5 참조). 동아시아 근대사 분야에서 운위되었던 “광복 당시 재만 조선인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라는 표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만 조선인의 이동성, 즉 쉽고 잦은 귀환, 예컨대 1930년대 초의 정치적 격변<sup>20)</sup> 등을 고려, 단선적 인구 증가를 보정하는 것이 미래 과제가 될 것이다. 평티엔 등 대도시의 조선인들 중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목돈을 쥐면 귀

19) 박창욱, 주성화, 리하이엔 모두 1940년 센서스를 무시하고, 아라라기는 1935년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朴昌昱, 1995,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8~30쪽; 주성화, 2007,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 214쪽; 李海燕, 2002, 앞의 글, 58쪽; 蘭信三, 2008, 『日本帝國人口移動國際社會學』, 東京: 不二出版, 208쪽 참조.

20) 손춘일은 1931년 9·18사건(만주사변)에서 조선인 1만 명 이상(10,935명, 행방불명 1,884명)이 중국인들의 습격을 피해 여러 곳으로 피난, 혹은 귀국했다고 본다. 손춘일, 1999, 『만주국의 재만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백산자료원, 149~151쪽.

〈표 6〉 만주국 1940년 센서스 상의 민족구성

민족	인구	성비	젊은 인구(16~30세)
만인총수	40,858,473(95%)	123.8	24.7%
한족	36,870,978(85.3%)		
만주 치런[旗人]	2,677,288		
몽골	1,065,792		
회교인	194,473		
기타	49,942		
일본인	2,271,495		
내지인	819,614(1.9%)	142.1	45.0
조선인	1,450,384(3.4%)	119.5	30.1
기타	1,497		
제3국인	3,732		
무국적인	69,180		
합계	43,202,880		

출처: 『1940년 센서스』, 3~11쪽.

국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랑자가 많았다.<sup>21)</sup> 광복 전 일본제국은 경계의 붕괴를 초래, 조선인들의 일본, 만주행 이동과 귀환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만주국의 1940년 센서스는 불완전한 것이나 일본제국 전체에서 타이완(1905), 일본(1920), 조선(1930년, 그 후 1935년, 1940년 후속조사)에 이은 네 번째의 본격 인구조사인데,<sup>22)</sup> 조선인들의 기본 특징이 드러난다. 이들은 만주국 전체 인구(세계 9위)의 3.4%를 차지하며(표 6), 만주국의 평균(도시 168.0, 농촌 119.8)과 비교해서 성비가 안정적이며, 젊은 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다.

조선인들의省별 분포(표 7 참조)는 1934년까지 60%대에, 1935년 56.8%

21) 1940년대의 경우, 윤희탁, 2001,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허상과 실상」, 『역사학보』 169집, 163~165쪽.

22) 安元稔, 2007, 『近代統計制度の國際比較』,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2·223쪽.

〈표 7〉 조선인의省별 분포(1940)

지역	숫자	비율(%)
신징특별시	16,424	1.1
지린성	167,620	11.6
룽장	7,595	0.5
베이안	28,319	2.0
허이허	2,196	0.2
싼장	35,085	2.4
둥안	33,195	0.2
무단장	118,571	8.2
빈장	66,032	4.6
지엔타오	616,029	42.5
통화	95,433	6.6
안둥	66,422	4.6
쓰핑	45,391	3.1
핑티엔	115,536	8.0
진조우	22,864	1.6
러허	1,399	0.1
쌍안서	781	0.05
쌍안남	8,981	0.6
쌍안동	1,692	0.1
쌍안북	909	0.06
합계	1,450,384	100

출처: 『1940년 센서스』, 174~197쪽.

였던 지엔타오성 비율이 40%대로 감소했다. 조선인들은 쌍안북성을 포함, 전 지역에 걸쳐 살았다. 19개 시(특별시 포함)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144,296명(조선인의 9.9%), 10만 명 이상 14개 도시에는 99,966명(조선인의 6.9%)에 이른다. 이것은 만주국 초기 9대도시의 조선인 거주 비율 3.5%와<sup>23)</sup> 비교하면 장

23) 『연보』, 100쪽.

족의 발전이다. 3대도시 거주에도 약간의 성장이 있었다. 1935년에 조선인의 2.3%가 이 도시들에 살았으나, 1940년 4%로 늘었다. 1940년 신징 인구의 조선인 비율은 1935년 도시의 1.5%에서 1940년 3%로 늘었다(표 10a 참조).

### Ⅲ.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조선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단순하지 않다. 전·후반기 통틀어 인구상, 산업분포상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중일전쟁 발발 후 공적 분야와 일부 전문직, 나아가 전방위적인 진출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다. 그간 만주국의 조선인이 일본인 지배자와 한족 사이의 중간자적 소수자(middlemen minority)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중간자란 동남아시아의 화교같이 부를 갖춘 소수민족이다.<sup>24)</sup> 나아가 일본-조선-만주국의 3자 관계가 유명한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의 비유(즉 핵심-반주변부-주변부의 지역체계로서의)를 받기도 했다.<sup>25)</sup>

이런 인식의 근거로 조선인과 중국인 간에 임금과 양곡배급의 차등이 거론되었다. 2등국민론은 어느 정도 타당할까? 우선, 윤희탁이 논구했듯 식량의 비유는 과장된 것으로서, 특히 만주국 말기에 양자는 공통적인 근경을 겪었다.<sup>26)</sup>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서는 조선인이 중간적 특성이 있다(표 8 참조). 그러나 1930년대 말 여러 지역과 부문의 일일 평균임금에서 극명한 차이는 일본인과 기타 민족들의 것이다. 일본인 남녀 평균임금(2.56위안)은 만주인(0.7위안)과

24) Hurbert Blalock, 1967, *Toward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 Y.: John Riley, p. 81.

25) Bruce Cumings, 1984,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ern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p. 13.

26) 윤희탁, 2001, 앞의 글, 143쪽.

〈표 8〉 만주국 노동자의 하루 임금(1939년 5월)(단위: 만주국 위안)

부문	만주인		일본인		조선인		전체평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업	0.9	0.5	3.51	1.61	1.45	0.65	1.62	1.51
광업	0.94	0.64	3.38	0.87	1.01		3.24	
토건	1.27		4.16		2.43		2.5	
운수	1.34		3.13		1.3		2.85	
교통	1.38	0.89	2.74		1.7	0.85	2.62	0.7
평균	1.0	0.51	3.5	1.6	1.38	0.65	2.14	1.12

출처: 공보 1939, 9, 18.

조선인(1.05위안)의 두세 배를 상회한다. 또한 조선인 남성의 임금은 만주인 남성의 것보다 약 40% 많다(1.38 대 1.0). 그러나 20세기 초 아시아 사상 최대의 이주인 중국 노동자의 만주행 홍수(1890년에서 1945년까지 2,500만 명, 1920년대에는 두 번씩 한 해 100만 명 이상)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주국 건국으로 약간 주춤했으나 공업화의 수요로 한 해 평균 76만 명(1932년에서 1942년까지)이 유입,<sup>27)</sup> 노동시장의 텅핑을 초래했다.

그러나 총량적인 통계에서 조선인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만주국 초기(1935) 조선인들은 2·3차산업에 불과 11%가, 대신 1차산업에 약 3분의 2가 몰려 있었다. 자유업과 官吏, 교육 부문에서 7%를 차지, 다소 약진한 편이다(표 9). 그런데 이것은 부인의 직업을 가장에 따라 계산, 무업 비율이 낮다. 개인별로 직업을 물었던 1935~1936년 센서스와 1940년 센서스 등과 비교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27) Thomas Gottschang and Diana Lary, 2000, *Swallows and Settlers: The Great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2·180.

〈표 9〉 만주국 세 민족의 산업구성(1935년 말)(%)

산업 \ 민족	만주인	일본인	조선인
농업, 어업	66.0	3.5	65.7
광업, 공업	2.8	14.4	4.2
상업, 교통	4.0	32.6	7.0
관리, 법률, 교육	1.1	16.7	2.4
종교, 예술, 예술, 기타 자유업	2.0	5.0	4.6
가사, 기타	11.5	15.9	6.7
무업	12.6	11.2	9.5
전체인구	32,075,729	120,791	739,353

출처: 만주국 민정부, 1936, 『2차통계연보』(이하 『2차연보』), 46쪽.

다음은 1935~1936년 센서스, 1940년 센서스에 나타난 3대도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산업구성이다(개인별로 직업을 물었으므로 표 9와 비교 불가능함).

〈표 10a〉 신징의 민족별 산업구성(1935년 말과 1940)(%)

산업 \ 민족	일본인		조선인	
	1935	1940	1935	1940
농업, 목축, 임업	0.2	5.7	10.5	5.0
광업, 공업	8.7	18.1	10.3	12.4
상업	7.3	15.8	7.5	18.0
교통업	3.5	11.9	2.3	6.0
공무, 자유업	23.2	22.0	3.6	6.5
가사사용인, 기타 유업	3.1	0.4	4.3	2.4
무업	53.9	31.0	61.6	49.7
인구	22,129	110,138	3,807	16,424
도시전체 인구비율	8.9	19.8	1.5	3.0

출처: 『1935~1936년 센서스』(1차), 107쪽; 『1940년 센서스』, 55~65 · 110~120 · 143~153 · 253~259 · 288~294 · 309~315쪽.

〈표 10b〉 하얼빈의 민족별 산업구성(%)

산업	민족	일본인		조선인	
		1935	1940	1935	1940
농업, 목축, 임업, 어업		0.06	0.8	10.7	15.1
광업, 공업		7.4	5.8	4.2	7.6
상업		15.2	12.5	11.1	16.7
교통		2.9	16.3	1.4	2.0
공무, 자유업		22.6	10.2	4.2	4.7
가사, 기타 유업		2.0	1.1	1.4	1.4
무업		49.9	53.4	67.0	52.4
인구		23,232	52,534	5,771	9,209
도시전체 인구비율		5.1	8.0	1.3	1.4

출처: 『1935~1936년 센서스』(1차), 112~113쪽.

〈표 10c〉 평티엔의 민족별 산업구성(%)

산업	민족	일본인		조선인	
		1935	1940	1935	1940
농업, 목축, 임업, 어업		1.7	0.3	2.0	7.0
광업, 공업		15.5	16.6	7.6	13.8
상업		11.8	11.8	17.9	16.9
교통		1.5	11.4	2.6	3.8
공무, 자유업		18.1	7.2	2.2	3.0
가사, 기타 유업		2.8	1.7	3.0	3.4
무업		50.0	51.0	65.1	52.1
인구		9,461	143,107	9,038	31,916
도시전체 인구비율		2.1	12.6	2.1	2.8

출처: 『1935~1936년 센서스』(1차), 118~119쪽.

신징, 하얼빈, 평티엔 등 3대도시에서 1935년 조선인은 세 민족, 즉 만주인(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중 1차산업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신 2·3차산업에서 거의 최하위에 있다. 무업도 가장 높다. 예외는 평티엔인데 상업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다. 1940년에는 1935년에 비해 조선인의 2·3차산업 종사자가 현격하게 늘었다(평티엔의 상업은 예외). 신징의 공무·자유업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조선인 관리들의 증가를 의미한다(표 10a 참조).

1935~1936년 센서스(인구 1만 명이 넘는, 만주국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지역만 대상으로 함)(표 11)에 따르면 조선인은 1차산업 비율이 10% 이하에, 상업·교통에 12%로 약진하고 있으나 무업 비율은 굉장히 높다.

〈표 11〉 만주국 1935~1936년 센서스(3대 도시 포함, 78개 지역), 두 민족의 산업구성 (1935년 말에서 1936년)

산업	민족	일본인(%)	조선인(%)
농업, 목축, 임업, 어업		0.3	8.5
광업, 공업		9.2	5.2
상업, 교통		18.6	11.9
공무, 자유		20.0	2.9
가사사용		1.2	0.3
기타 유업		0.9	3.4
무업		49.7	67.8
인구합계		114,511명	102,776명
만주국 전체의 일본인, 조선인 합계(외무성 자료)		492,604명	826,570명

출처: 1·2차 임시조사를 통해 구성.

다음 표 12는 만주국 중기(1937)의 불완전한 조사이다. 2·3차산업, 공무, 자유업 분야에 조선인은 12%에 지나지 않고 1차산업에 대거 몰려 있다. 이 통계는 JMY의 1941년판을 포함, 두루 유포되었으나 유업자의 배우자를 유업으로 합산했으므로 1940년 센서스와 비교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표 12〉 만주국 중기 세 민족의 산업구성(1937년 말)(%)

산업 \ 민족	만주인	일본인	조선인	만주국 인구총계
농업, 목축, 임업, 어업	61.3	2.5	57.2	
광업, 공업	3.4	15.7	3.8	
상업, 교통업	4.9	24.5	4.9	
공무, 자유업	3.7	18.7	4.0	
가사, 기타	12.8	15.0	12.7	
무업	13.9	23.6	17.4	
인구합계	35,533,731	418,300	931,620	
				36,949,972

출처: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통계처, 1940, 『만주제국 통계연감』, 25쪽.

드디어 1940년 센서스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전반적인 산업구성이 파악되었다(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물어 전기의 어느 자료와도 비교가 불가능함)(표 13 참조). 이것에 따르면, 조선인 1차산업 종사자(조선인의 42%)는 만주국 전체(약 38%)에 비해 다소, 일본인(약 5%)에 비해 매우 높다. 조선인 2차산업 종사자(약 4%)는 만주국 전체(3.6%)에 비해 약간 높으나, 일본인(13.4%)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3차산업 전체의 조선인 종사자(조선인의 9.5%)는 만주국 전체 평균(10.1%)에 뒤진다.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인 공무·자유업 종사(조선인 전체의 1.4%)가 만주국 평균(2.6%)과 일본인(9.5%)에 비해 낮지만, 약 1만 명의 관공리, 3,000명의 교사, 2,300명의 의사 등 화이트칼라, 혹은 전문직 조선인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비록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촉탁 등 하급직이었지만, 조선인 관공리는 만주국 전체 관리들 숫자(175,422명)의 5.9%에 이른다.<sup>28)</sup> 일본인과 중국인들의 공무원 직위의 묵시적 비율(중앙관리들의 경우 대략 1 : 1)이 있었으므로, 조선인 관공리들의 증가는 일본인 관리들의 배려(혹은 양보) 하에서, 혹은 중일전쟁

28) 경찰 포함. 이것은 1935년 76,654명에서 1939년 86,479명으로 증가한다. 『2차연보』, 148쪽; 幕内満進(1996), 『滿洲國警察外史』, 東京: 三一書房, 226쪽.

〈표 13〉 만주국 1940년 센서스 상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산업분포(괄호 안은 %)

산업 \ 민족	일본인	조선인	만주국 전체(단위: 1천) <sup>29)</sup>
농업	37,290(4.5)	60,367(41.6)	16,248(37.6) <sup>30)</sup>
축산, 임업, 수산	3,568(0.4)	6,088(0.4)	
광업	20,309(2.5)	5,117(0.4)	355(0.8)
공업	89,232(10.9)	50,637(3.5)	1230(2.8)
상업	75,344(9.2)	43,120(3.0)	1,508(3.5)
교통	83,642(10.2)	17,944(1.2)	156(0.4)
공무, 자유	77,637(9.5)	20,504(1.4)	1,137(2.6)
관공리	46,246	10,339	
교육 종사자	7,261	3,062	
의무 종사자	7,249	2,314	
종교	892	427	
문예	1,995	344	
기타	13,996	4,018	
가사 사용인, 기타 유업	9,608(1.2)	16,306(1.1)	1,689(3.6)
무업	422,984(51.6)	687,015(47.4)	20,880(48.3)
합계	819,614	1,450,384	43,203

출처: 『1940년 센서스 일본인편』, 61~71 · 281~287쪽.

후 징집된 재만 일본인 관료들의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일전쟁 후의 만주국은 특히 고학력 조선인들에게 실로 새로운 취업 공간이 되었다.<sup>31)</sup> 만주국 후반기에 재계에서 조선인들의 존재는 미미했으나, 관공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와 전문인 계층이 막 성장하던 중에 만주국이 패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山中峰央, 2005, 「滿洲國人口統計の推計」, 『東京經大學會誌』 245號, 186쪽.

30) 농업 · 목축 · 임업 · 어업 합계.

31) Carter Eckert, 1996, "Total War,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e Colonial Korea," in Peter Duus, Ramon Myers, and Mark Peattie(ed.),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3.

## IV. 1940년대의 조선인 산업분포

만주국의 마지막 시기에 중일전쟁의 효과(즉 1940년 센서스에서 발견된 화이트칼라 조선인들의 존재)의 추세를 추적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제한적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sup>32)</sup> 야심만만한 조선인 청년들이 관공리, 변호사, 의사, 교사, 그리고 명문 국립교육기관들을 포함, 틈새 인가증까지 꾸준히 만주국의 문을 두드린 사실이 드러난다. 조선인 화이트칼라와 교육기관 합격자들을 통해서 보자.

조선인 고위관리로는 초기(1935)에 지엔타오성 민정청장 김병태, 학무과장 윤태동, 시학관 김춘학 정도이나, 후기(1940)에 이르러 지방법원 차장, 판사 2명, 총영사 2명(박석윤 포함), 중앙·지방부서 과장급 10명, 국장급 1명, 사무관급 16명,<sup>33)</sup> 기좌(技佐) 9명 등에 이른다.<sup>34)</sup>

1935년 지린성공서의 연벤[延邊] 담당 직원 31명 중 조선인이 7명, 지엔타오성공서 직원 169명 중 조선인 51명이 근무했다. 지엔타오성 전 기간(1933년~1942년 말)에 264명의 관리(천임관 이상)가 거쳐 갔는데, 이 중 조선인은 성장이범익(1937년 11월~1940년 5월)과 차장 유흥순(후일 강원지사), 시학관 이인기를<sup>35)</sup> 포함, 29명 정도가 파악된다.<sup>36)</sup> 그리고 협화회에 조선인 회원 약 6만

32) 이하는 공보 1933년에서 1945년에 등재된 여러 인가증 취득자, 합격자들 중에서 조선인 이름이라고 추정되는 최소치를 헤아린 것이다. 이 조선인들은 '선계', 조선 본적지 등 확실한 표시를 지닌 이들, 다수 조선인 거주지역인 지린성, 평티엔성, 지엔타오 출신자들, 아무 단서가 없는 이들의 3종류가 존재한다. 3자 성명에서 중국 인과, 4자 성명(조선인들은 194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창씨개명을 함)에서 일본 인과 구별되는 조선인 이름들을 찾도록 노력했다. 예컨대, 金成奎, 金海鶴烈, 金海光一 등은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33) 뒷날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총장에 오른 신기석 포함.

34) 滿蒙資料協會 編, 1940, 『滿洲紳士錄』; 윤휘탁, 2009, 「만주국정부의 민족구성과 운영상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43집, 120·124쪽에서 재인용.

35) 후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36) 廣岡淨進, 2009, 「滿洲國間島省の人官僚構成」,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東京: 思文閣, 678~681쪽.

명이 가입했고, 평티엔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조선인보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37)</sup> 조선인 간부도 약간 있었다. 1941년 협화회 인사에서 중앙본부에 최소 6명, 지역간부에 24명이 사령장을 받았다.<sup>38)</sup>

그리고 중앙·지방 공무원 시험에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했다(표 14). 이것은 센서스 이후 만주국 공보에 발표된 중앙행정부의 민생부, 경제부, 사법부, 제사부, 치안부, 수도경찰, 문교부, 외교부, 총무청, 흥농부, 지적총국 행정과, 대동학원, 官需局 등의 위임관, 고등관, 기술관, 교관과 지방관서 위임관, 위임기술관 등의 채용, 전형, 자격, 등격고시 등의 합격자를 이른다. 전체 합격자 수는 약 1만 9,000명인데 조선인은 289명으로 1.5%를 점한다.

〈표 14〉 1940년대 만주국 관리 합격자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전체	3,255	5,387	4,880	3,000	2,525	74	19,121
조선인		79	63 <sup>39)</sup>	73	70	4	289

출처: 공보 1940. 11. 27~1945. 2. 7.

만주국에서 을사(변호사) 개업을 한 조선인은 적어도 4명이 파악된다(표 15).

〈표 15〉 만주국 을사 명부(괄호 안은 조선인)

1941	1942
10(2)	28(2)

출처: 공보 1941. 9. 3, 1942. 3. 12.

조선인 의사들에게도 만주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만주국 정부는 의사법(1936), 국민의료법(1943), 의료단체법(1944) 등을 제정, 전시의 의료 통제를

37) 滿洲帝國 協和會, 1943, 앞의 글, 58~59쪽.

38) 공보 1941. 3. 31에서 1941. 11. 26까지.

39) 최규하[梅原圭一] 전대통령 포함. 공보 1942. 9. 14.

강화했는데,<sup>40)</sup> 이런 수요가 조선인 의사들을 불러들였다. 1938년 말, 1939년 초 조선인 의사 등록이 급증하는데(2,155명 중 255명으로 전체의 11.8%)(표 16 참조),<sup>41)</sup> 이때가 거의 최초로 조선인 의사들을 받아들인 시점인 듯하다. 이 시기의 미미한 중국인 의사(치과 의사 포함) 시험 합격자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sup>42)</sup> 센서스 이후에도 조선인 의사들은 꾸준히 증가, 만주국 패망까지의 총합은 전체 2,064명 중 261명으로 약 13%에 이른다. 만주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조선인 인구비율(3.4%)과 비교한다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것은 미미한 조선인 한의사 등록자(전체 3,602명 중 4명)(1939~1944)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만주국 정부는 한의사 인가는 중국인에, 양의사 인가는 조선인에 배려한 듯하다.

〈표 16〉 만주국 의사 등록자(1938~1945)

	1938~1940 센서스			1940~1945 센서스		
	전체등록자	조선인	조선인 비율(%)	전체	조선인	조선인 비율(%)
일반의사	3,589	293	8.2	1,669	243	14.6
치과	649	15	2.3			
약사	105	5	4.8			
수의사	64	5	7.8	395	18	4.6
합계	4,407	318	7.2	2,064	261	12.6

출처: 공보 1938. 9. 24~1945. 2. 24.

그리고 조선인 교사들도 다수 존재했다. 센서스 이후 패망까지 교사자격 합격자는 모두 약 2만 4,000명이며 그중 조선인은 316명(1.4%)이다. 1940년 말에서 1941년까지 초등교사 허가증 획득에 조선인들도 약간의 기회(0.7%)를 얻었다. 1945년 조선인 중등교사 자격증 획득자는 무려 18%에 이른다.

40) 沈潔, 1996, 『滿洲國社會事業史』,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62~263쪽.

41) 1953년 한국 초대 헌명사령관 元容德 포함.

42) 1937년 6명, 1938년 13명, 1939년 17명. 沈潔, 1996, 앞의 책, 263쪽.

〈표 17〉 만주국 1940년대 교사 허가증

	1940년 말~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조선인 비율(%)
초등	19,898(139)					19,898(139)	0.7
중등	1,663(55) <sup>43)</sup>	96(11)	368(26)	72(2)	444(80)	2,643(174)	6.6
직업교육 <sup>44)</sup>	50	3	4	5(1)	10(2)	72(3)	4.2

출처: 공보 1940. 12. 9~1945. 7. 7까지.

센서스 이후 패망까지 만주국 유수의 정부직할 고등교육기관과 유학 인가 시험에도 조선인들이 지원, 약 155명 정도의 합격자를 냈다(표 18).<sup>45)</sup> 이 중에서 변경 개척지에 보낼 의사들을 속성으로 양성한 하얼빈, 치치하얼, 룡징[龍井]의 개척의학원의 조선인 합격자(25명)는 전체 213명 중 무려 11.7%를 점한다.

〈표 18〉 만주국 1940년대 정부직할 고등교육기관과 유학 인가 합격자(말호 안은 조선인)

	1940. 12~ 1941	1942	1943	1944	1945	조선인 숫자
하얼빈의대	97	73(3)		107(2)		5
신징의대	51			43(3)		3
신징의대 약학과, 수의학과	103			34(2)		2
자무쓰[佳木斯]의대	5(1)					1

43) 음악 교사 황병덕[共田秉德] 포함. 공보 1940. 12. 10.

44) 평티엔임시농업교사양성소 포함.

45) 이 숫자는 조선인이 끼어 있는 대학 합격자들만의 것이다. 직할 기관들의 합격자는 연말 滿系(조선인 포함)와 3월 日系를 대상으로 한 두 종류가 있었다. 예컨대, 1941년의 경우 만계 약 730명과 이듬해 3월에 일계 935명(평티엔농대 36, 신경징산 35, 하얼빈공대 123, 평티엔공대 177, 신경징대 158, 하얼빈의대 40, 신징의대 36, 신징의대 약제사양성소 18, 자무쓰의대 73, 신징법정대 83, 국립하얼빈학원 156명), 도합 약 1,700명 정도를 뽑았다. 그러나 탈락 등으로 재학생 숫자와는 거리가 있다. 예컨대, 1939년 2월 말 국립대학들의 재학생 숫자는 4,960명이다. 『1940년 센서스』, 333쪽.

신징공대				58(4)		4
펑티엔공대	27(2)	150(7)				9
하얼빈공대	90(1)			50(2)		3
하얼빈농대	74(4)			66(10)		14
펑티엔농대				111(4)		4
신징법정대	195(11)				200(13)	24
중앙사도(師道)훈련소	88(5)		40(4)	60(1)		10
사도대학			164(6)	265(15)	150(11)	32
하얼빈개척의학원	20					24(1)
치치하얼[齊齊哈爾] 개척의학원	21				50(3)	23(2)
룽징개척의학원	52(17)					23(2)
도일유학인가	101(7)			87(6)		30(6)

출처: 공보 1940. 12. 20~1945. 1. 31.

일부 조선인은 다통[大同]학원, 지연구어[建國]대학, 군관학교 등 만주국 명문 교육기관을 졸업했다. 다통학원은 만주국 건국에서 패망까지 고급 공무원을 선발, 훈련시킨 기관이다. 정규코스 1기(1932년 10월 졸업) 96명을 비롯, 19기(1945년 8월 졸업) 졸업생 52명까지의 2,629명과, 연구소 1기(1944. 7), 2기(1945. 8) 합계 66명, 중견지도자 코스 1기(1938. 7)에서 5기(1941. 9)까지의 합계 241명, 총합 2,936명의 졸업자 중에서 조선인 졸업자는 신기석(9기), 이충환(13기), 최규하, 서정규, 조기준(이상 15기) 등 최소 28명이다.<sup>46)</sup> 중일전쟁 후 창설된 만주국 최고의 국립대학인 지연구어대학은 1기(1938년 입학) 145명을 비롯, 8기(1945년 입학)까지 도합 1,068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는데 이 중 조선인은 강영훈, 민기식(3기)을 포함, 최소 50명이다.<sup>47)</sup>

또한 만주국의 중앙육군훈련처(펑티엔군관학교)는 1932년 개교 이래 1938년

46) 滿洲大同學院同窓會, 2002, 『物語大同學院』, 東京: 創林社, 180~182쪽.

47) 建國大學同窓會, 2003, 『建國大學同窓會名簿』, 東京.

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조선인은 정일권(5기)을 포함, 87명이 졸업했다. 1939년 출범한 본격적인 육군군관학교(신징군관학교)는 1945년까지 일계 1,086명, 만계 1,590명을 내었는데 조선인 졸업자는 김동하, 박임항, 이주일(이상 1기), 박정희 전 대통령(2기) 등을 포함, 48명이 있었는데, 그중 24명은 1941년부터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엔타오 지역의 항일유격대를 진압하는 용도로 1939년 창설되어 1945년 7기까지 모집된 지엔타오특설대의 746명의 병력(일본 지휘관을 포함) 중 조선인은 690명을 차지했다.<sup>48)</sup>

중일전쟁 후 조선인 화이트칼라의 가시적 성장은 중국인들에게 불만거리가 되어 중국인 사이에서 ‘조선인은 만주국의 2등국민’이라는 담론의 유포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이것에는 일본인들의 은근한 유포 가능성, 일부 조선인들의 도취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조선인 스스로 이런 인식을 소유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호가호위적 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거주가 분리된 지역들(특히 북만주)이 있었고,<sup>50)</sup>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기타 민족집단 사이에서 후자를 멸시, 폭력을 행사한 일화들이 발견된다.<sup>51)</sup>

48) 신주백, 2002, 「만주국군 속의 조선인 장교와 한국군」, 『역사문제연구』 9권, 92·98·111쪽.

49) 이런 사정들이 만주국 패망 직후 중국인들 사이에 이 담론이 유포, 나아가 창춘, 지린 등지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에 의한 조선인들의 학살을 초래했을 것이다. 李海燕, 2002, 앞의 글, 43~45쪽.

50) 한석정, 2008, 「근대 만주의 예비적 탐사」, 한석정 외,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231쪽 참조.

51) 김석형 구술(이향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오!』, 선인, 95~102쪽.

## V. 맺음말

총량적인 지표에서 보면 만주국 시대 조선인들은 2등국민 담론과는 달리 전기에 주로 지엔타오 지역과 농업에 집중된 주변적 위치에서 후기에 부지런히 2·3차산업에 다소 진출한, 그러나 전체 평균에 뒤지는 소수자였다. 무엇보다 이렇다 할 조선인 자본과 파워(사업가와 고관들)가 없었다. 국제적으로 괴뢰국이라는 규탄을 받았으나 독립국적 제스처에 열중한 만주국의 지도자들은 이 ‘독립국’의 국민인 ‘만주국인’(대부분 중국인)의 존재를 의식해서 공직, 기업 분야의 상당한 자리를 이들에게 할애했다.<sup>52)</sup> 이런 사정에서 조선인은 애매한 존재였다. 이들은 만주국의 공식이념인 오족협화와 조선총독부의 만선일여(1937년 이후 사용) 담론 사이에 끼어(즉 이들의 소속, 정체성이 만주국과 조선 사이에서 일정치 않은) 거주지역에 따라 사용 언어와 교육체계가 달라지는 큰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국적법이 일제의 패망까지 제정되지 않았다.<sup>53)</sup> 재만 조선인 중에는 만주국에 대한 협력자, 실업자, 아편밀매자 등 별별 종류가 다 있었다.<sup>54)</sup>

52) 예컨대, 1939년 상업조직의 경우, 비록 일본계가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상점의 81%를 차지했지만, 중국계 점포는 수적으로 전체 점포의 92%에 이르렀다. 윤희탁, 2009a, 앞의 글, 314쪽; 한석정, 2007,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191~97쪽.

53)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135~146쪽.

54) 신규섭(2003), 「재만 조선인의 만주국관 및 일본제국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권, 316쪽; 田中隆一, 2007, 앞의 책, 123~37쪽. 만주국 건국 전에 창춘, 안동, 평티엔의 조선인들의 1~2할이 아편 밀거래에, 하얼빈의 조선인 9할이 아편밀매 및 煙館業에 종사했다는 추정이 있다. 박강, 2003, 「만주사변이전 일본과 재만한인의 아편, 마약밀매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권, 325쪽. 만주국시대에 그 사정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1935년 조선인 접객업 종사자들(평티엔 2.4%, 신징 27.1%, 하얼빈 61.4%)은 중국인, 일본인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평티엔의 경우,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기생집이나 유흥업소 비중은 일본인 업소들의 두 배나 되었다. 윤희탁, 2009b, 「만주국 상업사회의 내적 구조와 민족적 특징」, 『동양사학연구』 106집, 303·305쪽.

그러나 중일전쟁 후 일본인들의 배려, 혹은 공백으로 인한 조선인들의 공적 부문과 전문직의 성장, 遍在성을 간과할 수 없다. 조선인들은 만주국 막바지에 공적 분야에 두루 志願했다.<sup>55)</sup> 그 의미는 다수의 고학력 조선인들이 만주국을 기회의 땅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만주국에서의 중하급직 관료, 군인, 노무관리자, 기술자, 혹은 기업활동 등 실전 경험들은 후일 신생국 한국에서의 약진에 중요 자산이 되었다. 1947년 7월까지 재만 조선인들 약 80만 명이 귀국했는데,<sup>56)</sup> 이 중에서 식민주의가 초래한 근대와 현장 경험을 겪은 일부가 섞여 있었다.

55) 예컨대, 1940년 조선인 개척민을 위한 간부 후보 70명을 포함, 1942년 번시후[本溪湖] 공업실습소의 30명 입학자 중에서 1명(공보 1942.4.7), 갑종 화약류 취급인 자격 취득자 15명(1942) 중에 1명, 44명(1944) 중 2명(공보 1941. 7. 31, 1944. 10. 23), 1941년 교통부 고등선원양성소 합격자 30명 중 3명, 1944년 62명 중 2명, 1945년 합격자 50명 중 4명(공보 1941. 3. 11, 1944. 3. 3, 1945. 3. 28), 국민체력 검정지도원 합격자 178명(1943) 중 4명, 국민체육연성소 합격자 29명(1945) 중 4명(공보 1943. 5. 26, 1945. 3. 29)이 조선인이었다. 1941년에서 1945년까지 裝蹄士(말굽을 갈아 끼우는 직업) 허가증 취득자 842명 중 57명(6.8%)도 조선인이었다(공보 1941. 3. 11에서 1945. 7. 23까지). 끝으로, 조선인들은 만주국 사법부의 형무소 집행관 자리에까지 지원했다(공보 1942. 1. 27).

56) 李海燕(2002), 앞의 글, 58쪽. 이것은 광복 당시 재만 조선인과 비슷한 숫자였던(약 200만 명) 제일 조선인들의 높은 귀환율(100만에서 140만 명)과 대조적이다. 전자가 주로 농업에, 후자가 (보다 유동적인) 노동에 종사한 차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森田芳夫, 1996, 『數字が語る在日韓國, 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71·83~84쪽.

## 참고문헌

-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 김석형 구술(이항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오!』, 선인.
- 박강, 2003, 「만주사변이전 일본과 재만한인의 아편, 마약밀매문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5.
-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2호.
- 朴昌昱, 1995,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손춘일, 1999, 『만주국의 재만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백산자료원.
- 신규섭, 2003, 「재만 조선인의 만주국관 및 일본제국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 신주백, 2002, 「만주국군 속의 조선인 장교와 한국군」, 『역사문제연구』 9.
- 윤휘탁, 2001,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허상과 실상」, 『역사학보』 169집 별책.
- 윤휘탁, 2009, 「만주국정부의 민족구성과 운영상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43집.
- 이동진, 2008, 「신경의 조선인: '신경실무학교'를 사례로」,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李海燕, 2002, 「第二次世界大戦後における中國東北地區居住朝鮮人の引揚の實態について」, 『一橋研究』 27卷 2號.
- 주성화, 2007,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
- 한석정, 2007,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 2008, 「만주의 기억」, 한일연대21 편, 『한일역사인식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 한석정, 2009, 「근대 만주의 예비적 탐사」, 한석정 외,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 현규환, 1976,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 建國大學同窓會, 2003, 『建國大學同窓會名簿』.
- 廣岡淨進, 2009, 「滿洲國間島省の官僚構成」,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東京: 思文閣.
- 宮川善造, 1940, 「人口統計より見たる滿洲國の聯族複合狀態」, 建國大學研究院; 山下晉司·中生勝美·伊藤亞人·中村 編, 2002, 『アジア太平洋地域 民族誌選集, No. 30, 滿洲民俗考, 滿蒙民族誌ほか』, 東京: クレス出版.

- 幕内滿進, 1996, 『滿洲國警察外史』, 東京: 三一書房.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37, 『第一次臨時人口調査報告書: 滿洲國 國務院 國勢調査報告』.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37, 『第二次臨時人口調査報告書: 滿洲國 國務院 國勢調査報告』.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42, 『康德7年臨時國勢調査, 全國編』.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42, 『康德7年臨時國勢調査: 在滿洲國 日本人調査結果表, 全國編』.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40~1945, 『滿洲帝國政府公報』.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34, 『滿洲帝國年報』.
-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1940, 『滿洲帝國統計年鑑』.
- 滿洲國 民政部, 1936, 『二次統計年報』.
- 滿洲大同學院同窓會, 2002, 『物語大同學院』, 東京: 創林社.
- 滿洲帝國協和會, 1943, 『國內における鮮系國民實態』.
- 山中峰央, 2005, 「滿洲國人口統計の推計」, 『東京經大學會誌』 245號.
- 森田芳夫, 1996, 『數字が語る在日韓國, 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 松村高夫, 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洲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學會雜誌』 63卷 6號.
- 沈潔, 1996, 『滿洲國社會事業史』,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安元稔, 2007, 『近代統計制度の國際比較』,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李海燕, 2002, 「第二次世界大戰後における中國東北地區居住朝鮮人の引揚の實態について」, 『一橋研究』 27卷 2號.
- 日本 外務省 亞細亞局, 2004, 『滿洲國及中華民國在留本邦人及外國人統計表: 木村健二・幸野保典 解題, 2004, 戰前期中國在留日本人統計』, 東京: 不二出版.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 Arnold, David, 1993, *Colonizing the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lalock, Hurbert, 1967, *Toward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Y.: John Riley.
- Cohn, Bernard, 1996, *Colonialism and Its Forms of Knowled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ern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 Eckert, Carter, 1996, "Total War,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e Colonial Korea," In Peter Duus, Ramon Myers, and Mark Peattie(ed),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ttschang, Thomas and Lary, Diana, 2000, *Swallows and Settlers: The Great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Hyun-ok Par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Jones, F. C., 1949, *Manchuria since 19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es, William, 1994, *Hausaland Divided: Colonialism and Independence in Nigeria and Nig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ra, Benjamin (tr. by J. Todd), 2001, *Algeria: 1830~200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 The Social Status of Koreans in the Manchukuo Period

Han, Sukjung

Through the population dynamics, this paper approaches the social status of Koreans in Manchukuo while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data. Their status refuses simple categorization. The Koreans were peripheral minority who clustered around unsafe rural area and urban amusement quarters in the early period, and became partially represented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sectors in the late period. However,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re arose a stratum of Koreans in white collar and public sector positions due to the consideration by or the vacuum of Japanese rulers who were conscripted for the final stage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Furthermore, Koreans were visible and omnipresent in almost all the posts and job opportunities in Manchukuo. This conspicuity had the seed of the persecution by Chinese right after the demise of Manchukuo.

## keywords

Koreans in Manchukuo, demographic dynamics, social status, Sino-Japanese War



#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

정안기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식민지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이른바 '만주 붐'을 배경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sup>1)</sup> 즉,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종래 관동군 주도의 만주 지역에 대한 점과 선에 따른 군사적 지배로부터 만주국 성립이라고 하는 공간적 지배로 확대되면서 본격화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의 만주 이민이 만주국 성립과 함께 곧바로 일제 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36년 9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전담하는 鮮滿拓殖株式會社 설립

※ 투고일: 2011년 1월 17일, 심사일: 2011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1) 재만 조선인 수는 1927년 당시 55만 8,280명에서 1930년 60만 7,111명으로 증가하였다. 3년간 증가 규모는 총 4만 8,839명으로 연평균 1만 6,279명이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재만 조선인 수는 1933년 67만 3,794명에서 1936년 88만 8,181명으로 증가했고, 그 증가 규모는 총 21만 4,387명, 연평균 7만 1,462명으로, 1920년대 후반의 약 7배에 달하였다. 1930년대 조선인의 만주 이민자 추계에 대해서는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이전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자유방임의 자발적 이민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1934년 土龍山 사건의 발생과 조선 농촌에서 소작쟁의의 격화 그리고 급증하는 조선인의 일본 渡航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래 방임주의적 만주 이민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1936년 9월 제국정부는 일본인 이민과는 별도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전담하는 국책 이민회사 선만척식주식회사와 자회사 滿鮮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조선인의 만주국 이민정책은 양적·질적·지역적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계획과 통제의 政策移民으로 바뀌었다. 이후 선만척식은 주로 복선개척사업과 만선척식에 대한 투자사업을 담당했던 반면, 만선척식은 東亞勸業株式會社를 흡수·통합해서 조선인의 신규 입식을 위한 토지매입과 영농자금 대부 그리고 자작농 창정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명백한 민족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정책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재만 조선인의 戰時協力과 五族協和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1년 선만척식(주)은 東洋拓殖株式會社에 흡수되어 北鮮開發株式會社로 재편되었던 반면, 자회사 만선척식(주)은 1935년 이래 일본인의 만주국 이민을 전담했던 滿洲拓殖公社에 흡수·통합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의 만주 이민자는 형식적으로 일본인 이민자에 準하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이주정책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일제의 만주국 지배의 역사상 구축을 위해 주로 일본인의 만주 이민정책과 실시과정을 일제 파시즘과 항일투쟁의 역사적 조건과의 관련에서 검토했던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夫]<sup>2)</sup>와 아사다 교지[淺田喬二]<sup>3)</sup>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1930년대 조선인의 만주국 이민정책의 형성과 실시과정에서 관동군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1930년대 전반 조선인 만주 이민을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입장과 쟁점 그리고 그 경위를 검토한 김기훈과

2) 松村高夫, 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學會雜誌』 제63권 제6호.

3) 淺田喬二, 1976, 「滿洲農業移民政策의 立案過程」,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龍溪書院.

임성모의 연구<sup>4)</sup>를 고려하면, 종래의 연구는 1930년대 전반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둘러싼 관계기관(조선총독부와 관동군 등)의 정치적 대립과 의도의 거리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1930년대 조선인 만주 이민의 송출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단지 관동군이 주도하는 이민정책의 피동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6년 당시 선만척식(주)의 설립이 ‘우가 키정책[宇垣政策]의 白眉’<sup>5)</sup>로 膾炙되었고, 종래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관동군이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으며, 1941년 만선척식과 만주척식의 통합이 제국정부 차원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정책은 종래와 같이 193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간 헤게모니의 경합 혹은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논점은 이민의 수용 측(관동군)과 송출 측(조선총독부)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移民機構史 혹은 移民制度史 연구가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0년대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의 형성과 변용을 1936년 이후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담당했던 선만척식(주)의 설립 경위와 사업 내용 그리고 1941년 양사의 해산·통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민제도사의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1년 만주사변 이래 1936년 선만척식(주)의 설립에 이르는 조선인 이민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쟁점은 ①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민회사의 동일 회사안과 별도 회사안, ② 이민회사의 일본 법인안과 만주국 법인안, ③ 이민회사 신설안과 동아권업(주) 개조안, ④ 조선인과 일본인 이식의 동일 지대론과 지역분리론, ⑤ 사업주체의 半官伴民型和 순수 민간형의 여부였다. 이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만주국

4) 김기훈, 1998a,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전주사학』 제6호; 김기훈, 1998b, 「일제의 조선인 만주이주정책 논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0호;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아시아 문화』 제18호; 임성모, 2009,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제29집.

5) 『京城日報』, 1934. 8. 24.

건국 이후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복수의 이민회사 설립계획과 1936년 설립된 선만척식(주)의 경영체제와의 관련을 동태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1936년 9월 일본국 법인으로 경성에 설립된 자본금 2,000만 원의 선만척식(주)과 만주국 법인으로 신경에 설립된 만선척식(주)의 구체적인 설립 경위와 사업 내용 그리고 그 실적을 검토해서 당초 계획과 비교한다. 셋째, 1939년 12월 日滿拓殖共同懇談會에서 논의된 만선척식(주)의 만주척식공사로의 통합 구상을 둘러싼 찬반논의와 그 귀결에 주목한다. 즉, 1940년 이후 만선척식(주)과 만주척식(주)의 일원적 통합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 II. 조선총독부의 이민회사 설립 구상

1936년 선만척식과 만선척식의 설립 경위와 관련해서 그 社史<sup>6)</sup>에 따르면, 1932년 이래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재만 조선인의 통제를 위해 독자적인 이민회사 설립을 계획하였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그러한 독자적

6) “당시 조선총독부는 소화 7년 이래 총독 宇垣 대장의 제창에 따라 조선인 만주 이주에 대한 지도원조와 在滿既住 鮮人에 대한 撫育統制에 관한 특별기관 설립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겨우 계획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는데, 拓務省과 그 외 東京의 관계관청 그리고 관동군 사령부와 교섭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다. 일부에서는 조선인 개척민만을 취급하는 특수기관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고, 장래 창립하게 될 만주척식회사가 조선인 개척민마저도 취급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조선인 개척민에 관해서는 재만 기주 선인의 統制集結을 주로 하고, 조선으로부터의 신규 이주는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결국, 조선총독부 당국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어 각 방면의 찬동을 얻기에 이르러 鮮滿拓殖株式會社를 조선 내에 설립하는 동시에 만주에는 滿鮮拓殖會社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人高見成, 1941, 『鮮滿拓殖株式會社/滿鮮拓殖株式會社五年史』, 12~13쪽.

인 이민계획에 기초해서 당시 관동군과 척무성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① 조선인 이민을 전담하는 특수회사 설립 여부, ② 재만 조선인의 통제와 신규 이민의 분리 여부였다. 그러나 이후 조선총독부는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민회사 설립 계획과 끈질긴 설득으로 선만척식을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931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이민회사 설립 계획과 1936년 선만척식 설립의 관련을 중심으로 1930년대 전반 조선인의 만주국 이민정책 형성 경위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_ 초기 이민회사의 설립 구상과 좌절

1931년 만주사변 이전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민정책은 당시 만주지역에서 토지상조권 문제를 둘러싼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민의 박해와 배일정책으로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만주국 성립으로 토지상조권 문제가 일제 강권으로 해결되면서 조선총독부는 대규모 조선인의 피난민 문제와 조선 농촌의 심각한 불황에 따른 식민통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선인의 대규모 만주 이민을 계획하게 되었다.<sup>7)</sup> 즉,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 장려·지원하는 국책 이민회사 설립에 따른 대규모 송출계획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1931년 10월 간도 주재 스에마쓰[末松] 警視가 제안한 조선인 이주방책에 따라 정무총감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고위관료와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서 만주지역의 농경상황과 조선인의 이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sup>8)</sup>

한편, 그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최초의 조선인 이민회사 설립계획은 표 1과 같이, 1931년 「鮮人移民會社設立計劃案」<sup>9)</sup>이었다. 같은 계획안은

7)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2a, 『滿洲事變ニ於ケル在滿朝鮮人被害の概況』.

8) 在間島末松警視, 1931, 「朝鮮人の間島及同接讓地方移植に就いて」.

9) 朝鮮總督府, 1931, 「鮮人移民會社設立計劃案」.

〈표 1〉 조선총독부의 만주 이민회사 설립 계획

구분		1931년 이민 계획(15개년)	1932년 이민 계획(15개년)	1934년 이민계획(15개년)		
		선인농사회사 설립계획안	선만농사회사 설립안	조선이민회사 제1안	조선이민회사 제2안	조선이민회사 제3안
자본금		6,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총독부 지원	소유주식	총독부 25%, 만주국 25%	50%	*매년 40~45만 원 보조	*총주식의 50% 소유	*총주식의 51% 소유
	배당보증		6%		*연간 5% 배 당 보장	*연간 6% 배 당 보장
집단 이민	취급호수	15만 호	30만 호	10만 호	20만 호	10만 호
	토지자금		-	10만 호: 150 원	10만 호: 200원, 10만 호: 400원	5만 호: 200원, 5만 호: 400원
	농경자금 (1호당)	150원	150원	200원	200원	200원
재주자	취급호수				10만 호	5만 호
	농경자금 (1호당)				222원	220원
자유 이민	취급호수				4만 5,000호	4만 5,000호
	농경자금 (1호당)				220원	220원

출처: 朝鮮總督府, 1932, 『滿鮮農事株式會社計畫要綱』; 朝鮮總督府, 1934, 『朝鮮人口問題對策』.

日滿合併 후 자본금 6,000만 원으로 “만몽에서 기개척지 혹은 미개지에 조선 인의 이민을 조지해서 소작 혹은 자작농을 설정하는 특수회사를 창립한다”<sup>10)</sup> 는 것이었다. 회사 자본금 6,000만 원 가운데 25%는 만주 정부(전액 토지 출자), 25%는 일본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출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계획은 이민에 필요한 농업, 수리사업 및 토지의 취득과 경영을 목표로 하는 7개 항목을 설정하고, 매년 1만 호, 총 5만 명으로 15개년에 걸

10) 朝鮮總督府, 1931, 앞의 글.

쳐 함께 15만 호, 75만 명의 조선인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이민회사 설립계획은 ‘일만합병’이라는 만주 정부의 출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1931년 12월 관동군이 입안한 「滿蒙開發方策案」에서 밝힌 조선인의 만주국 이민 구상은 중국인(산동인)의 만주 이민을 제한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이민은 동일한 차원에서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었다.<sup>11)</sup> 나아가, 1932년 1월 만철의 지방농무과도 「만주에서 이민책요강」을 작성하였다. 같은 요강에서 조선인의 만주국 이민은 20개년에 걸쳐 매년 5,000호(25만 명)의 조선 농가를 만주로 이주시켜 총 10만 호의 자작농을 창정한다는 것이었다.<sup>12)</sup> 이와 같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관동군과 남만주철도도 모두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는 1920년대 이래 적극적인 일본 농민의 만주 이민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1932년 4월 조선총독부는 앞서 1931년 초기 구상과는 달리 표 1과 같이 본격적인 조선인 이민계획으로 ‘鮮滿農事會社’<sup>13)</sup> 설립을 계획하였다. 선만 농사회사는 공적 자본금 6,000만 원으로 그 절반은 조선총독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출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회사 설립 이후 15개년에 걸쳐 6%의 주주배당을 보증하는 대신에 회사의 감독과 업무집행의 통괄권을 장악한다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인 이민사업은 매년 2만 호, 15개년에 걸쳐 30만 호(총 150만 명)의 조선 농가를 입식시킨다는 계획으로 그 필요 경지는 밭 75만 정보, 논 30만 정보, 합계 150만 정보를 계상하였다. 그 가운데 80만 정보는 만주 정부 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미경지를 양도받아 무상으로 불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민자는 당시 재만 조선인으로 생활 안정이 필요한 자와 신규 이민자를 안배해서 모집하고, 이주농민에 대한 금융

11) 小林龍夫 편, 1964, 『現代史資料7 滿洲事變』, みすず書房, 292쪽.

12) 小林龍夫 편, 1964, 위의 글, 376~381쪽.

13) 朝鮮總督府, 1932d, 「鮮滿農事會社設立趣意および内容説明」.

알선을 규정하였다.<sup>14)</sup> 당시 선만농사회사 설립과 관련한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신천지의 개발 방법은 내지, 조선, 만몽 3자의 割據的 개개의 획책활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들 3계통을 일원적으로 고찰해서 각각의 적성에 따라 산업적, 지리적으로 적당한 수량적 통제를 가해서 안배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구나, 다수 내지인의 만몽 이주는 국책(경제, 국방, 정치 등)상의 모든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농목업자, 근육노동자로서 내지인의 이주는 적성상 상당히 곤란하다. …… 이에 반해서 조선인은 생활양식의 정도와 능력 등으로 보면, 이들은 농목업에 높은 적성을 가지며, 더구나 이주를 위한 다액의 경비도 요하지 않는다. 더구나, 다수의 선주민과 동업의 동포가 재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연고적으로도 비교적 이주가 용이하다. 그리고 다수 조선인의 만몽 이주의 결과는 선내 인구과잉의 완화와 궁핍 농민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이들의 내지진출마저 자연히 억제함으로써 내지 노동계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조선 통치상의 다대한 이익만이 아니라 내지에서 사회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내지인 이민을 취급하는 회사와 동일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다. 2대 회사의 대립은 시설비의 중복, 토지획득의 경쟁 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폐해는 중앙의 통제로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내선인 이민의 동일회사 취급은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내지인과 조선인 사이에 정부의 보조금, 대부금 등 차이로부터 차별대우에 대한 불평과 폐해가 우려된다.

이상, 1932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선만농사회사 설립 계획은 앞서 1931년 ‘선인이민회사’ 설립 구상과 비교하면, 조선인 이민계획의 보다 구체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대규모 계획이라 하겠다.<sup>15)</sup>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만농사회사 설립 취지서에서 밝힌 조선총독부의 정책구상이 1936년 9월 설립되는 선만척식회사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1932년 6월 조선총독부

14) 朝鮮總督府, 1932d, 위의 글.

15) 朝鮮總督府, 1932a, 「移民會社計畫の内容」.

는 「對滿朝鮮人 이민에 대해서」라는 조사자료에서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대한 종래의 방입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sup>16)</sup>

첫째, 조선인 이민의 높은 적응성과 경제성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즉, 조선인의 만주 이민이 일본인 이민과 비교해서 생활양식과 농목업 능력 등 적응성이 높고 이주경비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조선인 이민의 제국통치에 대한 기여를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조선이 당면한 농촌 과잉인구의 해소에 따른 조선 통치의 안정과 이들의 일본 도항을 억제함으로써 일본 노동시장에 대한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셋째, 조선인 이민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책 이민회사 설립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 이민의 동일회사 취급의 폐해를 지적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차별에 기초한 별도회사 설립과 종래 조선인 만주 이민을 담당했던 동아권업의 통합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 2\_ '만몽자문회의'와 관동군의 정책 변화

1932년 4월 조선총독부 특별위원회는 조선인 만주 이민의 '適性'을 고려하여 대량의 조선인 선만농사회사 설립 계획을 완성했고, 이를 관계당국에 배포하였다.<sup>17)</sup> 나아가, 우가키 총독은 1932년 8월 동경을 방문해서 수상을 비롯한 척무성과 대장성 그리고 관동군과 교섭하였다.<sup>18)</sup> 그러나 우가키 총독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제국정부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선만농사회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일정한 동의는 얻을 수 있었지만, 관계관청으로부터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실제로, 1931년 말 이후 조선총독부의 의도와는 달리 1932년 이후 만주국

16)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2b, 『對滿朝鮮人移民に就て』.

17) 宇垣一成, 1932, 4, 「滿鮮拓殖株式會社設立に關する件」.

18) 『동아일보』, 1932, 4, 14.

의 이민정책 전반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즉, 관동군은 1932년 1월 일본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가토간치[加藤完治]그룹’<sup>19)</sup>을 포함하는 ‘滿蒙政策諮問會議’를 개최하였다.<sup>20)</sup> 같은 회합에서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인 이민의 중요성이 환기되면서 일본인 본위의 이민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실제로,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는 만주국 이민을 둘러싼 만주 이민 비관론, 조선인 이민 주체론, 일본인 이민 적극론, 민족불문 이민 적극론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sup>21)</sup> 결국, 1932년 2월 관동군이 작성한 「이민방책안」에 따르면, 일본인 이주는 적극 장려하는 한편, 조선인 이주는 ‘오는 것은 막지 않은’ 이른바 방임정책을 분명히 하였다.<sup>22)</sup> 나아가, 1932년 9월 관동군은 「만주 이민에 관한 요강」에서 신규 조선인 이민은 ‘특별히 장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 함께 재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지도와 통제’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sup>23)</sup>

이러한 관동군의 조선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조선군사령부는 1932년 11월 20일 조선인의 만주 이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19) 滿洲開拓史刊行會 編, 1980, 『滿洲開拓史』 32~89쪽.

20) 『滿洲移民』, 『近代民衆の記録6』, 新人物來住社, 1978.

21) 朝鮮公論社, 1933, 『朝鮮公論』 2월호, 26~51쪽.

22) 한편, 宇垣 총독은 1932년 6월 초 일기에서 滿洲國의 조선인 이주 放任정책이 조선과 滿洲國의 통치는 물론이고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중대한 정치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격렬히 비판하였다. 宇垣는 일본의 상당히 유력 인사들조차 ① 조선인은 放任해도 滿洲에 이주한다. ② 조선인 이민을 위해 쓸 돈이 있으면 일본인의 이주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③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만주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악감정을 더욱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언동을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견해를 偏見과 短見 혹은 淺薄한 견해라 혹평하였다. “이러한 說들은 만주에 化外の 民을 만들어 異日의 累를 釀成하는 일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偏見이다. 또한 北에 자유로이 갈 수 없다면 內地에 渡航하여 그곳에 여러 가지의 社會問題를 惹起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短見이다. …… 그들(滿人)이 이민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선인이다. 따라서 그들을 防止하려는 생각에서 사실 이상으로 鮮人을 악선전하여 그들을 抑制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결국에는 이러한 淺薄한 說들을 배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宇垣一成, 1932, 『宇垣一成日記(1932. 6. 5)』 제2권, みすず書房, 852쪽.

23) 『滿洲農業移民方策』(2.1), 141~144쪽.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만주국 개발에 기여, 만주국에서 제국 세력의 부식, 조선 민족의 발전에 기여, 조선 통치에 기여라는 내용의 「재만 조선인의 근본 방침에 관한 의견」<sup>24)</sup>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조선군사령부가 1932년 초 조선총독부가 입안했던 선만농사회사 설립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함께 관동군의 정책선회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었다. 즉, 조선인의 차별을 문제로 하는 별도회사 설립은 물론이고 제국 통치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대한 조선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관동군의 조선인 만주 이민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은 1932년 12월 당시 조선총독부 신경주재 도우모토(堂本) 사무관의 「만주이주협회 설립 요강안에 관한 건」과<sup>25)</sup> 1932년 8월 남만주철도 경제조사회가 작성한 「조선인 이민대책 요강」에 따르면, 조선인 만주 이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인 신규 이민에 따른 재만 조선인의 ‘不逞赤化’의 사상적 문제에 대한 우려였다. 즉, 재만 조선 농민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대량의 신규 조선인 이민은 빈곤한 재만 조선 농민의 증가와 반일사상으로 이어지면서 만주국의 치안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재만 조선 농민의 미작이 일본 농촌의 미가를 하락시킨다는 경제적 인 문제였다. 즉, 미작을 특기로 하는 조선 농민의 대규모 만주 이주와 벼농사가 당시 일본의 미가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농촌문제를 피폐시키고, 나아가 만주국에서 일본인 이주지에 대한 무단 침식을 우려한 것이었다.

셋째, 이른바 ‘代位說’을 유포시켜 조선 통치를 동요시키는 정치적 문제였다. 즉, 조선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대신에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킨다는 ‘대위설’의 유포를 초래해서 조선 통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 관동군은 일본인 이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조선인의

24) 조선군사령부, 1932, 「在滿朝鮮人指導の根本方策に關する意見」 5006; B368.

25) 조선총독부관방외사과, 1933, 「滿州移住協會設立要綱案に關する件」.

신규 이민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과 함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정책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의 입장 차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통해서 식민통치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반면, 관동군은 만주국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고,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는 조선인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1933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으로 발생한 재만 조선인의 피난민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즉, 1932년부터 동아권업(주)을 앞세운 안전농촌 건설과 재만 조선 농민의 생활안정에 집중하였다.<sup>26)</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총독부와 우가키 총독이 조선인 만주 이민문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우가키 총독은 1933년 5월 동경의 관계관청을 방문해서 재차 조선인의 「이주문제 소견」을 제출하는 등 조선인 이민회사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당초 우가키 총독은 조선총독부의 이민회사 계획을 「適地適應主義」에 입각한 합리적인 이민계획으로 간주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였다.<sup>27)</sup> 실제로, 우가키 총독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이주문제 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sup>28)</sup>

동일 이민기관으로 내선 양 민족을 취급하는 것은 그 처우 방법과 그들을 접촉하는 데 복잡한 주의와 시설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조선인에 한정된 별도의 기관을 창립하는 것이 良策이라 하겠다. 더구나 필요한 것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내선인의 공동취급이 불가피하다면, 별도 기관의 설립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그 경우에도 취급상 내선인 사이에 뚜렷한 차별감을 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적어도 10~15년간에 걸쳐 약 20만 명을 정착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자유 이민은 그 원외로 해야 한다.

26) 東亞勸業株式會社, 1935, 『營口·河東·鐵嶺·綏化·三源浦 朝鮮人安全農村建設經過並現狀』.

27) 『동아일보』, 1932. 4. 14.

28) 人高見成, 1941, 앞의 책, 13쪽.

그러나 이러한 우가키 총독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신규 조선인 이민정책에는 변함이 없었고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당면한 재만 조선인의 안전농촌 건설과 경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9)</sup>

### 3\_ '조선이민척식회사'의 설립 논의와 선만척식(주)

그러나 1934년경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1932년 이래 일본인 중심의 시험이민의 파탄과 만주국에서 정치상황의 변화 그리고 조선과 일본 국내의 정치·경제적 현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첫째, 일본인 무장이민에 대한 중국 농민의 반발로 발생한 土龍山 사건<sup>30)</sup>으로 만주국 이민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격증하는 조선인 자유이민에 따른 일본인 입식지의 무단 침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만주국은 급증하는 조선인의 자유이민에 대한 제한과 재만 조선인에 대한 지역적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sup>31)</sup>

둘째, 조선 농촌에서 소작쟁의의 빈발이다. 1933년 여름 삼남 일대의 대홍수와 함께 서북선 지역에서는 봄부터 여름에 걸친 장기간의 한발과 병충해로 수백만의 유랑농민이 발생하였다. 즉, “심한 곳에선 한 마을 전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폐촌된 곳도 많았고, 그 밖에 부산, 평양 등 대도시로 몰려들어 날 삭버리 인부노릇으로 전락한 자도 부지기수”<sup>32)</sup>에 달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농촌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다.

셋째, 일본 국내에서의 실업문제 발생과 조선인의 내지도향의 억제 논의이

29) 『滿洲日日新聞』, 1933. 9. 3.

30) 土龍山 사건이란 1934년 3월 일본인 실험이민으로 제2차 무장개척민이 松江省 依蘭현으로 진입하면서 집단이주와 토지수탈에 반발하는 수천 명의 중국인을 일제가 학살한 사건이었다.

31) 『朝鮮通信』, 1934. 1. 9;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아시아 문화』 제18호.

32) 『삼천리』 제7권 제1호, 1935. 1. 1.

다. 이러한 조선 농촌의 궁핍농민이 1932~1933년에 걸쳐 일본 국내로 범람하면서 일본 노동시장에서 일본인은 물론이고 조선인의 실업과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조선인의 내지도향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만이 아닌 조선총독부도 그 단속에 부심하게 되었다.<sup>33)</sup>

이상, 제국권에 걸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1934년 3월 조선총독부 외사과는 「만주로 조선인 이주의 필요성과 그 호수」<sup>34)</sup>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규모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현재 농촌피폐와 소작쟁의의 빈발 원인은 주로 그 生計 유지에 필요한 경지면적 확보의 곤란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농촌의 갱생과 일조로서 과잉농가를 만주로 이주시키는 것은 만주의 자원개발은 물론이고 장래 조선을 이상농업지로 개발하는 데 참으로 긴급한 일이다. …… 때문에 조선농촌의 장래 갱생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매년 증가하는 3만 9,000호(1호당 5인 가족, 약 20만 명) 내외의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주를 위해서는 그 반수를 자유이민으로, 나머지는 집단이민으로 그 경비를 1호당 자유이민에 대해서는 100원, 집단이민에 대해서는 200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소요 총경비는 585만 원이 필요하다.

이상의 요지는 조선총독부가 제국권에 걸친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조선인의 만주 이민정책을 새롭게 구상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외사과는 1934년 5월 표 1과 같이, 이른바 「조선이민척식회사」라는 세 개의 이민회사 설립계획을 작성하였다.<sup>35)</sup> 나아가, 우가키 총독은 1934년 6월 동

33) 『大阪毎日新聞』, 1935. 11. 22.

34) 總督府外事課, 1934. 3, 「滿洲ニ朝鮮人ヲ移住セシムルコトノ必要性並ニ其ノ戶數」.

35) 조선총독부외사과, 1934. 5, 「滿洲ニ對スル朝鮮移民拓殖會社設立要綱」. '朝鮮人口問題對策'에 포함된 자료임. 조선총독부 외사과는 조선인 이민계획과는 별도로 1935년부터 제3차 빈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砂防사업, 林道開設사업, 墾田축조계획, 海山선 철도공사, 만포선 철도공사 등 실업구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을 방문해서 육군수뇌부를 비롯한 척무성,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등과 정치적 절충을 반복했고, 이윽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가키 총독은 “대량 이민의 시험대라 할 수 있는 안전농촌, 舊朝鮮 보병대 출신자의 자위이민, 척무성의 무장이민 등이 실패했던 것에 비해서 國民公等學校 졸업자와 그 외 특수훈련을 받은 일부 민간의 소집단 이민만이 순조로웠던 사실을 고려해서 총독부로서는 먼저 중심인물의 양성에 노력하고 이민교육과 척무정신의 함양 등 종래 경시했던 정신적 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sup>36)</sup>

이러한 우가키 총독의 성과에 힘입어 8월 조선총독부 다나카[田中] 외사과장은 그동안 준비했던 조선인 이민계획안과 구체적인 실행안을 완성해서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절충을 개시하였다.<sup>37)</sup> 나아가 9월 상순 이마이[今井] 정무총감이 동경을 방문해서 척무, 외무, 육군 등 관계기관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중심인물의 양성 등 세부적인 논의를 추진하였다.<sup>38)</sup>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일본 중앙정부도 1934년 10월 30일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을 발표하면서 조선인 만주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sup>39)</sup>

조선 남산지방은 인구조밀해서 생활궁핍한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남산지방민의 내지 도항자가 최근 급증함으로써 내지인의 실업과 취직난을 일층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종래부터 내지에 재주하는 조선인의 실업마저도 점차 심각하고 또한 이에 동반해서 조선인 관계의 각종 범죄, 임대분쟁, 그 외 제반의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내선인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 내선융화를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치안상의 우려할 만한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선과 내지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인을 선내에 안주시키는 일과 인구

36) 『中外産業新報』, 1934. 6. 3.

37) 『경성일보』, 1934. 8. 24.

38) 『만주일보』, 1934. 6. 23.

39) 內閣, 1934, 「朝鮮人移住對策ノ件」.

조밀지역의 인민을 만주로 이주시켜 내지 도향을 일층 감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선 내에 조선인을 안주시키는 조치와 조선인의 만주 이주대책 그리고 조선인의 내지도향 감소대책, 일본 국내에서 조선의 지도향상과 융화대책을 공포하였다. 나아가, 1935년 2월 조선총독부는 그동안 대외비로 취급해 왔던 조선인의 만주 이민계획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대이민 계획의 앞선기관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가 문제였으나, 총독부 직영안, 동아권업공사와 기타 동척 등 기설 회사의 활용안 등이 있고, 이에 대처하여 반관반민의 이민회사를 설치하는 등의 3안이었다. 이 3개안 가운데 결국 제3안인 대규모 이민회사 창립안으로 귀착되어 이것을 채용하지는 방침”<sup>40)</sup>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조선총독부가 1934년 5월 입안했던 이민안 가운데 제3안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3안의 경우, 앞서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1932년 선만농사회사 설립계획을 적극 계승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34년 5월 「20개년 100만 호 이주계획」을 심의했던 제2차 신경 이민회의에서 조선인의 대량이민이 일본인 입식지에 대한 無斷占有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선총독부안은 종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민자 규모의 축소와 수정이 불가피하였다.<sup>41)</sup> 수정안은 1935년 3월 조선총독부와 척무성 합동회의에서 척무성이 제출한 「만주농업이민근본방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었다.<sup>42)</sup> 당시 척무성안은 신경 이민회의의 쟁점과 조선총독부안을 절충한 것으로 그 요지는 자본금 3,000만 원의 만선개척(주)을 일본 법인으로 설립해서 1936년부터 15개년에 걸쳐 만주 및 북선지역에 집단이민 10만 호를 이식하고, 아울러 자유이민 6만 호를 입식한다는 계획이었다.<sup>43)</sup> 이후 1935년 9월 조선총독부는 자본금

40) 『동아일보』, 1935. 2. 8.

41) 『滿洲農業移民方策』(2.1, 2-1), 366~406쪽.

42) 『동아일보』, 1935. 3. 29.

43) 滿洲開拓史刊行會 編, 1980, 앞의 책, 160~161쪽.

3,000만 원의 선만척식(주)의 설립을 정식으로 공포하는 한편,<sup>44)</sup> 종래 조선인 이민사업 대행기관이었던 동아권업은 모회사 만철과의 협의를 거쳐 신규 이민 회사에 통합한다는 구상이었다.<sup>45)</sup> 결국, 1932년 이래 조선총독부가 주장했던 동아권업(주)의 통합문제는 1936년 1월 조선총독과 만철총재와의 회합을 통해 흡수·합병을 정식 결정하기에 이르렀다.<sup>46)</sup>

한편, 조선총독부와 척무성이 입안한 선만척식(주)의 설립계획은 회사의 국적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의견 차이에 직면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척무성은 조선인 이민회사의 국적을 일본 법인으로 하고, 경성에 본점을 두고, 만주국 신경에 지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관동군은 만주국에 설립하는 회사는 전부 만주국 법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주국 법인화를 주장하였다. 그 실태는 1936년 4월 1일 선만척식과 만선척식 설립 계획안에 대한 내각, 외무성, 대장성, 육군성, 척무성, 조선총독부, 대만사무국 등의 22명이 참가한 사무관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sup>47)</sup>

먼저 의문스러운 점은 어떤 이유로 母子 양 회사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회사로 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는 일본 국적의 회사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만주국 정부로서는 공사법에 의한 특권을 외국회사에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므로 그 수속이 번잡하게 된다. 만주사변 이후 일만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형식상 만주국을 존중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일본이 지배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의 자회사로 하였다. 더욱이, 이중국적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일만 불가분의 관계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 본 회사를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법률 해석이 난해한 법규를 만드는 것도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적·기술적·인적으로 양편으로 나누어 설립 하자는 것이다. 형식은 양자가 상이하지만, 실질은 임원진, 자본 모두 동일한 것으로 단지 조선 내 사업만이 본회사와 다르게 되는 것이다.

44) 『만주일보』, 1935. 7. 12.

45) 『경성일보』, 1935. 9. 12.

46) 『大阪朝日新聞』, 1936. 1. 26.

47) 對滿事務局, 1936. 4, 「鮮滿拓殖株式會社設立要綱案」.

이상, 관동군을 비롯한 육군성이 조선인 이민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만주국 법인화를 고집했던 것은 만주국이 형식상 주권국가임을 내세우면서도 조선인 이민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어쨌든, 1936년 1월 28일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은 관동군사령부에서 선만척식과 만선척식의 설립과 관련한 만주국과 공식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이 만선척식의 설립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조선인의 이민지 문제는 謎題로 남았다. 여기서 이민지 문제란 관동군이 조선인 이민을 간도와 동변 도(東邊道)로 한정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조선총독부는 만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선만척식의 설립은 자본금 2,000만 원으로 15개년에 걸쳐 집단이민 80만 명과 별도로 80~100만 명 규모의 자유이민을 규정하였다.<sup>48)</sup> 나아가, 1936년 3월 육군성, 척무성, 조선총독부는 양사의 설립 요강에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4월 1일 對滿事務局에서 관계 사무관 회의를 개최해서 원안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나아가, 표 2와 같이 5월 7일 양사의 설립요강<sup>49)</sup>은 제69회 제국의회를 통과했고, 이어서 법제국의 승인과 대장성의 추인을 획득함으로써 회사 설립에 관련한 일체의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sup>50)</sup>

48) 『경성일보』, 1936. 1. 28.

49) 對滿事務局, 1936. 4. 앞의 글. 같은 요강에서 밝힌 회사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총독부는 과거 4개년에 걸쳐 계획하고 특별의회를 통과한 선만척식회사는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선농의 생활권은 구 동북정권 시대에는 비적의 박해, 지방관헌의 苛斂誅求, 지주의 압박 등 이중 삼중의 위협에 직면했었다. …… 그러나 만주사변의 발발로 아국의 세력이 신장함에 따라 그들(조선인)도 아국에 귀의할 것을 염원하게 되었다. …… 만주 신천지를 찾아서 渡滿者가 점차 증가한 결과, 數所에서 滿人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내선 간에는 조선인 도항은 점차 증가해가는 경향으로 내지 노동계에 異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 내선 양자의 관계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정세를 고려해서 시급히 만주 이주자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내선 노동문제 조정에 기여하는 것은 현재 일만 양국의 급무이다. 따라서 선만척식회사를 설립해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0) 人高見成, 1941, 앞의 책, 14쪽.

〈표 2〉 선만척식(주)의 설립과 자금 계획

연차	수입						지출						잉여금		
	납입 자본금	당해년도 초 사업자금			단기 차입금	사채 발행	합계	사업자금			단기 차입금 변제	사채 상환금		집기 정리비	합계
		사업자금 회수금	직립금	기타				이주자 대부금	토지자금	민선척식 납입금					
1	8,000,000				60,000	8,060,000	400,000	7,500,000	-	7,900,000		18,563	44,000	7,962,563	97,437
2			97,437		100,000	1,500,000	150,000	800,000	576,227	1,526,227				1,526,227	171,210
3			171,210		100,000	5,000,000	800,000	800,000	3,991,764	5,091,764				5,091,764	179,446
4	8,000,000	33,845	186,039		219,354	8,219,354	800,000	800,000	4,878,943	5,978,943	260,000			6,238,943	1,980,911
5		103,817	18,000	1,994,911	2,116,728	4,500,000	1,200,000		5,011,181	6,511,181				6,511,181	105,547
6		182,710	21,000	119,547	323,257	6,000,000	450,000		5,856,811	6,306,811				6,306,811	16,446
7		271,636	22,000	30,446	324,142	6,000,000			5,675,145	6,000,000	150,000			5,825,145	498,997
8		399,952	34,000	512,997	946,949	5,000,000			5,294,177	5,294,177	650,000			5,944,177	2,772
9		419,289	49,000	2,772	471,041	2,656			4,823,697	4,823,697	650,000			5,473,697	-
10	14,000,000	3,582,585	188,875		3,771,460	1,000,000	18,771,460		7,500,000	7,500,000	2,656			8,602,656	168,804
11		392,885	150,000	168,804	711,689	5,000,000	5,711,689		3,783,410	3,783,410	1,700,000			5,483,410	228,279
12		273,401	152,000	243,279	668,680	5,000,000	5,915,092		3,715,092	3,715,092	230,000			3,945,092	
13		312,897	154,000	30,000	496,897	6,000,000	6,569,340		3,769,340	3,769,340	2,800,000			6,569,340	
14		307,705	154,000	30,000	491,705	6,500,000	6,991,705		3,615,990	3,615,990	3,300,000			6,991,705	
15		2,621,620	155,000	30,000	2,806,62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출처: 朝鮮總督府, 1936. 4, 「鮮滿拓殖株式會社設立要綱」.

### Ⅲ. 鮮滿拓殖(주)과 滿鮮拓殖(주)의 설립

다음은 표 3과 같이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던 선만척식(주)과 관동군이 주도했던 만선척식(주)의 설립 경위와 경영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표 3〉 선만척식(주)과 만주척식(주)의 설립 실태

구분	선만척식(주)	만선척식(주)
자본금	2,000만 원	1,500만 원
국적	일본국	만주국
본점	조선, 경성	만주국, 신경
감독자	조선총독	만주국, 산업부대신
주요사업	(1) 만선척식에 대한 투자와 사업자금 대부 (2) 서북선개척사업	(1) 동아권업의 매수 (2) 신규 조선인 이민 이식사업 (3) 재만 조선 농가의 통제집결 (4) 재만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사업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鮮滿拓殖株式會社/滿鮮拓殖株式會社五年史』, 26~70쪽.

#### 1\_ 鮮滿拓殖(주)의 설립과 경영체제

앞서 제국정부로부터 선만척식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우가키 총독은 1936년 5월 12일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를 비롯한 20명을 지명해서 회사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6월 4일 선만척식회사령<sup>51)</sup>을 공포하였다.<sup>52)</sup>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8월 1일 정무총감

51) 朝鮮總督府, 1936, 『鮮滿拓殖株式會社令案』. 鮮滿拓殖株式會社令은 총칙 33조와 부칙 9조의 구성이었다.

52) 『경성일보』, 1936. 9. 12.

이마이다 고토쿠[今井田清徳]를 비롯한 28명의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회사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나아가, 1936년 8월 25일 제1회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드디어 9월 9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창립 당시 선만척식의 초대 총재로 취임한 니노미야 하루시케[二宮治重]는 회사 설립의 목적을 ① 재만 조선 농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통제로 오족협화에 일조하고, ② 주로 남선지방의 과잉인구를 노동력이 부족한 만주국과 서북선 지역으로 이주시켜 자원개발과 국력 진흥에 기여하고, ③ 누년 심각한 내선 간 노동문제 완화와 조정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 설립의 배경과 관련하여 1936년 8월 조선총독에 취임한 미나미[南]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sup>53)</sup>

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선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경시하면, 만주 거주 100만 조선인이 반항하면, 오족협화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水泡로 돌아가고 만다. 나아가, 조선 통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조선인을 偏愛하면 만주인이 질투해서 이 또한 오족협화를 저해하게 된다. 그 점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 점에서 관동군과 총독부가 妙案이 없는 것 같다. 이 점을 잘 궁리하지 않으면 만주가 阿修羅場이 되면서 일본의 국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고 만다. …… 조선에서 경찰의 힘만으로 조선인 일본 내지도항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년 상당수가 密航함으로써 내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北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지만, 만약 북쪽을 폐쇄해서 만주 유입을 저지한다면, 내지로 점차 흘러들 것이다. 특히, 그러한 만주 出口을 폐쇄하는 무리를 범한다면, 100만 재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들 100만 조선인을 교묘하게 교화하고 국경 부근에 모범적인 朝鮮人村을 건설해서 연해주 거주 20만 조선인에게 보인다면 이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우리 측에 기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만주에 3개 혹은 4개 사단의 兵力을 증강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53) 二宮治重, 1937, 「朝鮮の近情と鮮滿拓殖會社に就て」, 日本外交協會, 11쪽.

이상의 지적은 미나마미 총독이 당시 조선인 만주 이민문제와 조선인 내지도 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주에서 조선인 이민자의 적절한 통제와 계획이민을 담당하는 선만척식(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선만척식(주)은 조선총독부 제령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회사로 그 존립 기한은 30년이었고, 회사 자본금은 2,000만 원으로 제1회 납입 자본금은 800만 원이었다. 나아가, 당초 계획은 자본금 2,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은 자회사 만선척식에 대한 투자와 나머지 500만 원은 북선개발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회사의 주주 총수는 38명 가운데 남만주철도(주) 10만 주를 비롯해서 동양척식(9만 9,900주), 조선식산은행(6만 주), 조선은행(4만 주)이었고, 이들 국책회사 4사가 발생 주식의 30%를 소유하였다. 또한,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을 비롯한 미쓰비시사[三井物産], 스미토모본사[住友本社] 등 당시 일본의 3대 재벌과 제일생명 등 9대 보험회사 그리고 조선인 자본가 민규식이 사장으로 있던 동일은행 등의 법인주주와 함께 나머지는 조선 굴지의 실업가에 한정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인 주주는 당시 조선인 자본가를 대표하는 민규식을 비롯한 방의석, 김연수, 최창학, 한상용, 손영목, 홍수길 6명이었다.

선만척식(주) 경영진은 회사령에 근거해서 총재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회사 총재는 조선총독이 임명권을 장악하였다. 선만척식(주) 총재는 당시 육군 중장 출신의 니노미야 하루시케<sup>54)</sup>였고, 이사는 와타나베 도요히코를 비롯한 5명과 감사 3명이었다. 경영진 가운데 조선인은 고원훈과 양재하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경영체제는 서무, 경리, 감리, 산업, 이민, 금융 6과 체제였으나, 1937년 직제개편에 따라 감리, 금융,

54) 二宮治重(1879~1945)은 岡山縣 출신으로 岡山中學을 거쳐 1900년 陸軍士官學校(제12기)를 졸업하고 다음해 6월 보병소위로 임관해서 보병 제20연대에서 근무하였다. 1904년 보병 제20연대장으로 1906년 러일전쟁에 출정하였다. 1910년 陸軍大學校(제22기)를 졸업하고, 1910년 참모본부원과 1912년 영국 유학을 거쳐 1913년 보병소좌로 승진하였다. 1915년 교육총감부 臨時軍事調査委員을 거쳐 1917년 보병 중좌로 진급해서 당시 육군상 大島健一 陸軍大臣의 비서관을 역임하였다. 1918년 육군성 군무과 과원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 수행했고, 육군대학 교관을 거쳐 1921년 보병대좌로 승진해서 참모본부 과장을 역임하였다. 1923년 근위보병 제3연

이민과를 통합해서 서무, 경리, 사업의 3과 체제로 재편되었다. 회사 직원은 참사, 부참사, 기사, 서기, 기수, 사무원, 견습생의 구성이었다. 나아가, 선만척식의 감독관청은 선만척식회사령에 근거한 조선총독부였다.

한편, 선만척식(주)은 영리회사가 아닌 특수회사였기 때문에 정부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토지의 매수와 개량, 개척민의 입식과 경영자금 등 다액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그 대부금 회수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영업 당초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이 설립 이후 3년까지 연 4%, 4년 이후 연 6%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8년차까지 이를 준하는 보조금 급부를 결정하였다. 단, 보조금 총액은 340만 원을 한도로 했고, 매년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 6%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선만척식(주)에 대해 제1년차 19만 원을 비롯해서 제5년차까지 총 47만 9,205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 2\_ 滿鮮拓殖(주)의 설립과 경영체제

만선척식(주)의 설립을 규정한 만선척식주식회사법은 1936년 6월 15일 만주국 국무원 회의를 통과하여, 26일 만주국 속령으로 공포되었다. 나아가, 1936년 8월 만주국 정부는 당시 관동군 고문 이네가키 이쿠오[稻垣征夫]를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을 지명해서 회사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척무성, 만주국 정부, 동아권업, 만철, 관동군 관계자들의 면면이었다. 나아가, 만주국 정부는 1936년 8월 20일 만주국 민정부대신 呂榮懷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을 지명해서 회사설립위

---

대장을 거쳐 1925년 육군소장으로 진급해서 영국 대사관 무관을 역임하였다. 1927년 보병 제2여단장을 거쳐 1930년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해 육군 참모차장에 취임하였다. 제5사단장을 마지막으로 1934년 예편하였다. 그 후 1936년 鮮滿拓殖會社 총재와 1940년 滿州拓殖公社 이사장을 거쳐 1944년 小磯內閣의 문부대신을 역임하였다. 秦郁彦 編, 2005, 『日本陸海軍總合事典』, 東京大學出版會.

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 25~26일 회합을 거쳐 9월 14일 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공칭 자본금은 1,500만 원으로 제1회 납입 자본금은 750만 원이었다. 당시 주주는 당초 회사설립 요강이 규정한 선만척식회사 혹은 그 임원 명의로 출자한다는 조건에 따라 선만척식(주) 총재 29만 9,400주를 시작으로 이사와 감사 6명이 나머지 600주를 소유하였다. 만선척식(주) 설립의 주요 목적은 조선 농민의 척식사업이었다. 제1차 계획은 설립년도부터 15개년에 걸쳐 15만 호(약 75만 명)의 조선 농민을 입식시켜서 자작농과 소작농을 창설한다는 계획이었다.<sup>55)</sup>

만선척식 경영진은 그 회사령에 따라 선만척식 경영진과의 겸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선척식 이사장은 모회사 선만척식 총재가 겸임하였다. 나아가, 경영체제는 설립 당초 총무부(서무과, 경리과, 금융과)와 사업부(기업과, 토지과, 농업과)의 2부 6과 체제였으나, 1937년 9월에 이르러서는 본사와 지점 그리고 출장소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40년 9월에 이르러 만선척식의 경영체제는 본사부문(서무과, 경리과, 기획과, 사업과)과 4개 지점(신경, 봉천, 연길, 목단강)과 北安출장소 체제로 변모하였다. 1940년 말 만선척식의 사원은 참사 6명, 부참사 10명, 기사 15명, 서기 126명, 기수 139명, 사무원 252명, 서기견습 5명, 사무견습 4명, 용원 116명, 촉탁 5명의 구성으로 합계 678명이었다. 나아가, 만선척식에 대한 감독관청은 만선척식회사령에 따라 만주국 산업부 대신이었다. 만주국 정부는 만선척식에 대해 법정적립금의 적립과 영업세와 토지취득세 그리고 분양등록세를 면제하였다.<sup>56)</sup>

이상,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전담하는 이민회사는 당초 조선총독부의 계획과 달리 선만척식과 만선척식이라는 二元體制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만선척식이 만주국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자금 전액을 일본국 법인 선만척식이 부담했던 반면, 만주국 출자는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양사의 경영진 임명권과 실질적인 통괄권

55) 人高見成, 1941, 앞의 책, 24~25쪽.

56) 滿洲國通信社, 1941, 『滿洲開拓年鑑』, 51쪽.

을 확보하는 대신에 만주국의 자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패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당초 조선총독부가 구상했던 이민계획을 척무성과 만주국 측이 적극 수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IV. 鮮滿拓殖(주)과 滿鮮拓殖(주)의 이민사업

다음은 1937년 이래 선만척식(주)과 만선척식(주)이 전개한 사업경영과 영업성적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자.

##### 1\_ 선만척식의 투자사업과 북선개척사업

선만척식(주)의 명목상 사업은 ① 서북선에서 조선인 이주자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경영 그리고 자금 대부, ② 서북선 조선인 이주자에게 필요한 건축물의 개조와 매매 임대, ③ 만주국에서 조선인 이주자를 위한 척식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주식의 인수와 자금 대부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선인의 서북선 개척 이민사업과 만선척식에 대한 투자와 사업자금 대부였다.

첫째, 서북선개척사업이다.<sup>57)</sup> 서북선개척사업은 1932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남선 농촌의 과잉인구 완화를 위한 북선지역 이주정책이었다.<sup>58)</sup> 서북선개척사업은 1938년부터 이후 8개년에 걸쳐 약 1만 호를 입식해서 장기적으로 자작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즉, 평안북도의 강계·자성·후창, 함경

57) 같은 시기 북선개척사업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북선수탈정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제27권을 참고.

58) 朝鮮總督府, 1934, 『朝鮮』 10월호.

남도의 장진·풍산·삼수·갑산, 함경북도의 무산으로 3개도 8개 군에 남선지역의 개척민을 입식시켜서 농경지를 개척하고 그 개척지에 식용작물인 마령저, 대맥, 연맥 등을 경작시키는 한편, 환금작물인 소맥, 채두, 완두 재배 그리고 공예작물인 아마와 감채 등을 재배시키는 것 외에 개척민에게 耕牛를 예탁해서 삼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1937년도 사업은 함경남도 갑산과 풍산지역을 중심으로 3,400정보의 토지에 약 190호를 입식하였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여비, 가옥건축비, 물자배급 등 입식자금으로 1만 4,850원 등 총입식경비는 6만 1,305원을 계상하였다. 1938년도에는 535호의 입식과 소요경비 16만 2,189원을 계상하였고, 1939년에는 입식호수 609호로 총소요경비는 60만 6,835원을 계상하였다.

둘째, 자회사 만선척식(주)에 대한 투자와 자금대부이다. 선만척식이 설립 직후 착수한 사업은 1936년 9월 12일 신경에 설립된 만선척식(주)의 발행 주식 30만 주(750만 원)의 인수였다. 이와 별도로 선만척식(주)은 자회사 만선척식(주)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부하였는데, 1937년 800만 원을 시작으로 1940년까지 합계 7,508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선만척식(주)은 1937년까지는 조선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했고, 이 가운데 800만 원을 자회사 만선척식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부하였다. 나아가 선만척식(주)은 1939년 제1회 정부보증 사채 1,224만 원을 흥업은행, 조선은행, 제일은행, 미쓰이[三井]은행, 미쓰비시[三井]은행, 스미토모[住友]은행 알선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자회사 만선척식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부하였다.<sup>59)</sup>

셋째, 이민자 교육을 위한 洗浦훈련소의 운영이다. 선만척식(주)은 만주국 송출 조선인 개척민에 대한 일정한 교육훈련과 중견인물 양성을 위해 1937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의 설치인가에 따라 강원도 평강군 세포에 이민자 훈련소를 개설하였다.<sup>60)</sup> 소요 용지를 취득해서 훈련소와 기숙사 등 필요 시설을 구비하고 1938년 초 만주 이주 희망자 가운데 105명을 선발해서 20여 일에 걸친

59) 『동아일보』, 1939. 8. 17.

60) 『경성일보』, 1938. 7. 29.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내용은 ① 황국신민의 덕성과 농민정신의 함양, ② 만주국 건국정신의 함양, ③ 이주지에서 농업경영상 필요 지식과 기능의 체득 등이었다. 훈련기간은 장기 10개월, 단기 5개월로, 1939년 말까지 훈련소 졸업생은 478명에 달하였다.

## 2\_ 만선척식의 이민사업과 성과

만선척식의 사업은 ① 이주자를 위한 필요토지의 취득과 경영, 자금 대부 그리고 기타 이주자의 안정 사업이었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착수한 사업은 ① 소요 토지를 매수해서 신규 조선인 이민을 입식하는 자작농 창정사업과 기존 이주 소작인을 대상으로 소작지를 매수하는 자작농 창정사업, ② 재만 조선 농민에 대한 필요 농경자금의 대부사업, ③ 회사 경영지구에서 조선인 교육, 위생 및 기타 제반 복리증진 사업이었다. 나아가, 1937년 이후 사업은 조선인 집결지를 간도와 동베이(안동과 봉천성) 및 길림, 빈강, 용강, 흥안남성 등 일본인 이민계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각 지구별로 이주 집결시켜서 통제와 함께 토지를 제공해서 농민의 정착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sup>61)</sup> 만선척식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동아권업(주)의 매수와 이민사업의 계승이다.<sup>62)</sup> 동아권업(주)은 1922년 1월 만주에서 토지취득과 수전개척 그리고 재만 조선 농민의 지도·보호를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주로 조선총독부와 대주주인 남만주철도의 지원으로 피난 조선인의 보호 안정을 위한 안전농촌 건설과 경영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동아권업은 만선척식의 설립으로 회사 재산을 만선척식에 매각하고 해산하였다. 동아권업(주)은 당시 만주와 내몽고에 걸쳐 약 11만 정보의 토지를 취득해서 직영농장과 관리농장 그리고 안전농촌의 세 가지 형태로 경영하였다. 만선척식(주)이 동아권업(주)으로부터

61) 二宮治重, 1937, 「在滿移住鮮農の現狀と將來」, 조선총독부, 『朝鮮』 6월호.

62) 東亞勸業株式會社, 1944, 『東亞勸業株式會社拾年史』.

계승한 농지는 경영토지 7,971정보(96만 6,920원), 관리토지 9만 2,928정보(104만 4,490원), 조지권 토지 49정보(1만 7,624원), 안전농촌 토지 9,845정보(322만 8,342원)였다. 동아권업 매수 이후 만선척식(주)은 영흥, 철령, 하동, 흥화, 삼원포를 중심으로 1937년부터 일정 연한을 정해서 연부상환에 따른 자작농 창정을 개시하였다. 1940년 말 당시 5개 안전농촌은 농가수 3,639호와 작부면적 8,423정보에 달하였다.

둘째, 조선인의 이민사업이다. 만선척식(주)의 기간사업은 신규 조선 이민의 입식 지원과 재만 조선 농민의 집결 통제 그리고 재만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사업이었다. 그 사업 개요는 1936년 8월 15일 만주국이 훈령으로 공포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에 근거하였다. 즉, 조선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켜 그들의 특기(벼농사)를 활용해서 ‘帝國의 聖戰’에 필요한 식량생산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사업 내용의 경우, ① 신규 입식 호수는 매년 1만 호로 한정한다. ② 신규 입식 지역은 간도성과 구동변도 23개 현으로 한정한다. ③ 소만 국경 지대의 조선인은 지정개소로 이주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당초 만주국 방침은 15개년에 걸쳐 영농 목적의 조선인 15만 호와 75만 명을 입식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이민의 입식 지역은 당초 관동군이 주장했던 간도와 동변도의 23개 현으로 제한되었지만, 종래 조선총독부의 주장과 같이 1938년 5월 만주국 이민정책의 수정과 함께 철폐되고 전 만주로 확대되었다. 이는 만주국의 조선 농민 이주정책이 조선 농민의 강제이주 폐지라는 原地安定主義와 集結主義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래 관동군이 주장했던 조선인 이민정책의 커다란 수정을 의미한다.<sup>63)</sup>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쳐 신규 조선 농가의 입식사업과 재만 조선인의 통제 집결 그리고 재만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① 신규 입식사업이다.<sup>64)</sup>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친 조선 농가의 신규 입

63)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편, 1939,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368~369쪽.

64)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크게 ① 통제이민과 ② 자유이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통제이민은 오로지 선만척식회사가 취급하는 이민이다. 회사이민은 원칙적으로 불가

〈표 4〉 만선척식(주)의 집단이민과 집합이민 실적

(단위: 호, 명)

지점명	사업지	부락수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신경지점	7	49	-	-	147	683	1,315	7,176	735	3,948	2,197	11,807
봉천지점	14	35	198	1,111	602	3,019	835	4,492	318	1,707	1,953	10,329
연길지점	11	79	2,392	12,325	1,894	9,647	1,074	5,750	550	2,994	5,910	30,716
목단강지점	3	11	-	-	-	-	912	5,134	-	-	912	5,134
북안건설사무소	2	24	-	-	-	-	-	-	2,810	6,274	2,810	6,274
정부관할	2	2	-	-	-	-	-	-	195	805	195	805
합계	39	200	2,590	13,436.0	2,643	13,349.0	4,136	22,552.0	4,608	15,728	13,977	65,065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71~74쪽.

식(집단·집합이민)은 표 4와 같이 신경, 봉천, 연길, 목단강, 북안건설 사무소, 정부취급 총 39개 사업지, 200개 부락을 중심으로 총이주농가 수 1만 3,997호, 이주민 수 6만 5,065명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집단이민이 총 4개의 개척단으로 3,494호 9,966명이었다.<sup>65)</sup> 나아가, 집합이민은 앞서 집단이민을 제외한 회사와 정부 그리고 금융회 취급으로 누계 농가호수는 1만 1,362호 5만 9,780명이었다. 나아가, 회사가 아닌 만주 정부가 취급하는 분산이민 혹은 연고이민은 1938년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1937년까지는 종래와 같이 자유이민이었다. 분산이민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이주증명서를 지참해야 했으

을 2회에 걸쳐 본부 외무부의 협력으로 조선 각도에서 이민자를 모집하여 이민열차를 임대해서 회사가 지정하는 이민지에 입식하는 것이다. ② 자유이민은 공공기관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이주하는 이민을 가리킨다. 당국은 통제이민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자유이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해 왔다. 조선총독부, 1938, 『朝鮮』 6월호.

65) 집단이민은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그리고 만선척식이 만주 이민에 필요한 원조와 알선으로 이주비, 경지, 영농자금, 가옥 등 입식 조건을 제공하고 장래 자작농으로 창정하고자 하는 이민을 가리킨다. 집합이민은 조선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집단이민에 준하지만, 이주비와 이주 후 일정분의 식량비는 자기가 조달한다. 경지는 만선척식이 알선하고, 일정기간 회사의 소작농으로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編, 1939, 앞의 책, 374~378쪽.

며, 조선의 신의주, 만포진, 혜산진, 상삼봉, 남양 그리고 만주국의 안동, 집안, 장백, 개산도, 도문 5개소에 개설된 만주국 개척총국의 변사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개년에 걸친 분산이민 농가의 호수와 이민자 수는 1만 1,771호 4만 1,252명이었고, 이민자는 주로 경기도 이남의 남선지역 농민이었다.<sup>66)</sup> 그 결과,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친 신규 조선인 이민자 총농가 수는 3만 1,275호 13만 3,746명을 기록하였다.<sup>67)</sup>

② 재만 조선 농민의 통제·집결사업이다. 같은 사업은 만주 각지에 散在浮動하는 재만 조선인의 경제적 안정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켜 자작농을 창설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에는 신규 입식과 동일하게 간도와 동변도 일대의 지정 장려지역 23개 현과 별도의 16개 현에 한정해서 실시하였으나, 1938년 이민정책의 수정과 함께 지역 제한도 철폐되었다.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친 재만 조선 농가의 집결 통제는 표 5와 같이 신경, 봉천, 연길, 목단강의 4개 지점을 중심으로 총집결호수는 2,828호, 이주자 수 1만 2,668명이었다.

〈표 5〉 만선척식(주)과 재만 조선 농민의 통제 집결 실적

(단위: 호, 명)

지점명	성현	부락 수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신경지점	7	19	650	2,580	29	113	172	805	65	264	919	3,762
봉천지점	4	16	1,157	5,385	56	281					1,213	5,666
연길지점	2	2	55	208	11	67	22	114			88	389
목단강지점	2	6	176	792	123	596	238	1,146	71	317	608	2,851
합계	15	43	2,038	8,965	219	1,057	432	2,065	136	581	2,828	12,668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71~74쪽.

66) 1938년 2월 4일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제1회 도별 이민자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를 대상으로 총 2,845호, 1만 4,182명이었다. 만주 이주지역은 간도와 길림성 그리고 통화성이었다. 朝鮮總督府, 1938, 『朝鮮』 3월호.

67) 滿洲國通信社, 1941, 앞의 책, 276~296쪽.

〈표 6〉 만선척식(주) 재만 조선 농민의 자작농 창정 실적 (단위: 호, 정보, 엔)

연도	호수	경지면적	대부금액
1937	1,786	6,744	1,360,421
1938	3,617	12,516	1,340,367
1939	2,932	18,288	2,158,097
1940	989	4,031	1,279,325
합계	9,324	41,579	6,138,210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114쪽.

③ 재만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사업이다. 본 사업은 종래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이었던 재만 조선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는 이른바 ‘금융자작농창정’사업이다. 즉, 이들 재만 조선 농민이 소작하는 중국인 소유 전답을 회사가 중국인 지주로부터 매입해서 이를 연부상환 조건으로 조선 농민에게 양도해서 자작농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1937년 이후 4개년에 걸친 재만 소작 조선인의 자작농 창정 호수는 표 6과 같이 9,324호였고, 경지면적은 4만 1,579정보, 대부금은 613만 8,210원에 달하였다.

셋째, 입식토지의 취득과 관리사업이다. 만선척식(주)은 신규 조선 이민의 입식 지원, 재만 조선 농민의 집결 통제 그리고 재만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을 위한 토지취득 사업이다. 만선척식은 설립 이래 관동군, 만주국 정부, 協和會 지원으로 적극적인 토지 획득을 추진하였다. 회사의 취득 토지는 동아 권업(주)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11만 794정보(525만 7,377원), 회사가 설립 이래 직접 매수한 토지 23만 7,214정보(670만 4,580원), 조선인 소작농의 자작농 창정을 위해 중국인 지주로부터 매수한 토지 4만 1,579정보(613만 8,210원)으로 합계 38만 9,587정보, 구입금액은 1,810만 137원에 달하였다. 나아가, 구입 토지의 관리는 자작농 창정 계약지, 금융자작농 창정지, 자작농 창정 예정지, 소작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넷째, 금융 대부사업이다. 만선척식(주)은 신설부락 및 회사의 경영농장에 거주하는 조선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의 대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농가에 대한 대부사업은 만주국이 공포한 금융합작사법에 따른 금융연합회가 담당하였다. 소요자금의 일부는 회사가 금융연합회에 일괄 대부했지만, 1938년 이후 폐지되었다. 1940년 말 현재 회사의 금융대부 상황은 안 전농촌 37만 1,898원, 집단개척민 197만 7,170원, 집합개척민 38만 113원, 금융자작농 524만 5,031원, 각종 농장 1,162만 2,612원, 기타 23만 7,936원으로 합계 1,984만 4,763원에 달하였다. 대부금의 운영은 단기대부 876만 9,585원과 장기대부 1,106만 5,178원에 달하였다.

다섯째, 기타사업이다. 회사는 개척정책에 필요한 가축 공급을 위해 1937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된 만주축산(주)에 대해 75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아가 1938년에는 자본금 1,000만 원의 만주곡량(주)이 설립됨에 따라 사업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50만 원을 출자하였다. 또한, 회사는 개척민에 대한 원활한 耕牛 공급을 목적으로 2개소의 목장을 개설해서 소, 말, 양의 번식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회사는 봉천과 왕청문에 각각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시에 영흥농장계연합회 정미소의 위탁·경영으로 매년 7~8만 석의 정곡을 만철 소비조합 등 대도시에 공급하였다. 다음은 개척민의 입식 교육을 위한 江密峰훈련소를 운영하였다. 즉, 조선 농가의 원활한 입식을 위해 1939년 초 길림성 강밀봉에 개척민 훈련소를 개설하였는데, 같은 해 10월부터 조선과 만주국 현지로부터 55명의 훈련생을 입소시켰다. 훈련 내용은 선만척식(주) 세포훈련소와 마찬가지로 정신교육과 국가관의 함양 그리고 농업경영 능력의 배양이었다. 이 외에도 만선척식은 조선인 개척민에 대한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지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 3\_ 사업성과와 수지구조

양사의 영업성과와 수지구조이다. 먼저, 선만척식은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8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750만 원은 자회사 만선척식에 출자하였다. 나머지 50만 원은 서북선개척사업에 충당하였다. 회사의 주력사업은 자회사 만선척식에 대한 투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공급을 위해 1937년부터 매년 조

〈표 7〉 선만척식(주)과 만선척식(주)의 차입금 내역 (단위: 원)

선만척식			만선척식		
연도	차입처	금액	연도	차입처	금액
1937	조선은행	4,000,000	1936	조선총독부	108,026
	일본흥업은행	4,000,000		남만주철도	2,544,090
1938	일본흥업은행 외 5은행	16,500,000		동양척식	62,461
1939	조선은행	5,000,000	1937	조선총독부	108,026
	일본흥업은행	5,000,000		남만주철도	1,375,684
1940	조선은행	8,250,000		동양척식	32,153
	일본흥업은행 외 4은행	6,250,000	선만척식	6,550,000	
	동양척식	3,280,000	조선총독부	108,026	
			1938	남만주철도	1,375,684
				선만척식	16,000,000
			1939	조선총독부	108,026
				남만주철도	1,375,684
				선만척식	21,650,000
			1940	만주흥업은행	2,000,000
				조선총독부	108,026
				남만주철도	1,375,684
				선만척식	28,930,000
				만주흥업은행	2,000,000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140~142쪽.

선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차입 내역은 표 7과 같이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쳐 함께 5,228만 원에 달하였다. 이는 납입자본금의 6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만척식의 대규모 차입은 사채 발행의 지연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자회사 만선척식은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모회사 선만척식 출자분 750만 원이었지만, 사업비는 조선인 개척민의 입식 원조와 통제 집결, 개척지

의 매수 개량, 개척민의 가옥 건설 등으로 막대한 금액에 달하였다. 나아가, 그 성격은 고정자본이었기 때문에 자본금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선척식은 사업 당초부터 막대한 자금차입이 불가피하였다. 그 차입 실태는 표 7과 같이 1936년도 271만 4,577원을 시작으로 1940년 3,241만 3,710원

(표 8) 선만척식(주)과 만선척식(주)의 영업성적(1940년 말) (단위: 원)

자산			자본과 부채		
과목	선만척식	만선척식	과목	선만척식	만선척식
영업용토지	61,566	2,802,222	자본금	8,000,000	7,500,000
영업용건물	71,617	2,109,292	법정적립금	19,500	
수목	64,827	8,798	사원신원보증금		191,391
영업집기/기구	12,191	358,073	토지건물양수액		487,656
동물	3,221	123,420	선만척식계정		119,940
저장품	405	1,422,054	사채	12,240,000	
주식	7,500,000	1,750,000	차입금	17,780,000	32,413,710
대부금	28,930,000	19,834,763	당좌차월	14,900	7,441,955
사채발생차금/발행비	194,664		예탁유가증권	10,500	
만선척식계정	309,949		가수금	73,799	508,362
매출금		1,244	미불금	233,144	532,016
국채	10,646		미경과계정	76,240	
현금과 예금	4,625	137,052	당기이익금	1,218	
가불금	17,426	926,240	당기순이익		246,085
농촌건설비		14,954,476			
토지건물양도금		3,473,465			
개척훈련소건설비		91,002			
미수금	1,196,611	1,257,307			
미경과계정	71,550	191,702			
합계	38,449,298	49,441,110	합계	38,449,301	49,441,115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25~26쪽.

에 달하였다. 이러한 양사의 영업실태는 표 8과 같이 1940년 말 대차대조표와 같았는데, 총자산의 증가추이는 선만척식의 경우 1936년 말 2,012만 원에서 1940년 말 5,044만 원을 기록했던 반면, 만선척식은 1936년 말 1,806만 원에서 1940년 말 5,694만 원을 기록하였다. 5개년에 걸쳐 양사의 총자산 증가 규모는 선만척식 2배 증가에 대해 만선척식은 3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모회사에 비해서 자회사 자산의 확대 추이는 양사가 二身同體의 경영체제를 전제로 했고, 실질적인 조선인 이민사업의 기축사업은 자회사 만선척식이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1936년부터 1940년에 걸친 양사의 손익구성이다. 선만척식의 평균 총이익금은 94만 5,107원에 대한 평균 총손실금 76만 6,218원으로 평균 순이익금은 17만 8,889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자회사 만선척식의 평균 총이익은 313만 2,878원, 평균 총손실금 296만 7,358원으로 평균 순이익은 16만 5,520원을 기록하였다. 양사의 1940년 말 손익구성은 표 9와 같이 선만척식의 수익은

〈표 9〉 선만척식(주)과 만선척식(주)의 손익구조(1940년 말) (단위: 원)

이익		지출					
선만척식		만선척식		선만척식		만선척식	
대부금이자	1,172,136	개척지수입	1,968,261	차입금이자	1,083,519	개척지경영비	541,554
기타 이자수입	5,915	농지수입	1,680,808	유가증권차입료	215	농지경비	663,176
주식배당금	246,085	안전농촌수입	322,145	지불수수료	1,183	안전농촌경비	31,932
척식훈련소수입	329	개척훈련소수입	602	본사비	214,354	개척지훈련소경비	10,779
수수료수입	9	정미수입	4,963	척식훈련소비	10,112	총계경비	1,514,618
잡수입	11,499	總計수입	814,375	서복선개척비	4,142	이자지출	1,738,573
		목장수입	300	영업용건물집기	4,040	잡지출	26,012
				사채발행비상각	23,410	목장경비	14,313
				잡손	94,102	정미경비	4,411
						당기순이익	246,085
합계	1,435,973	합계	4,791,454	합계	1,435,077	합계	4,791,453

출처: 人高見成 編, 1941, 앞의 책, 25~26쪽.

주로 자회사 만선척식으로부터의 대부이자와 주식배당이 전체 수익의 90%를 차지했던 반면, 지출에서는 차입금 이자와 본사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만선척식의 경우, 수익에서는 개척지 수입과 농지수입이 중심이었던 반면, 지출에서는 總計費와 차입금 이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손익구조는 모회사 선만척식이 만선척식에 대한 투유자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했던 반면, 만선척식은 조선인 개척농민에 대한 토지임대와 소작료 수입이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양사의 이익금 처분은 주주배당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상, 조선인 이민과 재만 조선인에 대한 자금공급과 각종 지원책은 조선총독부가 통괄하는 선만척식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만주국 법인 만선척식에 전액 공급하는 체제였다. 나아가, 만선척식이 만주국 특수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은 물론이고 사업비 전액을 일본국 법인 출자라는 변칙적인 형태를 채용했던 것은 역시 이민사업의 리스크와 낮은 수익성 때문이었다. 만선척식은 만주중앙은행과 만주흥업은행으로부터 차입했지만, 출자회사 선만척식도 조선은행과 일본흥업은행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서 만선척식에 공급하였다. 즉, 만선척식은 만주 국내와 조선으로부터 이중의 자금조달 경로를 활용해서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양사의 자금조달은 그 알선기관이 상이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의 자금조달 창구는 유효하게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태는 만주국이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괄권을 확보하면서 이를 관장하는 조선총독부의 이민정책에 편승해서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했음을 시사한다.

## V. 滿鮮拓殖(주)의 해산과 滿洲拓殖公社

한편, 선만척식은 1941년 6월 마지막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을 결정하였고, 자회사 만선척식은 당시 일본인의 이민기구였던 만주척식공사에 통합되었다. 즉, 조선인 이민사업은 종래 일본인 이민을 전담했던 만주척식공사에 일원적으로 통합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 1\_ 이민정책의 수정과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

양사 통합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1939년 12월 22일 일만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이었다. 그 요지는 “만주개척공사를 재편해서 만선척식회사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개척사업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각종 개척민에 대한 공정한 보도 조성과 민족협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제국정부는 만주 개척사업의 일원적 재편을 위해 관계당국과 1년 6개월에 걸친 조정을 거쳐 1941년 6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앞서 1939년 12월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 공포에 앞서 만주 관동군 참모부 과장이었던 가타쿠라 다다시(片倉衷) 중좌<sup>68)</sup>는 1938년 말부터 종래 조선의 만주 이민사업 재편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 「이민 근본 대책 결정을 위한 중요 사항 검토 촉진에 관한 건」과 「이민 근본 대책 결정을 위한 중요 검토사항」을 작성하였다. 같은 방침에 근거해서 관동군은 만주척식의 개조에 따

68) 片倉衷는 1898년 仙臺 출신으로 191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제31기), 1928년 육군대학교 졸업(제40기), 1930년대 보병대위로 관동군 참모부 소속으로 만주사변에 관여, 1933년 육군성 참모본부 제2부 제4과 제4반에 배속, 1934년 보병소좌로 진급해서 육군병기본장겸 군무국 소속으로 對滿사무국 사무관, 1937년 관동군 참모, 1938년 보병중좌로 진급해서 관공군 제4과장, 1939년 보병대좌로 진급, 1941년 관동군 방위참모, 1944년 소장으로 진급해서 1945년 제202사단장에 취임, 1991년 사망했다.

른 개척사업의 원활화와 신속화를 꾀하는 한편, 만선척식과의 통합에 따른 ‘척식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책을 강구한다는 것이었다. 즉, 입식지역의 취득, 배분, 영농방식, 이민을 취급하는 여러 기관과 내선인의 입식, 원주민 보도 등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쇄신을 위한 이민기구의 일원적 재편을 강조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책이 바로 만주척식공사의 개조<sup>69)</sup>와 함께 만선척식공사와의 통합 구상이었다.

나아가, 1939년 1월 7일 관동군은 신경에서 개최한 일만척식공동간담회에서 「만척개조와 만선척의 통합 요강」을 제출하였다. 같은 자료는 일만관계 강화와 민족협화의 구현 그리고 산업개척의 촉진을 위한 근본방침으로 개척 조성기관의 일원적 통합을 위해 만주척식공사와 만선척식의 통합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통합방법은 만주척식을 개조·증자해서 만선척식을 매수한다는 것이었다. 만주척식의 증자는 일만정부가 각각 50%를 출자하였다. 새로운 회사는 정부 보조기관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민지 건설과 경영, 원주민의 국내 이주와 轉住의 보도·조성이었다. 즉, 새로운 회사의 업무는 이주자의 입식 알선, 이주지의 건설과 경영에 대한 지원, 이주자에 필요한 금융과 소요 물자의 구매, 배급 및 생산물의 판매 알선 등 협동조합 중앙회 업무, 개척용지의 관리와 처분 등이었다.

## 2\_ 滿鮮拓殖(주)과 滿洲拓殖公社의 통합 논의

그러나 간담회에서 정부 측과 민간위원 사이에 양사의 통합과 관련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39년 4월 이래 수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거쳐 8월

69) 滿洲拓殖公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37년 8월 공칭 자본금 5,000만 원(1941년 증자로 6,500만 원)으로 설립, 발행주식 100만 주, 납입자본금 5,750만 원이었다. 만주척식공사는 일본인 이주자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 이주자에 대한 자금대부, 이주용지의 취득과 관리 분양, 이주자에 필요한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만주국 관내에 입식하는 일본인 개척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조성 그리고 지도사업 일체를 담당하였다. 滿洲國通信社, 1941, 앞의 책, 55쪽.

척무성, 대만사무국 그리고 육군성 관계자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사의 통합문제를 논의하였다. 양사 통합과 관련하여 양측은 만주국의 이민정책으로서 일본인 이민은 장려하고, 조선인 이민은 통제해야 한다는 양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대립의 쟁점은 중일전쟁 장기화의 와중에서 과연 만주국의 민족협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한 통합 논의였다. 정부 측은 만주국의 건전한 육성과 민족협화를 위해 제만 중국인과 조선인의 민심을 안정화시키고자 만주개척기구의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하시모토 텐자에몬[橋本傳左衛門] 등 민간위원 측은 오족협화를 위해 대규모 일본인 이민이 제일 목표이며, 일본인 이민을 중심으로 만주국 건국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일만불가분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양사의 통합이야말로 이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먼저, 양사 통합을 반대한 민간위원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주개척공사를 통한 내지인 개척민의 이주는 점차 순조롭게 진전되는 와중에서 그 사정을 전혀 달리하는 조선인 이민을 취급해 왔던 만선척식과의 통합은 내지 개척민의 송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내지인 개척민 송출에 전력하고 경주해야 하는 시기에 만주척식공사가 동시에 조선인 개척민의 지도·조성을 담당한다는 것은 여력의 분산을 초래해서 내지인 송출의 주요 사명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현재, 만주개척공사에서 내지 개척민에 대한 취급과 조선인의 취급은 예를 들어, 개척민의 토지면적, 융통금액, 금리 등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합 후 동일회사에서 양자를 구별해서 취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셋째, 당국의 설명과 같이 양사 통합 후에 내지인과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민족협화 혹은 조선 통치와 관련하여 오히려 민족 간의 불화를 유발하고 융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만주척식공사는 일만일체의 국책으로 양국 정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공사 설립 2년의 경험으로 다시 이를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너무 조

70) 岡部牧夫, 1990,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제3권, 不二出版, 447~449쪽.

급한 방책이다. 오히려 신중한 고려와 함께 점차 조선인을 지도해서 결국 조선인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다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양사 통합을 추진했던 척무성과 관동군 그리고 육군성을 포함하는 정부 측의 입장이다. 그에 앞서 1939년 7월 4일 회합에서 당시 양사 통합을 주도했던 관동군 측의 가타쿠라 중좌는 민간위원의 반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sup>71)</sup>

만주인의 인심 파악과 민심 안정의 고려 또는 개척정책의 진화성을 고려하면, 본 정책(만선척식의 통합)의 실현은 필수의 문제이다.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 만주에서 개척사업은 진행 중이고, 그 양적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만주에서 정치, 행정, 사회적 은혜는 일본인과 중국이 중심이고 조선인과 몽골인은 부수적이다. 이는 내선일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래 연해주, 시베리아 정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만주에서 일본인 개척민의 조성은 조약에 의해 공명한 기관이 행하고 있지만, 조선인 개척민의 기관은 관동군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인민처리위원회라고 하는 비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확연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주에는 반만 항일 기운으로 북만 이상국가의 면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형세와 함께 작년도에 북만으로 조선인을 입식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국경방면에는 일본인과 중국인뿐이다. 조선인을 입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인은 그러한 조선인 애무의 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본안에 반대하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하지만, 일한합병 이래 20년 아직 일본인은 조선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래서는 만주인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의를 양해 협력해서 만선척 통합의 실현에 노력해주시 바란다.

다음, 정부 측이 제기한 통합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주국의 건전

71) 岡部牧夫, 1990, 앞의 책, 143~144쪽.

한 발전을 위해서 민심의 파악과 안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족협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기구는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금번 만주국 개척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내선인의 개척민에 대해 두 개의 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족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심의 안정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조선 통치를 고려해서라도 2,000만 조선인을 만주국 건국의 聖業에 참여시키는 것이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척정책의 근본적인 개조와 관련해서 내선인의 관계를 一環의 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셋째, 회사를 통합한 경우, 동일회사가 사명을 달리하고, 또한 대우와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상의 지장만이 아니라 시급한 내지 개척민의 송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지만, 회사의 운영, 특히 인사를 신중히 하고, 조선인의 이주자 수를 적당히 제한한다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사의 본래 사명과 관련해서 만주척식공사는 내지인 개척민의 적극 송출기관인 반면, 만선척식은 조선의 무질서한 북만주 진출을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양사의 통합은 물과 기름과 같다는 논의도 있지만, 양사 설립의 연역에 비추어보면, 양사의 통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섯째, 만주국 건국의 성업은 일만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이 달성할 수 있다. 만주국 정부는 만주 개척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내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만주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甲論乙駁의 결과, 당시 육군차관은 양사 통합문제에 관한 소견에서 만주국이 내세운 오족협화의 실현과 대국적 견지에서 제국정책의 실현 그리고 조선과 만주에서 양사 통합을 희망하는 조선 통치상의 고려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대장성 측이 척무성에 대해서 ① 통합에 따른 내지 개척민의 송출에 절대적으로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② 통합 후 회사의 운영, 특히 인사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 ③ 만일 통합의 결과가 소기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이를 환원해서 장애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양사 통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2명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위원이 앞서 척무차관의 답변을 양해함으로써 양사 통합이 결정되었다.

### 3\_ 선만척식의 해산과 만선척식의 통합

이러한 양사 통합단계에서 발생한 관계기관의 대립은 1939년 12월 「만주개척 정책기본요강」 공포를 통해서 일단락되었다. 구체적인 통합은 1940년 6월 4일 종래 만선척식(주)의 이사장이었던 니미야가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만주척식공사의 신임 총재로 임명되었다.<sup>72)</sup> 이후 8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 9월 양사의 구체적인 통합안을 결정했고, 1940년 12월 6일 통합준비위원회는 현지안을 완성해서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1940년 12월 28일 대만사무국은 사무관회의를 통해서 만주척식공사와 만선척식(주)의 통합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sup>73)</sup> 그 방침은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에 근거해서 만선척식(주)을 만주척식공사에 통합해서 개척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개척지의 건설과 경영 그리고 그와 관련한 원주민의 보도에 관한 각 민족의 공정 타당한 조성과 개척정책의 통제적 대행에 따른 민족협화의 적극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은 ① 만주척식공사가 만선척식의 영업 전부를 매수하고, 만선척식은 해산한다, ② 매수금액은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매수금은 만주척식의 자본금을 1,500만 원으로 증자해서 충당하고, 이는 일만 양 정부의 절반 출자로 한다. 일본 정부 출자액 750만 원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④ 만선척식의 차입금 이자, 선만척식의 발행사채는 만주척식이 계승하고, 이를 일만 양 정부가 보증한다. 기타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주척식의 발행사채로 대체한다, ⑤ 선만척식은 해산 후에도 그 주주인 조선은행, 동양척식 등 조선 관계기관이 신규 조선인 개척사업을 위해 만주척식공사의 자금조

72) 人高見成, 1941, 앞의 책, 186쪽.

73) 對滿事務局, 1940. 12, 「滿洲拓殖公社, 滿鮮拓殖株式會社統合實施要綱」.

달에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관계당국은 1년여에 걸친 신중한 논의를 거쳐 1941년 4월 신경에서 양사의 통합 조인식을 개최하고 만선척식의 총자산을 7,503만 9,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 후 양사는 5월 23일과 28일에 양사 통합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통합준비를 완료하였다. 나아가, 1941년 6월 1일 양사는 만주국 수도 신경에서 정식으로 통합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인 이민을 담당했던 만선척식이 만주개척공사에 흡수·통합되면서 재만 조선인의 입식 혹은 신규 조선인 이민정책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만주개척공사는 개척부 경영과 가운데 제2경영계와 개척금융부 내에 제2금융부를 설치해서 조선인 개척민을 특별 취급한 것 외에는 전부 일본인 개척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모회사 선만척식(주)은 1941년 1월 120만 원의 평가자산을 동양척식(주)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1941년 6월 경성에서 마지막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해산을 결정하였고, 선만척식회사령도 같은 해 12월 폐기하였다.<sup>74)</sup> 선만척식은 주요 투자회사였던 만선척식이 만주척식에 통합됨으로써 북선개척사업만이 남게 되면서 회사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선만척식의 해산을 결정하고, 북선개척사업을 동양척식에 양도시키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즉, 동양척식이 1941년 1월 말 현재 선만척식으로부터 인수한 서북선개척사업의 자산 내역은 국유 차수지 약 1만 1,624정보, 이주농가 1,260호, 이주민 7,177명으로 자산 평가액은 129만 7,199원이었다. 이후 동양척식은 1942년 10월 선만척식의 북선사업을 계승해서 100% 출자의 북선개발(주)을 설립하였다.<sup>75)</sup> 당시 북선개발(주) 사장은 와타나베 도쿠시로 [渡邊得司郎]였고, 자본금 500만 원(납입자본금 250만 원)이었다. 이상, 1937년 이래 관동군과 제국정부가 종래 조선인 이민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만선척식을 만주척식에 통합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던 것은 역시 제

74) 東洋拓殖株式會社, 1941, 9, 「鮮滿拓殖株式會社解散ニ關スル件」.

75) 東洋經濟新報社, 1943, 『朝鮮産業年報』, 131쪽.

국통치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첫째,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인의 적극적인 전시협력과 민족협화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만주국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국인의 민족적 民心離反을 고려하면, 종래 민족차별적인 조선인 이민정책의 수정은 민심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문제였다. 일제는 1940년경에 이르러서야 일만일체와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내세우며, 재만 조선인을 만주국의 구성분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제가 만주국의 오족협화와 조선에서의 내선일체라는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서 재만 조선인을 대륙진출의 첨병으로 내세우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1937년 이후 만주 이주비의 과중한 부담과 이민자 감소의 문제이다. 1937년 이래 선만척식이 신규 만주 이주민에게 지급하는 일반 이주비를 비롯해서 소작료 납입, 자작농 창정을 위한 토지대금 상환은 이주민의 입장에서 과중한 부담이었다. 실제로, 이주 초년도의 경우, 이주민의 입장에서 60여 원의 적자계상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농민들은 만주 이주를 주저하게 되었다.<sup>76)</sup> 또한, 만주 이주 조선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이 조선 전역에 널리 유포되면서 1939년 이후 신규 이민자 모집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당시 만주국 명예총영사였던 김연수 등 조선인 유력자를 내세워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독려하는 이른바 ‘선만척식의 밤’을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77)</sup>

셋째,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군수공업화의 영향이다. 전쟁경제의 진전과 함께 일본 국내의 석탄광업 등 중요 군수산업은 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1939년부터 조선총독부의 관 알선을 통한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sup>78)</sup> 나아가, 조선에서도 1930년대 후반 급격한 군수공

76) 『朝鮮通信』 제137호, 1937.

77) 鮮滿拓殖株式會社, 1941, 『大陸の開拓と半島同胞』.

78) 朴慶植, 199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업화로 인해 남선지역 과잉노동력이 북선 공업지대로 대거 이주하는 산업노동력의 급격한 유동화가 현재화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조선인 만주 이민자의 감소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만주국에서도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일본 자본의 대규모 만주 투자에 따른 대량의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면서 1932년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入滿制限 조치의 철폐와 함께 재만 조선인 농업노동력도 공업노동력으로 유동화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sup>79)</sup>

## VI. 맺음말

이상, 1930년대 초반 만주국 건국기 재만 조선인 혹은 조선인의 만주 이민문제는 일제의 입장에서 제국통치의 딜레마이자 모순의 불씨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재만 조선인 혹은 조선인 만주 이민은 대륙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의 貯水源이자 제국팽창의 尖兵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sup>80)</sup> 1936년 선만척식(주)과 만선척식(주)의 설립 경위와 경영 실태 그리고 1941년 양사의 해산·통합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1년부터 1936년 선만척식(주)의 설립에 이르는 조선인 이민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이민회사 설립 구상과 실행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은 ①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민회사의 동일 회사안과 별도 회사안, ② 이민회사의 만주 법인안과 일본 법인안, ③ 이민회사 신설안과 동아권업 개조안, ④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일 지대론과 지역 분리론, ⑤ 사업주체의 반관반민형과 민간형이었다. 그러나 선만척식과는 별도의 만선척식의 설립이라는 이원적

79) 朝鮮總督府, 1940, 『朝鮮』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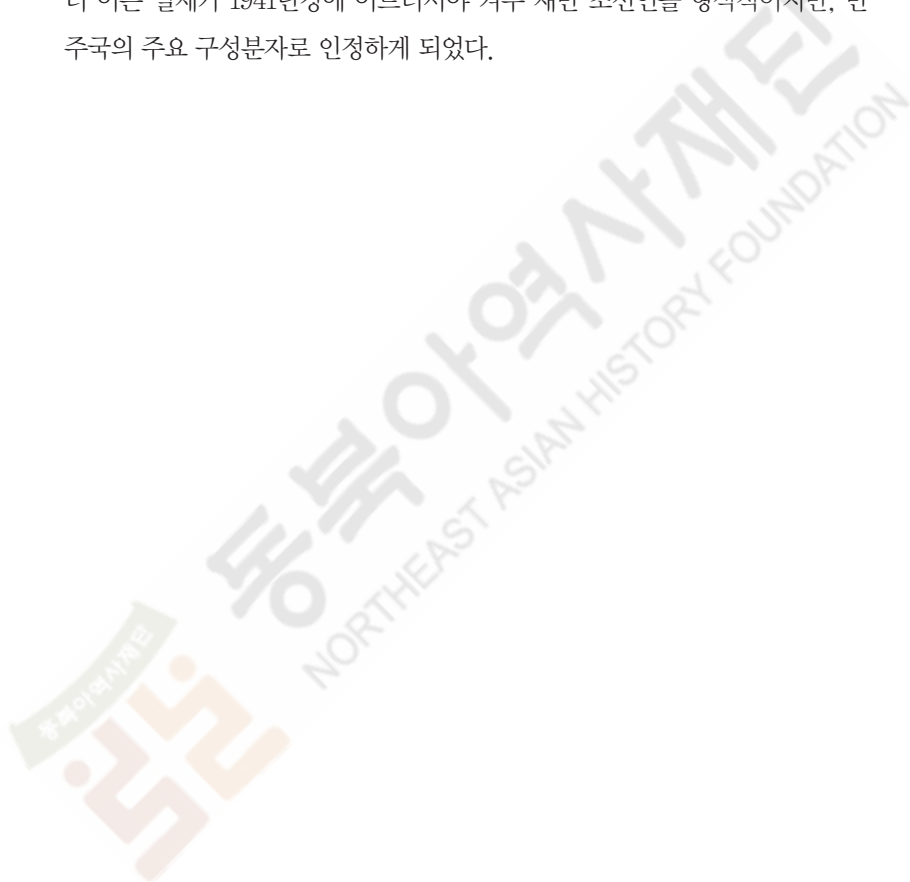
80) 조선총독부외사부척식과, 1939, 「滿洲開拓民」, 조선총독부, 『朝鮮』 11월호.

인 경영기구의 설립과 쟁점 ④를 제외하면, 당초 조선총독부의 정책 구상을 그대로 반영한 이른바 ‘우가키정책의 백미’였던 것이다. 나아가, ④의 쟁점도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1938년부터 종래 조선총독부의 구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1936년 설립된 선만척식은 1931년 이래 조선총독부가 계획했던 복수의 이민회사 구상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전반 조선인의 만주 이민정책의 플래너(planner)는 종래의 연구와 같이 관동군이 아니라 바로 조선총독부였다고 하겠다.

둘째, 1937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인 이민사업의 성과와 당초 계획과의 괴리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초 조선의 인구문제와 조선 농촌에서 계급모순의 현재화에 따른 식민통치의 위기를 조선인의 대규모 만주 이민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 봄에 편승한 조선 농민의 자발적인 만주 이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100만 인 규모의 만주 이민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1934년 이후 관계기관과의 교섭과정에서 조선인의 신규이민은 설립년도부터 15개년에 걸쳐 15만 호, 약 75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나아가,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쳐 만선척식이 취급한 신규 조선인 이민자 규모는 농가 수 3만 1,275호, 이민자 수 13만 3,746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에 비교하면, 농가 호수 78%, 이민자 수 33.4%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의 영향과 제국경제권의 급격한 군수공업화와 이에 따른 조선인 노동력 확보의 경합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셋째, 1941년 만선척식(주)의 만주척식공사로의 통합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국은 일본인 수를 넘어서는 재만 조선인의 적극적인 대일협력과 전시동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즉,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만주국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민심이반을 고려하면, 종래 민족협화의 만주국 건국이념과 배치되는 민족차별의 조선인 이민정책은 그 제도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일제가 ① 만주국에서 일본인 중시의 제국통치를 더욱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② 오족협화를 내세워 만주국의 독자성을 보다 강화할 것인가라는 제국통치정책의 새로운 기로에 직

면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제가 만선척식(주)과 만주척식공사의 통합으로 재만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을 제도적으로 철폐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즉, 오족협화와 내선일체라는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일원화와 함께 이를 통해 만주국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제국통치의 새로운 선택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는 일제가 1941년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만 조선인을 형식적이지만, 만주국의 주요 구성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자료〉

『大陸東洋經濟』.

『동아일보』.

『滿洲日日新報』.

『滿洲評論』.

『朝鮮及滿洲』.

『朝鮮通信』.

岡部牧夫, 1990,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不二出版.

開拓會, 1933, 「北鮮開拓第3號」.

高山三平, 1936, 『滿洲移民問題』, 巖松堂書店.

關東軍參謀部, 1933, 「滿州における朝鮮人指導方案」.

關東廳管理局企劃課, 1933, 『在滿朝鮮人二關スル一般狀況』.

權泰山, 1933, 『在滿朝鮮人問題に關して』, 滿鮮研究社.

近藤康男, 1942, 『滿洲農業經濟論』, 日本評論社.

金三民, 1931, 『在滿朝鮮人の窮狀と其の解決策』, 新大陸社.

南滿洲鐵道株式會社產業部, 1937, 「鮮人農家經濟調查報告, 第2編」.

堂本貞一, 1934, 『在滿朝鮮同胞の重要性』.

大藏省管理局, 1950,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통권 제23책 滿洲編 제2분책.

大阪商科大學同經濟研究所, 1942, 『滿洲國經濟の研究』, 日本評論社.

東亞勸業株式會社, 1935, 『營口·河東·鐵嶺·綏化·三源浦 朝鮮人安全農村建設 經過並現狀』.

東亞勸業株式會社, 1944, 『東亞勸業株式會社拾年史』.

滿洲開拓史刊行會, 1980, 『滿洲開拓史』.

滿洲工業技術院協會, 1944, 『滿洲產業年鑑』.

滿洲鑛工技術院協會, 1943, 『滿洲鑛工年鑑』.

滿洲國通信社, 1941, 『滿洲開拓年鑑』.

滿洲國通信社, 1943, 『滿洲開拓年鑑』.

- 滿洲事情案内所, 1943, 『滿洲百萬戶移民國策の全貌』.
- 滿洲帝國, 1942, 「滿洲人口統計」.
- 滿洲帝國協會 中央本部調査會,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の實態」.
- 滿鐵調査部, 1939, 「日鮮滿洲移民各關係機關懇談會報告」.
- 滿鐵弘報課, 1943, 『滿洲の農業經營』, 東亞新書 第10卷.
- 木下通敏, 1934, 『滿洲に於ける農業經營の實際と移民問題』.
- 民政部總務司調査科 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 西野政務調査局, 1934, 『滿洲移民農村の現況並二緊急移民對策』.
- 石林久彌, 1933, 『對滿朝鮮移民の堅實性』, 朝鮮公論社.
- 石津半治, 1933, 『滿州國における經濟的農業移民設定に關する方策と其具體案』.
- 鮮滿拓殖株式會社, 1938, 『西北鮮開拓事業概要』.
- 鮮滿拓殖株式會社, 1941a, 『大陸の開拓と半島同胞』.
- 鮮滿拓殖株式會社, 1941b, 『鮮滿拓殖株式會社/滿鮮拓殖株式會社五年史』.
- 鈴木文治, 1935, 『滿州移民の展望』, 日本外交協會.
- 二宮治重, 1937, 『朝鮮の近情と鮮滿拓殖會社に就て』, 日本外交協會.
- 日滿實業協會, 1937, 『滿洲經濟情報』.
- 日本學術振興會 編, 1936, 『滿洲移民問題と實積調査』.
- 在間島末松警視, 1931, 「朝鮮人の間島及同接讓地方移植に就いて」.
-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迅, 1939,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 朝鮮軍司令部, 1932, 「在滿朝鮮人指導の根本方策に關する意見」.
-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2a, 『滿州事變ニ於ケル在滿朝鮮人被害の概況』.
-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2b, 『對滿朝鮮人移民に就て』.
- 朝鮮總督府, 1931, 「鮮人移民會社設立計畫案」.
- 朝鮮總督府, 1932a, 「移民會社計畫の内容」.
- 朝鮮總督府, 1932b, 「滿蒙新國家に對する要望事項」.
- 朝鮮總督府, 1932c, 「滿鮮農事株式會社計畫要綱」.
- 朝鮮總督府, 1932d, 「鮮滿農事會社設立趣意および内容説明」.
- 朝鮮總督府, 1933, 「朝鮮人口問題對策」.
- 朝鮮總督府, 1934, 「北鮮開拓試驗移民計畫書」.
- 朝鮮總督府, 1934, 『在滿朝鮮同胞に對する本府施設の概要』.
- 朝鮮總督府, 1935, 『朝鮮人移民問題の重大性』.

- 朝鮮總督府, 1937, 『朝鮮の人口現象』.
-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朝鮮統治上緊急解決を要すべき滿州問題に對する意見」.
-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 1933a, 「對滿鮮人移民の件」.
-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 1933b, 「滿州移住協會設立要綱案に關する件」.
- 朝鮮總督府農林局, 1933, 「北鮮開拓事業實行打合會同聽取事項答申書」.
- 朝鮮總督府外事課, 1934, 「滿州に朝鮮人を移住せしむることの必要性並びに其の戸數」.
- 拓務省, 1932, 「滿蒙移民計畫」.
- 拓務省拓北局, 1934, 「朝鮮人移住對策の件」.
- 拓務省拓北局, 1941, 『滿洲拓殖公社關係法規』.
- 喜多一雄, 1943, 『滿洲開拓論』.
- Kinoshita, Michitoshi, 1934, 『滿洲に於ける農業經營の實際と移民問題』.
- Yasuda, Taijiro, 1942, 『滿洲開拓移民農業經營と農家生活』, 大同印書館.

#### 〈논문·연구서〉

- 김기훈, 1996, 「만주국하 재만 조선인 농민의 경제상황-1930년대 연결현 양성촌 B둔을 중심으로」, 육사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기훈, 1998a,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전주사학』 제6호.
- 김기훈, 1998b, 「일제의 조선인 만주이주정책 논쟁: 1932~1934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0호.
-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아시아 문화』 제18호.
- 김기훈, 2006, 「한인의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제76호.
- 김령, 2004,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 박섭, 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농민경영의 성장과 농업구조의 변동』, 일조각.
- 박영석, 1982, 「일제하 한국인 만주이민 문제」, 『한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 박창욱, 1991,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겨울호.
- 손춘일, 1999, 「만주국의 재만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백산자료원.
- 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복선수탈정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제27권.

- 오세창, 1979, 「재만한인민회연구」, 『백산학보』 제25집.
- 유병호, 1991, 「일제의 조선인이민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1호.
- 유원숙, 1995, 「1930년대 日帝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산사학』 제19권.
- 윤휘탁, 1992, 「1920-30년대 만주 중부지역의 농촌사회구조-간도지방의 조선인 농민을 중심으로」, 『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논총』 下권, 탐구당.
- 윤휘탁, 1996, 『만주국 연구』, 일조각.
- 윤휘탁 편, 2004,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역사비평.
- 이형찬, 1988,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이민 연구」,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 이훈구, 1932, 『만주와 조선인』, 숭실전문학교.
- 임성모, 2009,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제29집.
- 지수길, 1994, 「1930년대 전반기 부르조와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 『국사관논총』 제51권.
- 한석정, 199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홍원표, 2004, 「朝鮮人の 滿洲農業移民과 東아시아의 民族關係 研究」, 『한경대학교 논문집』 제26권 제1호.
- 홍중필, 1990, 「만주 조선인 이민수전 개척소고」, 『명지사론』 제3권 제1호.
- 홍중필, 1992a, 「1920년대 재만 조선인의 정착상 문제에 대하여-상조권, 귀화, 소작 관습을 중심으로」, 『이태영교수 화갑기념논총』 제3권 제1호.
- 홍중필, 1992b, 「만주 길림지방 조선인 이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192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39권.
- 홍중필, 1993a, 「만주 조선인 이민의 전개과정 소고」, 『명지사론』 제5권.
- 홍중필, 1993b, 「재만 조선인 이민의 분포 상황과 생업」, 『백산학보』 제41권.
- 홍중필, 1994, 「滿洲朝鮮人農業移民의 經濟狀況에 對하여-1934年 東亞勤業株式會社 奉天省所在朝鮮人農場을 中心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11호.
- 姜尙中 編, 2010, 『大日本・滿洲帝國의 遺産(興亡의 世界史)』, 講談社.
- 高崎宗司, 1996, 『中國朝鮮族』, 明石書店.
- 蘭信三 編, 2008, 『日本帝國をめぐる人口移動の國際社會學』, 不二出版.

- 大江志乃夫, 2005,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 滿洲移民研究會, 1972,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御茶の水書房.
- 滿洲移民研究會,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龍溪書院.
- 朴慶植, 199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 芳井嶋研一, 2000, 『環日本海國地域社會の變容』, 青木書店.
- 山中峰央, 2009, 「만주국의 인구와 노동력」, 『경제사학』 제47권.
- 松村高夫, 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學會雜誌』 제63권 제6호.
- 鈴木邦夫 편, 2007, 『滿洲企業史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 淺田喬二, 1991, 『日本帝國主義の滿州支配』, 時潮社.
- 鶴嶋雪崎嶺, 1997, 『中國朝鮮族』, 關西大學出版部.
- イゴリ R. サヴェリエフ[Savel'ev, I. R. (Igor' Rostislavovich)], 2005, 『移民と國家: 極東ロシアにおける中國人, 朝鮮人, 日本人移民(Migration and the stat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diaspora in the Russian Far East)』, 御茶の水書房.

**[ABSTRACT]**

##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and Seonman Colonization Co., Ltd. during Manchu State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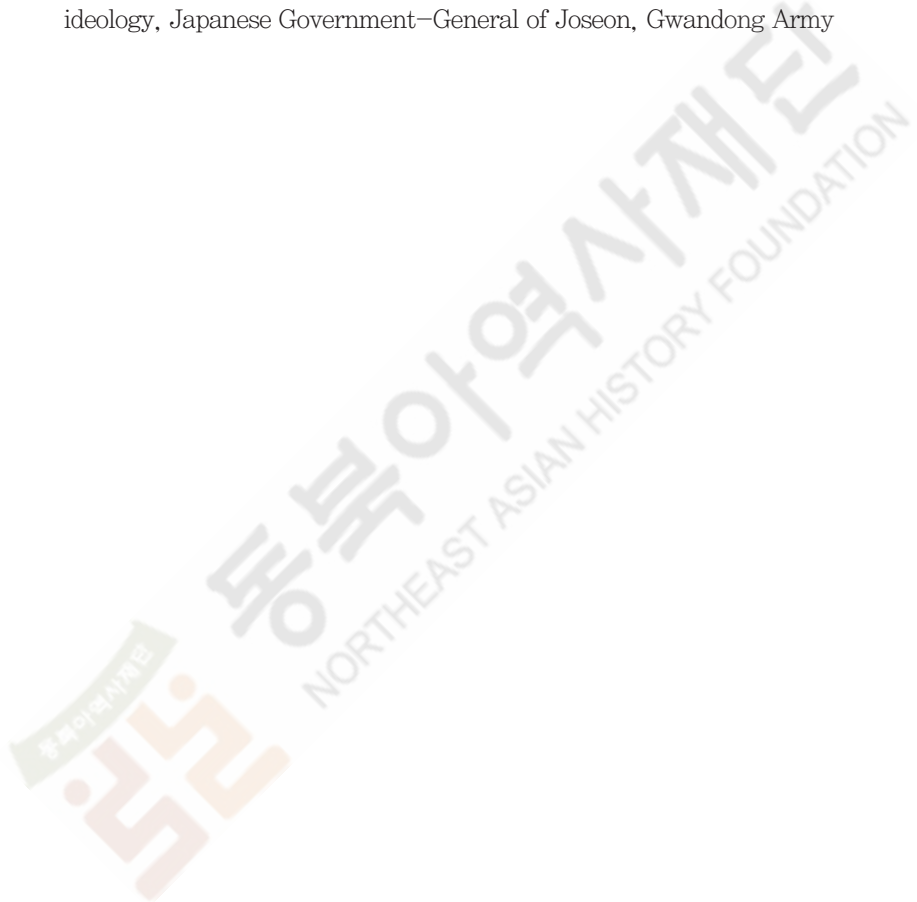
Joung, Anki

This paper intends to newly examine the formation and use of the immigration policy for Joseon farmers into Manchuria in the 1930s. For this purpose, it will put its focus on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the business details of Seonman Colonization Co., Ltd., which was a state policy immigration company founded in 1936, and Manseon Colonization Co., Ltd., the affiliated company of Seonman Colonization. It will also pay its attention to the whole process that Manseon Colonization became unified into Manchu Colonization. In 1931 after Manchuria was built up,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was characterized by permissive voluntary immigration, but it was changed into plan, control-based policy immigration wit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regional restrictions in 1936 when Seonman Colonization Co., Ltd., which was a state policy immigration company taking full charge of Joseon farmers' immigration into Manchuria separately from Japanese immigration, and its affiliated company, Manseon Colonization Co., Ltd., were founded. Seonman Colonization was involved in pioneering the northern part of Joseon and making investment and loaning for its affiliated company, Manseon 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Manseon Colonization assimilated Dongah Gwonup Co., Ltd. and worked on the purchase of lands for the settlement of Joseon people.

the loaning for agriculture, and the creation of independent farmers. This immigration policy for Joseon people into Manchuria, which was based on clear national discrimination, was totally corrected because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which broke out in 1937, required Joseon residents in Manchuria to cooperate during the wartime and the ideology of 5-nation cooperation had to be systematically completed. That is, Seonman Colonization became assimilated into Dongyang Colonization Co., Ltd. and then, reorganized into Bukseon Development Co., Ltd., but Manseon Colonization became unified into Manchu Colonization Corporation which took full charge of Japanese' immigration into Manchuria. While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became entrusted to Manchu Colonization, the immigration organization for Japanese, it got positioned in the same level as Japanese' immigration. The unification of Manseon Colonization and Manchu Colonization can be regarded as the systematic completion of the 5-nation cooperation ideology which was the spirit of the national foundation of Manchuria reflecting the shock of China-Japan war in 1937. The previous researches highlighted the initiative of Gwandong Army in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during Manchu period, but actuall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orked for it more actively. That is, the foundation of Seonman Colonization, which took charge of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in the 1930s, was the top of 'Ugaki Policy', which suggests that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as the planner of the immigration policy for Joseon people into Manchuria.

keywords

Seonman Colonization Co., Ltd., Manseon Colonization Co., Ltd., Manchu Colonization Corporation, Joseon people's immigration into Manchuria, Planner of immigration policy, 5-nation cooperation ideolog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Gwandong Army





#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

김기훈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본 연구는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중국 동북, 즉 만주 이민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다양한 이민담론 중 당시 민족지 중의 하나였던 조선일보가 형성해 나간 만주 이민담론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최초에는 주로 항일 민족투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한중수교 이후 재중 조선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폭넓게 진행되어왔다. 연구대상 시기별로 보면 한말과 1910~1920년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1930년대 즉 만주국 시대의 조선인 이민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연구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만주국 시대의 조선인 이민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실적 규명과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

※ 투고일: 2011년 1월 4일, 심사일: 2011년 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하지만, 만주 이민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인식과 그 결과로서 어떤 담론들이 생산·유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만주국의 수립으로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는 일본 식민지 제국 내에서의 이동으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중국 지역으로의 해외 이주였다면,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제국이라는 동일한 정치적 영향권 내부에서의 이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 아니었다. 일제 기관들 간의 대립과 타협, 국제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되었던 구체적인 정책은 시기별로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조선 식민통치의 모순을 만주 이민으로 해결하기 위한 호기로 간주하던 조선총독부, 이에 대해 일본 농업이민을 끌어들이려 만주의 실질적 일본화를 시도하던 관동군, 조선 노동자의 일본 도항문제와의 연관 속에 이 문제를 바라보던 일본 본국 정부라는 최소한 세 종류의 담론 주체들이 이민에 관한 식민담론을 만들어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런 식민기관들 간의 상호갈등과 조정하면서 형성해나갔던 담론을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에 관한 지배담론으로 파악하였다. 만주 이민에 관한 이 지배담론은 곧 식민당국의 정책담론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sup>2)</sup> 크게는 일제의 식민담론의 한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인 이민에 관한 인식 혹은 담론이 지배적인 식민담론에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담론 생산 주체에 따라 상호편차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들이 다각도로 분석되어왔다.<sup>3)</sup> 그러

1) 김기훈, 2006, 「한인의 만주 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76호, 주로 역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2) 식민당국의 이민담론은 이민정책을 뒷받침하던 ‘정책담론’임에 틀림없으나, 그 담론이 식민 지배 당국에 의하여 형성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배담론’으로 파악하였다.

3) 이 시기의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 혹은 만주 이민에 관한 인식들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에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국문학 계통에서 수행된 이런 연구들은 본 연

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문학작품과 기행문 등을 분석한 것으로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언론매체의 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sup>4)</sup> 이에 본 연구는 당시의 우익 민족 언론지의 하나였던 조선일보가 형성하고 있었던 만주 이민 관련 언설들을 식민당국의 지배담론에 대한 대응담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하나의 매체만을 분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우선, 조선일보는 1940년 8월에 폐간됨으로써 그 이후 만주국 패망기인 1945년 8월까지 대략 태평양전쟁 시기에 속하는 마지막 5년간의 조선 사회의 만주 이민담론을 살펴볼 수 없었다. 만주국 시기를 다 다루지 못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한계는 또 하나의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문과의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담론적 특징을 보다 더 선명하게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글 매체가 생산하던 담론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출발한 본 연구는 완성된 연구를 지향한 것이기보다는

---

구를 시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 김재용, 2006, 「일제 말 한국인의 만주 인식-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북방사 논총』 12호; 박일우, 2008, 『한국 근대문학의 滿洲 표상에 관한 연구-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성욱, 2008,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승현, 2006, 「일제 말 '민족주의계' 지식인의 식민담론 수용과 현실 인식」, 한성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배주영, 2003,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한국학보』 29권 3호; 신승모, 2008, 「식민지기 일본어 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 '만주'를 바라보는 동시대 시인의 諸相」, 『한국문학연구』 34집 등이 있다. 그리고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 기행문을 분석하여 만주담론을 다양화해주고 있는 연구들로서 서경석, 2004,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86호; 서영인, 2007, 「일제 말기 만주 담론과 만주 기행」, 『한민족 문화연구』 23집 등이 참고할 만하다.

- 4) 언론매체의 사료적 성격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역사학계에 서도 최근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수요역사연구회에서 매일신보를 연구하였고, 한국 민족운동사 연구회에서 1930년대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8집(2009)에 수록된 「1930~40년대 한글신문의 변모양상」이라는 제목하의 특집 논문들은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앞으로 이 방면의 심층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매체 하나만을 시험적으로 다루어 본 일종의 사전 연구이며, 시론적인 연구이다.<sup>5)</sup>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기본자료는 만주국 시기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사용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의 창간과 폐간 과정 그리고 편집 성격 등을 먼저 간략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시기에 동아일보와 더불어 양대 민족 언론으로 간주되던 일간지였다. 삼일운동 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일간지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첫 호를 내놓았다. 초기의 임원진은 친일적인 사람들이 많아 종종 친일논쟁에 휩싸이기도 한다.<sup>6)</sup> 그러나 1924년 9월에 신석우가 송병준으로부터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하게 되자 조선일보는 민족 진영의 일간지로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된다. 소위 '혁신 조선일보'의 시대가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후 발행인과 사장이 수차례 바뀌고, 경영분규 등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1933년 방응모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만성적인 재정난을 일소하고 튼튼한 재정적 기반 위에 새 출발하게 되었다.<sup>7)</sup>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제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티어 오던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동시에 폐간되고 만다. 그것은 전시체제 하의 물자 부족을 명분으로 총독부가 매일신보 하나만을 남기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진 폐간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만주국의 설립으로부터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시기인 1932~1940년은 1920년대와는 달리 언론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제국은 조선의 언론기관에 대한 통제를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하였

5)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필자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일제의 지배담론을 재생산할 것이라 추정하며,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담론의 지향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6) 이러한 논쟁을 의식하고 조선일보의 민족지적 성격을 부각한 최근의 논문도 있다. 이연, 2001, 「일제하의 한국 언론의 민족 투쟁사-「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7)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나남, 402~405쪽.

8) 정진석, 1990, 위의 책, 549~550쪽.

다.<sup>9)</sup> 그 결과 이 시기는 ‘한국 언론사에 있어 가장 치욕스런 시기’라거나<sup>10)</sup> ‘언론의 친일보국시대(1936~1940)’로서 이 시기의 언론은 “전시 시책에 필요한 선전도구로서 쓰여져 전쟁 동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일제의 통치정책을 변호하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sup>11)</sup> 라고 혹평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이민담론에 대한 논의도 일정부분 조선일보의 친일논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담론의 친일적 경향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담론이 존재하였으며, 그런 담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문제는 관련이 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언급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이후 조선일보 폐간 시기인 1940년 8월까지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을 검색하여 찾아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우선 ‘이민’으로 검색된 약 972건의 기사를 활용하여 제목을 중심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접 그 기사를 참고하였다. 일제는 1939년 이후에는 ‘이민’이란 용어를 ‘개척민’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그래서 추가로 ‘개척민’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74건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주로 ‘이민’으로 검색한 972건과 ‘개척민’으로 검색한 74건 도합 1,046건의 기사이다.<sup>12)</sup>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는 조선일보의 사설들이

9) 1930년대 중 특히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대가 총독부의 언론통제가 강화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강화되는 언론통제와 이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 변화에 대해서는 성주현, 2009, 「1930년대 이후 한글신문의 구조적 변화와 기자들의 동향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158~170쪽을 참조할 것.

10) 정진석, 2005, 『언론 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173쪽.

11)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217쪽.

12) 추가로 사용한 검색어는 ‘재만 동포’(403건), ‘선만척식회사’(5건), ‘만주국 조선인’(38건)으로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타 검색은 하였지만, 가장 포괄적인 ‘이민’ 검색 결과와 중복되어 제한적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만주이민’(60건), ‘만주국 이민’(17건), ‘이민정책’(11건), ‘관동군 이민’(4건)이 있었다.

다.<sup>13)</sup> 조선일보가 창간된 후 폐간될 때까지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쓰여진 사실 중에 만주 이민에 관련된 사실로서 148개를 검색한 후 다시 1931년 9월 이후의 사실 49개를 추려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사실 목록은 〈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석하여 도출한 조선일보의 이민담론을 일본제국의 이민정책 속에 표명된 지배담론에 대한 대응담론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대응담론이 어떻게 지배담론을 비판 혹은 동조해 나갔는가 하는 점도 아울러 검토하였다.<sup>14)</sup>

이 글은 조선인의 만주 이민담론의 형성배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만주국 시기 일제의 이민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려 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이민정책에 반영된 일본제국의 지배담론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만주 이민에 관한 조선일보의 사실을 그 종류와 특징을 시기별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주요 이민담론을 종류별로 차례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 II. 만주국 시기(1932~1945)의 조선인 이민정책

조선 말기인 1860년대부터 경제적 궁핍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던 조선 북부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병합되던 해

13) 만주국 시기 조선일보의 사실 작성에 주도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편집국장의 명단과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韓基岳 1928~1932.4; 朱耀翰 1932.9.13~1933.8.1; 李光洙 1933.9.14~1934.1.1; 金炯元 1934.1.1~1937.11.24; 咸尙勳 1938.1.22~1940.8.10. 정진석, 1990, 앞의 책, 405쪽.

14) 본 연구의 방향을 지배담론과 대응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자극을 주신 육군사관학교의 이장송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인 1910년에는 20여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제 시기의 조선인 이민은 중국 동북지방의 정치적 주체가 바뀐 일본과 '만주국' 수립을 전후로 전기이민(1910~1931)과 후기이민(1932~1945)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이민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하는 국제이민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이주와 정착의 환경이 결정되는 구도 속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재만 조선인은 침략세력인 일본과 이에 저항하거나 반감을 지닌 중국세력 사이에 끼인 채, 양 민족에게 이용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며 생존을 도모해 나가는 ‘동북아의 주변적인 존재’였다.”<sup>15)</sup>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1년 7월 초에 발생한 소위 만보산사건은 재만 조선인들의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sup>16)</sup>

일본의 만주 장악과 만주국 설립으로 시작되는 후기이민은 비공식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만주국과 공식 식민지인 조선 간의 이동으로서 제국 내부의 식민지 간 이동(intercolonial migration within an Empire)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이민은 일제의 일관된 ‘장려’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소위 ‘국책이민’이라는 이미지로 곧잘 표상된다. 鮮滿拓殖會社의 건립을 통한 이주알선 등의 사실로 볼 때 전혀 무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정형화된 이미지는 ‘국책이민’ 혹은 ‘개척민’으로 명명되었던 만주국 후기정책의 담론적 효과라고 생각된다. 조선인 이민은 일제에 의하여 ‘방임’되다가 ‘통제’되었고 만주국 후기에 가서 일부 지원 조건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통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이민’과 ‘개척민’이라는 용어로 일괄 포장되면서 일제권력의 큰 지원과 비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진정한 ‘장려’ 정책은 조선인 농민이 아니라 일본인 농민들에게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 이민정책을 결정한 주체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었다.

15) 윤휘탁, 2005, 「침략과 저항 사이에서」, 『한국사학보』 19집, 324쪽.

16) 만보산사건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대응을 비교한 논문이 많은 참고가 된다. 민두기, 1999, 「만보산사건(1931)과 한국 언론의 대응 -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 65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본제국’이라는 단일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만주국의 실세인 관동군, 조선총독부, 그리고 일본 본국정부라는 세 개의 주체가 상호 갈등·조정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었다.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선인 이민을 바라보는 각 주체들의 시각도 매우 유동적이었다.

만주국 초기의 이민정책은 만주국의 실세였던 관동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관동군은 일본의 본국정부 그리고 팽창주의적 농본주의자인 소위 ‘가토[加藤]’ 그룹의 일본인 농업이민 프로젝트에 동의하여 초기 정책을 입안하였다. 관동군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만주를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농촌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에서 가토 그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의 합의 결과는 1932년 초에 작성된 만주국의 「移民方策案」으로 확정되었다. 그 속에 “일본인 이민을 獎勵하고, 조선인 이민은 放任하며, 중국인 이민은 制限한다”는 만주국의 기본방침이 분명하게 천명되고 있다. 만주국의 이 ‘방임’ 정책에 따라, 초기의 조선인 이민은 이동의 자유만이 부여되었을 뿐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sup>17)</sup>

관동군의 소극적인 방임정책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 목적상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량의 조선인 이민을 만주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식민통치 결과 붕괴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진흥책이 추진되었고,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농촌의 과잉인구를 만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점이 역설되었다. 또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을 대량으로 만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총독부의 이런 의견에 동조한 것은 일본 본국정부였다. 1934년 봄,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 문제가 일본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심하던 일본 내무성이 조선총독부에 동조하였다. 내무성과 총독부는 조선 노동자의 일본 도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주 이민을 적

17) 김기훈, 1998b, 「일제의 조선인 만주이주정책 논쟁: 1932~193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집, 369~381쪽.

극 권장해야 한다는 방침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동년도 10월에 내각 의결사항으로 공식화되었다.<sup>18)</sup> 그 후 2년여의 실무자급 논의를 거쳐 1936년 후반기에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를 담당하기 위한 회사로서 京城에는 母會社인 鮮滿拓殖會社, 만주국 수도인 新京에는 子會社인 滿鮮拓殖會社가 설립되었다.<sup>19)</sup>

한편, 조선인 만주 이민에 대한 논의가 제국기관들 간에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독자적으로 소규모의 '計劃移民'을 송출하였다. 소위 만주국의 '安全農村'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민이었다. 만주사변의 여파로 전 만주에 걸쳐 수많은 조선인 피난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933년도부터 營口를 비롯한 鐵嶺 등 5개소에 차례로 '안전농촌'이 건설되었다. 이는 집단부락 형식으로 조성된 조선인 이민부락이었다. 안전농촌 사업을 주도하고 재정 부담을 대부분 담당하였던 조선총독부는 처음에는 귀국 조선인을 만주로 재송출하다가 뒤에는 삼남 지방의 재해농민들을 선발하여 이곳으로 송출하게 된다.<sup>20)</sup> 1933년부터 1936년까지 5개소의 안전농촌에 한반도로부터 입식된 농민은 1,432호 7,496명에 이르렀다.<sup>21)</sup>

일본 본국정부의 각의결정 이후 관동군도 조선총독부의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일본 농업이민 주창자인 가토 그룹의 교수들의 인식과 논리가 관동군을 움직이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그들은 만주국 초기의 조선인 이민 방임정책이 조선 농민들을 자유롭게 만주로 몰려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래의 정책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조선인 이주농민들이 일본 농민 이주예정지를 점차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관동군은 1936년 재만 조선인과 신규이민의 거주 및 입식지를 규

18) 김기훈, 1998b, 앞의 글, 381~402쪽.

19) 김기훈, 2002, 「일제 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일본인 이민 '장려', 조선인 이민 '통제' 정책 형성의 배경」, 『아시아 문화』 18호, 65~67쪽.

20) 안전농촌의 창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현은주, 1999, 「1930년대의 만주이민에 대하여-營口安全農村 건설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3호.

21) 朝鮮總督府, 1941, 『朝鮮の農業』, 京城, 54쪽.

제하고 연간 이주민의 수를 할당하는 통제방침을 만주국의 국책으로 결정하였다. 이 통제방침 하에 1937년부터 만선척식회사가 본격적인 조선인 이민사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만주국 정부는 처음에는 통제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만주국의 재만 조선인들은 관동군이 지정한 16개 현으로 집결해야 했고, 신규 이주 조선인들은 간도와 동변도의 23개 현에만 입식할 수 있었다. 연간 입식민의 수도 1만 호 '이내'로 한정되고, 반드시 이주증명서를 소지해야 입국이 허용되었다. 1937년 초기에 정식으로 허가된 이민의 종류는 만선척이 취급하는 '집단이민'뿐이었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통제방침은 조선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937년 말부터 회사이민이 아닌 순전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自由移民' - 뒤에는 分散移民으로 개명 - 이 새로운 종류로 추가되었다. 물론 이들도 이주증명서를 소지해야 했다. 1938년 만주국 정부는 지역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 지방의 농무계나 금융회가 추천하는 '集畝移民'이라는 형태의 이민을 다시 추가하였다. 그리고 1939년 말 대대적인 만주국 이민정책의 재수립을 천명한 '滿洲國開拓政策基本要綱'에 따르면, 조선 이민은 일본 이민에 '準'하는 국책이민으로 규정되었고, 척식회사가 취급하는 집단, 집합이민에게는 정부의 보조금도 약간 지급하도록 되었다. 1941년에는 그동안 조선인 이민을 취급하던 만선척식회사가 일본인 이민을 취급하던 滿洲拓殖會社로 통합되었다. 분리되어 운영하던 조선 농민과 일본 농민의 이민사업이 '내선일체'의 명분 속에 단일화가 된 것이다.<sup>23)</sup>

● 수차례에 걸친 통제정책의 다소간의 변화, 혹은 완화는 1937년의 중일전쟁을 위시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인 이민방침이 완화된 배경을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배경을 손꼽아야 할 것이다. 일제권력에게 戰線의 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주와 조선의

22) 김기훈, 2002, 앞의 글, 70~78쪽.

23) 김기훈, 1993, 「만주국」 시기 일제의 對滿 조선인 농업이민정책사 연구, 『학예지』 3집, 160~161쪽.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었다. 조선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던 엄격한 통제정책을 약간 완화한다든가, 조선 이민을 일본 개척민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유화전략이었다. 둘째, 군사적인 배경도 일부 작용하였다. 당시 관동군은 대소전략의 일환으로 ‘北邊振興計劃’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인들을 내몽고, 흑룡강성 등 소련과 인접한 북변지방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서 기존의 지역 제한 등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배경을 들 수 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만주국은 일본제국의 전시 식량공급기지로 중시되었다. 만주국이 전시 식량증산을 위하여 취한 다양한 방책 중의 하나가 미작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조선 농민들의 약탈적 동원이었다. 조선 농업이민에 대한 통제 완화와 지원 등은 바로 그런 동원을 위한 일제의 고도로 계산된 유인책이었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만주 농업이민 계획 자체를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1942년부터 시작된 제2차 5개년 이민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다가 마침내는 붕괴되고 만다. 근원적인 이유는 이민 대상자의 고갈이었다. 조선에서 농민들은 전시 식량 부족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했다. 동시에 전시 산업노동력으로 일본과 북부 조선으로 동원되어 나갔다. 약 백만 명의 농민들이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나갔고,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징병령에 의하여 약 20여만의 조선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조선 농촌으로부터의 이러한 인력차출은 만주 이민자원 자체를 근원적으로 고갈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제국의 전반적인 국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지방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강제적’으로 계획된 이민 숫자를 채우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조선의 만주 이민계획은 이렇게 붕괴되어나간 것이다.<sup>25)</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국 시기의 이민을 일사분란한 일제의 ‘정책 이민’ 혹은 ‘국책이민’<sup>26)</sup>이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고착하는 것은 복합

24) 김기훈, 1993, 앞의 글, 161쪽.

25) 김기훈, 1993, 앞의 글, 162~163쪽.

26) 조선인 이민이 국책이민으로 정식으로 분류된 것은 1939년 이후의 일이다. “금년(1939) 일월 이래 …… 만주 개척민 중 조선농민도 국책개척민으로 취급하기로 되

적이고 유동적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단순 고정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민정책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제국의 내부에서는 정책갈등과 대립이 항상 존재하였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이민회사가 다루던 집단이민 외에 개인적인 연고로 이동하였던 자유이민이나 도시로의 이주민 등 다른 종류의 이민들이 실제적으로 대량으로 존재하였다. 존재하였던 다른 이민들의 존재를 간과하고, 정책이민만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일본제국의 시선과 통계에 너무 사로잡힌 까닭이다.

이용 가능한 일제의 자료에 따르면, 정책이민 - 한반도나 만주의 일제 식민기관의 정책에 의하여 추진된 이민 - 의 결과, 1932~1942년 사이에 약 3만 6,500호 14만 500명이 만주로 입식되었다고 한다. 이 통계는 재일 인구학자인 김철이 1932~1940년 사이에 귀환자를 뺀 순이민(net immigrant)을 72만 7,000명이라고 추정한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이민'의 대상이 농업이민에 국한되어 다른 직종의 이민(상인, 노동자, 관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수의 농민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유이민으로서 일제의 국경검문을 피하여 입경함으로써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점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sup>27)</sup> 일본제국의 통계 즉 일본제국의 시선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에 많은 조선인 이민이 존재하였다는 말이다. 만주국의 조선인 농업이민 '통제' 정책 자체가 기대하는 만큼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만주국 이민을 '국책이민'이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실제와는 거리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었는데…….”[“북안성에 보낼 삼천호, 국책개척민으로 취급”, 『조선일보』, 1939. 8. 30]. 이 글에서는 이전에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안전농촌이나 선만척의 이민도 단순한 자유이민이 아니라 식민당국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정책이민으로 지칭하였다. 용어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편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7) 김기훈, 1993, 앞의 글, 164~165쪽.

### Ⅲ.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담론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 이민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듯이, 이민에 관한 일제의 정책담론, 즉 지배담론도 하나의 일관된 담론체계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기적인 변화는 물론 담론주체(식민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이민정책을 주관하던 식민당국(일본 본국정부, 만주국, 조선총독부)이 궁극적으로 상호동의를 한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 속에 담긴 주장과 논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주장과 논리를 ‘일본 농민중심 개척론’과 조선인의 일본 ‘도항억제론’으로 파악하였고, 이런 하위담론들을 구성요소로 한 상위담론을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에 관한 지배담론으로 간주하였다.

#### 1\_ 일본 농민중심 개척론

만주국 초기부터 주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 간의 정책논쟁의 중심은 대량의 만주 이민을 보내되 그것을 일본 농민중심으로 할 것인가, 조선 농민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모순에 의하여 발생한 조선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대량의 만주 이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식민지인 조선만이 아니라 식민모국인 일본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과잉인구를 만주로 배출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하에 그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농민의 경우 만주로의 이주 필요성은 인구문제 해소만이 아니라 ‘대화민족을 대륙에 부식’시켜 일본제국의 대륙팽창을 공고히 한다는 정치적·군사적인 명분이 더 첨가되었다. 소위 농본주의와 이민을 통한 대륙팽창주의가 결합된 것이다.<sup>28)</sup>

28) Louise Young, 1998, “Colonizing Manchuria: The making of Imperial Myth,”

일본제국의 대륙팽창을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와 긴밀하게 연관시킨 것이 바로 ‘개척담론’이다. ‘개척민’이라는 용어가 ‘이민’을 대체한 공식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39년도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만주국은 식량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일본 농민의 이주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소위 100만 호 이민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39년 1월경 일본 농업이민 단장들이 ‘이민’이라는 용어를 ‘개척민’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sup>29)</sup> 이 제안은 그 후 일본당국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점차 ‘개척민’이라는 용어가 만주 이주민을 지칭하는 공식용어로 바뀌어나갔다.<sup>30)</sup> 1939년 말 ‘개척정책’을 확정함과 아울러 일제는 소위 ‘뎀 부대’를 등장시켜 만주 이주를 장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다.<sup>31)</sup> 이때 생산되고 유포된 담론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개척담론에 해당한다.

이 개척담론은 식민권력의 기본적인 지배담론으로서 일본 농민들의 자발적인 만주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부드러운’ 동원전략이었다. 특히 만주국 말기에 가게 되면, 전식량생산에 개척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동원담론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한편, 이 담론은 문명담론의

---

in Stephen Vlatos(ed.),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99~101; Sandra Wilson, 1995, “The ‘New Paradise’: Japanese Emigration to Manchuria in the 1930s and 194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XVII, 2 (May), pp. 257~261.

29) 1939년 1월 ‘日滿개척사업간담회’에서 1차, 2차 단장들이 ‘이민’이라는 용어가 옛날의 해외이민을 연상시켜, 국책만주이민의 본질적 개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민을 ‘개척민’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동만 육야에 개척대”, 『조선일보』, 1940. 5. 18.

30) 예를 들면, 1939년 말 확정된 만주국의 대대적인 이민정책계획 문서의 명칭은 ‘滿洲國開拓政策基本要綱’이었다.

31) 일본제국은 1939년 말 만주국의 ‘개척 정책’을 확정함과 아울러 소위 ‘뎀 부대’를 등장시켜 만주 이주를 장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양예선, 2007, 「일본의 만주문학 - 대륙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7집 참조. 이때 형성된 담론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개척담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만주 개척담론의 구체적인 형성은 1930년대 말이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신과 논리는 만주국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 시기 전체의 일본 이민담론은 기본적으로 개척담론으로 간주하고 있다.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만주 이주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활로 모색이 아니라 만주라는 광활한 토지를 개척하기 위한 희망과 사명의 움직임으로 표상된다. 그 과정에서 만주는 개간을 기다리는 처녀지, 미개지로 묘사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은 문명의 세례를 기다리는 계몽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환언하면, 개척담론은 만주의 대지와 그곳의 원주민들을 타자화하면서 구성된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sup>32)</sup>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과 같은 만주 개척담론의 구체적인 형성은 1930년대 말이다. 그러나 이민을 통하여 대륙팽창을 추구하고 합리화하며,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려는 일본제국의 의도와 논리는 만주국 초기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개척’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척담론은 만주국 초기로부터 이미 형성되고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척담론을 만주국 시기 전체로 확대·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제의 개척담론은 기본적으로 일본 농민 중심주의요 일본 농민 우선주의였다. 조선 농민들의 만주 이주정책은 바로 이러한 일본 농민 중심주의적 개척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변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주국 시기에 추진된 일본제국의 조선 농민 이민정책은 ‘방임정책’(1932~1936)과 ‘통제정책’(1937~1945)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농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처음에는 지원도 하지 않고, 제한도 하지 않은 소위 방임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방임정책이 일본 농민의 대규모 입식 부지 확보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이제는 그 이주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농민들의 입식규모, 지역 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통제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 통제정책은 조선인들의 반발과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그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전쟁의 확대에 따라 ‘통제’의 현실적 의미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32) 일본의 만주 개척담론은 일본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기 위한 동원 전략으로도 활용되었다. 일본 내에서의 만주 개척민 동원 전략의 형성과 그 담론의 서사구조 등에 관해서는 Louis Young, 1998, pp. 101~109 참조.

후반에는 이주 ‘제한’이 아니라, 할당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다.<sup>33)</sup> 이런 상황 속에서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개척담론의 일본 농민 중심주의도 사실상 그 의미가 갈수록 더욱 퇴색되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 2\_ 도항억제론: 소위 ‘南鎖北開論’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는 일본으로의 조선인 도항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만주국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제국 정부가 조선 농민의 만주 이민을 장려하는 대신 일본 渡航 노동자를 억제하려는 소위 ‘南鎖北開論’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인의 도항과 渡滿은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인의 일본 ‘도항억제론’은 일본제국의 조선인 만주 이민에 관한 지배담론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일제의 강제적 한일병합의 결과 조선인은 비록 ‘외지인’으로서 일본 ‘내지인’과의 일정한 구별은 있었지만, 외면적으로는 일본제국의 국적을 가진 제국 신민이라는 동일한 법적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도 법적으로는 일본 내지에서의 거주, 취로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며, 일본으로의 내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sup>35)</sup>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일본제국은 필요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이주와 내왕, 즉 도항을 규제하는 각종 조치들을 취하였다.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본의 조선인 도항규제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sup>36)</sup>

33) 김기훈, 1993, 앞의 글, 162~163쪽.

34)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폐간됨으로써 태평양전쟁기의 개척담론, 즉 일본 농민 중심주의가 약화된 시기는 다루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만주국 시기 전체의 담론을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의 하나이다.

35) 정진성·김인성, 1998, 「일본의 이민정책과 조선인의 일본이민: 1910~1939」, 『경제사학』 25권 1호, 197~198쪽.

36) 서현주, 1991,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17권 2호, 167쪽. 여기에 인용된 박재일의 『재일조선인』(1957), 22~30쪽을 토대로 하여 약간

- 제1기: 정책조정기 (1910~1924) - 유치, 제한, 완화 정책 반복
- 제2기: 도항억제기 (1925~1938) - 도항규제정책 지속적 강화
- 제3기: 강제동원기 (1939~1945) - 도항규제의 실질적 무의미

조선인의 내지 도항 즉 일본으로의 이주가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일본 기업가들의 조선 노동자 유치로부터 시작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아울러 조성된 경제호황 기간 동안 일본 기업가들은 조선에서 값싼 노동자를 다량 고용해 갔다. 그러나 종전 후 경제가 만성 불황으로 빠져들면서 조선 노동자들은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하의 농촌경제 악화로 인하여 조선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그 후에도 계속 일본으로 이주하여 나갔다.<sup>37)</sup>

그 결과 1924년까지 도항문제에 관한 일본의 규제정책은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925년 10월부터 도항 제한정책이 다시 실시되었다. 한 해 전인 1924년 여행증명서 제도가 철폐된 후에 조선인의 도항 증가와 노동력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일본 내지에서의 조선인 실업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도항 저지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부산에서 ① 무허가 노동자 모집에 의해 도항하는 자, ② 일본에서의 취직자리가 불확실한 자, ③ 일본어를 해독할 수 없는 자, ④ 필요한 여비 이외의 소지금 10엔 이하인 자, ⑤ 모르핀 중독자 등을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는 도항을 금지시켰다.<sup>38)</sup> 당시 독일 노동자의 87%가 10원 미만의 소지금을 가지고 일본에 상륙하고 있었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조건은 극히 까다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 경우에만 거주지 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도항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부산, 여수 등 출발 항구에서 도항이 재차 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착 항구인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다시 소지 여부를 검사

의 수정을 가하였다.

37) 김광렬, 2003, 「戰間期 일본거주 조선인의 생활상과 귀향」, 『한일민족문제연구』 4집, 84쪽.

38) 정진성·길인성, 1998, 앞의 글, 200쪽.

하였다. 이처럼 최소한 세 번에 걸친 도항증명 검사를 통하여 조선인의 도항을 억제하려 한 것이다. 도항 억제정책은 1939년 전시 하 노무동원계획의 일부로서 조선인 노동자를 계획적으로 일본의 산업방면에 강제동원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될 때까지 줄곧 지속되었다.<sup>39)</sup>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총독부의 도항 억제정책이 특히 강화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대량의 만주 이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소위 ‘남쇄북개’에 따른 ‘도항억제론’을 주창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기관 간의 조선인 만주 이민에 관한 논의는 일치하지 못하였다. 관동군과 일본 정부는 일본인 농업이민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금지하지는 않되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만주국 초기의 공식적인 조선인 이민정책은 소위 ‘방임정책’으로 반영되었다.<sup>40)</sup> 이에 조선총독부는 다른 식민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중 역점을 두어 강조한 논리의 하나가 바로 ‘남쇄북개론’이었다. ‘남쪽의 관문은 폐쇄하고 북쪽의 관문은 개방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곧 만주 이민을 장려하는 대신에 도항노동자는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도항억제론’이었다. 식민통치의 모순에서 발생한 조선 농촌문제는 수많은 무직실업자를 양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문제를 조선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로 파악하고, 이들 ‘과잉인구’를 만주 이민으로 대량 송출함으로써 일본으로의 노동자 도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 노동자의 일본 도항이 국내의 노동시장 교란 및 실업자 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의 ‘도항억제론’은 일본 본국정부의 관리들에게 특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 결과 1934년 말 일본 각의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장려하고 대신 도항을 철저히 억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sup>41)</sup>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현된 ‘도항억제론’은 이제 조

39) 서현주, 1991, 앞의 글, 175~177쪽.

40) 김기훈, 1998b, 앞의 글, 369~381쪽.

41) 김기훈, 1998b, 앞의 글, 381~402쪽.

선 농민들에게 일본 혹은 만주라는 두 이주공간 중 만주 한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속력을 지닌 지배담론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 IV. 만주 이민 관련 조선일보 사설 개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의 만주 이민담론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1931년 9월 만주사변 이후 1940년 8월 조선일보가 폐간되던 시기까지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다루었던 49개의 사설을 종류별로 그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이민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을 종류별로 본다면 대략 재만 조선인 문제(재만 동포구제, 교육문제, 경제적 안정책, 토지소유권과 취득문제, 치외법권 철폐 후의 조선인 대책)와 신규 입식하는 이주 조선인 문제(이민방책, 안주방책), 도항규제 문제의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를 염두에 두면서 간단하게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주사변 직후부터 대두된 것은 재만 조선인의 긴급구제 문제였다. 1920년대에는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서 수난을 받던 재만 동포를 구원하자는 운동을 펼친 바 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백만 동포가 불안 중에 있거니 어찌 安閑이 볼 것이냐”,<sup>42)</sup> “불우의 재변을 당한 때에 남다른 아픔과 근심으로 이를 부조해야 한다. …… 조선인이여 동포애의 참된 시련은 이때에 있다”<sup>43)</sup>는 식의 호소를 통하여 병란과 자연재해를 당한 재만 동포를 구제하자는 논설을 전개하였다.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11편

42) “재만 동포의 구제난”(사설, 『조선일보』, 1931. 10. 26. 앞으로 사설 목록에는 특별한 표시(사설)를 붙이지 않고, 사설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사에만 관련 표시를 할 것이다.

43) “동포애는 이런 때에”, 『조선일보』, 1931. 10. 28.

의 사설은 대부분 재난동포 구제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만주사변과 그 여파라는 시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만주사변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와중에서도 때때로 등장한 재만 조선인 문제는 교육문제였다. 만주 동포들의 교육문제는 “深重한 民族百年의 長策에 관한 바”로서 “현대 문화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아울러 “민족 고유한 문화에 의한 독자적 교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만주와 조선에 있는 “식자 및 각계 선구자의 충분 유의할 일”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이러한 관점 속에 조선일보는 재만 조선인들의 교육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다루었다. 이를테면, 1933년 6월에는 ‘재만 조선인 중학 축성회’의 설립을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로서 환영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낸 교포사회를 격려하고 있다.<sup>45)</sup> 그 외에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치외법권 철폐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조선인에게 우려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교육문제가 지목된 사례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해외 이주민들에게 기초적인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교양 교육기관의 확대를 염원하는 담론은 만주국 시기 이민담론이 민족담론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 내부만이 아니라 조선 외부로까지 확장된 ‘민족’의 연결고리를 혈연 외에 ‘민족문화’에서 찾고 있었다.

사변의 여진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날로 격증하는 流移民群”의 탈출구로서 만주가 연속적으로 지목된다. 농촌에서 밀려나는 유랑민들이 가는 곳은 일본과 만주밖에 없다는 인식 그리고 그런 탈출구가 없다면 “그야말로 반도 안에서 질식이나 아사나 하게 될 그러한 참경에 이를 것이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만주 이민을 바라본다. 이러한 窮迫移民에게 만철

44) “만주동포의 교육문제 - 시급한 계몽교육”, 『조선일보』, 1932. 3. 6.

45) “재만조선인 중학축성회”, 『조선일보』, 1933. 6. 30.

46) 사실로서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 『조선일보』, 1935. 4. 12, “대만 치외법권일부 철폐”, 『조선일보』, 1936. 6. 13 등이 있고, 특집기사로서 1935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 조선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6번째 기사에서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총재가 원하는 ‘수전개척의 지도자’나 ‘토지매수’는 요원하다. 대신 당시 더 시급한 것은 “생활 안정의 기초가 될 諸件의 합리적 해결”이었다.<sup>47)</sup>

이렇듯 만주국 초기에 재만 조선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논점은 재만 조선인의 안정책 문제이다. 정착민의 안정을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는 담론이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주장된 토지상조권 확보 문제,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된 취적문제가 논설의 주를 이룬다. 그리고 치외법권 철폐가 점차 공식화되면서 철폐 후의 재만 조선인 사회의 안정에 미칠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sup>48)</sup> 토지상조권이나 취적문제 등 조선인의 법적 신분에 관한 담론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어떤 방향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재가 된다.<sup>49)</sup> 동시에 이렇게 안정책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당시 만주국의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자세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사설이 신규로 만주에 이주하는 조선인 이민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한 최초의 계획이민은 안전농촌으로의 이

47) “만주와 조선인 어쩌면 조을까”(사설), 『조선일보』, 1933. 8. 7; “만주 토지 매수는 當今이 最適好機 - 만철총재와 일문일답”(만주시찰 특파기자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1933. 8. 7. 그러나 만철 총재가 조선인들에게 “만주의 수전개척사업의 지도자로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인터뷰 내용은 수전개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개척담론 구성에 일본제국도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하여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48) 관련 사설들의 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재만동포와 토지 상조권 문제 - 사실상 기득권을 승인하라”, 『조선일보』, 1934. 5. 5; “재만 조선인문제 - 安住의 方책을 수립하라”, 『조선일보』, 1934. 12. 16; “재만 無籍동포”, 『조선일보』, 1935. 2. 11;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 『조선일보』, 1935. 4. 12; “재만 조선인의 토지상조 제한”, 『조선일보』, 1935. 11. 17; “대만치외법권의 일부 철폐 - 조선인의 수익은 의문”, 『조선일보』, 1936. 6. 13.

49) 재만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는 田中隆一, 2004, 「日本の‘滿洲國’統治と在滿韓人問題: ‘五族協和’と‘內鮮一體’の相剋」, 『만주학보』 1집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고,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된 조선인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신규섭, 2003,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집이 유용하다.

민이었고,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지속되었다. 1937년부터는 선만척식회사에 의한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사이민은 정부의 일정한 지도와 지원을 받는 대량이민이며 집단이민이었다. 이러한 집단이민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만주 이민에 관하여 이민회사 설립계획이 무성하게 논의되고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가는 무척 통명스럽다. 이미 만주에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고, 저절로 만주로 밀려나가는 자유이민을 “보호지도”할 생각은 않고, “돈을 써가며 이민을 모집하여 몇 천 호씩 이주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선후를 모르는 일이고, 완급을 생각 않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보호알선’되는 단체이민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최후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나온 사람들”로서 생존의 ‘의지와 투지’가 강한 자유이민을 오히려 ‘指導扶掖’하라고 주장한다. 대량이민, 회사이민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sup>50)</sup>

단체이민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가 부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1937년 만선척식회사에 의하여 대량이민이 실시되던 첫해부터이다. 대량이민 사업을 만주가 ‘조선의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이라며 기대감이 넘치는 사설로서 이 계획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sup>51)</sup> 그러나 기대감과 아울러 ‘안주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으면 대량이민의 ‘역사적·획기적’인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집단부락을 구성하고 이주해온 조선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安住의 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정책적 배려가 일본인 이민단과 비교해볼 때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sup>52)</sup> 그러면서도 대량 계획이민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경축’, ‘전도를 축하하는 어휘를 사용해야면서 이전의 이민계획에 보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논조를 보이고 있다. 1938년의 신년 기획 사설은 기대와 우려, 축하와 비판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이민담론을 전개한다. 대량

50) “자유이민대책 - 시급히 보호하라”, 『조선일보』, 1935. 3. 10.

51) “대량적 만주이민 - 그들의 안주책 여하”, 『조선일보』, 1937. 3. 16.

52) “집단부락과 이민대책”, 『조선일보』, 1937. 12. 17.

이민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실망, 시행되고 있던 당시의 만주 이주정책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수행방법상의 문제 등을 주목하고 있다. 조선인 이민통제에 대한 문제점, 교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안주책에 대한 미비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sup>53)</sup> 기대와 비판이 공존하는 담론은 특히 신규 입식지와 기존 조선인을 일정한 지역으로 집결시키려는 만주국의 이민통제 구상과 관련한 사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부제의 제목에 ‘猛省을 促’한다는 식의 격렬한 어휘도 동원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조선 내의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거주제한 폐지’가 이루어지자, 조선일보의 논조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매년 이민회사에 의하여 만주로 1만 호 이민을 내보내는 것이 조선의 인구 과잉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원조 없이 ‘만연도향’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전개한다.<sup>55)</sup> 1939년에 들어서면, 만주 조선인 이민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더 노골적으로 표명된다. 해외이주 동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특집기사는 그 제목부터가 선동적이다. “조선인의 대륙 진군보/ 만주로! 만주로! 이주 개척 일세기에 무변광야를 옥답화, 80만 재만 동포의 역사적 위업”이라는 타이틀 하에 만주 이민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sup>56)</sup> 조선인 이민사를 수난사가 아니라 개척사로 인식하는 담론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뒤를 이어 등장하는 사설들은 개척담론을 반복 재생산한다. ‘지도와 보호’가 없이 방임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민에 대한 지도, 장려, 보호 등 각종 사업”을 관장할 총독부 ‘이민위원회’의 설치는 “우리가 기대하던 것에 부합된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한다.<sup>57)</sup> 무적자 문제, 경작권과 소작권 보장 문제, 송환 이주자 문제 등을 당면과제로서 당국의 선처를 희망하면서도 언설의 논리 구조는 ‘눈물과 한숨’의 과거와 희망의 ‘신천지’가 대비되고, 그 ‘신천지’에서 해결을 요

53) “신년과 아동의 주장 (4) 조선인 이민문제”, 『조선일보』, 1938. 1. 6.

54) “만주국 이민문제- 만주국 당국에 猛省을 促함”, 『조선일보』, 1938. 6. 26.

55) “인구과잉과 만주 이주”, 『조선일보』, 1938. 11. 7.

56) “조선인의 대륙 진군보”(신년특집기사), 『조선일보』, 1939. 1. 1.

57) “이민위원회”, 『조선일보』, 1939. 2. 23.

하는 부수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sup>58)</sup> 조선일보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만주 이민 관련 사설은 국책이민을 수행하기 위해 경성에 수립되는 ‘중앙개척 협회’를 주제로 다룬다. 지난 이민사를 압축하여 소개하고, 식민당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정책이민의 성과를 소개한 후, 국책이민을 홍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sup>59)</sup> 이때쯤 되면 조선인의 만주 이민담론은 일본인의 개척담론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도항문제와 관련된 사설의 추이다. 식민 권력은 만주 이민과 도항 이민을 길항관계로 파악하고 만주 이민으로 도항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조선일보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비판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있었다. 1934년 5월 1일자 “조선인 도항문제-도항제한과 송환은 불가”라는 사설을 필두로 시작된 이러한 비판은 거의 매년 등장하고 있다.<sup>60)</sup> 그러나 1939년이 되면 일본 내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여 노동력의 일본 유입을 저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노동력을 알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조선일보가 도항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설은 일본 내의 노동자와 학생의 지도와 감독을 알선할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었다.<sup>61)</sup> 일본 도항자 규제문제는 더 이상 조선일보가 비판할 만한 ‘문젯거리’가 안 된 것이다.

58) “만주 이민의 당면 문제”, 『조선일보』, 1939. 4. 19.

59) “개척협회의 태동”, 『조선일보』, 1939. 11. 20.

60) 1934년부터 1940년 사이에 등장하는 도항문제에 관한 사설은 모두 10편으로 거의 매년 1~2 편이 쓰여지고 있다. 도항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의 관심을 끌었다는 이야기이다.

61) “도항자 문제”, 『조선일보』, 1940. 6. 27.

## V. 조선일보의 조선인 만주 이민담론

일본제국의 만주 이민에 관한 지배담론의 하나였던 개척담론은 만주국 건반기(1932~1938)에는 주로 일본인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주와 개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본제국의 대륙팽창과 아울러 황무지 개발, 미개한 사회의 문명화를 동시에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이주민은 일본 농민뿐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 농민의 성공적인 이주를 위하여 모든 정부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담론의 논리에 밀려 조선인 이민은 처음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뒤에는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만주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기사 보도는 물론 사설을 통하여 그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대응담론을 ‘보호안주론’과 ‘조선 농민 개척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제국의 또 다른 지배담론이었던 ‘도항억제론’은 조선일보가 만주국 건립 이후 그 실질적 효능이 사라질 때까지 즐기차게 비판하여 오던 담론이었다.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도항 억제정책의 완전폐지나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주 이민이 도항억제의 합리적인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만주 이민이나 도항 노동자의 이주자유를 모두 허용하라는 담론 즉 ‘도항자유론’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 1. 保護安住論

조선일보가 만주국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둔 조선인 이민담론은 보호안주론이었다. 성공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안주’할 수 있는 ‘당국’ 차원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다. ‘안주책’이라는 말은 조선일보가 이민을 논할 때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였다. 이런 주장은 만주국 초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당시 조선인 이민에 관한 식민당국의 정책이 ‘방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만주국의 방임정책은 조선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만주로 입국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특정한 보호나 지원은 제공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를 당시에는 편의적으로 자유이민이라고 불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방임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대량의 집단적인 만주 이민을 송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식민당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집단이민 논의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 차원의 자유이민을 ‘指導扶掖’하라고 대응한다. 자유로 이주한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최후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나온 사람들”인 만큼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타적인 이민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 ‘지도부액’ 즉 식민당국의 보호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공식적인 방임정책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지도·원조가 고려된 이민계획은 안전농촌 이민계획이었다. 조선총독부라는 식민당국이 주선하는 집단이민이었지만, 그 이민의 성과가 아직 불확실한 임시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안주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안전농촌 이민이 시작된 지 2년째가 되던 1934년 말, 조선일보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안주의 방안을 수립하라”는 사설을 발표한다. 그 텍스트에서 조선일보는 재만 조선인은 ‘경제적 안주’를 목적으로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 이니 “당국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주의 방책을 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명제를 당위론적으로 주장한다. 그 전제하에 기후, 풍토, 치안 등 자연적이거나 정치적인 악조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부터, 無戶籍者의 간이입적 등 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착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각종 고통과 불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식민당국에게 재차 요구한다.<sup>63)</sup>

이주민에 대한 ‘당국’ 즉 식민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민과 식민정부의 관계를 보는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62) “자유이민대책-시급히 보호하라”, 『조선일보』, 1935. 3. 10.

63) “재만 조선인 문제-安住의 방안을 수립하라”, 『조선일보』, 1934. 12. 28.

해외이주만이 아니라 국내이주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여전하다. 예를 들면, 1934년 여름 대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조선총독부는 일부는 안전농촌으로, 일부는 국내의 함북탄광과 평남의 광산, 토목공사장 등으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식민당국이 알선한 이들 국내 이주자들이 수십, 수백 명이 야간 탈주를 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조선일보는 즉각 사설을 통하여 논평을 가하고 있다. 이때도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이 기술에 숙련되지 못하고,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여 탈주하였을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숙련 농민이 가능한 일터 주선, 임금 사전고지, 최소임금을 당국이 개입해서라도 보장해주게 할 것, 인정풍속이 서툴지 않게 부락규모의 집단적 이주를 주선하고, 오락시설을 설비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안정 및 보호시설의 마련에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64)</sup>

‘보호안주책’ 여부에 대한 관심은 1937년 선만척식회사에 의한 이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도 계속되고 있다. 이때는 선만척식회사에 의해 계획되고 있는 보호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백호 단위의 집단이민, 경지면적 4정보, 연간 유통자금 200원, 토지는 3년 거치 10~15년 연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다. “만일 이 계획이 실현화된다면 만주 이민도 그리 상상하는 것같이 비참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계획이 “시험적 계획”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된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0원의 저리지금을 대여한다고 하지만, 이자가 아직 미정이며, 4정보의 경지를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서 원리를 연부 상환할 수 있는 수입이 될 것인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거 건축, 도로개척, 학교설립, 오락시설 설치 등 사회기반 시설의 문제도 장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민회사의 계획안만으로 그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64) “이민의 방법을 주밀히 하라-탈주자 속출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4. 11. 29.

“당국은 모름지기 이민이 안심하고 영주할 만한 계획과 시설을 가해야 할 터”라는 지적을 잊지 않고 덧붙인다. 이러한 예들이 입증하듯이, 조선일보가 파악하는 성공적인 이민의 관건은 ‘당국’으로 표현되는 식민권력의 개입에 의한 이주민의 ‘보호’ 정책의 실시나 ‘안주책’의 강구였다.

만주 이민에 대한 이러한 ‘보호론’을 조선일보 필진이 계속 유지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그것은 한말 이래 특히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조선인들의 流移民 경험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신년 초두의 사설은 조선일보의 이민사 인식과 이민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수난에서 수난의 길을 걸어온 해외동포”는 그 당시 만주 80만, 일본 40만, 소련 20만을 포함하여 “근 이백만”에 달하고 있어 “한 곳에 모이면 서구의 小民族國家에 필적할 만한 일대 民族帶를 형성할 만한 상태”에 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대한 숫자를 이루는 200만 명의 해외동포는 이주지에서의 생활이 모두 불안정하다. 그 까닭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수의 이민군은 先進諸國의 貿易前衛隊 또는 未開地 開拓을 위한 일정한 勢力保護 하의 집단 이민군으로서의 이주를 행한 결과가 아니요, 그것은 장구한 시일 간에 생활의 敗殘 기타 불행한 이유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法律保護以外에서 정치없이 생활의 底面을 향하여 流動된 것……<sup>65)</sup>

이 구절은 이민론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인 이주민과 대조되는 해외 이주민의 형태로서 ‘무역전위대’ 혹은 ‘미개지 개척’의 기능을 하였던 “일정한 세력 保護의 집단이민군”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궁핍과 어려운 환경을 탈출하기 위한 이민이었던 조선 이민은 “법률 보호 이외”의 대상이었고, 그런 비보호 때문에 하층생활을 하는 유랑민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다. 해외동포의 불행이 ‘보호’를 받지 못한 까닭

65) “재외동포를 想함”, 『조선일보』, 1934. 1. 3.

이라는 인식은 만주 이민의 경우에는 더욱 명백하다. 만주 이민사를 언급하는 사설 텍스트에는 보호를 받지 못해서 수난을 당하였다는 모티프가 기본 메뉴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치적으로 아무 보호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통제 플랜도 없는 만주 광야의 조선 이민군은 구 동북정권의 압박, 마적단의 약탈, 만인 지주의 확대를 받아가면서 가엾은 한줄기의 생명을 위하여 악전고투를 하여 나온 결과……<sup>66)</sup>

‘정치적 보호’와 ‘사회적 통제’가 없이 구 동북정권의 복합적 압박하에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회상을 한다. ‘보호’와 ‘통제’가 없었던 것을 조선 이민의 생활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논리상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를 정부, 즉 식민당국이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보호’ 담론에서 주장하는 이민의 ‘안주’를 위한 식민당국의 대책수립 요구는 일제의 조선인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로 쉽게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1939년 초 조선통독부가 이민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을 때 조선일보의 논평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정부기관의 보호가 없고 방임된 결과로 이주민들이 수난을 겪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근 백 년에 걸친 만주와 노령으로의 이주가 있었으나, ‘위정당국’에서 적당한 기관을 설치하고, 이민의 장려와 지도와 보호의 사무를 처리한 일은 없었고 그저 방임되었을 따름이다. 이민 관련 민간 기관이 두세 곳 있었으나 그것은 영리기관으로서 이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기관은 아니었다. 그 결과 이주지의 환경과 사정은 실로 ‘눈물겨움’ 그 자체였다.<sup>67)</sup>

그런데 조선인 “이민에 대한 지도, 장려, 보호 등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이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사설은 그 이민위원회 설치

66) “신년과 아등의 주장 (4) 조선인 이민 문제”, 『조선일보』, 1938. 1. 6.

67) “이민위원회”, 『조선일보』, 1939. 2. 23.

가 “기대에 부합된 것”이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함을 표명한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첨가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 본격적인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사설은 이민위원회에 “이민의 장려, 지도, 보호를 철두철미하게 실행하여서 입식 후에 이식지를 福地樂土로 생활 안정을 얻게 할 것은 물론이요, 일보를 더 나아가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사명이 중차대”함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 사설이 등장한 1939년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식민당국이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던 기간이다. 일본제국의 국책에 대한 지지를 언론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조선일보의 논조를 국책 호응과 지지 쪽으로 굴절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만주 이민문제에 관한 한 식민권력의 ‘보호’를 이전부터 줄곧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었기에 조선일보가 식민당국의 이민정책에 ‘기대에 부합’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지한 것은 내적 논리상 큰 모순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식민권력의 압력과 회유의 결과 친일적으로 변하였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고 본다. 만주 이민문제는 실로 친일과 항일의 이항적 구도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 2\_ 조선 농민 개척론

일제의 일본인 중심 개척담론은 초기에는 방임정책으로 반영되었으나, 그 결과 대량의 조선인들이 자유로 입만하게 되자 일본 농민의 입식지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만 혹은 신규 조선인들의 거류지 제한 등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만척식회사가 보호·원조를 표방하고 출발하였지만, 초기(1937~1938)에는 관동군의 요구에 따른 통제정책 시행이 중요한 임무였다. 이러한 통제정책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기사 보도와 아울러 사설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때 사용하였던 조선일보의 논리와

주장을 본 연구에서는 ‘조선 농민 개척론’으로 부르코자 한다. 이 개척론은 초기에는 통제정책을 비롯한 조선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9년 이후가 되면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개척론은 일본의 개척론과 동조되면서 보다 더 동원 전략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된다.

### 1) 조선 농민 개척론의 서사구조와 특징

일찍이 루이스 영은 일본의 개척담론의 서사구조가 수난-영웅적 극복-번영이라는 ‘정통적 서사 (arthodox narrative)’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68)</sup> 이런 서사구조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가 취한 조선인 개척론의 서사구조를 ‘수난-극복-기대-문제’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수난’과 ‘극복’은 만주사변 이전 중국 치하에서의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생존하여 수전 개발을 해나간 측면을 부각한 것이고, ‘기대’는 만주국 수립으로 수난의 역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번영의 역사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주국의 정책이 통제정책 등과 같은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나오자 이를 비판하면서 ‘문제’로 제기하고 그 대안을 당국에 요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때 조선인의 수전 개척을 비롯한 과거의 개척사는 만주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의 만주 황무지를 개척해 나간 조선인 농민들의 ‘공로’는 현재와 미래의 만주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권리’로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개척담론의 서사구조를 보여주는 사실들은 1937년부터 193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대량적 만주이민”(『조선일보』, 1937. 3. 16), “집단부락과 이민대책”(『조선일보』, 1937. 12. 17)에서 이미 그러한 구조가 발견된다. 1938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서사구조는 만주 이민을 다룰 때는

68) Young, Louise, 1998, “Colonizing Manchuria: The making of Imperial Myth,” in Stephen Vlatos(ed.),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1~103.

거의 어김없이 포함된다. “신년과 아동의 주장 (4) 만주 이민” (『조선일보』, 1938. 1. 6)을 비롯하여 “인구 과잉과 만주이주”(『조선일보』, 1938. 11. 17.) 등이 그것이다. 어느 사설 텍스트를 보더라도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형성하는 조선인 개척담론의 서사적 특징을 1938년 신년 사설을 통해 그 전형적인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69)</sup> 평소의 사설은 앞면 상단 1~2단에 그치지만, 이 사설은 5단에 이르는 장문의 논설이다. ‘수난’과 ‘극복’의 역사와 아울러 조선인 이민들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문제’ 제기 및 해결 요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정치적으로 아무 보호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통제 플랜도 없는 만주 광야의 조선 이민군은 구 동북정권의 압박, 마적단의 약탈, 만인지주의 학대를 받아가면서 가없는 한 줄기의 생명을 위하여 악전고투를 하여 나온 결과 금일의 백만 동포는 만주에 없지 못할 역군이 되었고, 신흥 만주국의 탄생 따라 조선 사람도 만주국의 유력한 구성분자의 하나로 參列하게 된 것이다. (b) 오족 협화를 기초로 왕도 낙토를 건설하려는 만주제국의 건국정신은 조선인 이민문제에 일대 曙光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사변 후 일본 세력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조선 농민의 만주 진출도 俄然活氣를 모하게 되었고, 대소 자본가의 토지 투자열도 불만한 것이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개척담론의 구조와 특성이 압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우선 ‘수난-극복-희망’의 기본구조를 갖추고 있다. (a)는 ‘수난과 극복’ 부분에 해당한다. 정치적 ‘보호’와 사회적 ‘통제’ 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조선 농민들이 구 동북정권 하의 압박, 약탈, 학대를 극복하여 이제는 만주 개척의 역군의 자리를 차지하고, 만주국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수난의 시절을 강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극복의 주체인 조선인들의 의지를 찬양한다. 그 과정에서 만주국의 탄생을 미화하고 있고, 수난의 원인 제공자를 구 동북정권의 악정만으로 단순화시키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소위 일제의

69) “신년과 아동의 주장 (4) 조선인 이민문제”, 『조선일보』, 1938. 1. 6.

‘침병’으로 간주되어 희생되었던 기억은 배제되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b)는 ‘기대’ 부분에 해당한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 세력의 확대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가 하는 조선인들의 일반적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만주제국 건설은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영끌어졌던 조선인 이민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曙光’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장밋빛 기대감이 사변 이후 활기를 띤 조선인의 만주 이주 배경이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만주 침략과 괴뢰 만주국 건설에 대한 평가가 ‘서광’과 ‘활기’로 요약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묘사는 1930년대의 만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일본제국의 시선과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제국의 ‘침략’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일본 세력의 ‘확대’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식민지인들이 일본제국이 제공한 시선에 고정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c)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조선 이민은 이제 만주 국책에 의하여 철저한 통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만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책이니만치 조선인을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정책이 아님은 물론이나 그 결과로 조선 이민에는 여러 가지 難問題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만주국 이민정책은 조선인의 중대문제로 화하게 되었다. (중략) 「우수」하고 「지도자」인 일본 내지인의 대량이식을 主眼으로 하는 관계상 此에 伴한 직접 간접의 영향이 조선인 이민에 파급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소화 12년(1937년: 필자)부터 二十個年間 백만 호, 오백만 명의 일본내지인 이식 계획에 따라 일천만 정보의 경작지를 조사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 진행을 위하여 또는 조선 이민의 「통제」와 「안정」을 위하여 조선인 이민정책을 새로이 세우게 되었다.

‘수난-극복-기대’의 구조가 끝나는 지점에서 당면문제를 제기하는 서사가 시작됨으로써 ‘수난-극복-희망-문제’라는 조선일보 특유의 개척담론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당면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c)에서는 당면문제로서 소위 ‘통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선인의 중대문제’가 된 통제정책이 취해진 원인이 대량 일본인 이민 입식계획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조선

인 이민이 백만 호 이민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인 이민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완곡한 표현 속에 분명하게 표명되고 있다. 뒤이어 이러한 통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d) 그러므로 조선 이민의 통제와 안정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鮮滿拓殖會社를 창립하고 조선인 이민사업을 주로 이 기관을 통하여 이민을 함은 좋으나 자유이민도 許하여 자유거주하게 할 것이다. 況 현재 수십년을 두고 경작하고 있는 땅을 非移民地區라 하여 토지를 放賣하고 나가라 함은 너무 실정을 무시한 가혹한 일이니 절대로 忌得권을 擁護하여 그대로 안주케 함이 가할 것이다.

(d)는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통제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역 통제정책에 대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만 조선인들에게 “수십 년을 두고 경작하고 있는 땅”을 팔고 나가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득권’ 차원에서 옹호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문제’제기의 서사는 계속 이어진다. 치외법권 철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선인의 교육문제, 不正業者 단속방침과 轉業 및 조선 送還 방침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이민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서사는 “수년 내지 십수 년 있어도 완전한 자작농이 될 희망이 적으니 어찌 王道樂土로 삼으랴”는 반전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왕도낙토’라는 만주국의 이데올로기가 여기에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수용되고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비판의 논리적 근거로 轉用되고 있다는 점은 조선일보의 개척담론의 비판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수난-극복-기대-문제’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서사구조는 1938년 후반부터는 점차 문제의 제기보다는 정책의 동조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일보가 격렬하게 제기하였던 문제가 일부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주국은 1938년 7월 27일 신징에서 이민사무처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간도와 동변도 일대에 국한되었던 제한을 철폐하고, 국경지대나 특정지대를 제외한 만주 전역을 조선 농민의

이주 가능지역으로 개방하게 된다. 종래에는 1만 호 ‘이내’로 국한하였던 이민의 숫자도 1만 호 ‘정도’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의 대강이 결정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鮮滿一如의 빛나는 열매”를 맺은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기사를 발표하고 있다.<sup>70)</sup> 이런 정책전환에 대한 조선일보의 우호적인 논의는 며칠 후 시사 해설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재확인된다.

(a) 조선인 이민의 지역적 제한은 국책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 하지마는 이것은 만주국 건국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요, 조선 이민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b) 조선총독부의 알선으로 본 문제에 대한 관동군 당국의 재인식과 만주국 정부의 호의에 의하여 (중략) (c) 이것은 문제 중의 이민 문제에 대한 一大 曙光이 되는 동시에 이로써 민족 협화의 건국 정신이 완전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sup>71)</sup>

(a)에서는 조선인 이민지역 제한문제가 명분상 일본인 중심의 개척정책이라는 ‘국책상 필요’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만주국 건국정신인 ‘민족협화’에 위배되고, 조선인 이민의 ‘발전저지’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종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하여 집요하게 비판하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b)는 이런 통제정책의 완화가 조선총독부의 ‘알선’, 관동군의 ‘재인식’ 그리고 만주국 정부의 ‘호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전시 후방의 안정 도모라는 일본제국의 정치적 의도는 배제해버리고 제국 기관들의 ‘호의’만을 부각하고 있다. (c)에서 이러한 제국의 정책수정이 조선인 이민문제에 대한 ‘일대 서광’이며, 만주국 건국정신인 ‘민족협화’의 ‘완전한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았다. 최고의 연사로서 그 의미를 포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1938년 8월경부터 일본제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시작함을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알려주는 기사이다.

이와 같이 이미 기사와 시사해설 등을 통하여 조선일보의 편집기조가 바뀌

70) “조선인집단이민에 만주 전역을 개방, 종래 구역제한 일척”(기사, 『조선일보』, 1938. 7. 30.

71) “이민 문제에 서광”(시사해설), 『조선일보』, 1938. 8. 11.

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런 태도변화는 사실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근일에 와서는 만주국에서는 종래의 限地移住政策을 포기하고 집합이주와 분산이주의 어느 것이든지 매년 일만호에 한하여 이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 년에 萬戶 즉 약 오만인이 만주로 이주하는 것이 조선 내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못 될 것이다. 그러나 질이 양호한 이주민이 이주하는 것은 종래 漫然渡滿으로 이주자에게도 고초가 막심하였고, 또 만주국 측에도 頭痛거리가 되었던 것에 비하여 일단의 好結果를 초래할 것이 殆히 확정된 사실이다.<sup>72)</sup>

만주국에 의하여 가해졌던 통제정책이 포기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점은 특히, 만주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된 1년 1만 호의 이민이 조선의 과잉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보호’를 받고 이주하는 양질의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민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sup>73)</sup>

여기에서 소위 ‘질적 통제’가 만주국의 ‘두통거리’를 해소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정책이라는 평가는 제국의 입장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이 사실의 성격을 특별히 잘 나타내주고 있다.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가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상의 모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던 이전의 논조는 사라지고, 또 다른 일본제국인 만주국의 관점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제국의 입장을 이해 내지는 옹호하는 기미는 이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한 ‘漫然渡滿’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난다. ‘漫然’이라는 어휘는 일제가 조선 노동자의 일본행을 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즐겨 사용하던 ‘漫然渡航’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었던 단어이다. 이 ‘만연’이라는 단어가 식민 경찰이 편의적으로 사

72) “인구과잉과 만주 이주”, 『조선일보』, 1938, 11, 7.

73) 사실에서 언급되고 있는 ‘質이 양호한 이주민’이란 농사를 지을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일정한 노동력을 확보한 이주민을 말한다.

용하던 ‘관제숙어’라고 용어 자체를 비판하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만주 이민에  
 계까지 스스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역설을 발견한다.<sup>74)</sup> 용어나 어휘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해볼 때, 제국의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국이 설정한 시각에  
 갇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부터 사소한 용어 사용  
 에 이르기까지 이 사설은 도처에서 제국의 논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변화는 1939년이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만주국 ‘개척  
 민’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 농민도 ‘준’ 일본인으로서 공식적으로  
 ‘개척민’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sup>75)</sup> 이때 등장한 사설들 예컨대, “이민 위원  
 회”(『조선일보』 1939. 2. 23), “만주 이민의 당면 諸問題”(『조선일보』 1939. 4.  
 19), 그리고 “개척협회의 태동”(『조선일보』 1939. 11. 20) 등은 일본 정책 지지  
 쪽으로 대폭 선회한 조선일보 담론의 특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조선 농민의 개척담론이 동원을 위한 국책 홍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  
 고 있음을 예시하는 사설이다. 그중 1939년 말 “개척협회의 태동”이라는 사설  
 을 택하여 그 증거를 살펴보려 한다. 사설에서는 개척협회 창설의 배경을 다음  
 과 같이 논하고 있다.

近百年의 역사와 過百萬의 개척자를 가진 만주의 조선 개척민은 이출  
 전이나 이입 후에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어서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  
 람이 한갓 섭섭하고 한이 많았을 뿐이다. (중략) 더욱이 사적으로 회고  
 한다면 개척민은 만주에서는 반기지 않는 손님이요 조선에서는 달아나  
 는 義子格으로 하등 친절미가 조금도 없었던 것이요, 약간의 시설이

74) “도항·노동자의 취제”(사설). 『조선일보』, 1934. 7. 15. 이 용어를 “경찰 방면에 유  
 행하는 일종의 관제 숙어”로서 “만연히 즉 일정한 목적 없이 일본 내지로 건너가는  
 조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유학생과 상인 이외에 “노동을  
 목적으로 하고 도항하는 일체의 조선인 노동자”를 지칭한다고 비판한다. 목적이 없  
 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있다.

75) “이민을 ‘개척민’, 총독부서도 개용 결정”(기사). 『조선일보』, 1939. 8. 18.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當局에서 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만주의 조선 개척민은 현금 동아 신 정세에 照應하여서 그 가진 바의 사명과 임무가 前日과 달라진 바가 있고, 또 荒漠한 原野를 개척하여 비옥한 낙토를 만드는 데는 조선 개척민의 특수한 기능과 조건이 절대로 요구되게 되었다.<sup>76)</sup>

이 사실에서도 외면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척담론의 서사구조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移出前이나 移出後에도 적당한 보호알선 기관이 없어서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한갓 섭섭하고 恨이 많았을 뿐”이었고, 그 결과 만주에서는 “반기지 않는 손님”이요, 조선에서는 “달아나는 義者格”이었던 수난사가 이제는 희망의 개척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구조가 내면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던 서사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총독부의 외곽기구로 개척협회가 만들어진 사실을 찬양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던 자리는 일제의 전형적인 개척담론 전략 즉 ‘동원’을 위한 국책홍보가 대신 차지하고 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제국의 식량기지가 된 만주국은 일본 농민만이 아니라 조선 농민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식량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일본제국의 이러한 의도에 조선일보는 “동아 신 정세” 하에 조선 개척민은 “荒漠한 原野를 開拓하여 비옥한 낙토를 만드는 데는 조선 개척민의 특수한 기능과 조건이 절대로 요구된다”라는 말로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본의 국책 지지라는 측면으로 굴절되어나갔던 조선 일보의 편집경향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하나 들면서 조선인 개척론의 서사구조 부분을 마치고자 한다. 1939년 9월 말 조선일보는 이기영의 대륙 개척 소설인 「대지의 아들」 연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소개문의 앞부분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굴절된 개척론의 서사구조를 그 어떤 예보다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76) “개척협회의 태동”, 『조선일보』, 1939. 11. 20.

검은 티끌이 휘날리는 아득한 이역 별판에 樂土를 찾아 헤매던 조선 이주민 백여 년의 만주 이주사는 그대로 血淚의 기록이었다. 박해와 희생의 이주 前史는 張政權의 몰락과 함께 흘러가고, 만주 건국의 대군호에 맞추어 백만의 조선 이주민들은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서 樂土 건설의 역사적 대업의 前線에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음침한 풍토를 배경으로 하고 탄식과 방랑에서 희망과 건설으로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는 그들의 사연은 그대로 일대 산 敍事詩다.<sup>77)</sup>

조선일보가 1939년경에 생산하고 있었던 개척담론의 특징적인 면모를 이처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는 없는 것 같다. 피와 눈물의 기록이며 박해와 희생의 수난사로 묘사된 조선인들의 이주 전반기 역사는 舊政權인 장학량 정권의 유산으로 치부된다. 새로운 만주국 건국은 조선인들이 “낙토 건설의 역사적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탄식과 방랑”으로 암울하게 묘사되던 조선 농민은 “희망과 건설”의 역군이라는 밝은 이미지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초기에는 수난에서 기대, 실망과 문제 제기 및 비판으로 논리를 전개하던 조선인 개척담론이 이 시기에 와서는 수난 극복과 희망과 번영이라는 서사구조 속에 생산을 위하여 동원을 부추기던 일본제국의 개척담론과 거의 차이가 없게 변하고 있다.

## 2) 水田開拓論

지금까지는 조선 농민 개척담론을 주로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그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조선인 개척담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조선 농민에 의한 수전 개척론이다.<sup>78)</sup> 이것은 일본의 개척담론에는 없는 요소로서 조선인의 개

77) “본보 次回 장편 소설의 주옥편, 백만 개척민의 血汗記,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 1939. 9. 27.

78) 만주국 초기 만철총재가 조선인들을 ‘수전 개척의 지도자’로 지칭한 것은 일본인 지도자들도 조선인들의 수전 개척론을 인정하고 있었던 수많은 예 중의 하나이다. “만주 토지 매수는 當今이 最適好機 - 만철총재와 일문일답”(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1933. 8. 7.

척담론 중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수전 개척론은 조선인의 만주 개척론의 핵심요소로서 등장한다.

현재 백만 이상의 조선 동포가 만주 각지에 산재하여 있고, 그중 八割을 접하는 조선 농민이 만주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던 습지를 개간하여 십일만여 町步의 沃土良畝를 만들고 종래에는 쌀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이 땅에서 매년 이백오십만석 이상의 벼를 생산하게 되었다.<sup>79)</sup>

이런 수전 개척의 성과는 통상 ‘구 동북정권의 압박’, ‘마적단의 약탈’, ‘만인 지주의 학대’를 받아가면서 ‘악전고투’를 하던 재만 조선 농민들의 수난사와 결부되어 묘사된다.<sup>80)</sup> 비록 표면에 드러내 놓지 않은 경우이라도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를 회상하면서 ‘惡戰苦鬪’, ‘血汗의 結晶’ 등을 언급하는 텍스트는 그 수난 속에서도 만주 땅에 수전 기술을 전파한 조선인의 개척담론이 항상 구조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 수전 개척담론은 조선일보가 만주국에 대한 조선 농민의 이주와 정착할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던 담론이다. 예를 들면 만주국이 한창 조선 농민의 이주를 통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 이주의 필요성만을 역설하지 않았다. 항상 조선 농민의 존재가 만주국 측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었다. 이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조선인 이주민들의 수전 개척의 능력과 성과였다.

(a) 조선은 (중략) 年年히 증가되는 인구는 다시 농민 생활을 위협하게 되므로 지리적 접근관계로 풍토가 크게 다르지 않고 역사적 밀접관계로 종래부터 왕래가 빈번한 우방 만주국에의 농민 이주는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b) 타면에 있어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는 조선 측으로 보아서만 기대할 일이 아니라, 만주국 측으로 보더라도 기대할 일이 적지 않다.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만주 개발 특히 만주 수전의 개발에

79) “신년과 아동의 주장 (4) 이민문제”, 『조선일보』, 1938. 1. 6.

80) “신년과 아동의 주장 (4) 이민문제”, 『조선일보』, 1938. 1. 6.

있어서는 조선 농민의 공적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수십 년에 亶한 수 많은 조선 농민의 노력이 없이는 황막한 만주에 水田 농사가 금일의 성과를 얻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亦然하다.<sup>81)</sup>

(a)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 필요성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인식하던 만주라는 공간은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이요,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공간이었고, 조선 이민을 받아들여줄 것으로 기대되던 우방 만주국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이 부분이 과거의 역사에 기대 일방적인 정서적 호소라고 한다면 (b) 부분은 수전 개척의 공로와 그에 따른 권리를 은근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 농민의 노력이 없이는 황막한 만주에 水田 농사가 금일의 성과를 얻었을 리가 만무”하다는 사고 속에는 자부심과 더불어 당연한 보상을 기대하는 권리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조선일보에 표명된 이러한 자부심은 당시 조선인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sup>82)</sup>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개척론 속에 은폐되어 있는 타자 의식이다. 다시 한 번 더 이기영의 표현을 빌려보자. 이기영은 조선인 이주자들의 만주 수전 개발에 대한 의미를 경제적인 부의 개발로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풍광을 바꾸는 ‘창조성’의 결실로도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또한 만주의 수전 개발은 原始的 自然을 變改하는 위대한 창조성을 띠고 있다. (중략) 즉 황폐한 평원을 수전으로 개척하는 것은 재래의 건조한 밭농사만 짓던 만주로 하여금 田畠樹林과 堤防川澤이 具有한 포실한 농촌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경제적 富源을 개발함에 근질 뿐 아니라 실로 전원의 풍광을 일변하는 자연미

81) “만주이민문제-만주국 당국에 猛省을 促함”, 『조선일보』, 1938. 6. 26.

82) 1939년 당시 신경의 건국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최남선의 평가에도 그러한 자부심이 역력하다. “더구나 수전개발은 조선 농민이 한 것이니까요. 지금 만주국 내에서 4백만 석이나 쌀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모두 조선인의 수전개발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임을 알 때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함대훈, 1937, 「남북만주편담기」, 『조광』 7월호; 소재영 편, 1989, 『間島流浪 40年』, 조선일보사, 268쪽.

를 가져오게도 한다.<sup>83)</sup>

이러한 예에서 잘 나타나듯이 조선인의 수전 개척담론은 일반적인 제국의 개척론이 가질 수 있는 개척지에 대한 문명과 야만의 구도로 쉽게 전환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만주는 수전을 개발한 황무지와 습지의 공간으로 개척을 기다리는 ‘원시적 자연’ 또는 ‘처녀지’의 이미지로 곧장 표상되었다. “쌀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이 땅”, 물을 두려워하고 쌀농사를 모르고 밭농사만 고집하는 ‘무지한 중국 농부들과 그들이 사는 땅은 야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수전 재배 기술을 전파하고, “田畚樹林과 堤防川澤이 具有한 포실한 농촌을 건설”하는 것은 문명을 전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주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형성 전파된 수전 개척담론은 신화가 되었고, 그 신화는 조선인의 정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한 연구는 1930년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만주를 정복해야 할 개척지로 또는 계몽해야 할 야만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만주를 식민지라고 여기는” 의식과 더 나아가 “제국의 위치에 서려는 욕망”까지 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sup>84)</sup>

조선일보의 사설 자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직접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소들을 행간에서 발견한다. 조선일보는 처음 1937년에서 1938년 전반까지는 개척담론을 이용하여 주로 이민과 관련된 당면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때도 사설의 행간에서 명백하게 읽히는 것은 개척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이었다. 1938년 후반 이후 뒤로 가면서 조선일보에 나타나던 조선 농민의 개척론에서는 이 자부심이 만주에서의 권리 주장을 위한 단순한 수단만이 아니라 민족적 우월감의 징표로도 인식되고는 하였다. 바로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된 타자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sup>85)</sup>

83) 이기영, 1939, 「만주와 농민문화」, 『인문평론』 11월호.

84) 배주영, 2003, 앞의 글, 38~48쪽.

85)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의 형상은 만주국 수립 이후 점점 더 왜소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은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히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 3\_ 渡航自由論

보호론과 개척론에 이어 조선일보가 주창한 조선인 만주 이민담론의 한 요소로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도항자유론’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34년 말 일제 권력은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장려하고 그 대신 도항을 억제하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은 조선총독부가 제창하던 소위 ‘남쇄북개론’ 즉 ‘도항억제론’의 반영이다. 조선일보는 이 제국담론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도항자유론’이라는 대항담론을 생산·유포하였다.

도항 억제정책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강력한 비판론을 제기한 것은 1920년대 일본의 도항 규제가 실시될 때부터이지만,<sup>86)</sup>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주국 건립 이후 도항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34년부터이다.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밀항 조선인을 송환시키며, 東港(동쪽 즉 일본으로의 도항이라는 의미) 제한을 엄중히 한다는 방침이 내무성과 총독부 간에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선일보는 1934년 5월 1일자 사설을 통하여 “도항

---

말해준다. ‘식민지적 무의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타민족에 대해 우월하다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국인을 타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성욱(2008),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 -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1쪽.

86) 일본은 본국의 노동문제를 유발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노동자 유입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민족 언론들은 식민당국의 도항 억제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여행증 제도를 이용하여 도항 제한을 시도하던 식민당국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平時에는 남의 피와 담을 짜내어 자기 배를 채우다가 患難의 때에는 그네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私利가 있을 때면 온갖 수단으로 착취와 억압적 행동을 사양 없이 하다가 조급하면 관문을 꼭 닫고 입국까지 허락치 아니함은 자본가와 정략가의 결탁 연합하여 官權과 財閥의 常例인 수단을 弱小한 우리에게 자행함이다”(“부산에서 우는 노동 동포에게”, 『조선일보』, 1924. 5. 28).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국내의 산업발달로 인하여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조선 농민들을 유치하다가, 산업의 퇴조와 아울러 노동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문을 꼭’ 닫는 일본 식민당국의 처사를 약소한 민족에게 ‘자행’하는 횡포로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만주국 시기 도항 관련 조선일보 사설 목록

연도	일자(면수)	제 목
1934	5. 1(1)	조선인 도항문제
	7. 15(1)	도항 노동자의 취체
1935	1. 27(1)	도항 노동자 취체
	7. 23(1)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1936	2. 6(1)	도항증 제도를 폐지하라
	4. 7(1)	도항 허가제도와 범죄
	7. 29(1)	도항 허가제도를 재론함
1937	3. 20(1)	도항 금지와 범죄
1938	5. 29. 석(1)	도항 증명제도의 완화
1940	6. 27(1)	도항자 문제

제한과 송환은 불가”하다는 비판론을 즉각 제기하였다.<sup>87)</sup> 그 후 도항문제와 관련하여 총 10편의 사설이 발표되는데, 1934년에 2편, 1935년에 2편, 1936년에 3편, 1937년에 1편, 1938년에 1편, 1940년에 1편으로 거의 매년 도항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만큼 도항문제를 조선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조선일보가 전개한 도항자유론은 식민당국의 도항억제론에 대한 대응담론이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도항자유론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규제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철폐하여 이동의 자유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자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주장도 자유론에 포함된다. 두 번째 주장은 만주로의 이민을 장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본 도항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주로의 이주나 일본으로의 도항은 이주자의 자유권리이며 이것을 식민당국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도항자유론을 전개하면서 식민당국의 도항억제론을 비

87) “조선인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4. 5. 1.

판해나간 논리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민당국이 주장하는 도항억제론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과 불합리성을 날카롭게 논박하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의 값싼 임금이 일본인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항을 엄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동일 판도 내에 있는”,<sup>88)</sup> “동일한 국내”의 구성원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며,<sup>89)</sup> “같은 영토 내에 장벽을 두는” 것과 같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일방에 제한을 가하면 다른 일방에도 제한을 가해야” “공평”하고 “무차별”할 것인데, 일본인의 조선 이동은 제한이 없으면서, 조선인의 일본 이동만 제한한다는 방침은 지극히 불공평하다는 것이다.<sup>90)</sup> 그리고 정치적으로 “동일한 판도” 내에서 동일한 “국민”의 일부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내지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내선일체’의 정신에도 맞지 않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방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91)</sup> 조선인도 동일한 제국신민으로 취급하여 일본인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내세운 ‘내선일체’라는 일본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균열 지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비판전략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판담론의 두 번째 논리는 도항자들이 속출하는 원인과 그 저지 정책이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통치하에 발생한 “조선농촌의 분해작용의 결과로 받게 되는 생활난의 위협”은 조선 농민들로 하여금 “생의 활로”를 찾기 위한 “최종적인 희망”이며<sup>92)</sup>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sup>93)</sup> 원래 “定住하기를 좋아하는 농민이 故土를 버리고 언어 풍습 습관이 다른 異土에 이주하기를 누가 원하랴?”고 반문하면서 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더 낫은 생활을 위한 ‘樂土’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

88) “도항 노동자의 취제”, 『조선일보』, 1934. 7. 15.

89) “도항 노동자 취제”, 『조선일보』, 1935. 1. 27.

90) “조선인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4. 5. 1.

91) “도항 증명제도의 완화”, 『조선일보』, 1938. 5. 29.

92)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5. 7. 23.

93) “조선인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4. 5. 1.

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막다른 선택으로서 ‘活地’를 찾아나선 窮迫 이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는 것은 “단순한 도항저지가 아니라 그들을 活地에로 연결하는 희망의 길을 단절”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한다.<sup>94)</sup>

세 번째의 비판논리는 도항억제 위주의 정책은 피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새로운 범죄를 양산하는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 도항규제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그 제도의 불합리성이나 비윤리적인 성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폐지 요구와 함께 항상 제안된 것은 식민당국의 ‘근본적 대책수립’이다. 이민문제가 농촌의 피폐와 생활 불안정에서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시설이나 사회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조선 농촌사회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조선 농민들은 만약 농촌의 “생활안정과 전도가 보장된다면” 굳이 일본 도항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도항자의 “자연적 감소”가 이루어져 도항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한다.<sup>95)</sup> 만약 이와 같이 농촌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도항저지’에만 급급하는 것은 브로커의 대두와 밀항 등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도항이민은 “樂地를 구하는 漫然한 夢想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活地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모색이며 본능적인 살기 위한 ‘욕망’이다. 이 ‘욕망’은 설사 제한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발호하여 사기나 밀항 등 도항 관련 범죄사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96)</sup>

● 이상과 같이 식민당국의 도항노동자 억제담론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담론은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 비윤리적인 측면 비판, 도항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근본대책 강구라는 주장과 논리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94)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5. 7. 23.

95)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5. 7. 23.

96) “도항 허가 제도를 재론함”, 『조선일보』, 1936. 7. 29.

다음 살펴볼 것은 조선일보의 도항 자유담론이 만주 이민과 일본 도항문제를 연동하는 제국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제국 기관들이 조선인의 대량 만주 이주를 도항이민의 감소방책으로 한창 논의하고 있을 때인 1935년 7월, 조선일보는 이러한 일본제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농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이민이 아니라 농촌의 황폐한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주 이민 계획에 의한 ‘도항 이민 문제’ 해결책도 考究되고 있는 모양이나 이것도 근본적 대책이 못 되고 ‘표피적·부분적 대책’일 뿐이라고 매우 소극적인 평가를 한다.<sup>97)</sup> 1년 후 1936년 7월, 선만척식회사에 의한 만주 이민정책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재론하고 있다. 부제도 ‘소위 南鎮北開策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때도 도항문제는 우선 “조선 농촌의 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농민 안주의 방도를 강구”하는 근본적 대책으로 풀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총독부의 소위 ‘남쇄북개론’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조선 농민은 일본 내지로 이주하는 것은 즐기되 만주로 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이 대체의 경향”이며, 그것은 일본의 이주지로서의 조건이 만주의 조건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따라서 만주에서 조선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만주 이민은 不勞로 장려될 것이며, 도항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에 의한 순리적이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덮어놓고 갑을 저지하고 을을 장려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못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기된 일본과 만주로의 이민이라는 두 흐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목적지의 생활조건이 어느 곳이 더 유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만주 지역의 생활조건을 일본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순리’적으로 흐름을 남에서 북으로 유도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총독부가 당시에 주장하던 도항 억제담론의 인위성과 무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도항과 도만은 이주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조선인의 이주 자유권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

97)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조선일보』, 1935. 7. 23.

고 말할 수 있다.

식민당국의 도항담론에 대하여 일관되게 비판적인 담론을 생산해오던 조선일보는 1938년도부터는 비판의 강도를 다소간 조절한다.<sup>98)</sup> 1939년에는 도항문제에 관한 한 편의 사설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당국의 도항담론에 동조하는 결과가 아니라, 역으로 식민당국이 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항증명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도항 규제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담론에 동조하지 않고, 대항담론으로서의 비판성을 끝까지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일보가 펼치던 도항 자유담론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조선인 개척담론이 1938년 이후에는 점차 일제의 동원전략에 호응함으로써 그 성격이 변질된 점을 고려해볼 때 그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sup>99)</sup>

##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 다룬 조선일보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이민담론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사변 직후에는 재만 조선인들에 대한 난민구조 문제, 재만 조선인들의 안주책 문제, 그리고 도항이민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중 난민문제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재만 조선인의 안주책 문제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였고, 하위 주제로서 취척문제, 토지상조권 문제, 교육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소

98) 1938년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식민당국의 도항규제 완화방침을 “실로 반가운 소식”이며 “만시지탄이나 適宜한 처사”로 환영하고 있다. “도항증명제도의 완화”, 『조선일보』, 1938. 5. 29.

99) 일제의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성과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일보의 개척담론과 도항담론 사이에 이와 같은 편차가 왜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위 정책이민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집단이민보다는 자유이민을 지원하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사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7년 이후로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다가, 1939년 이후가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식민당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항이민은 만주 이민과 아울러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해외 이민군의 이대 주류 중의 하나였다. 식민권력은 만주 이민과 도항 노동자를 길항관계로 파악하고 만주 이민으로 도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조선일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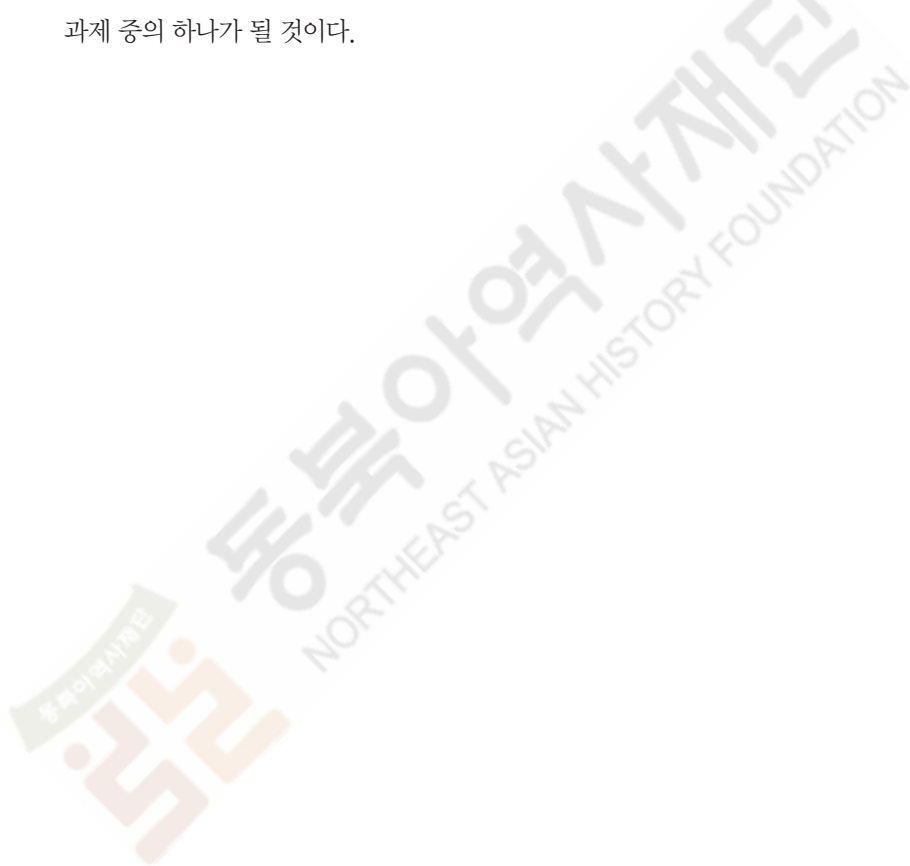
이런 일반적인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사설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일보의 만주 이민담론이 ‘보호안주론’, ‘조선 농민 개혁론’, ‘도항자유론’ 등 세 가지의 하위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의 이런 담론은 일본제국의 ‘일본 농민중심 개혁담론’과 ‘도항억제론’이라는 두 종류의 지배담론에 대한 대응담론의 성격을 지닌다. ‘보호안주론’은 이민의 이주와 정착을 위하여 ‘당국’이 항상 보호 및 안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발적으로 식민당국의 관여와 보호를 요청하는 이런 평소의 주장은 논리상 총독부의 이민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인 개혁담론’은 ‘수난-극복-희망-문제’라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수전 개혁론’이 개혁담론의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조선일보의 개혁담론은 일종의 편승전략을 쓰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편승전략이란 표면적으로는 식민당국의 담론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동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당면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전략 즉 동조와 비판을 병행하는 전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특히 1937~1938년도에는 만주국의 조선인 이민 통제정책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후기로 갈수록 일방적인 정책 지지로 변해버렸음도 지적하였다. 수전 개혁론은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이 개혁론이 자칫하면 문명-야만의 구도 속에서 만주와 만주인을 야만시하기 쉬운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도항

자유론'을 언급하였다. 제국당국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일본 도항을 억제하려는 소위 '남쇄북개' 정책을 천명하면서 도항 억제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도항문제를 도항의 원인, 즉 농촌문제 개선이라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스럽게 감소시켜야지 억제 일변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식민당국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만주 이주와 일본 도항을 연동시킨 정책에 대해서도 목적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켜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 방향을 막아버리는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식민지 연구에서는 흔히 식민당국은 담론적 지배를 통하여 식민지인들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식민지인들은 대항담론으로 저항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 도항문제에서는 지배담론과 대응담론의 지배-저항 구도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주 이민문제는 이런 지배-저항의 단순구도로 양측의 담론을 나누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식민당국의 담론과 조선일보의 담론 중에 상호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던 '보호안주론'은 재만 조선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식민당국의 지원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런 담론을 지배와 저항의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형성한 조선인의 이민담론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이주민들의 목적지인 만주 땅의 토착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비판은 주로 일본인과의 차별대우나 안주책의 미비였지, 토착민인 만주국 주민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수전 개척론의 예에서 보듯이 만주를 수전 기술을 전파하는 개척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면서 부지불식간에 만주국 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있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만주 이민담론 연구를 위해서는 제국의 정책에 대한 동조-저항의 단순구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기존의 설명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일제 식민시기의 언론매체에 담긴 만주 이민담론을 조선일보 사설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당시 매체를 통하여 유포되던 이민담론의 전체상을 파악하려면 또 하나의 민족지였던 동아일보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과의 비교·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성은 명확하며, 이런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앞으로 남겨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일자 자료〉

『조선일보』, 1931. 9. 18 ~ 1940. 8. 10.

### 〈참고 자료〉

-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 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5집.
- 김광렬, 2003, 「戰間期 일본거주 조선인의 생활상과 귀향」, 『한일민족문제연구』 4집.
- 김기훈, 1993, 「만주국」 시대 일제의 對滿 조선인 농업이민정책사 연구, 『학예지』 3집.
- 김기훈, 1998a, 「일제시대 전기(1910~1930)의 조선인 만주이주」, 『육사논문집』 54집.
- 김기훈, 1998b, 「일제의 조선인 만주이주정책 논쟁: 1932~193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집.
- 김기훈, 2002, 「일제 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 일본인 이민 '장려', 조선인 이민 '통제' 정책 형성의 배경」, 『아시아 문화』 18호.
- 김성욱, 2008,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 -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 2003,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용, 2006, 「일제 말 한국인의 만주 인식 - 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2호.
- 김태운, 1994, 『일제강점기 한국 流移民 小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승현, 2006, 『일제 말 '민족주의계' 지식인의 식민담론 수용과 현실 인식』,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두기, 1999, 「만보산 사건(1931)과 한국 언론의 대응 -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 65집.
- 박용규, 2005, 「일제의 지배 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 변화 - 일제 말기(1937~1940)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28집.
- 박용규, 2008, 「일제강점기 언론에 대한 연구동향과 전망」, 『일제강점기언론사연구』, 나마.
- 박용희, 2009, 「제국과 식민지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시각: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 '다양한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의 관점」, 『역사학보』 20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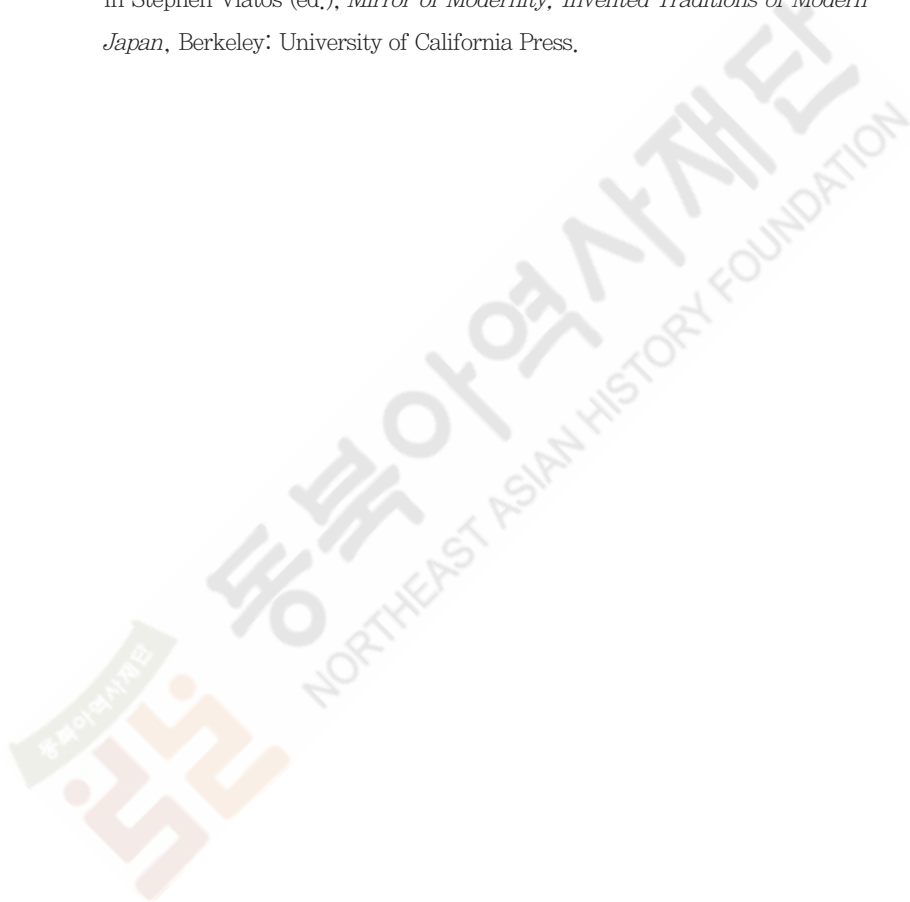
- 박일우, 2008, 『한국 근대문학의 滿洲 표상에 관한 연구-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환, 2009, 「일제강점기 한글신문의 변모 양상-‘친일’과 ‘민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 배주영, 2003,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한국학보』 29권 3호.
- 서현주, 1991,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17권 2호.
- 성주현, 2009, 「1930년대 이후 한글신문의 구조적 변화와 기자들의 동향-『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 소재영 편, 1989, 『間島流浪 40年』, 조선일보사.
-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 31집.
- 신규섭, 2003a, 「재만조선인의 ‘滿洲國’觀 및 ‘日本帝國’像」,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호.
- 신규섭, 2003b,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집.
- 신규섭, 2004,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鮮滿一體化’의 좌절과 ‘三矢협정」, 『한국근현대사 연구』 29집.
- 신규섭, 2006, 「재만 친일 조선인의 만주(국) 인식」, 『북방사논총』 12호.
- 신승모, 2008, 「식민지기 일본어 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만주’를 바라보는 동시대 시인의 諸相」, 『한국문학연구』 34집.
- 양예선, 2007, 「일본의 만주문학-‘대륙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7집.
- 윤휘탁, 2005,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서: 日·中의 틈바귀에 낀 재만조선인」, 『한국사학보』, 19집.
- 이연, 2001, 「일제 하의 한국 언론의 민족 투쟁사-「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 이원동, 2005, 『일제 강점기 이기영 소설의 담론적 실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모, 2008, 「근대 일본의 국내 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집.
- 田中隆一, 2004, 「日本の‘滿洲國’統治と在滿韓人問題: ‘五族協和’と‘內鮮一體’の相

- 헌], 『만주학보』 1집.
- 정성호, 1998,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 인구학』 21권 1호.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나남.
- 정진석, 2005, 『언론 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진성 · 길인성, 1998, 「일본의 이민정책과 조선인의 일본이민: 1910~1939」, 『경제사학』 25권 1호.
- 朝鮮總督府, 1941, 『朝鮮の農業』, 京城.
- 조형근, 2009, 「비판과 굴절, 전화 속의 한국 식민지 근대성론」, 『역사학보』 203집.
-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 최원규, 2000, 「동양척식회사의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한국민족문화』 16집.
- 최해주, 2009, 「1930년대의 한글 신문에 나타난 총독정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 허영주, 1990, 「일제 하 離鄉의 실상과 일본 노동 이민의 소설적 형상화」, 『계명어문학』 5권 1호.
- 현은주, 1999, 「1930년대의 만주이민에 대하여 -營口安全農村 건설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3호.
- 홍완표 · 윤휘탁, 2004, 「조선인의 만주농업이민과 동아시아의 민족관계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 36집.
- 홍종욱, 2009,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 정세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 홍종필, 1994, 「재만조선인에 대한 중국측의 압박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12집.
- 황민호, 2009, 「일제하 한글신문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보도 경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 Guelcher, Gregory Paul, 1999, "Dreams of Empire: The Japanese Agricultural Colonization of Manchuria (1931~1945) in History and Mem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Moskowitz, Karl, 1974, "The Creation of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Japanese Illusions Meet Korean Reality," *Occasional Papers on Korea*, Vol 2.
- Stoler, Ann Laura, 1992, "In Cold Blood": Hierarchies of Credibility and the

Politics of Colonial narratives,” *Representations* 37.

Wilson, Sandra, 1995, “The ‘New Paradise’: Japanese Emigration to Manchuria in the 1930s and 194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XVII, 2 (May).

Young, Louise, 1998, “Colonizing Manchuria: The making of Imperial Myth,” in Stephen Vlatos (ed.),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부록〉 만주국 시대 조선인 이민 관련 조선일보 사설 목록 (1931. 9 ~ 1940. 8)

연도	일자	제목	내용
1931	10. 8. 석(1)	兵禍에 만난 재만동포	만주 조선인
	10. 22. 석(1)	재만동포의 구제안	만주 조선인
	10. 26. 석(1)	재만동포의 대책여하?	만주 조선인
	10. 28. 석(1)	동포에는 이런 때에	만주 조선인
1932	1. 8. 석(1)	만주 동포 문제 협의회	만주 조선인
	2. 4. 석(1)	간도와 조선인 문제	만주-간도 조선인
	2. 16. 석(1)	먼저 재만 조선인의 안전	만주 조선인
	3. 5. 석(1)	만주 동포와 교육문제	만주 조선인
	3. 25. 석(1)	간도문제 중대화	간도 조선인
	4. 9. 석(1)	만주 조선인 문제의 음미	만주 조선인
	7. 7. 석(1)	만주 피난 동포	만주 조선인
1933	1. 15 (1)	혹한과 재만동포, 당국의 대책은 무엇	만주 조선인
1933	6. 30(1)	재만 조선인 중학 축성회	만주 조선인
	8. 7(1)	만주와 조선인 어찌면 조흘까	만주 조선인
1934	1. 3. 석(1)	재외동포를想함	이민-재외동포
	5. 1(1)	조선인 도항문제	도항 노동자
	5. 5(1)	재만동포와 토지상조권문제	만주 조선인
	7. 15(1)	도항 노동자의 취제	도항 노동자
	11. 29(1)	이민의 방법을 주밀히 하라	일반-복선 이민
	12. 18(1)	재만 조선인 문제	만주 조선인
1935	1. 27(1)	도항 노동자 취제	도항 노동자
	2. 10. 석(1)	재만 무적 동포	만주 조선인-국적
	3. 10. 석(1)	자유이민 대책	만주 이민-정책
	4. 12 (1)	재만 조선인의 교육문제	만주 조선인-교육
	7. 23(1)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문제	도항 노동자
	11. 17. 석(1)	재만 조선인의 토지 상조제한	만주 조선인-토지
1936	2. 6(1)	도항증 제도를 폐지하라	도항 노동자

	3. 29. 석(1)	만주 상업학교 설립 운동	재만 조선인 - 교육
	4. 7(1)	도항 허가제도와 범죄	도항 노동자
	6. 13(1)	대만치외법권의 일부 철폐	일반 - 만주국
	7. 29(1)	도항 허가제도를 재론함	도항 노동자
	8. 27(1)	국책 七項目을 결정	일반 - 일제 국책
1937	3. 13(1)	치외법권 철폐	일반 - 만주국
	3. 16(1)	대량적 만주이민. 그들의 안주책 여하	만주 이민정책
	3. 20(1)	도항 저지와 범죄	도항 노동자
	7. 27(1)	在留中國人 제군에게 호함	기타 - 재중 조선인
	11. 27(1)	재만 부정업자 문제	만주 - 조선인
	12. 17(1)	집단부락과 이민대책	만주 - 집단부락
1938	1. 5. 석(1)	신년과 아동의 주장 (3)농어산촌문제	만주 - 농촌과 이민
	1. 6. 석(1)	신년과 아동의 주장 (4)조선인 이민문제	만주 - 이민정책
	4. 7(1)	在北支 不正業者 문제	일반 - 재중 조선인
	5. 29. 석(1)	도항증명제도의 완화	도항 노동자
	6. 26(1)	만주이민문제	만주 이민
	7. 6(1)	재외 조선인 보호문제	일반 - 재외 조선인
	11. 6. 석(1)	인구과잉과 만주 이주	만주 이민 - 인구
1939	1. 12(1)	화전민의 만주 이주안	만주 이민 - 화전민
	2. 23(1)	이민위원회	만주 이민 정책
	4. 19(1)	만주이민의 당면문제	만주 이민
	11. 19. 석(1)	개척협회의 태동	만주 이민정책
1940	6. 27(1)	도항자 문제	도항 노동자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s about Korean Migration during  
Manchukuo Period  
– Focusing on the Editorials of Chosun-ilbo –

Kim, Gih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ourse on the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49 editorial articles of the Chosun Daily (between September of 1931, when the Manchurian Incident took place, and August of 1940, when the Chosun Daily ceased publication) were carefully analyzed. The editorials of the Chosun Daily produced a discourse on the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counter-discourse against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Japanese Empire. At that time,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Japanese Empire contained two lower discourses such as Japanese peasant-oriented pioneer discourse and suppression discourse of Koreans' passage to Japan. This study considered Korean migration discourse was composed of three lower discourses: a discourse of protection and safe settlement, a pioneer discourse of Korean peasants, and a freedom discourse of Koreans' passage to Japan. The discourse of protection and safe settlement was arguments that colonial government should provide migrants with proper ways of protection and safe settlement. This discourse was related to the laissez-faire policy for Korean migrants. The pioneer discourse of Korean peasants had the

narrative structure of sufferings-overcoming-expectation-problem, and the core component of this pioneer discourse was the paddy cultivation discourse. The pioneer discourse was first used as a strategy to refute the control policy of Manchuko. To a certain extent, that strategy could achieve some results. The pioneer discourse, however, had become a unilateral discourse to support Japanese policies on the migration largely from the late of 1938. Lastly, the discourse arguing freedom of Koreans' passage to Japan was a counter-discourse against the policy of so-called closing South gate and opening North gate, which was devised to suppress the stream of voyage of Koreans to Japan by turning the stream of Korean migrants to Manchuria. The Chosun Daily criticized this policy as an irrational policy of closing one direction forcefully. Instead, Chosun Daily suggested opening both gates and to let the Koreans choose the destination by themselves.

#### keywords

the discourse on the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a Japanese peasant-oriented pioneer discourse, a suppression discourse of Koreans' passage to Japan, a discourse of protection and safe settlement, a pioneer discourse of Korean peasants, the paddy cultivation discourse, a freedom discourse of Koreans' passage to Japan, a discourse of closing South gate and opening North gate.



#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

## - 네트워크와 제국의식 -

임성모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익히 알려져 있듯이 근대 일본의 여행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체여행 중심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깃발을 든 가이드가 인솔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지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여행은 '미지와외의 조우를 통한 타자인식의 심화와 자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여행 이미지와는<sup>1)</sup> 다른 측면을 지닌다. 참가자 대다수에게 단체여행은 대개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단체여행에는 참가자가 일정을 직접 짜서 여행을 모색하는 '手配여행'과 여행사의 일정에 그저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主催여행'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sup>2)</sup> 대표적인 단체여행인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 입장에

※ 투고일: 2011년 2월 7일, 심사일: 2011년 2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1) 여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테마들에 대해서는 김유철·임성모 외, 2008,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1~2), 산치림의 각 권 총설을 참조.

2) 白幡洋三郎, 1996, 『旅行ノススメ: 昭和が生んだ庶民の'新文化'』, 中央公論社,

서는 수배여행이 되고 학생 입장에서는 주최여행이 되는 셈이다. 수학여행에서 학생은 수학이라는 명분 아래 여행에 동원될 뿐 여행을 실제로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행의 실질적 주체가 타율적으로 동원된다는 의미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여행의 패턴은 한 사회가 국가주의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수학여행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천황제적 국가주의가 교육현장에서 작동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수학여행은 여전히 100퍼센트 가까운 실시율과 참가율을 자랑하고 있다.<sup>3)</sup> 아마 여행을 매개로 형성된 네트워크 가운데 일본의 수학여행만큼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sup>4)</sup>

근대 일본의 수학여행은 그 형식의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자연관찰이나 풍경탐방 위주의 체험학습 형식, 둘째로 근대적 문명시설이나 전통적 명승지에 대한 견학 위주의 지리학습 형식, 셋째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포괄하는 ‘국가의식’ 지향의 역사학습 형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학여행의 세 형식은 청소년의 연령과 교육 단계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서 각각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으로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수학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에게 익숙한 수학여행의 이미지가 바로 중·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여행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근대 일본이 지향했던 국가주의 윤리와 ‘애국적’ 인간상이 수학여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이에 대해 교사와 특히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195쪽.

3) 日本修學旅行協會(JSTB: Japan School Tours Bureau), 『修學旅行のすべて』의 각년도판 참조; 아울러 JSTB의 홈페이지(<http://www.jstb.or.jp/chosa.html>)도 참조.

4) 미국식 학제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에 이식된 국가주의 교육 원리와 시스템이 존속된 한국의 경우에도 수학여행은 여전히 하나의 ‘일상’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5) 白幡洋三郎, 1996, 앞의 책, 125~126쪽.

보였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사범학교 등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수학여행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식민지로 그 시선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의식’ 뿐만 아니라 ‘제국의식’<sup>6)</sup>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종래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시행된 수학여행에 관해서는 주로 그 성립 과정과 관련된 ‘국내’ 여행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어왔다.<sup>7)</sup> 따라서 연구의 대상 시기도 메이지[明治] 초기 위주여서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제국의식’의 측면을 읽어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식민지 수학여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만주·조선 수학여행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sup>8)</sup> 그 연장선상에서 특정 학교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가 나왔다.

나리[奈良] 여자고등사범학교(지금의 나라 여자대학)의 수학여행을 사례로 거기에 나타난 조선 인식을 분석한 이토 겐사쿠[伊藤健策]의 연구,<sup>9)</sup> 그리고 나라와 도쿄[東京] 여자고등사범(지금의 오차노미즈[御茶の水] 여자대학)의 수학여행을 제국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비교분석한 오사 시즈에[長志珠繪]의 연구<sup>10)</sup>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토의 연구는 조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오사의 연구는 젠더사의 관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제국 일본’ 시

6) 임성모, 2006a,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23 참조.

7)濱野兼一, 2003, 「明治期における埼玉縣師範學校の遠足・行軍・修學旅行について: 法的規定以前の實態に關する一考察」, 『早稲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 11-1; 濱野兼一, 2001, 「明治期における學校行事の研究: 運動會・遠足にみる修學旅行成立への布石」, 『早稲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 9-2; 井上好人, 2000, 「明治期の小學校における遠足・修學旅行と地域社會」, 『金澤經濟大學論集』 86 등.

8) 高媛, 2003, 「滿洲修學旅行の誕生」, 『彷徨月刊』 215; 三谷憲正, 2005, 「日本近代の朝鮮觀: 明治期の滿韓修學旅行をめぐる」, 『ジャイロス(Gyros)』 11.

9) 伊藤健策, 2006, 「戰時期日本學生の修學旅行と『朝鮮』認識」, 『國史談話會雜誌』 46, 東北大學.

10) 長志珠繪, 2007, 「滿洲」ツーリズムと學校・帝國空間・戰場: 女子高等師範學校の大陸旅行記録を中心に」, 駒込武・橋本伸也 編, 『帝國と學校』, 昭和堂.

기의 제국의식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들이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재정의 연구<sup>11)</sup>가 주목되는데, 그는 나라 여자고등사범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만주·조선의 ‘식민도시’에 대한 ‘제국 일본의 시선’을 제국 의식으로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주도 하의 ‘日鮮滿一體’관, 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반성, ‘皇國’ 교사로서의 자각 등을 제국의식의 내용으로서 밝혀냈다. 경성이나 신경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조선과 만주 전체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에 가장 접근한 연구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경시되고 있는 측면이 한 가지 있다. 수학여행의 ‘결과’로서만 제국의식에 주목할 경우, 제국의식의 ‘획득(혹은 배양)’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제국의식은 확대된 형태의 국가주의이고, 수학여행은 제국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작동되는 국가주의의 중요한 기제였다. 여기서 여행과 관련된 제국의 네트워크란, 여행을 가능케 하는 각종 인프라와 치안 상황, 경제력 등을 총칭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여행 인프라에는 철도·해운 등의 교통기관, 호텔 등의 숙박시설, 그리고 여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알선 업체들이 포함된다. 1930년대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사업의 국책화’를 추진했던 시기로서, 국내의 경우 ‘관광의 국민화’가 철도성에 의한 각종 여행 네트워크의 정비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2)</sup>

이 글에서는 여행 네트워크의 변화가 일본의 해외여행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가운데, 만주로의 수학여행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을 매개로 ‘제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능하였으며 그 참가자들의 제국의식에 어

11) 정재정, 2010, 「植民都市와 帝國日本の 視線: 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 生徒의 朝鮮·滿洲 修學旅行(1939년)」, 『일본연구』 45, 한국외국어대학교.

12) 종래 파시즘기의 관광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에 의한 위축이 강조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가 밝혀낸 바와 같이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 체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광산업은 ‘후생’을 표방하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高岡裕之, 1993, 「觀光·厚生·旅行: ファシズム期のツーリズム」, 北澤史朗·北河賢三 編, 『文化とファシズム: 戦時期日本における文化の光芒』, 日本經濟評論社, 48쪽.

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상호작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기의 수학여행을 좀 더 입체적인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II. 해외 수학여행과 네트워크

일본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용어는 1886년 도쿄[東京]사범학교가 실시한 11박 12일의 '長途遠足'을 계기로 해서 미디어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의 수학여행은 군대식 행군과 '학술연구'를 결합한 형태로 사범학교 교과과정으로서 실시되었다.<sup>13)</sup> 초기에는 국내에 국한되던 이 수학여행이 해외로 확대되는 계기는 청일 전쟁이었다. 1896년 효고[兵庫] 현립 도요오카[豊岡] 중학교의 조선 수학여행과 나가사키[長崎] 상업학교의 상하이[上海] 수학여행이 해외 수학여행의 효시를 이룬다. 당시 학생들이 승선한 닛폰유센[日本郵船]의 고베마루[神戸丸]는 청일전쟁 당시 황해 해전에 참전했던 사이쿄마루[西京丸]의 '자매선박'이었다. 이 밖에도 구마모토[熊本] 상업학교가 1898년(상하이), 후쿠오카[福岡] 상업학교가 1902년(한국)에 해외 수학여행을 시작하고 있어서, 대륙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규슈[九州]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이 엿보인다.<sup>14)</sup>

규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해외 수학여행이 전국화되는 분수령은 바로 러일전쟁이었다. 1906년 文部省과 陸軍省이 공동주최한, 중학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滿洲 수학여행을 계기로 '대륙' 수학여행이 전국화되었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의 滿韓관광이 대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상황 속에서 수학여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육군성이었다. 육군성은 6월 26일

13) 濱野兼一, 2001, 「明治期における學校行事の研究: 運動會・遠足にみる修學旅行成立への布石」, 『早稲田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別冊』 9-2, 65쪽.

14) 久保尚之, 1996, 「驚くべき修學旅行」, 『滿洲の誕生』, 丸善, 22~23쪽.

문부성이 인정한 중학 이상의 학생 여행단에 대해서 專用船의 무상승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통고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열기를 고조시켰다.<sup>15)</sup> 당시 신문사들은 만한 수학여행에 대한 당국의 편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있었다.<sup>16)</sup> 7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이 만한 수학여행에는 전국 각급 학교의 신청이 쇄도했는데, 문부성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신청학교 수 152개교, 신청자 총수 7,616명이었고 이 중 실제 여행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3,694명이었다고 한다.<sup>17)</sup>

수학여행 참가자의 중심은, 신문사 주최 여행단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간사이[關西] 지역 학생들이었다.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의 경우는 교장 이하 교직원과 학생들 141명이 참가했다. 7월 19일 우시나[宇品]를 출항한 일행은 23일 다렌[大連]에 도착, 뤼순[旅順], 평톈[奉天], 푸순[撫順], 테링[鐵嶺], 랴오양[遼陽], 잉커우[營口]를 순방한 뒤, 本隊와 支隊로 나눠져 지대만 육로로 한반도를 거쳐 귀국했다. 학생들은 학부별로 영어부는 사회 일반, 지리역사부는 지리와 역사, 국어한문부는 문학, 수물화학부는 전쟁, 박물관부는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관찰한 뒤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남기고 있다.<sup>18)</sup>

도쿄의 경우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와 府立一中 등 총 8개교가 참가했다. 부립일중(지금의 도쿄 도립 히비야[日比谷] 고등학교)의 경우, 4학년 19명, 5학년 21명, 교사 9명 등 총 49명이 참여했으며, 도쿄 고등사범학교는 저명한 동양사학자 나가 미치요[那珂通世]를 비롯한 교직원 21명과 학생 168명 등 192명

15) “學生滿韓旅行の便”, 『東京朝日新聞』, 1906. 6. 27.

16) 예컨대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지금부터 滿韓이나 대만으로 수학여행을 시도하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아울러 官憲 측은 이들에게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기를, 이를테면 私設 철도나 航業者들이 무상 혹은 대폭할인의 특전을 제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讀實新聞』, 1906. 6. 20.

17) 『時事新報』, 1906. 7. 23.

18) 廣島高等師範學校, 1907, 『滿韓修學旅行記念錄』, 廣島高等師範學校; 영인본은 小島晉治 監修, 1997, 『幕末明治中國見聞錄集成 9』, ゆまに書房.

의 여행단을 조직했다.<sup>19)</sup>

그런데 이들 수학여행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旅程이 러일전쟁 전적지 견학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립일중의 경우, 7월 13일 도쿄를 출발해서 18일 다롄에 상륙한 뒤 뤼순, 평톈, 테링, 라오양, 잉커우, 진저우(錦州)를 견학하고 8월 11일 귀경할 때까지 약 한 달간의 여정이 거의 러일전쟁 전적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도쿄 고등사범학교의 경우는 여행의 목적을 “遼東에서의 日露戰役의 遺跡을 시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20)</sup>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수학여행의 전 과정에서 軍部の 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행의 가이드는 주로 육군 측이 담당하여, 뤼순의 203고지 등을 방문할 때 참전군인들이 러일전쟁 당시 격전의 비화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여행 역시 군대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도쿄 고등사범의 경우 전체 학생을 두 개의 團으로 나누고 각 단을 6개 조로 편성해, 군대의 行軍을 각 조장이 지휘하게끔 했고, ‘연대’나 ‘무장집합’ 등 군사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다.<sup>21)</sup> 근대 초기 일본의 교육현장이 제복착용, 두발통제, 정리정돈, 시간엄수 등 군대식 집단행동을 고스란히 적용한 ‘국민교육’의 장이었음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지만,<sup>22)</sup> 이러한 특징은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수학여행에서도 똑같이 맹위를 떨쳤던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해외 수학여행은 대만, 조선, 만주, 중국 본토 등 식민지·점령지를 대상으로 확산되어나갔다. 초기 수학여행의 실시 주체가 주로 사범

19) 日比谷高校百年史編集委員會 編, 1979, 『日比谷高校百年史』, 日比谷高校百年史刊行委員會; 東京高等師範學校修學旅行團記錄係, 1907, 『遼東修學旅行記』, 東京高等師範學校.

20) 東京高等師範學校修學旅行團記錄係, 1907, 위의 책, 46쪽.

21) 有山輝雄, 2002, 『海外觀光旅行の誕生』, 吉川弘文館, 65~67쪽.

22) 山本信良·今野敏彦, 1987, 『近代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 明治期學校行事の考察』, 新泉社.

학교였던 것은 수학여행이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智育(건문), 德育(협동활동), 體育(신체단련)의 장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로 수학여행이 일반학교로 확대되는 배경에 철도망의 확대, 박람회 개최 등이 작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벤트로서의 볼거리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수학여행의 양상은 일본의 국민국가 확립, 산업혁명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국 경영'의 전개과정과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근대 일본의 수학여행 가운데 滿鮮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은 시기적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유형화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초기의 수학여행은 규슈를 중심으로 전개된 나가사키 상업, 후쿠오카 상업, 미야코노조[都城] 상업 학교의 수학여행들처럼, 졸업 이후의 식민지 상공단체 취업을 전망하는 실업훈련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이를 '실업형' 수학여행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이후 일본 '제국'의 판도가 결정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디어 이벤트'<sup>23)</sup>로서 기획된 수학여행들의 경우는 이러한 현실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지향성이 더 두드러졌다. 특히 수학여행을 주도했던 사범학교들의 경우 '忠良한 臣民'을 육성하게 될 교사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훈련의 측면이 강했다. 도쿄 고등사범이나 히로시마[廣島] 고등사범학교의 경우처럼 교원 엘리트들에게 '국토순례'의 차원을 뛰어넘어 '제국순례'의 체험을 갖게 하는 일은, 그 과정의 군사훈련적 측면을 포함해서, 제국신민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1930년대까지 일본의 해외 수학여행은 이와 같은 '정치형' 수학여행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어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에 의해 '제국'의 판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이른바 '문화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학여행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후반의 만선 수학여행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자 고등사범학교들의 참여이다. 도쿄 여자 고등사범과 나라[奈良] 여자고등사범으로 대표되는 여자 고등사범학교의 만선

23) 津金澤聰廣 編, 1996, 『近代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同文館; 津金澤聰廣・有山輝雄 編, 1998, 『戦時期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世界思想社 참조.

수학여행 참가는 종래 남자 고등사범학교 중심으로 시행되던 군사행군과 정치 훈련을 병행하는 전형적 수학여행과는 사뭇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총력전체제'에 부응하는 '제국신민'으로서의 문화적 감수성을 획득하는 장으로서 수학여행이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총력전을 수행할 제국신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감성훈련의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러일전쟁을 분수령으로 해서 수학여행은 '실업형'에서 '정치형'으로 그 주류가 바뀌었고, 만주사변 이후의 총력전 시기가 되면 '정치형' 수학여행과 함께 '문화형' 수학여행이 차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학여행의 유형별 추이가 이른바 '제국 네트워크'의 형성 및 변용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학여행의 형성, 확대, 변용은 그 자체가 여행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와 무관할 수 없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요소는 치안, 경제력, 그리고 여행 인프라였다. 러일전쟁 이전에는 치안의 불안정, 경제력의 제한, 인프라의 不備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해외 단체관광 자체가 불가능했다. 초기의 수학여행이 규슈 중심의 '실업형' 수학여행에 국한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의 산업혁명이 일단락된 러일전쟁 이후,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의 호황 국면을 맞으면서 해외여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정한 경제력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선박, 철도, 호텔 등과 단체관광 알선 여행사, 여행안내소 등과 같은 여행 인프라의 구축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바야흐로 '정치형' 수학여행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철도나 호텔 등의 하드웨어의 확대와 함께 수학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무래도 여행사나 여행관련 잡지 등 소프트웨어의 확충이었다. 흔히 '미디어의 폭발기'라고 불리는<sup>24)</sup> 1920년대는 특히 關東

24) 요시미 슌야[吉見俊哉], 2007, 「제국 수도 도쿄와 모더니티의 문화정치」, 요시미 슌야 외 저,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 팀'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1920~30년대 근대 일본의 문화사』, 소명출판, 34~41쪽.

大震災 이후의 급격한 모더니즘화 과정에서 정보력의 집적과 그 외연의 (식민 지로의) 확대가 나타났다. 1924년 일본여행문화협회의 설립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만철과 철도성이 주도하고 닛폰유선, 오사카상선 등이 참가하여 2월에 설립된 이 협회는 4월부터 기관지 『다비[旅]』를 창간하여 다양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sup>25)</sup> 이처럼 만철 등의 국책회사가 위로부터 여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만주 ‘관광 붐’을 조성하면서 해외 단체관광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이 시기에도 타이완과 한반도를 제외하면 여행환경 가운데 치안 요소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예컨대 만주의 치안은 만주국 수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 안정화되었다. 1930년대의 수학여행은 확충된 경제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여자 고등사범의 참가로 상징되는 ‘문화형’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문화형’ 수학여행의 대두 자체가 여행 네트워크의 확대 및 강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음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형’ 만선 수학여행의 전형적인 사례인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의 1939·1940년 만선 수학여행 관련자료를 토대로 수학여행과 제국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는 사범학교들 가운데서도 수학여행 관계자료가 가장 충실하게 남아 있는 사례에 속한다.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 수학여행 관계자료의 상황을 살펴보면 나라여대 校史편찬위원회가 수집한 교사 관계자료 가운데 제10편(수학여행 등)이 보충편까지 포함해서 총 224점의 보고서와 여행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만선 수학

25) 기관지는 발회식을 소개하는 가운데 협회의 설립 목적을 “건전한 여행 취미의 육성, 여행에 관한 안내와 주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내지, 조선, 滿蒙, 支那 등지의 人情과 풍습의 소개 등 모든 방면에서 일본인 본래의 性情을 보육하고 守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S生, 1924, 「日本旅行文化協會發會式」, 『旅』 1-1, 4쪽.

26) 조선, 특히 경주 관광을 둘러싼 여행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2009, 「제국 일본의 ‘滿鮮’ 觀光誌와 고도 경주의 표상」, 『한국문화연구』 36 참조.

〈표 1〉 나라 여자고등사범 1939년 대륙수학여행 관련서류의 구성

순번	내 용	쪽수
1	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 教務課	1
2	女高師滿洲御案内日程(滿洲移住協會)	28
3	旅行日程表(大阪鮮滿支案内所)	36
4	滿鮮地方修學旅行計畫書	40
5	滿鮮旅行要綱	57
6	昭和十四年八月・九月 滿鮮旅行日程 文・理・家事科四年	61
7	旅費概算調(大阪鮮滿支案内所)	68
8	滿鮮旅行心得	69
9	滿鮮旅行參加者氏名表	72
10	本校生徒滿鮮旅行狀況	87
11	旅行不參屆	96
12	各科四學年滿鮮修學旅行報告書(表紙)	151
13	目次	153
14	一 參加生徒	154
15	二 出發前の行事	155
16	三 日程	156
17	四 見學事項	179
18	五 生徒事務分擔	183
19	六 健康狀態	184
20	七 滿鮮旅行一般ニ關スル感想	187
21	八 會計報告	190
	(領收書等)	198
22	九 生徒旅行記 三部	254

여행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10종이 남아 있다.<sup>27)</sup> 이 가운데 특히 본 연구의 집

27) 그 내역을 살펴보면 十-95: 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 十-96: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十-97: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理

중적 고찰대상인 1939년도 만선 수학여행(대륙 수학여행)에 관련된 공문서들(十一-95: 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sup>28)</sup>

### Ⅲ. 만주 수학여행과 제국의식

#### 1\_ 수학여행의 목적과 경과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는 도쿄 여자고등사범학교와 함께 일본 여자교육의 최고학부로 설치된 교원양성 학교였다. 여자 사범학교였던 만큼 '婦德 양성'을 교육방침으로 중시하여, 학생들에게는 '婦人の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되었다. 학생들은 '인격 형성'을 위한 전원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었으며, 학과는 문과, 이과, 家事科의 3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9)</sup>

1939년 제1회 만선 수학여행은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참가 학생은 문과 17, 이과 13, 가사과 37명, 총 67명으로 4학년

---

科四年); 十一-98: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家事科四年); 十一-99: 昭和十五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 十一-100: 第二回大陸旅行實施報告(昭和15年9月); 十一-101: 昭和十五年度大陸修學旅行記(文科四年); 十一-102: 昭和十五年度鮮滿修學旅行記(理科四年); 十一-103: 昭和十五年度大陸修學旅行記(家事科四年); 十一-104: 鮮滿地方修學旅行計畫書 등이다. 이들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http://mahoroba.lib.nara-wu.ac.jp/kousi/mokuroku.html>.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는 一(會議錄)부터 二八(新制大學) 가운데 일부인 12점을 공개하고 있다.

28) 쪽수는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 十(修學旅行等)-95 파일의 쪽수이다. 수학여행보고서의 九항인 生徒여행기는 각 科별로 위 史料 十一-96, 97, 98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29) 奈良女子大學六十年史編集委員會 編, 1970, 『奈良女子大學六十年史』, 奈良女子大學.

전체(93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sup>30)</sup> 문과 7명, 이과 9명, 가사과 10명, 총 26명이 불참했는데, 수학여행 불참 신고서에 적힌 이유는 주로 질병과 수업 준비였다. 불참자 중에는 조선인 학생들이 3명 포함되어 있었다(이과 홍희식, 가사과 김정순·최선경). 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행기간 동안 각 과별로 서무·회계·기록계 업무를 분담했고, 이를 기초로 여행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솔교사는 모두 5명이었다.

나라 고등사범의 만선 수학여행 실시 계획은 1937년부터 교사회에서 거론되다가 193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학여행 시기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방학에 실시하며, 여행비용은 수학여행 적립금을 증액해서 조달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

학교 측이 수학여행 허가를 얻기 위해 문부성에 제출한 여행계획서에는 해외 수학여행 실시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제1회의 경우에는 '만선 지방 사정을 견학하기 위해서'라고만 되어 있으나, 제2회에는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한 기술이 등장한다.

이제 시국은 우리 국민에게 신동아 건설의 커다란 책임을 맡겨, 여자라 하더라도 동아 대륙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깊이 있는 체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본교 생도처럼 장래 여자 중등교원으로서內地는 물론 조선, 만주 및 지나까지 나가 중임을 맡아야 할 자들에게는 한층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교 교직원들이 이러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생도가 본교에 재학하는 鮮滿支의 학우와 교류하고 이해하며 지도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지역의 지리와 역사에 능통하고 풍속, 인정, 제도, 문물 등에 대해 실지 인식과 체험을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이야말로 시국에 비추어 국책에 즉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sup>31)</sup>

30) 제2회 만선수학여행은 1940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였고, 참가인원은 4학년생 51명(전체 79명)이었다.

31) 「鮮滿地方修學旅行計畫書」,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 十一-104: 「鮮滿旅行ニ關シ文部大臣ニ伺案」, 同關係史料 十一-99: 昭和十五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



〈표 2〉 나라 고등사범 제1회 만선 수학여행의 일정

날짜	발착	시간	견학 및 숙박 장소
8월 21일 (월요일)	奈良역 출발	오전 07: 50	京都, 米原 경유
	敦賀역 도착	오후 01: 26	氣比신사 참배
	敦賀항 출발	오후 04: 13	선상에서 기미가요 제창, 하얼빈호 선중 숙박
8월 22일			神奈川현 이민지시찰단 일행을 위한 鈴木虎雄 滿洲移住協會 參事の 강연 방청(오후 04: 00부터), 선중 숙박
8월 23일	清津항 도착	오전 05: 45	清津신사 참배, 상공회의소 견학, 清津고등여학교장(阿部吉助)의 청진 연혁 설명, 佐保會의 접대
	清津역 출발	오전 08: 20	
	牡丹江역 도착	오후 08: 53	牡丹江市내 숙박 (周防여관 외)
8월 24일	牡丹江역 출발	오전 06: 55	哈爾濱시내 숙박 (名古屋여관)
	哈爾濱역 도착	오후 07: 00	
8월 25일			버스로 출발(오전 10: 00) 滿蒙開拓靑少年義勇隊 哈爾濱 특별훈련소 견학, 哈爾濱 숙박(名古屋여관)
8월 26일	哈爾濱역 출발	오후 00: 40	哈爾濱신사, 忠靈塔, 志士の 碑, 小林·向後 二烈士의 碑, 孔子廟, 露人묘지
	新京역 도착	오후 06: 39	
8월 27일			關東局 방문(大貫 視學官의 만주 일본인 교육 방침 및 시설 설명), 관동군사령부 방문, 忠靈塔, 寬城子 전적지, 南嶺전적기념비, 臨時皇居 遙拜, 清真寺, 견학 후 佐保會 회원의 환영연회
	新京역 출발	오후 03: 25	
8월 28일 (월요일)	大連역 도착	오전 08: 15	忠靈塔, 滿洲資源館, 星ヶ浦, 노천시장, 東和長油坊, 碧山莊, 大連부두, 大連시내 숙박(錦水여관), 佐保會 환영회

날짜	발착	시간	견학 및 숙박 장소
8월 29일	大連역 출발	오전 07: 45	白玉山 납골당·表忠塔, 기념관, 東鷄冠山 北堡壘, 水師營 會見所, 203高地, 박물관 견학 후 버스로 大連행, 大連시내 숙박
	旅順역 도착	오전 09: 12	
8월 30일	大連역 출발	오전 05: 10	노천탄광 및 시내 견학 奉天시내 숙박(溫泉호텔여관)
	撫順역 도착	오후 03: 03	
	撫順역 출발	오후 05: 45	
	奉天역 도착	오후 06: 55	
8월 31일			忠靈塔, 국립박물관, 北陵, 同善堂, 北大營, 봉천성내(투어리스트 뷰로 越智의 설명), 奉天시내 숙박, 佐保會 환영회
9월 1일	奉天역 출발	오전 09: 45	安東시내 숙박(日の出여관 외)
	安東역 도착	오후 05: 02	
9월 2일	安東역 출발	오전 08: 40	平壤神宮, 七星門, 박물관, 乙密臺, 玄武門, 永明寺, 浮碧樓, 平壤부내 숙박
	平壤역 도착	오후 02: 40	
9월 3일	平壤역 출발	오전 11: 20	京城부내 숙박
	京城역 도착	오후 08: 30	
9월 4일 (월요일)			朝鮮神宮, 조선총독부, 博文寺, 經學院, 昌慶苑, 秘苑, 德壽宮 李王家 박물관
9월 5일	京城역 출발	오전 07: 55	慶州시내 숙박
	慶州역 도착	오후 06: 48	
9월 6일	佛國寺역 출발	오후 07: 16	武烈王陵, 鷄林, 石水庫, 芬皇寺, 佛國寺, 石窟庵 金剛丸 선중 숙박
	釜山역 도착	오후 09: 56	
	釜山항 출발	오후 11: 30	
9월 7일	下關항 도착	오전 07: 15	
	下關역 출발	오전 09: 00	
	奈良역 도착	오후 09: 57	

요컨대 만선 수학여행 실시의 목적은 ‘지방사정 견학’과 ‘시국·국책(신동아 건설) 부응’ 사이에서 후자를 강조하면서도 전자의 견문 확대를 실질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점은 후술하듯이 여행보고서에서도 일정하게 엿볼 수 있다.

제1회 만선 수학여행의 경로와 일정은 그림 1 및 표 2와 같았다. 이 경로와 일정 가운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판단된다.

첫째는 하얼빈 견학 중에 실시된 만몽개척 훈련소 방문이다. 왜냐하면, 이 훈련소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하얼빈 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이전에 수차례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사전교섭에 나서고 있다.<sup>32)</sup> 학교 측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만주이주협회 등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참가 학생들과 동년배로서 군사적 차원에서 강행된 농업이민의 일환이었던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대<sup>33)</sup>로의 방문을 일정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 훈육의 측면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둘째로 일정표의 견학장소를 신사, 전적지, 역사유적지, 박물관, 시설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일정의 중심이 전적지 및 (지배기구) 시설물 견학에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전적지의 중심은 그림 2에서 보듯이<sup>34)</sup> 역시 뤼순의 러일전쟁 관련 전적지였다. 뤼순은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제국의 성지로 자리매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3에서와 같이 역사유적지나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만주에서 만주나 중국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보고자 했음을 말해 준다. 참가 학생들의 기행문을 보더라도, 후술하듯 이 점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32) 『滿鮮修學旅行ニツキヘ依頼狀』(1939年 8月 11日 發送),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 十(修學旅行等)-95.

33) 櫻本富雄, 1987,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 青木書店 참조.

34) 이 사진은 1939년 도쿄 여자고등사범 수학여행단이 찍은 사진이지만, 백옥산 표충탑 사진은 인물들만 바뀔 뿐 모두 똑같은 구도로 촬영되어 있으므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나라 고등사범의 경우를 쉽게 떠올리게 만든다.

〈표 3〉 수학여행의 만주지역 견학장소별 분포

날짜	신사	전적지	유적지	박물관	근대적 시설
8월 21일	○				
8월 22일					
8월 23일	○				
8월 24일					
8월 25일					◎
8월 26일	○	◎	○		
8월 27일		◎			◎
8월 28일		○		○	
8월 29일		◎			
8월 30일					○
8월 31일		◎	○	○	

\* ○=1회, ◎=2회 이상인 경우를 가리킴.

셋째는 주요 도시에서의 여행이 버스 투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주 여행에서 관광버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인데, 일정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버스 투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자 고등사범학교의 해외여행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바꿔 말해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만주의 산업화, 여행산업의 체계화라는 여행 인프라의 구축이 수학여행의 범위를 확장시킨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표 4는 1930년대 만주 6대 도시의 관광버스 운행 실태를 정리한 것인데, 운행코스와 수학여행단의 일정이 거의 중복됨을 엿볼 수 있다.

넷째로 위의 시내버스 투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학여행이 다양한 여행 네트워크와의 연관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사카 선만안내소의 관여이다. 선만(선만지)안내소는 1923년 滿鐵이 도쿄 지사의 경리과에 조선과 만주 사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선만안내소는 1925년에 서무과로 관할이 바뀌면서 도쿄 이외에 오사카와 시모노세키에도 설치되었다. 1927년부터는 운수과로 이관되어 정보 안내 외

〈표 4〉 만주 6대 도시의 관광버스 운행 실태

도시	운행조건	운행코스	운영자	보유차량	운행기간
旅順	3회 4시간	白玉山(納骨祠/表忠塔)→戰利品陳列館→東鷄冠山北堡壘→水師營會見所→爾靈山→박물관	南滿洲전기주식회사(1926)→大連도시교통주식회사(1936)	25인승, 30인승 포함 25대(1939)	1932~1944
大連	1회 6시간(3~11월)	大連역→忠靈塔→大連神社→大廣場→滿洲資源館→大連역→大連大佛→星ヶ→露天市場→油房→碧山莊→부두	大連도시교통주식회사	25인승 10대(1939)	1937~1941
奉天	1회 6시간(3~11월)	奉天역→忠靈塔→국립박물관→北陵→柳條湖→北大營→天齋廟→鐵西공업지대→남부주택가	奉天자동차운수주식회사→奉天교통주식회사(1937)	21인승 8대(1938)→25인승 7대(1943)	1932~1943
撫順	2회 2시간(3~11월)	撫順역→탄광사무소→大山坑→古城子露天掘→撫順神社→殉難碑	奉天자동차운수주식회사→奉天교통주식회사(1938)	21인승 1대 이상(1935)	1935~1943
新京	1회 3시간	新京역→新京神社→忠靈塔→寬城子戰跡→日本橋→舊國務院→宮廷府→清真寺→大同廣場→協和會館→南嶺戰跡→(建國神廟→)安民廣場→新國務院→南新京→興安大路→大同大街→寶山백화점	新京교통주식회사(1935)	25인승 6대(1940)	1936~1943
哈爾濱	1회 3시간(5~10월)	哈爾濱역→中央寺院→忠靈塔→二志士之碑→孔子廟→露人墓地→松花江	시교통국→哈爾濱교통주식회사(1938)	25인승 2대→25인승 2대, 42인승 3대(1940)	1936~1943

출처: 大連都市交通株式會社, 奉天·新京·哈爾濱交通株式會社 共編, 1939, 『滿洲の觀光バス案内』, 大連都市交通株式會社; Japan Tourist Bureau 滿洲支部(奉天), 『滿支旅行年鑑』, 1939~1943 各年度版 등에 의거; 高媛, 2002, 「樂土を走る觀光バス」,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6』, 岩波書店, 225~229쪽에서 재구성.

에 물산 판매 업무까지 담당했으며 1936년에는 모지[門司]에도 추가로 설치되었다.<sup>35)</sup>

선만안내소의 업무 내용은 주로 여행 상담, 티켓 예매, 숙소 예약, 자동차 예약 등이었고, 이들 업무는 대부분 안내소에 파견 나와 있던 JTB(저팬 투어리스트 뷰로)가 담당했다. 선만안내소는 이러한 업무 이외에 여행을 주최하기도 했는데, 1929년 시모노세키 안내소가 실시한 제1회 선만시찰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sup>36)</sup> 참고로 만주사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만주 사정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대량의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육군성 신문반과 손잡고 다큐멘터리 필름 상영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sup>37)</sup>

선만안내소는 1939년부터 중국(汪兆銘 중화민국 정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만지안내소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총재실 홍보과 소관으로 격상되면서 나가타[新潟]와 오타루[小樽]에 추가로 설치된다. 1944년에는 히로시마, 후쿠오카, 마쓰야마[松山], 센다이[仙台], 삿포로[札幌]에도 설치되었다.

나라 고등사범의 수학여행은 이 선만(지)안내소가 일정 결정에서부터 각종 티켓과 숙소, 버스 예약 등까지 알선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이러한 선만안내소의 알선 업무는 만주로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을 나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선만안내소는 만주 관광을 둘러싼 여행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기제였던 것이다.

다섯째로는 숙박시설로서 모든 일정에서 저렴한 일본식 여관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표 2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수학여행단은 만주에 접어든 뒤로 무단장[牡丹江]의 스오[周防] 여관, 하얼빈의 나고야[名古屋] 여관, 신징의 아사히[旭] 여관, 다렌의 긴스이[錦水] 여관, 평토텐의 온센호텔루[溫泉ホテル] 여관, 안둥[安東]의 히노데[日の出] 여관 등지에 여장을 풀고 있다. 수학여행 「보고서」에는 각 여관의 시설과 대우에 대한 품평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예컨

35) 貴志俊彦, 2010,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 吉川弘文館, 35~36쪽.

36) 貴志俊彦, 2010, 위의 책, 38쪽, 시찰단의 앨범 사진이 남아 있다.

37) 滿鐵弘報課, 1932, 『滿洲事變と滿鐵』, 滿鐵弘報課 참조.

대 여행 10일째인 8월 30일에 숙박했던 평토티의 온센호테루 여관에 대해서는 “에노시마초[江の島町]에 있는데, 설비와 대우가 매우 불량. 다음번 여행 때에는 이런 여관을 선정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라 평하고 있다.<sup>38)</sup>

만주의 숙박시설로는 다롄에서 최초로 개업하여 만철 연선에 잇달아 설립된 만철 직영의 야마토[大和] 호텔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비롯한 만주 단체관광은 대부분 일본식 여관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이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즉, 일본 엔으로 숙박료를 지불할 수 있었고, 일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39)</sup> 여관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보였던 만선 수학여행에서 참가 학생들의 만주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음 절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남긴 여행기를 토대로 만주에 대한 제국의식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sup>40)</sup>

## 2\_ 제국의식의 양상과 향방

제국의식이란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이 제국주의 지배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의식’, 특히 자신이 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소속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영국 제국주의 연구자인 기바타 요이치[木畑洋一]에 따르면, 제국의식은 민족·인종차별주의, 대국주의적 내셔널리즘, 문명화의 사명감 등을 중요 요소로 하여 구성된다.<sup>41)</sup>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경우, 인종차별

38) 「各科四學年滿鮮修學旅行報告書」, 『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ニ關スル書類』, 168쪽.

39) 貴志俊彦, 2010, 앞의 책, 36쪽. 기사는 “동아시아 관광을 고찰할 때, 이러한 여관 네트워크의 존재를 더 주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주뿐만 아니라 조선 여행의 경우에도 ‘여관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40) 만주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전반에 대해서는 임성모, 2006b,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북방사논총』 12 참조.

41) 木畑洋一, 1998, 「イギリスの帝國意識」, 『大英帝國と帝國意識』, ミネルヴァ書

주의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제국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주는 특히 근대 일본의 제국의식을 형성하고 배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러일전쟁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공통된 기억으로 구축되었다. 거기에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개재되어 있었는데, 뤼순으로 대표되는 만주로의 관광은 '산화'한 '영령'에 대한 '위령 공간'의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었다. 따라서 만주 여행에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일종의 '성지순례'라는 함의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만철을 발판으로 한 경제침략,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침략전쟁과 만주국 건설에 의한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지배를 경과하는 가운데, 만주는 '위령 공간'으로서의 함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근대화의 '전시 공간'(혹은 쇼윈도)으로서 관념되기 시작하였다. 정체정도 지적하고 있듯이 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 제국을 호령하는 일본(인)의 지도성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는 함의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특히 만주 현지에 대한 관심보다 '만주 속의 일본' 혹은 '일본화되어가는 만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학생들의 기록에서 '만주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거나 '만주임을 느끼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는 서술로 드러나고 있다.<sup>42)</sup> 하얼빈에서의 만몽 개척 청소년 의용대 방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는 것과는 무관할 수 없겠지만, 여행 참가자들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던 만주에서 일본 도시의 풍광과 물산에 접하게 되면서 '內地'와 '外地'의 구분조차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여행단의 견학장소 가운데 역사유적지나 박물관 등 만주 현지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장소가 경시되고 있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결과, 참가 학생들은 만주 현지에서 만주나 중국 사회와 '만주인'을 관찰하

房, 4~10쪽.

42) 예컨대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14쪽.

기보다는 ‘일본’과 ‘일본인’을 보고 있다. 예컨대 만주 제일의 무역항 다렌(大連)에 대한 여행기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감상이 눈에 띈다.

부두의 호화롭고 장대한 건축 설비는 우리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예전[청대-인용자]에는 ‘칭니와[靑泥窪]’라고 하여 50호 규모의 일개 寒村에 불과했던 다렌. 그 다렌이 러시아 지배 시대를 거쳐 일본인의 손에 의해 완성되면서, 오늘날 극동의 대무역항, 신흥 만주국의 일대 현관으로서 50만의 인구를 품에 안고 평텐을 잇는 만주 제2의 도시로 번영하고 있는 모습은 경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다렌을 이 정도로까지 만들어낸 일본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돌아보면서 일본인의 저력이라고 할 것에 경외심마저 느꼈다.<sup>43)</sup>

다렌을 ‘만주 제2의’ 거대 도시로 발전시킨 제국 일본의, 일본인의 ‘위대한’ ‘저력’에 감탄하고 자기최면에 빠지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감상이다. 그들에게 만주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자기화(=일본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만주를 그렇게 ‘근대화’시킨 제국의 후예라는 자기만족과 긍지를 배양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만주는 러일전쟁과 직결되는 ‘제국의 위령 공간’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개발을 과시하는 ‘제국의 쇼윈도’로서<sup>44)</sup> 관념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러일전쟁 직후 이곳을 방문했던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일찍이 중국인 부두 노동자들을 ‘추접스런’, ‘성난 별떼’로 표현했던 것과<sup>45)</sup> 정확히 조응하는 시선이기도 했다. ‘쿨리’로 상징되는 ‘미개’한 중국인들을 문명화시킬 주체가 바로 일본인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 사명감은 이렇게 변주되기도 하였다.

만주에 접어들자마자 우리는 만주로 쑥쑥 파고들어가는 일본인의 힘을

43)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8~9쪽.

44) 임성모, 2006a, 앞의 글, 107~108쪽.

45) 夏目漱石, 1956, 『滿韓とところどころ』, 『漱石全集 16』, 岩波書店, 135쪽.

몸으로 찌릿하게 느꼈다. 만주에 들어와 만주인의 기운을 받기는커녕 일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일본인임을 강하게 느꼈다. 만주의 문화를 이토록 일본의 문화 아래 결집시켰다는 데 놀랐다. 이 화려한 도시를 일본화하려면 (일본—인용자) 농민이 좀 더 많이 일본의 힘을 심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sup>46)</sup>

본래 다른 나라의 ‘문명[光]’을 살핀다는 뜻(‘觀國之光’)에서 기원했던 ‘관광’이 자국의 문명됨을 재확인하는 행위로, 더 나아가 문명 제국의 일원으로 현지를 문명화시켜야 한다(‘일본인의 힘을 심어나가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고취하는 행위로 변모했던 것이다. 결국 참가자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을 취사선택해서 보았던 셈이다. 그것은 선만안내소가 짠 일정에 內藏되어 있기도 했지만, 여행을 나서기 전에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만주 관련 정보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학생들의 여행기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이 강한 여행의 형태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만철, 선만안내소, 여행문화협회 등이 다양한 여행안내서들의 출판에 관여했던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데자뷰’ 효과를 이끌어냈으리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sup>47)</sup>

물론 만주 현지에서의 체험이 제국의식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예컨대 ‘民族協和’를 국시로서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중심의 민족 차별이 농후했던 만주에서 차별 현실에 대한 위화감이 표출된 사례도 간혹 나타나곤 했다. 예컨대 한 학생은 “일본인은 너무 거만하게 굴고 있다. 조선

46)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5쪽.

47) 당시 만철을 비롯한 여행관련 조직들은 유명 문필가들을 동원하여 만주 등지로의 여행을 안내서 형태로 만들어냈다. 예컨대 휘순 전적지 안내서로서 1927년 출간된 이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우에다 교스케[上田恭輔]의 『휘순 전적 안내기[旅順戰跡案内の記, 大阪屋號書店]』를 대표적인 안내서로 들 수 있겠다. 우에다는 러일 전쟁 당시 만주군 사령관과 함께 만주 별판을 누렸던 작가로서, 이 책은 만철 소유의 일간지 『만주일일신문』에 연재되었던 글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자연주의 계열의 소설가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만선 행락[滿鮮の行樂, 大阪屋號書店, 1924]』도 당시에 만주 여행 관련 필독서였다.

인이건 만주인이건 우리만큼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의를 잃은 태도, 경멸적 태도를 취해도 좋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sup>48)</sup> 만주에서의 방약무인한 일본인의 태도가 타민족에게 위화감을 주어 제국 경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심정이 토로된 것이다. 그러나 정재정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우려는 ‘일본을 더욱 제국답게 만들기 위한 노파심’이었을 뿐,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아니었다.<sup>49)</sup>

1939년 9월 11일 교사회회의에서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보고가 있었다. 회계 보고를 중심으로 견학장소, 여행일정에 대한 경험, 여행학생 건강상태 등이 보고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자는 만선여행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sup>50)</sup>

1. 만주 전체를 파악하여 깊은 이해를 얻어서 만주가 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장래 졸업 후에 만주지방으로부터 초빙이 있을 경우 기꺼이 부임할 것으로 사료된다.
2. 新京의 도시계획 등에 일본인이 어느 정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직접 봄으로써, 일본인의 정신력이 강함을 깨닫고 日滿一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만주 건설을 위해 몸바친 先人들의 偉業에 강렬한 감명을 받았다.
4. 경성, 경주, 평양 등의 박물관에서는 內鮮 관계의 긴밀성을 통감했다.

학교 측의 수학여행 추진 의도가 기본적으로 ① ‘선인’으로 상징되는 ‘일본인’의 ‘위업’을 확인하고, ② ‘일만일체’와 ‘내선일체’라는 제국의식을 획득하는데 두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특히 후자는 러일전쟁 직후의 단계와는

48)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20쪽.

49) 정재정, 2010, 앞의 글, 87쪽.

50) 『滿鮮旅行引率教官ヨリ所感報告ノ件』,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一(教官會議)-26: 昭和14年1月-昭和16年9月(特26).

달라진 제국 팽창의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사안으로서 졸업 후 '외지' 취직의 전망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조선이나 만주로의 교사 취직은 이 시기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경 등지에서 있었던 동창회 조직 사호카이[佐保會]의 환영 연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수학여행과 식민지 취직을 직결시켜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문부성은 1940년 1월 학무국장 명의로 조선, 대만, 사할린[가라후토] 및 만주, 중국[지나] 등지로의 취직 지망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 측이 2월 3일자로 문부성에 회신한 '졸업생 배당'에 관한 보고를 보면, 희망학생은 문과 2명, 이과 3명, 가사과 5명이었다.<sup>51)</sup> 졸업 후 실제로 '외지'에 취직한 사람은 이과 2명, 가사과 5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주의할 점은 이들이 모두 식민지와 인연이 있던 가족의 성원들이었다는 것이다. 졸업생명부로 확인해 보면 7명 중 이과 1명, 가사과 2명은 조선인이고 나머지 4명도 주소지가 '외지'로 되어 있어서 전원이 지역 연고를 가진 학생들이었다.<sup>52)</sup> 따라서 식민지 취직을 겨냥한 수학여행이라는 판단은 과대해석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의 진전에 따라 식민지로의 도항자가 증가하리라는 전망은 일반적으로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향후 교사가 될 재원들에게 '외지'에서의 일본의 세력 확대와 '일본인의 활약'을 직접 확인시키는 일은 취직과 무관하게 '국책'으로서 중요한 일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정재정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참가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통해 '황국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여행은 제국 경영과 연동된 제국의식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 일단은 문과 학생들의 여행기 말미에

51) 「卒業生配當ニ關スル件」 및 「卒業生配當ニ關シ文部省ニ報告案」. 모두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十六(卒業生狀況等)-42; 卒業生配當ニ關スル書類 昭和14年 수록.

52) 「卒業生名簿」,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十六(卒業生狀況等)-50; 昭和8年-昭和16年.

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단 대륙의 공기를 접하고 온 사람은 内地의 풍물에서도 전과는 다른 감흥을 느낀다. 시모노세키 역의 구내와 플랫폼은 시끌벅적 정신이 없다. 내지 생활의 긴장과 긴박감이 느껴진다. 물끄러미 기차를 바라보는 식의, 만주인의 무심한 표정이 떠오른다. 일본인은 자기 일에 매진하느라 한눈을 팔지 않는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邦人뿐 아니라, 내지로 돌아와 봐도 모두들 그렇다. 세계 역사의 표면에 부상하여 이제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되려 하고 있는 민족과, 세계 역사의 수면 아래 잠겨 역사의 격류를 방관하고 있는 민족. 이것이 일본인과 만주인의 모습까지 변하게 했는지도 모른다.<sup>53)</sup>

수학여행은 적어도 참가학생들에게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되려 하고 있는 민족’과 ‘세계 역사의 수면 아래 잠겨 역사의 격류를 방관하고 있는 민족’, 즉 일본인과 중국인(만주인) 사이의 극명한 대비와 이분법을 새삼스레 확인하는 이벤트로서 충실하게 기능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 여자고등사범의 수학여행은 다양한 여행 인프라들이 ‘제국’ 규모에서 결합된 네트워크의 작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학여행은 제국을 리드하는 민족으로서 일본인의 긍지를 확인하고 ‘日滿一體’와 ‘內鮮一體’라는 허구적 제국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러일전쟁 직후의 단계와는 확연히 달라진 제국 팽창의 현실이 일정하게 반

53) 「昭和十四年度滿鮮修學旅行記」(文科四年), 54쪽.

영되어 있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을 전망하는 제국의식의 강화도 엿보였다. 물론 좀 더 실질적인 시안으로서 졸업 후의 식민지 교사 취직의 전망도 전혀 없지 않았다.

향후 교사가 될 재원들에게 ‘외지’에서 일본의 세력 확대와 ‘일본인의 활약’을 직접 확인시키는 일은 취직과 무관하게 ‘국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수학여행은 제국경영과 제국의식의 심화에 기여해야 했다. 그 구체적인 효과의 일단은 문과 학생들의 여행기 가운데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되려는 민족’과 ‘세계 역사의 수면 아래서 역사의 격류를 방관하는 민족’ 간의 이분법적 위계질서로 드러났다. 만주로의 수학여행은 그런 의미에서 일정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학여행이 위로부터의 국가 이데올로기, 제국의식 주입의 일방적인 장이었다고만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수학여행은 위로부터의 주입과 아래로부터의 일상적 욕망의 분출이 서로 어긋나고 때로 충돌하는 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을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종속변수로만 보지 말고 제한된 독립변수로서 조명해 볼 필요도 있다. 예컨대 1929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만선 수학여행 도상의 항해에서 기성 가요의 가사를 反軍的으로 바꿔 부른 학생들이 승선한 군인들과 충돌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sup>54)</sup> 수학여행을 통해 국가가 ‘생산’하려 했던 국가주의와 제국의식의 ‘소비’가 과연 어떠한 실태를 노정했는지 시야에 넣으면서 국가와 사회, 이데올로기와 욕망의 관계를 좀 더 균형 있게 조망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쌍방향적 분석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식민지로의 수학여행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수학여행은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또 식민지들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만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수학여행에서도 중국인 학생과 만주 등지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2세 학생의 경우<sup>55)</sup>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또 원산, 금

54) 12師團司令部, 1929, 「生徒修學旅行途次反軍的俗歌放歌に關する件」.

55) 예컨대 1935년도 漢口江漢中學校 日本學生 母國見學旅行團의 사례 등이 자료로

강산, 경성, 평양을 거쳐 만철 연선의 다롄부터 하얼빈까지를 경유했던 龍井중학의 사례도 존재한다.<sup>56)</sup> 이들 다양한 수학여행의 사례를 교차시키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제국' 규모로 전개되었던 이 시기 수학여행의 사회적 효과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서 남아 있다.

56) 조선족 사진작가 류은규의 사진집 『잊혀진 흔적』(1998)에는 용정중학의 1938년 수학여행 일정을 담은 화보가 실려 있다.

## 참고문헌

- 김유철·임성모 외, 2008,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1~2), 산치림.
-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2009, 「제국 일본의 '滿鮮' 觀光誌와 고도 경주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6.
- 요시미 슌야[吉見俊哉], 2007, 「제국 수도 도쿄와 모더니티의 문화정치」, 요시미 슌야 외 저,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1920~30년대 근대 일본의 문화사』, 소명출판.
- 임성모, 2006a,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23.
- 임성모, 2006b,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북방사논총』 12.
- 정재정, 2010, 「植民都市와 帝國日本の 視線: 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 生徒의 朝鮮·滿洲 修學旅行(1939년)」, 『일본연구』 45, 한국외국어대학교.
- 高岡裕之, 1993, 「觀光·厚生·旅行: フェシズム期のツーリズム」, 赤澤史朗·北河賢三 編, 『文化とフェシズム: 戦時期日本における文化の光芒』, 日本經濟評論社.
- 高媛, 2002, 「'樂土'를走る觀光バス」,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6』, 岩波書店.
- 高媛, 2003, 「滿洲修學旅行의 誕生」, 『彷徨月刊』 215.
- 廣島高等師範學校, 1907, 『滿韓修學旅行記念錄』, 廣島高等師範學校.
- 久保尚之, 1996, 「驚くべき修學旅行」, 『滿洲の誕生』, 丸善.
- 貴志俊彦, 2010,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 吉川弘文館.
- 奈良女子大學校史關係史料(<http://mahoroba.lib.nara-wu.ac.jp/kousi/mokuroku.html>).
- 奈良女子大學六十年史編集委員會 編, 1970, 『奈良女子大學六十年史』, 奈良女子大學.
- 東京高等師範學校修學旅行團記錄係, 1907, 『遼東修學旅行記』, 東京高等師範學校.
- 滿鐵弘報課, 1932, 『滿洲事變と滿鐵』, 滿鐵弘報課.
- 木畑洋一, 1998, 『大英帝國と帝國意識』, ミネルヴァ書房.
- 白幡洋三郎, 1996, 『旅行ノススメ: 昭和が生んだ庶民の'新文化'』, 中央公論社.
- 濱野兼一, 2001, 「明治期における學校行事の研究: 運動會·遠足にみる修學旅行成

- 立への布石』、『早稲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9-2.
- 濱野兼一, 2003, 「明治期における埼玉縣師範學校の遠足・行軍・修學旅行について: 法的規定以前の實態に關する一考察」, 『早稲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11-1.
- 山本信良・今野敏彦, 1987, 『近代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 明治期學校行事の考察』, 新泉社.
- 三谷憲正, 2005, 「日本近代の朝鮮觀: 明治期の滿韓修學旅行をめぐって」, 『ジャイロス(Gyros)』11.
- 小島晉治 監修, 1997, 『幕末明治中國見聞録集成 9』, ゆまに書房.
- 櫻本富雄, 1987,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 青木書店.
- 有山輝雄, 2002, 『海外觀光旅行の誕生』, 吉川弘文館.
- 伊藤健策, 2006, 「戰時期日本學生の修學旅行と朝鮮認識」, 『國史談話會雜誌』46, 東北大學.
- 日比谷高校百年史編集委員會 編, 1979, 『日比谷高校百年史』, 日比谷高校百年史刊行委員會.
- 長志珠繪, 2007, 「滿洲ツウリズムと學校・帝國空間・戰場: 女子高等師範學校の大陸旅行記録を中心に」, 駒込武・橋本伸也 編, 『帝國と學校』, 昭和堂.
- 井上好人, 2000, 「明治期の小學校における遠足・修學旅行と地域社會」, 『金澤經濟大學論集』86.
- 津金澤聰廣 編, 1996, 『近代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同文館.
- 津金澤聰廣・有山輝雄 編, 1998, 『戰時期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世界思想社.
- 夏目漱石, 1956, 「滿韓ところどころ」, 『漱石全集 16』, 岩波書店.

**[ABSTRACT]**

School excursions to Manchuria in 1930s Japan:  
Focused on the trip network and imperial consciousness

Yim, Sungmo

This article tries to illuminate the imperial consciousness of modern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investigation about the Japanese school excursions to Manchuria in 1930s. Especially, I will focus on the influence of the trip network to school excursions. The period of 1930s in which modern Japan's transformation to mass society had progressed, saw adoption of various infrastructures to tourism like tourist bus service, and an enrichment of cultural aspect of school trip networks. In this article, I will research actual respects of those networks and students' imperial consciousness by investigating the 1939 excursion materials of Nara higher normal school for girls. At the same time, I will raise a necessity of solid investigation of school excursions by studying the aspect of consumption of imperial consciousness and the interactive relation between inbound and outbound trips in this period.

keywords

school excursion, Manchuria, the Japanese, network, imperial consciousness, Nara higher normal school for girls

# 논문

1





#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홍승현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중국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관념인 華夷觀이 漢代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士大夫<sup>1)</sup>들의 夷狄 인식을 통해 고찰될 것인데,

※ 투고일: 2010년 9월 13일, 심사일: 2011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1) 士大夫란 일반적으로 士와 大夫 두 단어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다. 처음 그것은 周代 封建制 하에서 諸侯나 대부의 封土를 관리하던 행정관료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戰國時期 봉건제의 와해와 함께 새로운 지식계층이 등장하며 사대부라는 합성어가 등장하여 새로운 관료층을 의미하게 되었다(『周禮注疏』, 「冬官 考工記」, 作而行之謂之 士大夫. 〈親受其職居其官也.〉〈〉안은 鄭玄의 注). 이에 대하여 미야가와 히사유키의 경우 관직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는 관료를 의미함과 동시에 지식계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관한 경우도, 임관 가능한 사람도 모두 사대부로 칭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李成九는 『荀子』에 등장하는 사대부를 士의 인격적 완성단계 내지는 귀족 대부의 풍모를 갖춘 사라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는 사대부란 지혜와 능력을 갖춘 관료로서 무엇보다 治者意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논지상 이들은 儒家係 관료로 파악된다. 따라서 漢代의 경우 관료층과 임관을 준비하던 정치참여 의식을 가진 지식계층(특히 儒生)을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兩漢 사대부들의 화이관이 어떤 관념과 시대의 산물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이 자신과 주변을 분리하여 사고하면서 등장한 화이관은 “중국인이 스스로를 中華 또는 華夏라고 하여 자신을 존대하고, 주변종족은 夷狄·蠻夷라고 비하하는 관념”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중국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인의 주변종족에 대한 차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근거하여 주변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화이관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그 성격에 이해함에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 하겠다.

현재 화이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는 그것이 중국 문화의 원형이 형성되었던 周代 산물이라고 보는 점이다.<sup>2)</sup> 이 문제는 주대의 사정을 전하는 문헌에 대한 정확한 고증의 결여, 혹은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발생하였다. 그러나 주대 사정을 전하는 문헌은 물론이거니와 春秋時期의 사정을 전하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중국과 이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sup>3)</sup> 당시 중국과 이적은 화이의식에 의해 명

사대부라고 표현해도 대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대부 용어의 등장에 대해서는 宮川尙志, 1956, 『六朝史研究 政治·社會編』,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74~180쪽과 李成九, 1987, 「戰國時代 官僚論의 展開」, 『東洋史學研究』 25, 55~56쪽을 참조.

2) 西嶋定生, 1970, 「總說」, 『岩波講座 世界歷史 4-東アジア世界の形成 I』, 東京: 岩波書店, 9쪽; 李春植, 1998, 「중화세계질서 이념의 탄생에 대하여」, 『中國學論叢』 11-1, 16쪽; 王柯 지음, 김정희 옮김, 2005,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43쪽.

3) 『左傳』에는 春秋時期 중원 국가들이 夷狄와 교섭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쑤은 戎狄와 혼인에 의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 결과 쑤의 呂相은 使者로 간 秦에서 狄과 자신들 관계를 인척이라고 표현한다(『左傳』, 「成公 13年」, “君之仇讎, 而我之昏姻也”). 그러나 한편으로 『좌전』 다른 곳에서는 쑤와 적의 정치적 갈등과 전투가 묘사되어 있어(『左傳』, 「僖公 8年」, “夏, 狄伐晉, 報采桑之役也”; 『左傳』, 「僖公 33年」, “狄伐晉, 及箕. 八月戊子, 晉侯敗狄於箕”; 『左傳』, 「成公 9年」, “秦人白狄伐晉”), 쑤와 적 사이의 인척관계가 항시적이고 영원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요컨대 당시 쑤는 필요에 따라 융적과의 갈등을 평화적 혹은 폭력적으로 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중국 국가와 이적의 관계를 분명한 華夷觀念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연합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sup>4)</sup>

두 번째는 화이관에 이적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sup>5)</sup> 일반적으로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인 천자는 중국뿐 아니라 이적의 지역까지 德化를 미쳐야 하는 책무를 지녔으며, 이에 의해 四夷는 천자의 有德의 세계에 포섭, 동화되어 중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흔히 화이관 안에 존재하는 포용성의 결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화이관을 확정하고 고정화한 『公羊傳』이나 『穀梁傳』을 통해 화이관 안의 포용성<sup>6)</sup>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sup>7)</sup>

본격적으로 화이구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戰國時期이다. 이적들의 성장과 침입, 그리고 상호 攻伐 속에서 주대적 질서가 붕괴함에 따라 중국 국가들은 현실을 왜곡할 방어기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만들어진 방어기제는 중국과 외부를 구분하고, 중국 문화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군사적으로 우세한 외부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것은 封建秩序의

4) 『左傳』에서 발견되는 모호한 華夷 구별이나 內외의 구별에 대해서는 홍승현, 2006, 「魏晉南北朝時期 中國의 세계 개념 변화와 이민족 정책」, 『북방사논총』 10, 199~203쪽을 참조.

5) 李春植, 2002, 『中華思想의 理解』, 신서원, 136·151쪽; 李成珪, 1992,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32쪽. 李春植은 華夷思想을 강력한 정치적·군사적·문화적 민족주의로 규정하였으며, 李成珪는 그것을 夷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우월성 및 그 지배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관념으로 보았다.

6) 夷狄이라 하여도 중국의 道德·禮儀에 동화된다면 그들도 華夏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화하라 해도 禮를 잃고 무도한 행위를 한다면 이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公羊傳』과 『穀梁傳』의 「華夷相互轉移論」은 이적에 대해서도 인간 윤리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고, 이적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吉本道雅, 2007, 「中國古代における華夷思想の成立」,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 8쪽; 小倉彦彦, 1970,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東京: 青木書店, 329쪽.

7) 히라라 도시쿠니는 『공양전』이 華夷의 相互轉移를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강렬한 攘夷意識에 의해 夷狄의 중국으로의 진화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노마 후미치카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日原利國, 1976, 『春秋公羊傳の研究』, 東京: 研文, 235~266쪽; 野間文史, 2001, 『春秋學 公羊傳と穀梁傳』, 東京: 研文, 138~147·262~266쪽.

열렬한 수호자인 儒家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 중국의 이적지배라는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았다. 즉, 최초의 화이관은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고 이적을 비하 하되, 하나의 힘에 의해 중국과 이적이 일률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8)</sup>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현재 화이관은 중국의 이적지배의 정당성을 그 내용으로 가지며 완성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혹 최초 화이관이 만들어지던 시기와는 달리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전 해석의 사회적 필요가 화이관의 내용을 변화시켰던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화이관의 형성 이후 그것이 각 시기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되고, 이용되었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시대적으로 양한시기의 화이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한과 주변의 관계는 일괄적으로 ‘冊封朝貢’으로만 이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과 匈奴의 경우 兩漢 400년 동안 전쟁, 和親, 冊封, 內屬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흉노와의 관계가 변화할 때마다,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전개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흉노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이적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필자는 한대 사대부들의 夷狄觀을 확인하고, 각 정치적 국면마다 그들이 화이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한과 흉노의 관계, 또는 한과 이적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작업은 이후 중국 사대부들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필자의 능력과 지면의 한계상 한대 사대부 전체의 화이관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에 시기별로 특정 사대부들의 화이관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8) 중국의 夷狄 인식의 변화와 華夷觀 성립에 대해서는 洪承賢, 2008, 「고대 중국 華夷觀의 성립과 성격 - 春秋三傳의 검토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7을 참조.

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이들이 한 초의 賈誼, 鹽鐵會議에 참석했던 文學, 宣帝時期 蕭望之, 後漢의 班固와 何休들이다. 물론 이들이 양한시기 전개되었던 화이론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니다. 이들은 필자가 지난 연구의 후속으로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고 이적을 비하하되, 하나의 힘에 의해 중국과 이적이 일률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최초의 화이관이 양한시기 특정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재천명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선별된 이들이다.

필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국시기, 이적의 두드러진 성장과 정치적 약진에 의해 위협을 느꼈던 중국은 화이사상이라는 장치를 고안하여 중국과 이적을 분리하였다. 그렇다면 힘의 약세에 있었던 한의 경우도 이적에 대한 우위를 천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기존의 화이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화이관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한편, 武帝時期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적에 대해 강한 힘을 보유하며 강력한 황권이 천명되었던 시기에는 어떠한 화이관이 등장하였을까?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가 주장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거칠게나마 검토한 결과 상대적 우위에 있었던 시기에도 사대부들에 의해 화이분리가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사대부들은 중국이 우세에 있던 시기에도 화이분리를 근간으로 한 화이관을 주장한 것이었을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검토가 전통시기 중국의 화이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은 화이관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王化思想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초 가의의 화이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실의 힘의 한계를 호도했던 왕화사상이 무제의 흉노 정벌 이후, 팽창하는 군주권을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살펴보기 위해 堯錫회의에 참가한 문학과 賢良들의 화이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무제시기를 전범의 시기로 삼고자 하는 선제시기와 관련해서는, 사대부들이 선제의 독재정치를 견제하기 위해 緯書를 이용하여 이적을 신하 삼을 수 없다는 논의를 전개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소망지의 ‘夷狄不臣論’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특히 소망지의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한 최초로 화이관계가 經義에 의해 규정된 사례

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한 사대부의 대립되는 화이관을 반고와 하후의 그것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았던 두 사람을 통해 화이관이 현실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한편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화이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화이관을 전개했던 것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한대 사대부들의 세계관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받기를 기대해 본다.

## II. 賈誼의 ‘三表’·‘五餌’와 王化思想의 전개

秦의 통일과 황제의 등장에 따라 華夷 구별이 사라지며 오직 황제에 의해서만 온 세계가 통치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생겼던 것도<sup>9)</sup> 잠시, 任俠的 질서로 뒹어진 無賴 출신의 功臣들로 인해 천하와 함께 利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sup>10)</sup> 漢高祖 劉邦은 郡縣과 封建이 결합된 郡國制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한 초 봉건제의 부활이 어쩔 수 없는 복수권력의 존재에 따른 현실 타협책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儒家들은 郡縣제를 천자의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다.<sup>11)</sup> 秦始皇이 실행한 郡縣제는 후대 유가에 의해 “천하를 사사로이 하는 마음”으로 표

9) 『史記』卷6, 「秦始皇本紀」, “日月所照, 舟輿所載, 皆終其命, 莫不得意, 應時動事, 是維皇帝……六合之內, 皇帝之土, 西涉流沙, 南盡北戶, 東有東海, 北過大夏, 人迹所至, 無不臣者.”

10) 『史記』卷97, 「酈生列傳」, “與天下同其利.”

11) 일찍이 閔斗基는 楚莊王이 陳을 토벌한 후 그것을 縣으로 삼은 조치에 대해 大夫 申叔時가 “今縣陳, 貪其富也, 以討召諸侯, 而以貪歸之, 無乃可乎”라고 비난한 『左傳』「宣公 11年」의 기사를 근거로 漢 이전부터 현의 설치가 군주의 사사로운 욕망의 소치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閔斗基, 1966, 「中國의 傳統的 政治像 - 封建郡縣論議를 통해 본」, 『震檀學報』 29, 398~399쪽.

현되었다.<sup>12)</sup> 분권을 이상으로, 무리한 균질적 지배를 거부하는 유가들에게<sup>13)</sup> 모든 권력이 황제 일인에게 집중되는 균현제는 제왕의 제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세계를 잠시 들여다보자.

『春秋』에서는 안팎을 구별하고,賢한 자와 不肖한 자에 차이를 두고, 고귀하고 비천한 자의 등급을 둔다.<sup>14)</sup>

董仲舒의 『春秋繁露』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안과 밖, 존귀비천의 상하가 구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유가의 세계다. 일찍부터 유가들은 신분과 능력에 따라 차이를 갖는 이들이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꿈꿨다.<sup>15)</sup> 그리고 그들은 그 세계가 물리력에 의해 천하를 장악한 霸者가 아닌 天命을 위임받은 道德王, 즉 王者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때 패자와 달리 이타적 사랑인 仁을 실현하는 도덕왕은<sup>16)</sup> 四夷마저도 포괄하는 仁義의 정치를 펼치게 된다.<sup>17)</sup> 그 결과 마침내 夷狄은 도덕적인 중국 지배자의 교화에 힘입어 中國化된다.

그 근거는 바로 『公羊傳』의 ‘華夷轉移論’이다. ‘화이전이론’이란 이적이더라도 중국의 도덕·禮·義에 동화된다면 중국, 즉 華夏가 될 수 있고, 중국이라 해도 예를 잃고 무도한 행위를 하면 이적이 된다는 것이다. 『공양전』의 이 ‘화이전이론’은 종종 종족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18)</sup>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일방적으로 이적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적이 중국이 되

12) 『讀通鑑論』, 「秦始皇」, “秦以私天下之心而罷侯置守.”

13) 吉本道雅, 2007, 앞의 글, 19쪽.

14) 『春秋繁露』, 「楚莊王」, “此其別內外·差賢不肖·而等尊卑也.”

15) 『荀子』, 「樂論」, “農分田而耕, 賈分貨而販, 百工分事而勸, 士大夫分職而聽, 建國諸侯之君分土而守, 三公總方而議, 則天子共己而已矣!” 『荀子』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는 모든 이들이 군주를 정점으로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분업화된 사회이며, 서열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16) 신정근, 2004,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태학사, 173~175쪽.

17) 『春秋繁露』, 「仁義法」, “故王者愛及四夷.”

18) 那波利貞, 1936, 『中華主義』, 東京: 岩波書店, 57쪽.

기 위해서는 그들 내부에 전승되어 온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한다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sup>19)</sup>

한편 이 ‘화이전이론’이 前漢 유가들이 가지고 있던 이적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과연 얼마큼의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춘추』는 言辭를 신중하게 운용함으로써 인륜의 차례를 매기거나 사물의 가치를 등급매기는 데에도 진지하게 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小夷에 대해 伐이라고 말하지 戰하였다고 하지 않으며, 大夷에 대해서는 戰이라고 하지 獲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獲이라고 하지 執이라고 하지 않는 각기 맞는 언사가 있다. 小夷는 大夷를 대적할 수 없어 피하므로 戰이라 할 수 없고, 大夷는 중국을 대적할 수 없어 피하므로 獲이라 할 수 없으며, 중국은 천자와 대적할 수 없어 피하므로 執이라 할 수 없다. 인륜의 차례는 혼용될 수 없는데 서로 신하로 하는 언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대소는 서로 차등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귀천은 윤리의 본분을 따르니 이것이 義의 바름이다.<sup>20)</sup>

동중서는 분명하게 대소는 서로 차등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귀천 역시 변화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화이의 구별마저 사실은 고정되어 변화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양진』이 궁극적으로는 강렬한 攘夷意識에 의해 화이분리 혹은 화이대립을 주장하며, 이적의 중국으로의 진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sup>21)</sup> 이렇듯 전한시기 유가의

19) 신정근, 2005, 「중화주의와 중국철학의 동맹」, 『중국문화』 44, 282쪽. 신정근에 따르면 중국 철학의 성과에는 보편화가 가능한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타자를 왜곡하고 억압하며 절멸시키려는 반인간적인 특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적의 중국화라는 것은 결국 이적문화의 절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春秋繁露』, 「精華」, “春秋慎辭, 謹於名倫等物者也. 是故小夷言伐而不得言戰, 大夷言戰而不得言獲, 中國言獲而不得言執, 各有辭也. 有小夷避大夷而不得言戰, 大夷避中國而不得言獲, 中國避天子而不得言執, 名倫弗予, 嫌於相臣之辭也. 是故大小不踰等, 貴賤如其倫, 義之正也.”

21) 日原利國, 1976, 앞의 책, 235~266쪽.

세계관은 화이를 구별하지 않았던<sup>22)</sup> 진대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화이를 구별하는 관념과는 다른 입장이 한 초 賈誼를 통해 개진되었다. 가의는 인간의 자취가 미친 곳이라면 그곳이 설사 蠻夷 이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천자의 땅이라 하였고,<sup>23)</sup> 모든 인간들을 복종시켜 지배해야 만이 진정한 천자라 할 수 있다고<sup>24)</sup> 하였다. 확실히 가의의 세계관은 당시 장성 이북과 장성 안을 구분하여 각기 單于와 漢皇帝의 통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던<sup>25)</sup> 전한 초의 세계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흔적이 미친 곳에 신하 아닌 자가 없다”<sup>26)</sup>던, 최대로 팽창되었던 秦代인의 세계관과 같다. 요컨대 가의는 진시황에 의해 규정된 제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황제라는 칭호와 그에 따른 세계범주가 명실상부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황제라는 칭호가 극대로 팽창된 세계의 지배자를 의미하기에, 그에게 한고조 이래로 흉노와 계속 유지되던 和親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황제의 칭호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흉노를 제압하지 못하는 당시의 현실은 황제권의 완전한 실현일 수 없었다.<sup>27)</sup> 그는 흉노를 제압하여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秦始皇이 자신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華夷觀念을 부정하는’ 道家 계열의 개념인 六合을 사용한 것, 또는 “地無四方, 民無異國”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혹 이러한 개념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史記』에 기술된 당시 진의 영토에 朝鮮·臨洮·嚮戶·陰山·遼東 등 四夷의 옛 거주지가 포함된 것은 실제로 진이 증원을 넘어 그 영역을 蠻夷의 거주지까지 확장하여, 그들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후 漢代人들의 증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鹽鐵會議에 참석한 文學들은 진에 대해 “海內를 작게 여겨 胡와 越의 땅을 탐하였다(『鹽鐵論』第44, 「誅秦」, 小海內而貪胡·越之地)”고 하였다.

23) 『新書』, 「匈奴」, “苟舟車之所至, 人跡之所及, 雖蠻夷戎狄, 孰非天子之所哉?”

24) 『新書』, 「威不信」, “古之正義, 東西南北, 苟舟車之所達, 人跡之所至, 莫不率服, 而後雲天子.”

25) 『史記』卷10, 「匈奴列傳」, “先帝制: 長城以北, 引弓之國, 受命單于; 長城以內, 冠帶之室, 朕亦制之.”

26) 『史記』卷6, 「秦始皇本紀」, “人迹所至, 無不臣者.”

27) 『新書』, 「威不信」, “今稱號甚美, 而實不出長城……今陛下杖九州而不行於匈奴, 竊爲陛下不足.”

홍노로 하여금 그 죄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망하게 하며, 선우의 목을 묶어 명령에 굴복하게 하고 中行說을 잡아 그 등짝을 매질하며, 모든 홍노의 무리들이 오직 주상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폐하의 위엄이 크게 떨치고 도의가 널리 퍼져, 천하에 의지하여도 반드시 굳건하여 높으신 칭호에 진실로 걸맞게 되리니, 그때 가까게는 중국을 살피시고 멀게는 사이를 바라보심에 뜻대로 되지 않으심이 없을 것입니다.<sup>28)</sup>

이러한 가의의 이적관이 세계를 四海之內과 四海之外로 구분하여 천자의 지배영역을 海內로만 국한했던 전통적인 유가의 이적관<sup>29)</sup>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이적관은 어떻게 출현했을 까? 가의 특이한 이적관은 아무래도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필요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다. 당시 공신집단에 의해 위축된 황제권의 회복이 文學之士들의 정계 진출에 유리한 지형을 창출했기에, 문학지사였던 가의는 강력한 황제권 회복을 제창하였다. 그 결과 강력했던 진의 황제 개념이 차용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위와 같은 대홍노 정책을 제출하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당시 사상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흔히 가의는 유학이 經學으로 발전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

28) 『新書』, 「解縣」, “匈奴伏其辜而殘亡, 係單于之頸而制其命, 伏中行說而笞其背, 舉匈奴之衆, 唯上之令. 陛下威憚大信, 德義廣遠, 據天下而必固, 稱高號誠所宜, 俛視中國, 遠望四夷, 莫不如志矣.”

29) 戰國時期 儒·墨系列의 문헌에 보이는 四海之內(=海內) 개념이 중국에 국한되었던 것과 이곳만이 천자의 통치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金翰奎, 1982a,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一潮閣, 29~31쪽을 참조.

30) 오히려 賈誼의 夷狄觀은 이후 鹽鐵會議에 참여했던 大夫의 그것과 같아 보인다. 대부분은 匈奴와의 화친을 주장하고 邊郡을 폐지하지는 文學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 은 九州를 가지고서도 홍노를 호령하지 못합니다. …… 황제라는 이름은 있어도 위신이 장성 밖으로 떨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을 보내 거만한 자들을 떠받들고 있으니 이것은 五帝도 참을 수 없는 일이며 三王도 반드시 분노하셨을 일입니다(『鹽鐵論』 第43, 「結和」, “今以九州而不行於匈奴……今有帝名, 而威不信於城之外, 反賂遺而向踞敖, 此五帝所不忍, 三王所畢怒也”)”라고 하여 지난날 가의와 동일하게 皇帝號의 실질을 이해하였다.

만 당시 漢王室은 순수한 유학을 통치이념과 방법으로 원하지 않았다. 한 정부는 현실에 필요한 내용을 학파에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sup>31)</sup>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필요는 당시 문학지사들에게 다양한 학문의 섭렵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가의 역시 “諸家の 書에 자못 통달”<sup>32)</sup>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3)</sup> 아마도 이것이 유가의 전통에서 벗어난 이적관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sup>34)</sup>

한편 가의의 이적관은 그의 학문적 전통과도 어느 정도 관련 있다. 『漢書』 「儒林傳」에 따르면 張蒼과 더불어 가의, 張敞, 劉公子 등이 『左傳』을 익힌 것으로 나온다.<sup>35)</sup> 그런데 『좌전』은 『춘추』의 다른 二傳과는 달리 이적을 문화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종족적으로 구분한다.<sup>36)</sup> 특히 『좌전』 안의 용적을 禽獸와 같이 취급하는 사례는<sup>37)</sup> 그 문헌이 화이를 문화적 차이가 아닌 태생 그 자체로 구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좌전』은 『공양전』이나 『穀梁傳』

31) 김근은 이 당시 유학과 함께 法家說, 黃老說, 陰陽說, 方士說 등이 성행하였고, 심지어 經學이 이들 諸說에게 압도당하기까지 하였다고 보았다. 김근, 1990,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漢代 經學의 해부』, 민음사, 156쪽.

32) 『史記』 卷84, 「賈生列傳」, “(賈誼)頗通諸子百家之書.”

33) 이에 대해 蔡廷吉은 漢初 학술의 특징을 ‘駁雜不純’이라고 표현하였으며, 戴君仁은 賈誼를 비롯한 前漢 사상가들의 雜家的 성향을 강조하였다. 蔡廷吉, 1984, 『賈誼研究』, 臺北: 文史哲, 10쪽; 戴君仁, 1957, 「論賈誼的學術並及其前後的學者」, 『大陸雜誌』 36-4, 113쪽.

34) 馬曉麗는 賈誼의 匈奴觀을 儒家의 大一統思想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강력한 황제권에 의한 흉노의 지배를 전통적인 유가의 대일통사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馬曉麗, 2006, 「賈誼的民族關係思想」, 『煙臺大學學報』 19-2, 203쪽.

35) 이들의 師承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唐의 陸德明은 『經典釋文』 序에서 左丘明—曾申—吳起—鐸椒—虞卿—荀卿—張蒼—賈誼라는 사승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徐復觀을 비롯하여 근래의 학자들 대부분은 가의 이전의 사승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徐復觀, 1976, 「賈誼思想的再發現」, 『兩漢思想史 二』, 臺北: 學生書局, 121~122쪽; 黃覺弘, 2006, 「賈誼與〈左傳〉之關係」, 『船山學刊』 59, 65쪽. 한편 『漢書』 「儒林傳」은 賈誼—貫公—貫長卿—張禹—尹更始—胡常—賈護—陳欽—王莽이라는 左傳學의 전승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36) 『左傳』, 「成公 4年」, “非我族類, 其心必異。” 楚雖大, 非吾族也, 其肯字我乎.”

37) 『左傳』, 「閔公 元年」, “戎狄豺狼, 不可厭也.”; 『左傳』, 「襄公 4年」, “戎, 禽獸也.”

과는 달리 사이를 “형벌로써 위협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한다.<sup>38)</sup> 그러므로 이러한 『좌전』을 학습한 가의가 今文學者들에 비해 이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녔던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가의 역시 흉노에 대한 지배를 중국의 확대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흉노에 대한 처리는 “장차 흉노의 무리들을 한의 臣民으로 삼아 千家를 일국으로 만들어 이를 변경 밖에 줄지어 놓아 隴西로부터 遼東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봉받은 땅으로써 변경을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 月氏와 灌窳의 변란에 대비하게 하며 그들 모두를 황제의 直屬郡에 속하게 해야 합니다”<sup>39)</sup> 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屬國의 설치였다. 알려진 것처럼 속국이란 이적들이 자신들의 國號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한에 귀속한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故俗을 그대로 유지하였다.<sup>40)</sup> 따라서 비록 이적의 땅이 중국의 군현으로 편제되어 외형상으로는 중국의 통치영역이 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고속을 유지하며 그 주장에 의해 지배되어, 속국의 설치실질적인 중국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했다.<sup>41)</sup>

38) 『左傳』, 「僖公 25年」, “德以柔中國, 刑以威四夷.” 『左傳』에 나타난 夷狄에 대한 중원 국가의 인식이 문화적 인식이기보다는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종족의식에 가깝다는 것은 浦衛忠, 1995, 『春秋三傳綜合研究』, 臺北: 文津, 143쪽을 참조. 사실 『좌전』에는 曹姓으로 중원의 국가이지만 이적의 禮를 사용한 邾에 대해 이적으로 표현한 사례(『左傳』, 「僖公 21年」, 蠻夷猶夏, 周禍也. 此邾滅須句而曰蠻夷. 昭二十三年, 叔孫豹曰: 「邾又夷也.」 然則邾雖曹姓之國, 迫近諸戎, 雜用夷禮, 故極言之), 역시 이적의 禮를 사용하여 이적으로 표현된 杞侯의 사례(『左傳』, 「僖公 23年」, 杞成公卒. 書曰「子」. 杞, 夷也. 成公始行夷禮以終其身故於卒貶之) 등이 나와, 『좌전』 역시 문화적 우열에 따라 華夷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모두 經文에 대한 傳의 해석이 아닌, 후대 杜預의 해석이어서 『좌전』이 쓰인 당시의 夷狄觀으로 볼 수 없다.

39) 『新書』, 「匈奴」, “將必以匈奴之衆, 爲漢臣民, 制之令千家而爲一國, 列處之塞外, 自隴西延至遼東, 各有分地以衛邊, 使備月氏灌窳之變, 皆屬之直郡.”

40) 『漢書』 卷6, 「武帝紀」, “師古曰: 「凡言屬國者, 存其國號而屬漢朝, 故曰屬國.」”; 『漢書』 卷55, 「霍去病傳」, “師古曰: 「不改其本國之俗而屬於漢, 故號屬國.」”

41) 前漢 武帝 이전 屬國을 관할하던 관원은 典屬國으로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기능은 속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속국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外交의 諸行事를 관장하였다. 金翰奎, 1982a, 앞의 책, 168쪽. 따라서 賈誼가 속국을 설치하고 전문 관원을 설치하여 匈奴를 통치하고자 한 것을 중국의 확대로 이해할 수는

가의는 이러한 속국의 설치를 통해 흉노를 통치하고,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이적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가의 또한 다른 유가와 마찬가지로 흉노의 영토와 인민을 직접지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가의에게 황제 개념의 실현을 위해 흉노를 제압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었으나 흉노를 직접지배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던 것이다. 그 역시 중국과 이적의 분리라는 화이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틀리지 않았음은 가의가 주장한 흉노에 대한 지배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의는 흉노에 대해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로움으로 유인”<sup>42)</sup>해야 한다고 하여, 화친을 주장하던 대다수의 관료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무력사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핵심은 ‘示武’가 아닌 ‘味利’, 즉 이로움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유명한 ‘三表’다. 삼표란 ‘天子之信’, ‘陛下之愛’, ‘陛下之好’로 표현되는데,<sup>43)</sup> 이는 “두터운 德으로 사이를 품어 북중케 하는 것”이며 “밝은 義를 들어 멀리까지 널리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sup>44)</sup>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적에 대해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인 중국의 황제가 이적의 지역까지 德化를 미쳐야 한다는 전형적인 王化思想이 등장한 것이다.<sup>45)</sup>

따라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무력이 아니라 유인책인 ‘五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미끼라는 것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복하여 귀속한 흉노에 대한 처리방법에 국한되어 있다. 귀의한 흉노 수장에게 비단옷과 수레를 내려 화려한 중국의 문화에 젖게 하며, 좋은 음식에 길들여 나머지 흉노들을 다투어 투항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6)</sup> 또한 가의는 흉노 문

없을 것이다.

42) 『新書』, 「匈奴」, “此其示武味利之時.”

43) 『新書』, 「匈奴」.

44) 『新書』, 「匈奴」, “今漢帝中國也, 宜以厚德懷服四夷, 舉明義博示遠方.”

45) 이에 대해 王興國은 三表의 기본사상을 유가의 德戰이라고 보았다. 王興國, 1992, 『賈誼評傳』, 南京: 南京大學, 174쪽.

46) 五餌에 관해서는 『新書』, 「匈奴」를 참조.

제를 담당하는 관인 屬國官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데, 바로 蠻夷降者를 관장하는 典屬國을 말한다.<sup>47)</sup> 이것 또한 행정단위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가의의 흉노 정책이 흉노를 정벌하여 직접지배하는 것이 아닌 투항한 만이항자를 단속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의 흉노 정책 역시 현실을 왜곡하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당시 關市를 개설하여 흉노와 화친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文帝時期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48)</sup> 관시란 원래 흉노가 한으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歲幣 이외에 민간교역을 행하던 장소로 정확한 무역량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武帝가 즉위한 후 화친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자 흉노를 후대하여 관시를 열어 많은 물자를 보내주니 “흉노의 선우 이하 모두 한과 친해져 장성 밑으로 자주 내왕”<sup>49)</sup>하였다는 기록을 보서는 관시를 통한 무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시의 개설은 한이 무력적으로 흉노와 대등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기에,<sup>50)</sup> 이 상황은 한이 흉노와 대등한 군사력을 마련하거나 혹은 흉노를 압도할 수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역시 천자를 머리로, 흉노를 발로 규정하고 흉노를 부리고 호령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의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시의 개설을 통해 흉노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그 결과 한의 맛있는 음식과 술에 익숙하게 된 흉노는 장성 아래로 이주하여 자신의 수장인 선우로부터 이탈하고, 한과 교역하면서 쓰게

47) 『漢書』卷19上, 「百官公卿表」, “典屬國, 秦官, 掌蠻夷降者. 武帝元狩三年昆邪王降, 復增屬國, 置都尉·丞·候·千人. 屬官, 九譯令, 成帝河平元年省並大鴻臚.”

48) 『漢書』卷94下, 「匈奴傳」, “逮至孝文, 與通關市, 妻以漢女, 增厚其賂, 歲以千金.”

49) 『史記』卷110, 「匈奴列傳」, “今帝即位, 明和親約, 厚遇, 通關市, 饒給之. 匈奴自單于以下皆親漢, 往來長城下.”

50) 廖伯源은 漢과 匈奴 사이에 맺어진 和親의 본질을 “양식과 재물로서 뇌물을 써, 흉노에게 和平을 구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廖伯源, 2008, 「論漢廷與匈奴關係之財務問題」, 『中國文化研究所學報』48, 3쪽.

51) 『新書』, 「匈奴」, “夫關市者固匈奴所犯滑而深求也, 願上遣使厚與之和, 以不得已, 許之大市. 使者反, 因於要險之所多爲鑿開, 衆而延之, 關吏卒使足以自守.”

되는 재물로 재정이 바닥나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가의가 말한 ‘德勝’,<sup>52)</sup> 즉 덕으로 이기는 것이다. 즉, 가의의 ‘삼표’와 ‘오이’는 힘의 열세로 인해 흉노에게 관시를 열어주었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을 황제의 덕화로 왜곡하려고 했던 왕화사상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 Ⅲ. 『鹽鐵論』 속 文學의 匈奴觀

위대한 황제의 명칭에 부합하는 세계제국의 수립(혹은 匈奴의 정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德을 통해 夷狄을 교화시킨다는 王化思想이 등장한 후 이것은 종종 현실의 힘의 한계를 호도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왕화사상이 漢이 가진 군사력의 열세를 호도하는 논리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武帝 사후 이 왕화사상은 팽창하는 군주권을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후자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무제 사후 개최된 鹽鐵會議에서 大夫와 丞相이 무제의 遺業을 이어받아 흉노를 격파하여 변경의 근심을 없애야 한다던 것<sup>53)</sup>에 반해 文學과 賢良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무제의 外征을 비판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중국을 고갈시키며 四夷를 정벌했다는 것이었다.<sup>54)</sup> 이것은 『鹽鐵論』에 “중원의 제후국을 피폐하게 하면서 이적의 국가를 원정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sup>55)</sup> “중국 내지의 백성들은 피폐하고 몰락해 가는데도 이는 걱정하지 않고 변경의 일에 만 힘을 기울입니다”<sup>56)</sup>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화이관을 이적

52) 『新書』, 「匈奴」.

53) 『鹽鐵論』 第6, 「復古」, “有司思師望之計, 遂先帝之業, 志在絕胡·貉, 擒單于.”

54) 『鹽鐵論』 第43, 「結和」, “竭中國以役四夷.”

55) 『鹽鐵論』 第6, 「復古」, “未聞弊諸夏以役夷·狄也.”

56) 『鹽鐵論』 第16, 「地廣」, “今中國弊落不憂, 務在邊境.”

에 대한 중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배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는<sup>57)</sup> 달리 昭帝時期 문학과 현량들은 華夷의 분리만을 주장할 뿐 이적에 대한 중국의 지배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대신 그들은 중국 황제의 덕에 의해 이적이 교화되어 귀부하게 된다는 德化論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시 문학들이 덕화론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들이 덕화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유가의 人性論에서 찾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당시 대부가 형벌에 의해 인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외정벌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문학들은 인의를 중시하여 정벌이 아닌 和親을 주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본성을 믿는 문학은 흉노와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 화친을 주장한 것이고, 대부는 흉노가 금수와 같은 존재이므로 믿을 수 없어 무력정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의 華夷觀을 철저한 종족적 차등의식으로, 문학의 그것을 문화적 차등의식이라 규정하였다.<sup>58)</sup>

실제로 『염철론』 안에서 문학은 흉노를 문화적으로 저열하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sup>59)</sup>에 반해 대부는 그들을 신의가 없는 탐욕스럽고 사나운 짐승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sup>60)</sup>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염철론』 전체를 관통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음 문학의 발언을 들어보자.

57) “中華世界秩序의 주된 사상이며 이때 華는 중원을 차지한 漢族으로서 주변민족인 夷를 지배하였다는 것”이나, “中華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미개한 夷狄까지 중국의 문화질서에 화합하여 천하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상”이라는 華夷觀에 대한 해석들은 그것을 중국이 이적을 지배하고자 하는 패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차례로 이홍중·공봉진, 2000, 「中國 華夷思想에서 ‘華夷’ 개념의 재해석」, 『세계지역연구논총』 15, 168쪽; 吳錫源, 1996, 「『春秋』의 華夷思想과 한국의 민족의식」, 『유교사상연구』 8, 6쪽.

58) 金翰奎, 1982b,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에 대한 一試論」, 『東亞研究』 1, 94~100쪽.

59) 『鹽鐵論』 第52, 「論功」, “法約而易辨, 求寡而易供, 是以刑省而不犯, 指麾而令從, 嫗於禮而篤於信, 略於文而敏於事.”

60) 『鹽鐵論』 第47, 「世務」, “春秋不與夷·狄之執中國, 爲其無信也. 匈奴貪狼, 因時而動, 乘可而發, 麤舉電至. 而欲以誠信之心, 金帛之寶, 而信無義之詐, 是猶親蹠·蹠而扶猛虎也.”

흉노는 사막 한가운데 처하여 불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늘이 그들을 천하게 여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 마치 중국의 사슴과 같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신하들이 그들에게서 의로움을 찾고 예의를 따져서, 중국의 방패와 창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수 없게 하고 만 리에 걸쳐 국경을 방비하게 하였습니다.<sup>61)</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오히려 문학이 흉노를 금수와 같이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문학의 표현에 따른다면 일 꾸미기 좋아하는 신하)가 흉노를 중국과 동등한 인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은 비록 완곡하기는 하지만 “어찌 만이나 맥 같은 사람들 때문에 번민하는가”<sup>62)</sup> 라고 반문하며 이들을 정벌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된 『염철론』 속 문학의 화친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염철론』의 대부와 문학의 주장을 전·후반부로 나누어 분석한 유하즈 가즈요리[ユハズ和順]의 연구가 주목된다. 유하즈는 『염철론』을 염철회의의 정식 의론을 담은 전반부(第1~第41), 회의 후 여담을 담은 후반부(第42~第59), 그리고 後序에 해당하는 마지막 「雜論」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 구분에 근거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흉노 문제에 대해 대부는 적극책을 채용하고자 하고, 문학은 융화책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후반부 기술에는 ① 흉노 공략에 필요한 비용장출을 위한 염철문제가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고, ② 『공양전』을 비롯한 『춘추』를 이용한 斷章取義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③ 전반부에 비해 문학 측에 의한 현실적·구체적 흉노 대책으로 ‘화친’이 주장된다. 그리고 그는 ②의 이유로 인해 후반부가 撰者인 桓寬에 의해 加筆 내지는 增補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sup>63)</sup>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염철론』 속에는 소제시기 문

61) 『鹽鐵論』 第38, 「備胡」, “匈奴處沙漠之中, 生不食之地, 天所賤而棄之……如中國之麋鹿耳. 好事之臣, 求其義, 責之禮, 使中國干戈至今未息, 萬里設備.”

62) 『鹽鐵論』 第12, 「憂邊」, “夫蠻貊之人, 不食之地, 何足以煩慮, 而有戰國之憂哉?”

63) ユハズ和順, 1991, 「『鹽鐵論』に見える對匈奴政策論争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37, 144·148~152쪽.

학의 목소리와 더불어 환관이 활약했던 宣帝時期 사대부들의 목소리가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자못 무제의 故事를 따랐다”<sup>64)</sup>고 알려져 있는 선제는 法家係 能吏를 대거 기용하여 중앙집권적 황제지배를 확립하고자 한 군주였다. 민간에 있을 때부터 霍光의 전횡에 불만이 있었던<sup>65)</sup> 그는 곽광 사망과 동시에 尙書의 副封制을 폐지하며 신속히 親政體制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선제의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당시 王吉은 “제왕의 本務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sup>66)</sup> 선제를 비판하였다. 대신 왕길은 유생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유학을 통치원리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sup>67)</sup> 그러나 선제는 오히려 유가들을 배척하며 법가계의 능력을 통한 독재정치를 실행했다. 아마도 선제의 이러한 관리임용은 사대부들에게 불만임과 동시에 위협이었을 것이다.<sup>68)</sup> 따라서 이상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선제시기 사대부들이 『염철론』 속에서 문학의 입을 빌려 무제시기에 대한 반대를 통해 무제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황제권을 꿈꾸던 선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염철론』 안에서는 사대부들의 팽창하는 황제권에 대한 반대라는 동일한 입장을 발견해낼 수 있다. 즉, 소제시기 문학들은 무제의 흉노 정벌을 황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한 대부와의 대립 속에서 흉노를 짐승에 비견하며 그들을 황제가 직접지배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였다.<sup>69)</sup> 한편 한이 흉노에 우세해지면서 흉노와의 관계설정이 새롭게 모색되던 선제시기가 되면 유가계 관료들은 강력한 황제권의 실현을

64) 『漢書』 卷72, 「王吉傳」, “是時宣帝頗修武帝故事.”

65) 『漢書』 卷68, 「霍光傳」, “宣帝自在民間聞知霍氏尊盛日久, 內不能善.”

66) 『漢書』 卷72, 「王吉傳」, “可謂至恩, 未可謂本務也.”

67) 『漢書』 卷72, 「王吉傳」, 3063~3065쪽.

68) 스미야 쓰네코는 『鹽鐵論』이 宣帝時期에 씌어진 것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염철론』을 王霸를 겸용하는 선제의 통치방법에 불만을 가진 사대부의 목소리로 간주하였다. 角谷常子, 1988, 「『鹽鐵論』의 史料的性格—桓寬のよった資料を求めて」, 『東洋史研究』 47-2, 18~21쪽.

69) 『鹽鐵論』의 전반부인 第12 「憂邊」과 第38 「備胡」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59, 60 참조.

위해 흉노를 정벌하자는 입장에 대해 화친이라는 방법을 내세운다. 그런데 화친이란 본질적으로 대등한 두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친이 주장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흉노를 짐승으로 간주하는 한 화친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선제시기의 사정을 포함한 『염철론』의 후반부에서 문학들은 흉노를 소박하면서도 질서가 있으며, 신의가 돈독한 이들로 묘사한다.<sup>70)</sup> 따라서 『염철론』에 등장하는 문학의 덕화론과 대부의 정벌론을 인간본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결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요컨대 『염철론』 속에 등장하는 문학의 덕화론 곧 왕화사상은 강력한 황제권에 근거한 흉노 정벌이라는 주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팽창하는 군주권을 억제하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적을 중국 황제의 덕에 의해 교화할 수 있다는 왕화사상은 앞서 언급한 ‘화이전이론’을 전제로 한다. 비록 不義하고 無禮하다 해도 중국의 문화에 동화됨에 따라, 중국 통치자의 덕에 의해 교화됨에 따라 이적도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선제시기 문학과 유가계 관료들이 원했던 것이 흉노가 중국에 교화되어 신속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예에 의해 질서가 부여된 차등의 세계만이 존재하였고, 이적은 그 세계로부터 영구히 추방당한 존재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제시기를 계승하고자 했던 대부가 “지금 內郡과 邊郡은 모두 한 백성이고 모두 한 신하인데, 안전함과 위험함, 수고로움과 안락함이 고르지 않다면 어찌 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며<sup>71)</sup> 황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배되던 세계를 구상했던 것과는 달리 문학들은 “무릇 두 나라 군주가 서로 사이 좋게 화합하고 중국의 안팎이 서로 교통하여 천하가 안녕하고 세세토록 걱정거리가 없게 되면 士民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sup>72)</sup> 라고 하여 중국과 이적의 세계를 분리하고 있다.

70) 『鹽鐵論』의 후반부인 第52 「論功」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57참조.

71) 『鹽鐵論』 第16, 「地廣」, “今俱是民也, 俱是臣也, 安危勞佚不齊, 獨不當調耶?”

72) 『鹽鐵論』 第43, 「結和」, “夫兩主好合, 內外交通, 天下安寧, 世世無患, 士民何事?”

이러한 문학들의 주장은 팽창하는 군주권에 대한 명확한 반대이며, 그 군주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계제국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 한의 사대부들은 황제권의 실현을 위해 행해졌던 한무제의 흉노 정벌을 “사치함이 도를 넘어서서”<sup>73)</sup>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대부들은 중국과 이적이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나, 중국에 의해 이적이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74)</sup> 그리고 이러한 구분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이적관은 蕭望之로 인해 經書의 해석을 더하게 되며 전한 후반기 확고한 이적 정책으로 자리잡게 된다.

#### IV. 蕭望之의 夷狄不臣論

武帝 이후 유학의 약진으로 인해 漢朝廷 안에는 유가들이 대거 등용된다. 이들 유가들의 등용은 經書의 지식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응용됨을 의미하는데,<sup>75)</sup> 이에 따라 夷狄에 대한 처리문제도 본격적으로 經義에 따라 논단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의 이적 정책이 경의에 따라 규정되게 되는 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한과 匈奴의 관계는 극적인 전환기로 들어선다. 한이 열세에 있었던 전한 초와 양자가 전쟁상태에 있었던 무제시기를 지나, 宣帝時期가 개막되며 한이 우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 우세가 흉노에 대한 한의

73) 『漢書』 卷75 「夏侯勝傳」, “武帝雖有攘四夷廣土斥境之功, 然多殺士衆, 竭民財力, 奢泰亡度, 天下虛耗, 百姓流離, 物故者半.”

74) 호시노 스에코는 “중국의 천자는 夷狄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漢代 今文學派의 기본원칙이었다고 하였다. 保科季子, 2007, 「漢儒の外交構想—「夷狄不臣」論を中心に」,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 44쪽.

75) 宮本勝, 1981, 「蕭望之の學問と經術」, 『中國學論文集: 竹內照夫博士古稀記念』, 札幌: 竹內照夫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會, 174쪽.

절대적·압도적 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흉노 내부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당시 흉노에는 單于의 자리를 둘러싼 길고 긴 쟁투의 결과 다섯 선우가 병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우의 병립은 呼韓邪單于에 의해 종결되기는 하지만, 그의 형 左賢王 呼屠吾斯 즉, 郅支單于와의 대립에서의 패배로 호한야선우는 甘露 2년(前 52) 원조를 위해 한 조정에 入侍 요청을 하게 된다.<sup>76)</sup>

이때 조정은 호한야선우의 입시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게 되는데, 丞相이었던 黃霸와 御史大夫였던 于定國은 『公羊傳』의 유명한 “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sup>77)</sup>이라는 경구에 근거하여, 흉노에게 諸侯王에 준하는 의례와 제후왕 다음가는 자리를 배정할 것을 건의한다.<sup>78)</sup> 稱臣하며 入朝할 것을 요구하는 흉노를 外臣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太子太傅로 있던 蕭望之는 이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까지 선우에게는 正朔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敵國으로 칭하였으니 마땅히 不臣의 예에 의해 대우해야 하고, 그 자리의 순서는 제후왕 위에 있게 해야 합니다. 外夷가 머리를 조아리고 藩國을 칭하면 중국은 겸양하여 그들을 신하로 삼지 않으니, 이는 즉 羈縻의 마땅한 도리이며 겸허함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福입니다. 『尚書』에서 말하기를 “戎狄은 荒服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와서 복종함이 실현하여 일정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다면) 만일 흉노의 후계자가 끝내 새처럼 숨고 쥐처럼 엎드려 조회하여 祭需品을 바치지 않는다 해도 반역한 신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와 양보를 오랑캐들에게 행하시어 복록을 무궁히 내리시는 것이 萬世의 長策입니다.<sup>79)</sup>

76) 澤田勳, 1996, 『匈奴－古代遊牧國家の興亡』, 東京: 東方書店, 59~62쪽.

77) 『公羊傳』, 「成公 15年」.

78) 『漢書』 卷78, 「蕭望之傳」, “初, 匈奴呼韓邪單于來朝, 詔公卿議其儀, 丞相霸·御史大夫定國議曰: 「聖王之制, 施德行禮, 先京師而後諸夏, 先諸夏而後夷狄. 詩云: 『牽禮不越, 遂視既發; 相土烈烈, 海外有載.』 陛下聖德充塞天地, 光被四表, 匈奴單于鄉風慕化, 奉珍朝賀, 自古未之有也. 其禮儀宜如諸侯王, 位次在下.」”

79) 『漢書』 卷78, 「蕭望之傳」, “單于非正朔所加, 故稱敵國, 宜待以不臣之禮, 位在諸

諸臣들과 다른 소망지의 견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五鳳 元年(前 57), 흉노 내부의 분열을 틈타 흉노 정벌의 주장이 대두되자 “마땅히 使者를 파견하여 弔問하고, 그 힘이 미약한 후계자를 도와 재앙과 환난을 구한다면 四夷가 그것을 듣고 모두 중국의 인의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만일 (그 미약한 후계자가) 은혜를 입어 그 君位를 회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하를 칭하며 복종해올 것이니, 이것이 덕이 성대한 것입니다.”<sup>80)</sup>라며 德化에 의해 사이를 교화한다는 전형적인 王化思想을 피력한다.

위와 같은 소망지의 이적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와타나베 요시히로[渡邊義浩]는 소망지의 이적관을 당시 선제에 의해 선양되었던 『穀梁傳』과 연관하여 이해하였다. 그는 무제시기를 지나 한과 흉노가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선제시기 들어 화친이 모색되면서 더 이상 강렬한 攘夷思想과 복수를 인정하는 『공양전』에 의해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조정은 변화된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經典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華夷混一을 이상으로 하는<sup>81)</sup> 『곡량전』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곡량전』을 顯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石渠閣會議 이후 『곡량전』의 화이관이 전개되어 소망지 역시 엄격한 양이사상에서 벗어나 화이혼일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sup>82)</sup>

그러나 소망지가 일련의 흉노 대책을 개선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소망지와 『곡량전』의 관계를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 우선 오봉 원년, 흉노 정벌을 반대

---

侯王上。外夷稽首稱藩，中國讓而不臣，此則羈縻之誼，謙亨之福也。書曰『戎狄荒服』，言其來服，荒忽亡常。如使匈奴後嗣卒有鳥窺鼠伏，闕於朝享，不爲畔臣。信讓行乎蠻貉，福祚流于亡窮，萬世之長策也。”

80) 『漢書』卷78, 「蕭望之傳」, “宜遣使者弔問, 輔其微弱, 救其災患, 四夷聞之, 咸貴中國之仁義。如遂蒙恩得復其位, 必稱臣服從, 此德之盛也。”

81) 노마 후미치카는 『穀梁傳』 「哀公 13年」 傳文에서 吳王 夫差가 小國을 인솔하고 중국 제후들과 회견할 때, 스스로 王號를 버리고 子爵을 칭한 사건을 찬미한 점을 근거로 『곡량전』은 춘추 말기에 가까운 애공 13년에 화이혼일의 세계가 실현되었다고 본다 고 분석하였다. 野間文史, 2001, 앞의 책, 266쪽.

82) 渡邊義浩, 2008, 「兩漢における華夷思想の展開」, 『兩漢儒教の新研究』, 東京: 汲古書院, 432~434쪽.

할 당시 그가 논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곡량전』이 아니라, 『공양전』 襄公 19년의 晉의 大夫 士匄가 齊나라를 공격하였으나 齊侯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던 기사였다.<sup>83)</sup> 또한 감로 2년의 논의에서 이적의 경우 “정삭을 더하지 않아 신하 삼을 수 없다”는 것은 『尙書大傳』의 周公과 越裳氏의 일을 典據로 삼은 것이다.<sup>84)</sup> 또한 『상서』 「禹貢」편의 ‘戎狄荒服’이라는 구절을 이용하여 융적의 복종함이 수시로 변함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그가 비록 석거각회의에서 선제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그가 『곡량전』을 선양하고, 『곡량전』을 이용해 정치적 결정을 논단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의 정치적 결정은 대부분 『공양전』에 입각해 있다.

『漢書』 「蕭望之傳」에 나와 있는 그가 경서를 이용하여 정사를 논단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상소는 地節 3년(67)에 내린 우박과 관련한 것으로, 그는 『春秋』 昭公 3년에 기록된 우박이 魯나라 季氏의 專橫에 대한 하늘의 경계였음을 피력하며 당시 霍氏 專政을 비난하였다. 陰陽災異를 통해 時政과 人事를 推斷하는 성격을 지닌 『齊詩』의 전공자답게, 그는 『춘추』의 災異說을 근거로 곽씨의 一姓擅勢를 비난하였던 것이다.<sup>85)</sup> 그가 魯學인 『論語』를 배웠다고 하나, 그의 사상적 기반은 齊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의 춘추해석을 노학인 『곡량전』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가 재이설을 적극 채용했던 것은 그의 춘추학이 공양학이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오봉 원년 흉노 정벌을 반대하며 인용했던 양공 19년의 기사는 대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공양전』의 대표적인 기사로, 尊尊의 원칙에 따라 대

83) 『公羊傳』, 「襄公 19年」, “晉匄士帥師侵齊, 至穀, 聞齊侯卒, 乃還。”

84) 『通典』, 「賓禮一」, “四夷之君不臣者, 『尙書大傳』曰: 「越裳氏獻白雉, 周公辭不受, 曰: 『正朔不施, 則君子不臣也。』”; 『詩經』, 「周頌·臣工之什」, “『書傳』: 周公謂越裳氏之譯曰: 德澤不加焉, 則君子不享其質, 政令不施焉, 則君子不臣。”

85) 『漢書』 卷78, 「蕭望之傳」, “春秋昭公三年大雨雹, 是時季氏專權, 卒逐昭公, 鄉使魯君察於天變, 亡亡此害, 今陛下以聖德居位, 思政求賢, 堯舜之用心也, 然而善祥未臻, 陰陽不和, 是大臣任政, 一姓擅勢之所致也。”

부의 재량권을 부정하는 『곡량전』과는<sup>86)</sup> 분명히 다른 입장의 기사다. 이상의 내용들은 흉노토벌 반대나 호한야선우를 신하삼지 말아야 한다는 소망지의 주장이 『곡량전』의 화이혼일이라는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따라서 그의 왕화사상이나 夷狄不臣論은 『공양전』의 화이분리로부터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관의 제기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1. 神爵 2년(前 60), 이에 題王 都犁胡次 등을 漢에 들여보내 화친을 청원하였다.<sup>87)</sup>
2. 신작 2년, 흉노 선우가 名王을 보내 奉獻하고 正月를 賀禮하였다.<sup>88)</sup>
3. 신작 4년 5월 흉노 선우가 동생 谷留若王 勝之를 보내 來朝하였다.<sup>89)</sup>
4. 오봉 3년(前 55) 선우가 신하를 칭하며 동생으로 하여 보배를 받들고 정월을 하례하게 하니, 북변이 안정되고 전쟁이 없었다.<sup>90)</sup>
5. 오봉 4년 흉노 선우가 신하를 칭하며 동생 谷蠡王을 보내 入侍하였다.<sup>91)</sup>
6. 감로 원년(前 53) 겨울, 흉노 선우가 동생 左賢王을 보내 來朝하여 정월을 하례하였다.<sup>92)</sup>

86) 『穀梁傳』은 “晉士匄帥師侵齊，至穀，聞齊侯卒，乃還。還者，事未畢之辭也。受命而誅，生死無所加其怒，不伐喪，善之也。善之，則何爲未畢也？君不屍小事，臣不專大名。善則稱君，過則稱己，則民作讓矣。士匄外專君命，故非之也”라고 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晉士匄帥師侵齊，至穀，聞齊侯卒，乃還。還者何？善辭也。何善爾？大其不伐喪也。此受命乎君而伐齊，則何大乎其不伐喪？大夫以君命出，進退在大夫也”라고 한 『公羊傳』과는 달리 大夫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례대로 『穀梁傳』, 「襄公 19年」; 『公羊傳』, 「襄公 19年」.

87) 『漢書』卷94上, 「匈奴列傳」, “(神爵二年)乃使題王都犁胡次等入漢, 請和親.”

88) 『漢書』卷8, 「宣帝紀」, “(神爵二年)匈奴單于遣名王奉獻, 賀正月, 始和親.”

89) 『漢書』卷8, 「宣帝紀」, “(神爵四年)五月, 匈奴單于遣弟呼留若王勝之來朝.”

90) 『漢書』卷8, 「宣帝紀」, “(五鳳三年)單于稱臣, 使弟奉珍朝賀正月, 北邊晏然, 靡有兵革之事.”

91) 『漢書』卷8, 「宣帝紀」, “(五鳳四年)匈奴單于稱臣, 遣弟谷蠡王入侍.”

92) 『漢書』卷8, 「宣帝紀」, “(甘露元年)冬, 匈奴單于遣弟左賢王來朝賀.”

이상은 호한야선우가 감로 2년 한 조정에 입시하여 흉노의 대우문제를 촉발시키기 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1의 기사에 따르면 호한야선우 전 虛閭權渠單于 때부터 이미 흉노는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한과 화친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화친의 내용은 흉노가 稱弟한 것으로,<sup>93)</sup> 이것은 한과 흉노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같은 해 허려권거선우 사후 즉위한 握衍胸鞞單于는 그의 동생 伊魯若王을 보내 奉獻하고 정일을 하례하게 한다(2). 이것은 당시 한과 흉노의 관계가 이름은 화친이나 그 실질적 내용이 한에 대한 흉노의 臣屬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賀正月(4)’이나 ‘來朝(6)’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封朝關係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감로 2년 이전 사실상 흉노가 한에 신속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요컨대 이미 흉노에 대한 한의 우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한의 흉노 지배 역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조정에서는 흉노 토벌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그들을 신하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감로 2년, 흉노를 신하삼아 그 자리를 제후왕 아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승상 황패와 어사대부 우정국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런데 승상 황패와 어사대부 우정국은 흉노를 신하삼는 것의 정확적 근거를 『공양전』에서 가져왔지만, 전통적인 유가는 아니다. 이들은 모두 法吏로 출발하여 중앙관료가 된 후 『상서』와 『춘추』라는 유가의 경전을 학습한 이들이다.<sup>95)</sup> 따라서 그들이 비록 『공양전』을 사용하여 정치적 사안을 논단하고는 있

93) 『漢書』卷78, 「蕭望之傳」, “前單于慕化鄉善稱弟, 遣使請求和親, 海內欣然, 夷狄莫不聞.”

94) 이 때문에 오카야스 이사무는 匈奴의 稱臣 연대를 甘露 3년이 아닌 五鳳 3년으로 보았다. 岡安勇, 1990, 「匈奴呼韓邪單于の對漢「稱臣」年代について」, 『東方學』 80, 44쪽.

95) 이것은 宣帝時期 활약했던 재상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시노 스에코는 이것을 “선제시기 유가적 소양을 지닌 文吏라는 하나의 전형상이 부상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保科季子, 1998, 「前漢後半期における儒家禮制の收容－漢的傳統との對立と皇帝觀の變貌」, 『歴史と方法 方法としての丸山眞男』, 東京: 青木書店, 229쪽.

으나<sup>96)</sup> 그들은 법술에 유능했던 能吏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강경책, 다시 말해 흉노를 신하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法術의 토양 위에서 전개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소망지로 하여금 한의 흉노 지배를 반대하는 ‘이적불신론’을 주장하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는 현실의 우위 속에서 흉노에 대한 정벌과 신속 등과 같은 강경책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특히 법술적 토양 위에 있었던 능리 출신의 재상들이 흉노에 대한 강경책을 통해 선제의 황제권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상황을 염려했을 것이다. 선제의 특성이 儒術을 따르지 않고 法律을 인용하였던 차라<sup>97)</sup> 법술에 근거한 흉노에 대한 강경책은 자칫 무제시기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98)</sup>

소망지는 흉노와의 화친의 이유를 “만일 흉노의 후계자가 끝내 새처럼 숨고 쥐처럼 엮드려 조회하여 제수품을 바치지 않는다 해도 반역한 신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흉노의 배반에 따라 초래될 군사적 정벌에 대한 우려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흉노의 신속에 의해 한과 흉노가 군신관계를 맺었다가 흉노가 번속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양국 간의 군신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황제의 세계제국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팽창

96) 法術에 의해 국가를 통치했던 武帝 역시 『公羊傳』의 복수를 인정하던 사례와 강렬한 攘夷意識을 이용하여 匈奴의 정벌을 결정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漢書』卷94上, 「匈奴傳」, “高皇帝遺朕平城之憂, 高后時單于書絕悖逆. 昔齊襄公復九世之讎, 春秋大之”), 무제 이후 유가 經典을 이용하여 法術을 粉飾하던 것은 하나의 사회적 경향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法吏 출신인 黃霸와 于定國에게 유가 경전을 학습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97) 『漢書』卷78, 「蕭望之傳」, “宣帝不甚從儒術, 任用法律.”

98) 호시노 스에코는 이것을 蕭望之가 가지고 있던 “유능한 실무적 견해”, “냉철한 현실 인식”의 결과라 하였지만 이미 흉노에 대한 漢의 우위가 확정적이었던 시기에 전쟁도 아닌 투항을 요구하는 흉노에 대해 夷狄을 신하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은 현실 인식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保科季子, 2007, 앞의 글, 39·42쪽.

하는 황제권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천자의 마땅한 신의와 겸양이라는 수사 뒤의 무제시기와 같은 황제권의 팽창을 두려워하는<sup>99)</sup> 선제시기 사대부의 아주 솔직한 진심이 표출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흉노에 대한 의견들 중 결국 선제는 소망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흉노와 화친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화책의 채택 결과, 선제 이후 한과 흉노의 관계는 각기 다른 세계로 공존하는 隣敵國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sup>100)</sup>

## V. 班固의 夷狄禽獸論과 何休의 夷狄進至於爵論

蕭望之에 의해 ‘夷狄不臣論’이 經書의 해석에 입각하게 된 후 중국과 夷狄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은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중국의 匈奴 정책 또한 서로의 권역을 인정하는 분리주의가 되었다. 그러나 後漢이 건국될 무렵부터 흉노는 계속된 자연재해와<sup>101)</sup> 烏桓의 침략으로<sup>102)</sup> 다시 쇠약해지고, 여기에 더해 單于 자리를 놓고 쟁투가 일어나 漢과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위 계승에 불만을 가진 右薊韃日逐王 比가 單于庭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 등 선우에 대한 공공연한 항명 끝에 西河

99) 宣帝와 관련하여 『漢書』에 등장하는 “자못 武帝의 故事를 따랐다(是時宣帝頗修武帝故事)”거나, 황제가 “모든 일을 총괄하였다(陛下躬聖質, 總萬方)”는 기사가 모두 선제시기 강력한 황제권의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0) 『漢書』卷94下, 「匈奴傳」, “孝宣·孝元皇帝哀憐, 爲作約束, 自長城以南天子有之, 長城以北單于有之. 有犯塞, 輒以狀聞; 有降者, 不得受.”

101) 『後漢書』卷89, 「南匈奴列傳」, “而匈奴中連年旱蝗, 赤地數千里, 草木盡枯, 人畜飢疫, 死耗太半.”

102) 『後漢書』卷90, 「烏桓傳」, “二十二年, 匈奴國亂, 烏桓乘弱擊破之, 匈奴轉北徙數千里, 漠南地空.”

太守에게 항복의 뜻을 알리며(建武 23년),<sup>103)</sup> 남·북흉노로의 분열의 서막이 오른다. 이후 조부의 칭호를 계승하여 일축왕 비가 호한야선우가 되고, 한에 稱臣함으로써 비로소 남흉노는 인적국으로서의 관계를 청산하고 한에 신속하게 된다(건무 26년).<sup>104)</sup>

이와 관련하여 건무 24년(48)에 光武帝는 여러 신료들을 모아놓고 일축왕 비의 항복문제를 비롯하여 그에 따른 흉노 부족들의 남으로의 遷徙 문제를 논의하였다. 대다수의 신료들은 이제 막 천하가 안정되어 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흉노의 臣屬 요청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나, 오직 耿國만이 흉노 降附民을 받아들여 그들로 하여금 여타 이적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는 한편 다른 이적을 이끌어 邊郡을 회복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sup>105)</sup> 『後漢書』는 이 조치로 인해 오환과 鮮卑는 요새를 보존하며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해지고 북흉노는 멀리 달아나 중국에 일이 적어졌다고 적고 있다.<sup>106)</sup>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후한이 건국한 후 흉노가 분열하여 남북 흉노의 선우정이 수립되고, 북흉노를 완전히 제압하는 永元 초까지의 상황을 『후한서』 「南匈奴傳」을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남흉노가 항복한 후, 위기의식을 느낀 북흉노가 한과 밀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화친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흉노의 끊임없는 노략질과 변경침략의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후한 정부가 흉노와의 관계에서 기력을 상당히 소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흉노 사이에 있었던 공방 역시 후한 정부에게

103) 『後漢書』 卷89, 「南匈奴列傳」, 2941~2942쪽.

104) 漢에 대한 匈奴의 臣屬 문제에 대해서는 好並隆司, 2001, 「稱臣而不名」再考, 『史學研究』 233, 27쪽과 好並隆司, 2002, 「光武帝と匈奴—後漢王朝に臣從した單于」, 『史學研究』 237, 46쪽을 참조.

105) 『後漢書』 卷19, 「耿國傳」, “是時烏桓·鮮卑屢寇外境, 國素有籌策, 數言邊事, 帝器之. 及匈奴奠韃日逐王比自立爲呼韓邪單于, 款塞稱藩, 願扞禦北虜. 事下公卿. 議者皆以爲天下初定, 中國空虛, 夷狄情僞難知, 不可許. 國獨曰: 「臣以爲宜如孝宣故事受之, 令東扞鮮卑, 北拒匈奴, 牽厲四夷, 完復邊郡, 使塞下無晏開之警, 萬世安寧之策也.」 帝從其議, 遂立比爲南單于.”

106) 『後漢書』 卷19, 「耿國傳」, “由是烏桓·鮮卑保塞自守, 北虜遠遁, 中國少事.”

〈표 1〉 후한과 흉노의 화친 및 흉노의 후한 침입 상황

연도	후한과 흉노의 화친과 흉노의 침입 상황	출전
建武 6년(30)	후한과 흉노 상호 使行하여 舊好로써 通교. 흉노 盧芳과 함께 북변을 침입	2940쪽
건무 13년(37)	河東郡 침입. 흉노 左部가 한의 塞內로 들어와 거주	2940쪽
건무 20년(44)	上黨郡 · 扶風郡 · 天水郡 침입	2940쪽
건무 21년(45)	上谷郡과 中山郡 침입	2940쪽
건무 24년(48)	남흉노 호한야신우 比 來降	2942쪽
건무 26년(50)	남선우 稱臣. 남선우가 雲中郡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	2943쪽
건무 27년(51)	북흉노 遣使하여 화친 요청	2945쪽
건무 28년(52)	북흉노 견사하여 화친 요청. 광무제 賞賜로 응답	2946쪽
건무 31년(55)	북흉노 견사. 璽書를 내리고 綵繒을 하사	2948쪽
永平 2년(59)	북흉노 護于丘 降附	2948쪽
영평 5년(62)	북흉노 6~7천 기병 五原郡으로 들어와 운중군을 노략질하고 原陽縣에 이름	2948쪽
영평 6년(63)	북흉노 자주 변경을 노략질. 북선우 合市를 위해 견사하여 화친 요청	2949쪽
영평 8년(65)	남흉노 북흉노와 결탁하여 한에 대한 배반 기도. 북흉노 西河 침입	2949쪽
영평 16년(73)	한의 북흉노 정벌. 북흉노 운중군을 침입 漁陽郡까지 이름	2949쪽
建初 8년(83)	북흉노 三木樓耆 부락의 稽留斯 등이 降附	2950쪽
元和 元年(84)	북선우 합시 요구. 章帝 허가. 북흉노 교역대를 남흉노가 공격	2950쪽
章和 元年(87)	북흉노 屈蘭 · 儲卑 · 胡都須部 등 58부, 20만 명, 정예병사 8천 명이 운중 · 오원 · 朔方 · 北地郡에 와 항부	2951쪽
永元 元年(89)	竇憲 북흉노를 크게 격파	2953쪽
영원 2년(90)	한 · 남흉노 연합군 북선우를 크게 격파하고 옥새와 포로 수천을 획득	2953~2954쪽
영원 3년(91)	右校尉 耿夔 북선우를 격파	2954쪽

는 어지간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 특히 남흉노를 천사한 지역이 운중·오원·삭방·복지·代襄·鴈門·상곡·代 등 8군이었기에, 변경지역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상태였다.<sup>107)</sup> 자연히 흉노와의 관계에 대해 엄격한 분리론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한 초를 살았던 대표적인 분리론자 班固의 의견을 들어보자.

(전략) ① 孝惠帝와 高后時期에는 약속을 존중하고 어기지 않았으나 흉노의 도적질은 줄어들거나 그치지 않았으며, 선우는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더하였다. (孝文帝 때에 이르러서) …… 흉노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 변경은 누차 피해를 입었다. …… ② 孝武帝時期에는 비록 정벌하여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하였으나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이 역시 대략 흉노에 맞먹었다. …… ③ (孝宣皇帝의 치세에 이르러) …… 선우는 머리를 숙이고 臣服하여 자식을 보내 입시케 하고 세 선우에 걸쳐 藩國을 자칭하며 한의 조정에 賓貢하였다. 이 당시 邊城은 해가 저물어야 문을 닫고, 소와 말이 들판을 덮었다. 三代에 걸쳐 개 짓는 경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전쟁에 동원되는 일이 없었다. …… ④ 王莽은 마침내 선우가 보낸 侍子를 참수하니, 변경에서 禍亂이 일어났다. …… 선우 咸 때에 이르러 인질로 보낸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이익에 눈이 멀어 침략하여 획득한 물자가 해마다 鉅萬을 헤아렸다. 그러나 화친으로 지급하는 물자는 천금을 넘지 못하였으니 어찌 인질을 버리지 않고 큰 이익을 버리겠는가?<sup>108)</sup>

107) 『後漢書』 「南匈奴傳」에는 “及悉復緣邊八郡”이라고 하여 8군이 모두 회복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기사에서 “南單于既居西河，亦列置諸部王，助爲扞戍，使韓氏骨都侯屯北地，右賢王屯朔方，當於骨都侯屯五原，呼衍骨都侯屯雲中，郎氏骨都侯屯定襄，左南將軍屯鴈門，栗籍骨都侯屯代郡，皆領部衆爲郡縣偵羅耳目”이라고 하여 內遷한 남흉노가 8군에서 거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翰奎는 이 사건을 匈奴의 ‘舉國入居’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後漢이 緣邊 8군을 사실상 영구히 상실했다고 보았다. 金翰奎, 1982a, 앞의 책, 227·316쪽.

108) 『漢書』 卷94下, 「匈奴傳」, “孝惠·高后時邊而不違, 匈奴寇盜不爲衰止, 而單于反以加驕倨, (逮至孝文) …… 而匈奴數背約束, 邊境屢被其害 …… 當孝武時, 雖征伐克獲, 而土馬物故亦略相當 …… (至孝宣之世) …… 然後單于稽首臣服, 遣子入侍, 三世稱藩, 賓於漢庭, 是時邊城晏閉, 牛馬布野, 三世無犬吠之警, 芻蕘亡干戈之役 …… 莽遂斬其侍子, 邊境之禍構矣 …… 至單于咸棄其愛子, 味利不顧,

반고는 한 초부터 왕망시기까지 각 시대별로 행해진 흉노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그중 오직 선제시기만이 변경을 편안히 하고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오직 선제시기만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선제시기 성공의 이유를 당시 흉노가 한에게 ‘賓貢’했던 것, 즉 당시 한과 흉노가 主客關係에 있었던 것에서 찾는다. 앞서 일축왕비의 신속을 허가할 것을 주장했던 경국도 신속 허가의 역사적 근거로 孝宣故事를 이야기했지만, 반고는 효선고사의 내용을 ‘빈공’이라고 하여 그 성격이 한과 흉노가 군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한과 흉노의 가장 좋은 관계는 인적국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이적을 중국과 철저히 구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적은 탐욕스럽고 이익을 좋아하여 머리를 풀어 헤치고 左衽하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는 복식이 다르고 습속이 다르다. 음식이 같지 않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 …… 이러한 까닭에 聖王은 이적을 禽獸와 같이 길렀을 뿐 함께 和約을 서약하지도 않았으며, 가서 정벌하지도 않았다. 약속한 즉 재물을 쓰기도 배신당할 수 있으며, 공격한 즉 군대를 피로하게 하여 노략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땅은 경작해서 먹을 수 있지 않으며 그 백성은 신하삼아 기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밖에 두고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며,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 않는다. 政教는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正朔은 그 국가에 더하지 않는다.<sup>109)</sup>

반고는 흉노를 사람의 얼굴을 가진 금수로 표현하고, 그 결과 역대 성왕 모두가 그들과 約도 맺지 않고 정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떠한 상태로도 흉노와 관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고의 ‘夷狄禽獸論’에 대

侵掠所獲, 歲鉅萬計, 而和親賂遺, 不過千金, 安在其不棄質而失重利也?”

109) 『漢書』卷94下, 「匈奴傳」, “夷狄之人貪而好利, 被髮左衽, 人面獸心. 其與中國殊章服, 異習俗, 飲食不同, 言語不通……是故聖王禽獸畜之, 不與約誓, 不就攻伐; 約之則費賂而見欺, 攻之則勞師而詔寇. 其地不可耕而食也, 其民不可臣而畜也, 是以外而不內, 疏而不戚, 政教不及其人, 正朔不加其國.”

하여 화이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公羊傳』의 夷狄觀이 이적을 금수로 보는 『左傳』의 이적관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다.<sup>110)</sup> 당시 각 學派들의 융합 추세와<sup>111)</sup> ‘九流百家之言’ 중 窮究하지 않는 것이 없다던<sup>112)</sup> 반고의 학문적 성향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이다. 또한 반고가 한 왕조를 철저한 이상화된 禮敎的 문화사회로 규정하여 특히 이적을 멸시하였던 것도 이러한 이적관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sup>113)</sup>

그런데 흉노와 羈縻의 방법으로 관계하고자 한 의견은 비단 반고만의 것은 아닌 듯하다. 白虎觀會議에서 『孝經鉤命決』을 근거로 하여 이적이 王者不臣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sup>114)</sup> 당시 분리주의에 입각한 후한의 사대부들의 대이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 후한 사대부들 역시 이적을 중국의 지배 대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順帝時期 武陵太守가 歸附한 武陵蠻에 대해서도 漢人과 동등한 세금을 수취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자 이를 토론하던 虞詡는 “자고로 聖王은 이적을 신하삼지 않으셨으니, 덕을 능히 미칠 수 없어서가 아니며 위엄을 능히 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금수의 마음과 같은 탐욕스러움을 예로써 복종시키기 어려움을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미의 도로써 그들을 어루만지서, 의무해 오면 받아들여 막지 않으셨으며 배반하면 버려두고 쫓지 않으셨습니다.”<sup>115)</sup>라고 하여, 이적을 금수로 인식하며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110) 渡邊義浩, 2008, 앞의 글, 438쪽.

111) 安作璋·劉德增, 1998, 「漢武帝獨尊儒術與齊學」, 『秦漢史論叢 第七輯』, 北京: 社會科學, 258쪽.

112) 『後漢書』 卷40上, 「班固傳」, 1330쪽.

113) 고지마 쓰요시에 따르면 班固에게 漢의 정통성이란 禮義國이라는 데 있었다. 小島毅, 2004, 『東アジアの儒敎と禮』, 東京: 三川, 13쪽.

114) 章帝時期 개최된 白虎觀會議에서 “夷狄은 중국의 絕域에 위치하고 풍속을 달리 하는 이들이며, 中和의 氣로부터 나온 이들이 아니어서 禮義로 능히 敎化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이 확정된다. 『白虎通』, 「王者不臣」, “王者所不臣者三, 何也? 謂二王之後, 妻之父母, 夷狄也……夷狄也, 與中國絕域異俗, 非中和氣所生, 非禮義所能化, 故不臣也.”

115) 『後漢書』 卷86, 「南蠻傳」, “自古聖王不臣異俗, 非德不能及, 威不能加, 知其獸心貪婪, 難率以禮. 是故羈縻而綏撫之, 附則受而不逆, 叛則棄而不追.”

그러나 후한시기 이적을 금수가 아닌 ‘天地의 所生’으로 파악하며, 인도적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함을 주장한 이도 있었다. 후한 桓·靈帝時期를 살았던 張奐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東羌의 殘兵 처리와 관련하여 “용적 역시 天地一氣의 소생이니 그들을 모두 주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헤이 평야를 적시면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져 妖異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며,<sup>116)</sup> 주멸을 주장하는 段熲에 반대하였다. 이렇게 이적을 중국인과 같이 천지의 소생으로 본 또 다른 이로 何休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후한 말 공양학자인 하휴는 그의 저작 『春秋公羊傳解詁』 중 莊公 30년 기사를 이용하여 이적 역시 중화와 같이 천지의 소생임을 주장한다.

齊나라 사람이 山戎을 정벌하였다. 제나라 사람이란 齊侯를 말한다. 왜 사람으로 칭하였는가? 폄하한 것이다. 어찌서 폄하하였는가? 子司馬子馬가 말하였다. “대개 산용을 폄박한 것이 너무 심하였다.” 이것은 대개 전쟁인데, 왜 전쟁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春秋』에서는 상대가 대등할 때 전쟁이라 말하는데, 桓公이 戎狄에 대해서는 그들을 驅逐한 것뿐이다. <이때 환공이 힘으로 그들을 구축했을 뿐이다. 용 역시 천지의 소생인데, 압박하여 주살한 것이 매우 심한 까닭에 전쟁했다 쓰지 않음으로써 그 일을 폄하하니 不仁함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다.><sup>117)</sup>

이렇듯 이적을 금수가 아닌 한인과 같은 천지의 소생으로 파악함으로써 인해 하휴의 『공양전』 주석 안에서는 이적 역시 교화를 통해 중국 천자의 신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夷狄進至於爵’,<sup>118)</sup> 즉 이적도 나아지면<sup>119)</sup> 爵에 이를 수 있다는 ‘華夷可變論’이다. 즉 그는 『공양전』의 ‘華夷轉移論’

116) 『後漢書』卷87, 「西羌傳」, “戎狄一氣所生, 不宜誅盡, 流血汗野, 傷和致妖.”

117) 『公羊傳』, 「莊公 30年」, “齊人伐山戎. 此齊侯也, 其稱人何? 貶. 曷爲貶? 子司馬子曰: “蓋以操之爲已蹙矣.” 此蓋戰也, 何以不言戰? 『春秋』敵者言戰. 桓公之與戎狄, 驅之爾. <時桓公力但可驅逐之而已, 戎亦天地之所生, 而乃迫殺之甚痛, 故去戰貶見其事, 惡不仁也.>” < >안은 何休의 注.

118) 『春秋公羊傳解詁』, 「隱公 元年」.

119) 다나카 마사미에 따르면 何休의 進은 夷狄이 중국의 禮를 닦아 터득하고 중국의 통치자에 복종하며 중국과 통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田中麻紗巳, 1982, 「何休의

을 이용하여 이적 교화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양한시기 今文學派의 주된 주장이 ‘이적불신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휴의 ‘화이전이론’은 공양학의 또 다른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적도 중국에 동화된다면 작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반고가 주장한 ‘이적금수론’에 비한다면 이적을 배려하는 또 다른 화이관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후한 말 하휴에 의해 이러한 화이론이 전개되었던 원인은 무엇일 까? 우선 이것을 하휴의 이상사회론인 ‘三世說’로 설명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하휴는 孔子가 말한 ‘전해들은 시대(所傳聞之世)’, ‘들은 시대(所聞之世)’, ‘직접 본 시대(所見之世)’를 각기 衰亂의 시대, 升平의 시대, 太平의 시대라 이해하였다. 아울러 각 시대의 특징으로 그 國을 안으로 하고 諸夏를 밖으로 하는 것, 제하를 안으로 하고 이적을 밖으로 하는 것, 이적도 나아지면 작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들었다.<sup>120)</sup> 즉, 대평의 시대에는 이적도 교화되어 華夏와 같이 되어 양자의 구별이 소멸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치야마 도시히코[內山俊彦]는 하휴는 쇠란의 시대를 공자 이후 春秋末 戰國, 그리고 秦代로 보았고, 대평의 시대를 한왕조 시대로 보았다고 하였다.<sup>121)</sup> 그렇다면 하휴는 이적도 교화에 의해 작에 이를 수 있는 대평의 시대인 한왕조가 이적을 금수로 취급하는 것을 논리의 정합성상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하휴가 『춘추공양전해고』를 찬술한 것은 후한 말 정치혼란에 따른 사회적 동요를 안정시키고, 좌전학의 약진으로 날로 쇠퇴의 길을 걷는 공양학을 부흥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저술 속

夷狄觀について-「進」を中心として, 『日本中國學會報』 34, 74쪽.

120) 『春秋公羊傳解詁』, 「隱公 元年」, “於所傳聞之世, 見治起於衰亂之中, 用心尙寬狃, 故內其國而外諸夏, 先詳內而後治外, 錄大略小, 內小惡書外小惡不書, 大國有大夫, 小國略稱人, 內離會書, 外離會不書是也. 於所聞之世, 見治升平, 內諸夏而外夷狄, 書外離會, 小國有大夫, 宣十一年秋“晉侯會狄於攢函”, 襄二十三年“邾婁剽我來奔”是也. 至所見之世, 著治太平, 夷狄進至於爵, 天下遠近小大若一, 用心尤深而詳, 故崇仁義, 譏二名, 晉魏曼多·仲孫何忌是也.”

121) 內山俊彦, 2001, 「何休の考えた歴史」, 『中國思想史研究』 24, 10쪽; 이연승, 2008, 「漢代 公羊學의 “西狩獲麟” 이해에 대한 연구-董仲舒와 何休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23, 273쪽.

에서 공양학의 이상사회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대일통사상에 입각한 삼세설이다. 따라서 그는 이적을 한인과 동일한 천지의 소생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sup>122)</sup>

한편 하후가 가진 학문적 경향과 학문적 논리성 이외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후가 생존했던 시대의 상황이다.<sup>123)</sup> 이를 위해 순제시기 무릉만에게 한인과 동등한 세금을 수취하고자 했던 문제를 재검토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순제 永和 元年(136), 무릉태수는 만이가 모두 복속되어 한인과 동일해졌으니 租稅와 賦役을 한인과 같이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때 논의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찬성하나, 오직 尙書丞 우후만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우후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증액한다. 그 결과 세금 증액에 불만을 가진 蠻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당시 후한 위정자들이 오래전에 복속해온 이적에 대해 통합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후한 말이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梁冀 집정시 零陵과 桂陽 두 郡이 산적에게 피해를 입자, 조정 대신들 모

122) 楊向奎는 何休의 三世說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공상적 機械史觀으로 평가하며, 後漢末 정치적 혼란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공상적 역사관을 서술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楊向奎, 1980, 「論何休」, 『釋史齋學術文集』, 上海: 上海人民, 166~170쪽.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夷狄進至於爵'은 논리의 정합성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이적이 중국과 동일하게 되는 '夷狄進至於爵'의 상태야말로 漢代를 太平의 시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는 하후의 삼세설을 역사진화론으로 인식하고 있다. 浦衛忠, 1995, 앞의 책; 陳其泰, 1996, 「何休公羊學說的體系及其學術特色」, 『中國文化月刊』 196; 黃朴民, 1999, 「何休歷史哲學理論探析」, 『求是學刊』 1999-1; 劉家和·李景明, 2005, 「論何休《公羊解詁》的歷史哲學」, 『江梅學刊』 2005-3; 吳從祥, 2008, 「何休“三世說”淺論」, 『紹興文理學院學報』 28-2.

123) 黃朴民은 何休의 '夷狄進至於爵'을 민족문제에 대한 公羊學派의 이성인식과 자신이 살았던 後漢 후기 사회현실이 결합된 大一統 사상에 근거한 민족관이라 평가하며, 이적이 중국 내지로 이주하여 漢化되어 민족대융합이 실현된 현실의 상황이 하후의 大一統思想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 黃朴民, 1998, 『何休評傳』, 南京: 南京大學, 140쪽. 樊文禮와 史秀蓮 역시 많은 夷狄들이 한으로 內遷한 후 한으로부터 冊封을 받았던 현실이 하후가 '夷狄進至於爵'을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였다. 樊文禮·史秀蓮, 2007, 「漢代儒家的民族觀—以賈誼·董仲舒·何休爲中心」, 『煙臺大學學報』 20-4, 82쪽.

두가 그들을 토벌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 尙書에 배수되어 있던 陳蕃만은 토벌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로 영릉과 계양 두 군의 백성 역시 황제의 赤子임을 들었다.<sup>124)</sup> 본디 영릉군과 계양군은 모두 越族의 원거주에 설치된 군들로 이적이 거주하는 변군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sup>125)</sup> 전통적인 한의 사대부들의 관념에 따르면 이 지역은 황제에 의해 직접 다스려지는 공간은 아니며, 그 백성 역시 황제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sup>126)</sup> 그러나 흥미롭게도 진번은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이적을 황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적의 중국 내지로의 이주 또는 이적과 한인의 잡거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귀화한 이적에 대한 후한 사대부의 태도 역시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靈帝時期 다음의 사례는 더욱 주목된다. 영제 中平 2년(185), 漢陽의 邊章과 韓遂가 羌胡와 더불어 난을 일으켜 三輔를 침입하자 車騎將軍 皇甫嵩은 오환 병사 3천의 징발을 조정에 요청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는 데, 당시 北軍中候였던 鄒靖은 병력이 약한 오환 대신 선비를 징발할 것을 주장하고, 大將軍掾 韓卓도 선비의 징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應劭는 선비가 공간적으로 멀리 격절된 漠北에 존재하고, 생활 문화적으로는 개·양과 더불어 살며 군장의 통솔도 받지 않고 일정한 거주마저 없는 미개한 존재이며, 본

124) 『後漢書』 卷66, 「陳蕃傳」, “時零陵·桂陽山賊爲害, 公卿議遣討之, 又詔下州郡, 一切皆得舉孝廉·茂才. 蕃上疏駁之曰: 「昔高祖創業, 萬邦息肩, 撫養百姓, 同之赤子. 今二郡之民, 亦陛下赤子也. 致令赤子爲害, 豈非所在貪虐, 使其然乎?»

125) 零陵郡은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南越과 閩越를 멸망시킨 武帝 元鼎 6년에 설치된 邊郡이었음이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桂陽郡의 경우에는 그저 劉邦時期에 설치되었다고만 적기되어 그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지역은 본래 秦代 설치된 長沙郡이 長沙國과 계양군으로 나누어지며 설치된 것이라 진대 이후 설치된 변군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王莽時 계양군에 속한 縣名을 살펴보면 宣風, 大武, 便屏, 南平亭, 除虜, 基武 등으로, 이들 지역이 夷狄의 땅에 설치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126) 漢代는 內郡과 外郡의 구별이 존재하였는데, 韋昭는 그 이유를 “中國爲內郡, 緣邊有夷狄障塞者爲外郡(『漢書』 卷8, 「宣帝紀」)”이라고 하여 邊郡이 중국의 내지와는 달리 이적의 거주지였음을 밝혔다.

성적으로는 탐욕스럽고 殘暴하여 신의에 구애받지 않는 고로 징발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대신 隴西의 羌胡 중 正道를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자를 모집하여 그중 날래고 용감한 자를 선발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27)</sup>

이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의 징발과 관련하여 의론자의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모두 이적을 선발하여 한의 군대로 조직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후한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으로부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sup>128)</sup> 이적을 한의 군대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적은 신하삼을 수 없다던 것에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129)</sup> 그리고 당시 선비 대신 강족을 징발하자는 응소의 주장은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석의 단서를 준다.

전한시기 오환의 북쪽 시라무렌 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던 선비가 중국사에 등장하는 것은 후한 초였다. 후한 초, 흉노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후한 정부가 건무 25년(49), 오환을 전한의 영역 내로 이동시킴으로써 선비는 요동의 장성 부근까지 남하할 수 있었고, 和帝 永元 연간 북흉노의 땅으로 이주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후한과 교통하게 된다. 이후 檀石槐이 군장이 되는 2세기 중엽 전성기를 맞이한 선비는 흉노의 故地를 획득한 후, 桓帝 永壽 2년(156) 이후 후한을 침입하는 것이 자심해졌고, 영제시기가 되면 “幽·并·涼 세 州 변경의 모든 군들은 선비의 침략을 받지 않는 해가 없었으며 살육과 약탈은 셀

127) 『後漢書』卷48, 「應劭傳」, “中平二年, 漢陽賊邊章·韓遂與羌胡爲寇, 東侵三輔, 時遣車騎將軍皇甫嵩西討之. 嵩請發烏桓三千人. 北軍中候鄒靖上言: 「烏桓衆弱, 宜開募鮮卑.」事下四府, 大將軍掾韓卓議, 以爲「……若令靖募鮮卑輕騎五千, 必有破敵之效.」劭駁之曰: 「鮮卑隔在漠北, 犬羊爲羣, 無君長之帥, 廬落之居, 而天性貪暴, 不拘信義……臣愚以爲可募隴西羌胡守善不叛者, 簡其精勇, 多其牢賞……」韓卓復與劭相難反覆. 於是詔百官大會朝堂, 皆從劭議.”

128) 渡邊義浩, 2008, 앞의 글, 441쪽.

129) 漢初에 제정된 蠻夷律에 따르면 蠻夷 성인 남자는 1년에 일정한 寶錢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徭賦를 감당하는 것으로 하여, 屯戍의 의무를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張家山漢墓竹簡』, 「奏讞書」. “蠻夷大男子歲出五十六錢以當徭賦, 不當爲屯.” 이후 사료에도 만이에 대해 일정한 중전을 물리는 것은 확인되나 그들을 군대로 징발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夷狄을 한의 군사로 조직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으로 여겨진다.

수 없을 정도”였다.<sup>130)</sup>

이와는 달리 강족은 갑골문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는 종족이었다. 그들은 이미 전한시기부터 甘肅 동남부로부터 지금의 四川 북부에 걸친 지역에서<sup>131)</sup> 유목을 주로 하며 부족적으로 농경에도 종사하였다. 전한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기도 하였지만<sup>132)</sup> 군사적으로 이용하여, 강족은 다른 종족과는 달리 일찍부터 중국의 중앙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전한의 대강족 정책은 근본적으로 ‘隔絕羌胡’에 따른 무력 진압과 중국으로부터 분리였다고 할 수 있다.<sup>133)</sup> 이러한 대강족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후한이 건립된 이후였다. 광무제 건무 11년(35) 隴西의 隗囂와 蜀의 公孫述이 타도되면서, 그들 휘하에 있던 강족은 농서·천수·부평 방면으로 이주된다. 이후 후한 정부는 투항한 강족을 關中과 북지·上郡·西河 등에 나누어 거주시킴으로써,<sup>134)</sup> 강족은 화북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며 농경화되었다.<sup>135)</sup>

130) 이상의 내용은 『後漢書』 卷90, 「鮮卑傳」, 2985~2990쪽의 내용을 참조.

131) 『後漢書』 「西羌傳」에 따르면 남으로는 蜀에 인접해 있었으며, 서북으로는 鄯善·車師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後漢書』 卷87, 「西羌傳」, 2869쪽.

132) 前漢의 對羌族 정책은 ‘隔絕羌胡’로 표현되듯 匈奴와 강족의 결탁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정벌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元鼎 4년 先零羌이 封養牢姐種과 仇怨을 풀고 동맹을 맺어 흉노와 통교한 후 이들과 함께 舍居縣과 安故縣을 공격한 것에 대해 武帝는 장군 李息 등으로 하여 10만 군사를 이끌고 강족을 정벌하게 한 것이다. 이 정벌 이후 한정부는 護羌校尉를 설치하여 강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後漢書』 卷87, 「西羌傳」, 2876~2877쪽.

133) 李正周, 2006, 「兩漢時期治羌政策」, 『煙臺大學學報』 19-2, 210~211쪽. 실제로 宣帝時期 先零羌이 湟水를 건너 한의 경내에서 목축할 것을 요청하니 趙充國은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결국 선제는 후에 義渠安國을 파견하여 그 종족을 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漢書』 卷69, 「趙充國傳」, 2972~2973쪽을 참조.

134) 王力과 王希隆의 분석에 따르면 後漢 200년 동안 羌族이 內遷된 지역은 關中, 北地, 上郡, 西河를 비롯하여 金城, 漢陽, 安定, 河東, 河內, 河南, 張掖, 武都, 漢中, 酒泉, 武威 등 매우 광범위하다. 王力·王希隆, 2007, 「東漢時期羌族內遷探析」, 『中國邊疆史地研究』 17-3, 49쪽.

135) 三崎良長, 2002, 『五胡十六國-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京: 東方書店, 12쪽;

간략하게 살펴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선비에 비해 강족은 중앙 정부와의 밀착도라든지, 농경화 정도에서 더 많이 중국으로 동화 혹은 교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응소로 하여금 선비가 아닌 강족을 징발대상으로 삼아 한의 군대로 편제하자고 주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과 이적의 지속적인 교통이 이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이적을 징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응소는 그중에서도 더 많이 중국화된 강족의 징발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하휴에게도 영향을 주어 ‘夷狄進至於爵’을 주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휴가 『춘추공양전해고』의 昭公 元年 조에서 이적의 땅을 貢賦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sup>136)</sup>

하지만 하휴가 전적으로 화이의 구별이 소멸되는 것을 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역시도 공양학의 다른 학자들처럼 “왕자는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王者不治夷狄’<sup>137)</sup>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공양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이지 공양학을 종합한 하휴로서는 공양학의 분리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공양학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하휴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양학의 이상사회론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하휴는 遠近大小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이상으로 삼아<sup>138)</sup> 이적이 작을 받는 세계를 꿈꾸었을 것이다.<sup>139)</sup> 그러나 그 역시도 안과 밖, 그리고 중국과 이적이 분리되어 있던 공양학의 세계에 살고 있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 같지는 않다.

王力·王希隆, 2007, 앞의 글, 56~58쪽.

136) 『公羊傳』, 「昭公 元年」, “晉荀吳帥師敗狄于大原。此大鹵也, 曷爲謂之大原? 他物從中國, 邑人名從主人, 原者何? 上平曰原, 下平曰隰。〈分別之者, 地勢各有所生, 原宜粟, 隰宜麥, 當教民所宜, 因以制貢賦。〉” < >안은 何休의 注.

137) 『春秋公羊傳解詁』, 「隱公 2年」.

138) 『春秋公羊傳解詁』, 「隱公 元年」, “天下遠近小大若一.”

139) 이와 관련하여 오구라 요시히코[小倉芳彦]는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後漢의 혼란을 경험한 何休가 한 왕조를 위한 절대화 작업 속에서 관념색 농후한 한 왕조의 德化圖式을 전개한 것이라고 보았다. 小倉芳彦, 1970, 앞의 책, 334쪽.

## VI. 맺음말

이 글은 華夷觀이 漢代 사대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었는가를 밝히고, 시기적으로 전개된 화이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준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검토되었다.

첫 번째로는 前漢 文帝時期 賈誼의 화이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황제 개념이 실현될 수 없었던 한 초, 한과 匈奴는 ‘二國’ 혹은 ‘兩國’으로 대등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가의는 시대적 통념과는 다르게 흉노에 대한 專官 설치와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이한 화이관의 출현은 文學之士들의 정계 진출에 유리한 지형을 창출한 황제권 강화의 필요로부터, 혹은 四夷는 형벌로써 위협해야 한다는 左傳學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의 역시도 중국이 夷狄를 압도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이적을 애호하고 신의를 지킨다면 이적 스스로가 복속해 올 것이라는 ‘三表’를 주장한다. 이것은 중국이 이적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세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이적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적에게 압도당하는 현실을 왜곡하고자 했던 논리로, 戰國時期 이적에 의해 중국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화이관이 만들어졌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음으로는 가의에 의해 주장되었던 王化思想이 武帝時期 이후 어떻게 견고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특히 왕화사상이 어떻게 황제권을 제약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알려진 것처럼 鹽鐵會議 속에서 大夫가 武帝의 匈奴 정벌을 위대한 세계제국 수립을 위한 聖戰으로 이해한 것과는 달리 文學들은 흉노 정벌을 중국을 피로하게 하였던 사치스러움의 극치로 이해하였다. 이때 문학들의 주장의 기저를 이룬 것은 철저한 화이분리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가의와 마찬가지로 왕화사상을 주장하였는데, 이 시기 왕화사상은 현실 왜곡논리가 아닌 팽창하는 황제권 제어의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결코 어울릴 수 없었던, 중국과 이적을 분리하는 화이관과 이적이 중국 황제의 德에 의해 지배된다는 왕화사상의 결합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무제시기를 전범의 시기로 삼고자 하는 宣帝가 즉위하며 화이관계에 대한 논의가 재등장하게 된다. 선제시기에는 개인 간의 의리와 복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公羊傳』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팽창주의적 요소가 농후한 『穀梁傳』이 선양되면서, 사회적으로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시기 蕭望之는 緯書를 이용하여 선제에게 “王者는 이적을 신하삼지 않는다”는 이른바 ‘夷狄不臣論’을 주장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한 황제권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 소망지는 한과 흉노가 군신관계를 맺었다가 흉노가 藩屬國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양국 간의 군신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황제의 세계제국을 부정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팽창하는 황제권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소망지가 주장한 ‘이적불신’의 원칙은 대외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白虎觀會議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적 원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後漢 초를 살던 班固에게서 철저한 화이분리가 주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좌전학의 영향을 받은 반고는 이적을 금수로 취급하며, 이적을 귀화조차 반대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분리론은 흉노와의 전투에 중군했고, 문화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이적 멸시의 경향이 특히 강했던 반고 개인의 성향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시 和親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던 북흉노의 도발과 雲中郡을 비롯한 8군에 남흉노가 內遷함으로써 발생했던 변경지역의 위기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와는 달리 후한 말 何休는 ‘夷狄進至於爵論’을 이용하여 이적 교화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는 이적도 중국에 동화된다면 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적을 배려하는 또 다른 화이관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화이관은 한 왕조를 太平의 시대로 보고 있던 하휴 학문의 논리적 정합성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전한 이래 중국과 이적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적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게 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휴 역시도 화이분리라는 공양학의 근간을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의가 화이분리에 입각한 왕화사상을 주장한 이후 양한 사

대부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화이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양학에 근거한 화이관은 화이분리를 근간으로 하여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양학을 선양한 한대 사대부들의 학문적 전통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으나 그것이 팽창하는 황제권에 대한 염려를 담보하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sup>140)</sup> 더불어 완전한 화이혼일이 극단적인 관념적 도식 안에서만 가능했었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일 것이다.

140) 결국 이 문제는 漢代 사대부들의 公羊學 宣揚이라는 문제와 연관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면상 이 문제는 別稿에 의해 다루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공양학이 大夫의 우수한 능력, 대부의 君主에 대한 강한 諫言, 혹은 군주의 專斷的인 권력행사를 견제하는 사대부의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洪承賢, 2003, 「奢侈論을 통해 본 前漢 사대부의 移風易俗」, 『中國史研究』 24, 74쪽.

## 참고문헌

- 『經典釋文』, 1985, 臺北: 崧高書社.
- 『穀梁傳』, 1999, 北京: 北京大學.
- 『公羊傳』, 1999, 北京: 北京大學.
- 『讀通鑑論』, 1998, 北京: 中華書局.
- 『白虎通』, 1994, 北京: 中華書局.
- 『史記』, 1998, 北京: 中華書局.
- 『荀子』, 1988, 北京: 中華書局.
- 『詩經』, 1999, 北京: 北京大學.
- 『新書』, 1996, 北京: 人民大學.
- 『鹽鐵論』, 1996, 北京: 中華書局.
- 『張家山漢墓竹簡』, 2006, 北京: 文物.
- 『左傳』, 1998, 上海: 上海古籍.
- 『春秋公羊傳解詁』, 1999, 北京: 北京大學.
- 『春秋繁露』, 1994, 濟南: 山東友誼.
- 『通典』, 1996, 北京: 中華書局.
- 『漢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後漢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戴君仁, 1957, 「論賈誼的學術並及其前後的學者」, 『大陸雜誌』 36-4.
- 馬曉麗, 2006, 「賈誼的民族關係思想」, 『煙臺大學學報』 19-2.
- 樊文禮·史秀蓮, 2007, 「漢代儒家的民族觀－以賈誼·董仲舒·何休爲中心」, 『煙臺大學學報』 20-4.
- 徐復觀, 1976, 「賈誼思想的再發現」, 『兩漢思想史 二』, 臺北: 學生書局.
- 安作璋·劉德增, 1998, 「漢武帝獨尊儒術與齊學」, 『秦漢史論叢 第七輯』, 北京: 社會科學.
- 楊向奎, 1980, 「論何休」, 『釋史齋學術文集』, 上海: 上海人民.
- 吳從祥, 2008, 「何休“三世說”淺論」, 『紹興文理學院學報』 28-2.
- 王力·王希隆, 2007, 「東漢時期羌族內遷探析」, 『中國邊疆史地研究』 17-3.
- 王興國, 1992, 『賈誼評傳』, 南京: 南京大學.

- 廖伯源, 2008, 「論漢廷與匈奴關係之財務問題」, 『中國文化研究所學報』 48.
- 劉家和·李景明, 2005, 「論何休《公羊解詁》的歷史哲學」, 『江梅學刊』 2005-3.
- 李正周, 2006, 「兩漢時期治羌政策」, 『烟臺大學學報』 19-2.
- 陳其泰, 1996, 「何休公羊學說的體系及其學術特色」, 『中國文化月刊』 196.
- 蔡廷吉, 1984, 『賈誼研究』, 臺北: 文史哲.
- 浦衛忠, 1995, 『春秋三傳綜合研究』, 臺北: 文津.
- 黃覺弘, 2006, 「賈誼與〈左傳〉之關係」, 『船山學刊』 59.
- 黃朴民, 1998, 『何休評傳』, 南京: 南京大學.
- 黃朴民, 1999, 「何休歷史哲學理論探析」, 『求是學刊』 1999-1.
- 角谷常子, 1988, 「『鹽鐵論』の史料的性格—桓寬のよった資料を求めて」, 『東洋史研究』 47-2.
- 岡安勇, 1990, 「匈奴呼韓邪單于の對漢「稱臣」年代について」, 『東方學』 80.
- 宮本勝, 1981, 「蕭望之の學問と經術」, 『中國學論文集: 竹內照夫博士古稀記念』, 札幌: 竹內照夫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會.
- 宮川尚志, 1956, 『六朝史研究 政治・社會編』,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 吉本道雅, 2007, 「中國古代における華夷思想の成立」,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
- 那波利貞, 1936, 『中華主義』, 東京: 岩波書店.
- 內山俊彦, 2001, 「何休の考えた歴史」, 『中國思想史研究』 24.
- 渡邊義浩, 2008, 「兩漢における華夷思想の展開」, 『兩漢儒教の新研究』, 東京: 汲古書院.
- 保科季子, 1998, 「前漢後半期における儒家禮制の收容—漢的傳統との對立と皇帝觀の變貌」, 『歴史と方法 方法としての丸山眞男』, 東京: 青木書店.
- 保科季子, 2007, 「漢儒の外交構想—「夷狄不臣」論を中心に」,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
- 西嶋定生, 1970, 「總說」, 『岩波講座 世界歴史 4—東アジア世界の形成 I』, 東京: 岩波書店.
- 小島毅, 2004, 『東アジアの儒教と禮』, 東京: 三川.
- 小倉芳彦, 1970,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東京: 青木書店.
- 野間文史, 2001, 『春秋學 公羊傳と穀梁傳』, 東京: 研文.

- ユハズ和順, 1991, 「『鹽鐵論』に見える對匈奴政策論争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37.
- 日原利國, 1976, 『春秋公羊傳の研究』, 東京: 研文.
- 田中麻紗巳, 1982, 「何休の夷狄觀について-「進」を中心として」, 『日本中國學會報』 34.
- 澤田勳, 1996, 『匈奴-古代遊牧國家の興亡』, 東京: 東方書店.
- 好並隆司, 2001, 「稱臣而不名」再考, 『史學研究』 233.
- 好並隆司, 2002, 「光武帝と匈奴-後漢王朝に臣從した單于」, 『史學研究』 237.
- 김근, 1990,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漢代 經學의 해부』, 민음사.
- 金翰奎, 1982a,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一潮閣.
- 金翰奎, 1982b, 「漢代 中國的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에 대한 一試論」, 『東亞研究』 1.
- 閔斗基, 1966, 「中國의 傳統的 政治像-封建郡縣論議를 통해 본」, 『震檀學報』 29.
- 신정근, 2004,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태학사.
- 신정근, 2005, 「중화주의와 중국철학의 동맹」, 『중국문학』 44.
- 吳錫源, 1996, 「『春秋』의 華夷思想과 한국의 민족의식」, 『유교사상연구』 8.
- 王柯 지음, 김정희 옮김, 2005,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 李成九, 1987, 「戰國時代 官僚論의 展開」, 『東洋史學研究』 25.
- 李成珪, 1992,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 이연승, 2008, 「漢代 公羊學의 ‘西狩獲麟’ 이해에 대한 연구-董仲舒와 何休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23.
- 李春植, 1998, 「중화세계질서 이념의 탄생에 대하여」, 『中國學論叢』 11-1.
- 李春植, 2002, 『中華思想의 理解』, 신서원.
- 이흥중·공봉진, 2000, 「中國 華夷思想에서 ‘華夷’ 개념의 재해석」, 『세계지역연구논총』 15.
- 洪承賢, 2003, 「奢侈論을 통해 본 前漢 사대부의 移風易俗」, 『中國史研究』 24.
- 홍승현, 2006, 「魏晉南北朝時期 中國의 世界 개념 변화와 이민족 정책」, 『북방사논총』 10.
- 洪承賢, 2008, 「고대 중국 華夷觀의 성립과 성격-春秋三傳의 검토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7.

**[ABSTRACT]**

##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inocentrism in Han Dynasty

Hong, Senghyun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Hua-yi, or sinocentrism, was understood and interpreted by the gentry during the Han Period of China and to identify the developments specific to each time period. To find out, the views of the following men on sinocentrism were analyzed: Jiayi under Emperor Wendi of Former Han Dynasty; Wenxue under Emperor Wudi; Xiaowangzhi under Emperor Xuandi; Bangu and Hexiu of the Later Han Dynasty.

Jiayi, who desired to build a new empire, claimed they needed to install the office dedicated to the Xiongnu and to deal with them in an aggressive manner – quite contrary to the widespread sentiment of the time. This sinocentric view was caused by the ne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power of emperors in order to allow intellectuals to the government, or from the Zuozhuanxue tradition with a strong stance toward the barbarians. Jiayi argued for “sanbiao”, the detailed methodology, in order to distort the reality that is under the pressure of barbarians.

Jiayi emphasized the civilizing influence of the kingship and this was inherited by the Wenxue during the time of Emperor Wudi. Wenxue understood Wudi conquering the Xiongnu as the culmination of extravagance that exhausted China. They claimed that the barbarians

will rush to serve China if the Emperors would rule the world with virtue, based on the moderate separation between the Chinese and the barbarians.

With Xuandi was enthroned, he wished to serve Wudi as his role model, thereby re-interpreting the sinocentric view.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Xiaowangzhi asserted that the king never regards the barbarians as his subjects in the apocrypha. It was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the sinocentric view and the check on the strong emperors. He believed that the military campaign against the barbarians that betrayed China will ultimately lead to the abolition of the separation of the Chinese and the barbarians and unitary government of the Emperor on the barbarians. He therefore believed that China and the Xiongnu should not create the relationship of sovereign and subject between them in the first place.

Bangu of Later Han treated the barbarians as beasts, strongly opposed to their naturalization. Such strict separation came from Bangu's personal experience in the war with the Xiongnu and his belief that the Chinese civilization is better than any. Fundamentally, it was caused by the Xiongnu, which requested peace but never ceasing to loot China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Hexiu of Later Han Dynasty said that the barbarians can be enlightened, and that they can receive a rank if they are assimilated in the Chinese civilization. Such view can als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logical coherence of Hexiu, but it was the result of the change of perspective on the barbarians due to the continued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China and the barbarians since the Former Han Dynasty.

keywords

Sinocentrism(華夷觀), Jiayi(賈誼), Wenxue(文學), Xiaowangzhi(蕭望之),  
Bangu(班固), Hexiu(何休), Xiongnu(匈奴), Hua-yi(華夷)



# 五胡王朝의 胡人 지배방식과 그 성격

## - 大單于의 任職과 單于臺의 설치를 중심으로 -

李椿浩 | 中國 滬江師範大學

### I. 머리말

匈奴族의 首長인 單于是 天神과 자신의 部衆을 연결하는 매개물로서,<sup>1)</sup> ‘廣大之貌’를 하고 드넓은 하늘처럼 위대할 뿐만 아니라,<sup>2)</sup> 漢人王朝의 ‘天子’ 혹은 ‘皇帝’에 버금가는 고귀한 존재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선우가 통치했던 흉노족은

※ 투고일: 2010년 6월 30일, 심사일: 2010년 10월 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1) 澤田勳, 1978, 「匈奴君長權의 성격 - 匈奴遊牧社會의 歷史的規定을めぐって」, 『駿台史學』 43, 52쪽.

2) 陸思賢, 1985. 3, 「撐犁孤塗單于詞義反映的‘攣鞬氏’族源」, 『內蒙古大學學報』, 19쪽, ‘撐犁孤塗單于’를 직역하면 ‘天子單于’라 할 것이다. 만약 현대인의 통속화된 언어로 이를 표현한다면, 匈奴族 將相大臣들이 單于를 알현하면 恭遜을 다해 ‘偉大한天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3) 林幹, 1986, 『匈奴通史』, 北京: 人民出版社, 26쪽, 匈奴人들은 單于를 ‘撐犁孤塗單于’라 불렀는데, ‘撐犁’는 ‘天’, 그리고 ‘孤塗’는 ‘子’로 풀이할 수 있으니 ‘撐犁孤塗單于’란 바로 ‘天子’와 같은 권위를 가진 통치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部落酋長과 달리 선우는 그 칭호 안에 至高無上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漢書』卷 94上 匈奴傳, 3751쪽, “單于姓攣鞬氏, 其國稱之曰撐犁孤塗單于”. 匈奴謂天爲撐犁, 謂子爲孤塗, 單于者, 廣大之貌也, 言其象天單于然也.”). 또한 匈奴 冒頓單于가 漢文帝에게 보낸 書簡 중에 “하늘이 세운 匈奴大單于”라든가, 혹은 老上單于가

주지하듯 冒頓·老上單于의 전성기를 지나 東漢 초기에 이르면 單于 계승을 둘러싼 내부의 반목으로 남·북 흉노로 분열되었으며, 이후 북흉노는 西遷하여 中國史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남흉노는 東漢에 귀부하여 일찍이 ‘遊牧帝國’을 건설하여 諸遊牧民族을 통치하에 두었던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점차 漢朝의 塞外에 거주하는 약소한 부락으로 쇠퇴하였다. 동시에 선우 역시 至高無上의 의미를 상실한 채 漢人王朝의 ‘王爵’처럼 漢帝가 塞外 胡人君長에게 수여하는 칭호로 변질되었던 것이다.<sup>4)</sup> 이러한 사정은 魏晉시기에도 큰 변함없이 지속되어 한인왕조는 胡人 有力者에게 이 칭호를 수여하여 이를 통해 이들을 회유하고 北邊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였다.

천하를 통일한 晉朝는 통치계층 내부의 사치·탐욕과 八王의 亂, 永嘉의 亂으로 국력이 크게 쇠하면서 멸망의 길로 내달았다. 그 속에서 秦漢 이래 內遷한 호인들은 하나 둘 자신의 왕조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호인 개국 군주들이 大單于를 자칭하고 있다. 匈奴漢 劉淵은 大單于·漢王을, 後趙 石勒은 趙王·大單于를, 前燕 慕容皝은 燕王·大單于를, 前秦 苻健은 大秦天王·大單于를, 西秦 乞伏國仁은 大都督·大將軍·大單于·河南王을, 南涼 秃髮烏孤는 大都督·大將軍·大單于·西平王을, 그리고 大夏 赫連勃勃은 大夏天王·大單于를 자칭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 개국 군주는 왕조의 건국과 함께 대선우를 자칭함으로써 本族 외에 다른 호인들의 최고통치자임을 對內外에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왕조의 통치가 안정을 찾아가고 그 기반이 공고화되어가면서, 儲君을 포함한 親信의 자제를 대선우에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호인들의 통치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sup>5)</sup> 이는 현실적으로 五胡王朝

보낸 서간 중에 “天地가 만들어질 때 日月에 의해 세워진 匈奴大單于”라고 표현한 것은 선우의 지위가 한인왕조의 황제·천자에 비견됨을 나타내고 있다(『漢書』 卷94 上 匈奴傳, 3756~3760쪽, “天所立匈奴大單于……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

4) 『晉書』 卷97 北狄匈奴傳, 2548쪽, “呼韓邪感漢恩, 來朝, 漢因留之, 賜其邸舍, 猶因本號, 聽稱單于, 歲給絳絹錢穀, 有如列侯. 子弟傳襲, 歷代不絕.”

5) 大單于가 오호왕조의 胡人들을 전적으로 관리·통치(엄밀한 의미에서는 京畿에 거주하는 胡人들을 대상으로 한다)함으로써 ‘鎮撫百蠻’·‘撫納羣胡’·‘統壹百蠻’·‘統

내에 本族 외에 적지 않은 호인들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우는 근본적으로 호인들이 일찍이 固有했던 ‘自由의 標徵’을 상실한 채 皇帝에 의해 非漢人을 통치하기 위해 임명된 관리로 변화였고 동시에 그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통치기구로서 單于臺를 두게 된 것이다.<sup>6)</sup>

일찍이 오호왕조에 대한 연구는 民族融合 혹은 胡漢分治 등 각 왕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각개 왕조가 고유하는 특징과 대표적 인물 등의 문제에 전적으로 매달려 진행된 듯한 느낌이 있다.<sup>7)</sup>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유관연구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대선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주장과 견해가 제출되었다. 즉 대선우의 존재 및 그 역할 중 대선우에는 일반적으로 帝位 계승자인 儲君이 임명된다고 한 주장이나,<sup>8)</sup> 혹은 오호왕조의 軍權은 대선우와 관계가 있는데, 이 시기 무력의 근간이 非漢人集團, 즉 六夷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諸部雜夷·‘鎮撫六夷’ 등의 표현이 史書에서 자주 출현하고 있다. 林幹은 “五胡時期에 이르면 匈奴漢에서 보듯 單于 혹은 大單于는 일찍이 匈奴 최고수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그 지위가 이미 大司徒 등과 같은 中央官 혹은 封疆大吏相 등으로 추락했다”고 하였다. 林幹, 1986, 앞의 책, 197쪽.

- 6) 谷川道雄, 1971, 「南匈奴의 自立およびその國家」,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築摩書房, 51쪽.
- 7) 박한제, 1988, a, 「五胡前期政權과 漢人士族」, b, 「苻堅政權의 性格」,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12~50, 51~69쪽; 지배선, 1998, 「永興元年 이후의 前趙」, 『中國學報』 38; 지배선, 2008, 「前秦 苻堅에 대하여-358년까지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44; 김영환, 2005, 「五胡十六國時期 後趙 통치자 石虎의 文化變容 연구」, 『中國學報』 51; 邱久榮, 1987, 3, 「十六國時期的胡漢分治」, 『中央民族學院學報』; 周偉洲, 1987, 「論十六國時期的‘胡漢分治’」, 『西北歷史研究』, 西安: 三秦出版社, 87~108쪽; 王延武, 1988, 2, 「後趙政權胡漢分治政策再認識」, 『中國史研究』; 周偉洲, 1992, 『中國中世西北民族關係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45~133쪽; 黃惠賢, 1997, 『中國政治制度通史』 第4卷 『魏晉南北朝』, 北京: 人民出版社, 72~80쪽; 韓狄, 2001, 5, 「十六國時期的‘單于’制度」, 『內蒙古大學學報』; 李紅艷, 2008, 1, 「關於十六國‘胡漢分治’問題的思考」, 『山東教育學院學報』; 谷川道雄, 1971, a, 「南匈奴의 自立およびその國家」, b,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隋唐帝國形成史論』, 30~67, 68~99쪽.
- 8) 內田吟風, 1975, 「五胡亂及び北魏時代の匈奴」, 『北アジア史研究-匈奴篇』, 京都: 同朋舍, 325쪽; 周偉洲, 1986, 『漢趙國史』,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87쪽.

무력을 장악하는 의미가 있다는 견해,<sup>9)</sup> 그리고 대선우는 오호왕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지역적 구분 없이 호인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長官이라고 한 것,<sup>10)</sup> 게다가 單于臺는 정치·행정적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성격을 갖춘 조직이라고 한 견해<sup>11)</sup>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 주장은 본 연구의 진행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대선우와 선우대의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성과와 대선우·선우대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제2절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출된 대선우의 任職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史書 상 기재의 차이와 누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선우대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할 것인데, 특히 사서에 대선우의 임직은 보이나 선우대의 설치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그 기능을 다른 기구가 대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선우대 조직과 그 통치가 미쳤던 지역적 범위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당시 오호왕조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조직에도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선우는 오호왕조 경내 모든 호인들을 그 통치 대상으로 하지 않고 京畿지역의 호인들에 국한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의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때, 오호왕조의 호인들에 대한 지배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본래의 연구목적 외에 더 나아가 胡漢分治의 실질적인 모습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9)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59쪽.

10) 周一良, 1997, 「乞活考」, 『魏晉南北朝史論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7쪽.

11) 周偉洲, 1987, 앞의 글, 103쪽.

## II. 大單于의 任職과 有關問題

이 글에서는 오호왕조의 군주가 自稱한 大單于나 혹은 어느 왕조, 세력집단이 다른 세력집단의 酋帥를 대선우로 책봉했었을 때의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왕조의 통치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胡人들을 전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官職으로서의 대선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sup>12)</sup> 拙見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에서 대선우의 임직과 그 유관문제 중 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리고 사서 상 기재의 차이와 누락으로 대선우의 임직문제에 적지 않은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우선 五胡시기 대선우의 임직과 그 인물의 출신·검직한 관직 등을 왕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五胡王朝 大單于의 任職과 人物表

왕조	군주	시간	인물	작위	검직한 관직	출신	출전, 쪽면
匈奴 漢· 前趙	劉淵	310	劉聰	楚王	大司馬· 錄尚書事	劉淵 第四子	『晉書』 2652
	劉聰	310	劉乂	皇太弟	大司徒	劉聰 異母弟	『晉書』 2658
		317. 7	劉粲	皇太子	相國	劉聰 長子	『資治通鑑』 2847
	劉曜	325. 6	劉胤	南陽王	大司馬	劉曜 子	『晉書』 2698

12) 有關史書의 기재를 통해 西晉·東晉은 수차례에 걸쳐 慕容鮮卑의 慕容廆·慕容皝·慕容儁을 大單于에 책봉하였고, 그리고 羌族 姚弋仲도 대선우에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前秦 苻登은 乞伏鮮卑의 乞伏國仁·乞伏乾歸를 大單于에 책봉하였으며, 乞伏乾歸는 後秦 姚興에 의해서 대선우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西晉 말 북중국에서 비교적 강력한 세력을 융유한 王浚은 慕容廆를 大單于에 책봉하기도 했는데, 모용외는 이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의미의 大單于와 오호왕조의 군주가 자칭한 그것을 모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後趙	石勒	330. 2	石宏	秦王	散騎常侍·都督 中外諸軍事·驃 騎大將軍	石勒 子	『晉書』 2746
			石弘	太子		石勒 第二子	
	石弘	333. 8	石虎	魏王	丞相	石勒 從子 <sup>13)</sup>	『晉書』 2754
	石虎	339. 7	石宣	太子		石虎 子	『資治通鑑』 3031
冉魏	冉閔	350. 11	冉胤	太原王	驃騎大將軍	冉閔 子	『晉書』 2794
前秦	苻健	352. 1	苻萇	天王皇 太子		苻健 子	『晉書』 2870
後燕	慕容垂	388. 4	慕容 寶	太子	錄尚書事 <sup>14)</sup>	慕容垂 第四子	『資治通鑑』 3383
北燕	馮跋	411. 7	馮永	太子		馮跋 子	『晉書』 3130

표 1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후자는 일반적으로 帝位를 계승할 儲君이 대신우에 임명되었다고 했

13) 石虎와 石勒의 관계에서 석호가 석륵의 從子라고 하는 설과 석륵의 父 朱幼가 일찍이 석호를 養子로 삼았으므로 그를 석륵의 동생이라고 보는 설이 兩立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 근거한 때문이다. “石虎, 字季龍, 勒之從子, 勒父朱幼而子之, 故或謂之爲勒弟.”(『太平御覽』 卷120 偏霸部4; 引崔鴻, 1998, 『十六國春秋後趙錄』,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580-上쪽). 이 글에서는 前者의 설을 채용하고 있다.

14) 大單于 慕容寶가 겸직한 관직에 대하여 『資治通鑑』과 『晉書』의 기사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388年] 燕主[慕容]垂以太子[慕容]寶錄尚書事, 授之以政……以太子寶領大單于”(『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三年(388)條, 3382~3383쪽)로 기재하였으나, 후자는 “[慕容]寶領侍中·大單于·驃騎大將軍·幽州牧”(『晉書』 卷123 慕容垂載記, 3087쪽)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慕容垂는 385년 11월에慕容農을 使持節·都督幽平二州北狄諸軍事·幽州牧에 임명하고 龍城에 진수토록 하였는데, 388년에 이르러서도 모용농은 여전히 幽州牧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四年(389)條, 3386쪽, “遼西王[慕容]農在龍城五年, 庶務脩舉.”). 그렇다면慕容寶가 겸직한 관직은 『資治通鑑』의 기사대로 錄尚書事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sup>15)</sup>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胡三省의 “太子가 대선우를 겸임한 것은 劉漢(匈奴漢)에서 시작됐다”<sup>16)</sup>고 한 註釋에서 기인한 듯한데, 그러나 匈奴漢·前趙의 경우 儲君의 반이 대선우를 역임했지 그 나머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어떨까는 의문이다. 표 1에 따르면 대선우를 역임한 전체 12명 중 7명은 儲君이며, 나머지 5명은 王爵을 가진 자들로 모두 君主의 자제들이다. 이 통계는 일반적으로 儲君이 대선우를 역임한다는 주장이 꼭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劉聰과 劉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들은 劉淵과 劉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심분 고려되었기 때문에 대선우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충이 호인들을 직접 통령할 수 있는 대선우에 임명된 후 勤卒 10만을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되면서,<sup>17)</sup> 그는 유연 사후 제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내분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匈奴漢의 國權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운의 대선우 임직은 당시 前趙의 주위상황과 君主 유요의 그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따라서 大單于=儲君이라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될 수 없으며, 이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개개의 호호왕조가 직면한 상황과 군주의 정치적인 배려라는 차원에서 존귀한 子弟近親이나 영향력이 강한 宗室이 대선우에 임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② 혹자는 주장하기를 대선우는 軍政大權을 장악한 왕조의 제2의 실력자인데, 황제에 다음가는 皇太子 혹은 皇太弟의 지위에 있던 자가 대선우를 역임했을 때에 비로소 皇權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匈奴漢 황태자 劉和는 대선우를 역임한 적이 없었지만 순조롭게 帝位에 오를

15) 內田吟風, 1975, 앞의 글, 325쪽; 周偉洲, 1986, 앞의 책, 187쪽.

16) 『資治通鑑』 卷116 晉紀38 安帝義熙七年(411)條, 3647쪽, “太子領大單于始於劉漢.”

17) 『晉書』 卷101 劉元海載記 附劉和傳, 2653쪽, “大司馬(劉聰)握十萬勤卒居于近郊.”

18) 강문호, 1999, 앞의 책, 58쪽.

19) 黃惠賢, 1997, 앞의 책, 74쪽.

수 있었고, 또한 後趙 石虎는 합법적인 儲君의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대선우에 임명되기 전 朝權과 軍權을 모두 장악한 뒤, 石弘을 압박하여 제위를 찬탈하고 居攝趙天王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太子 石宣은 대선우의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 石韜를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왕조의 제2의 실력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무하게 誅殺되고 만다.<sup>20)</sup> 그리고 北燕 馮跋의 태자 馮永은 대선우를 역임했지만, 결국 제위에 오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이상의 제 사실을 종합할 때, 儲君이 대선우를 역임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皇權의 진정한 계승자가 된다는 주장은 오호왕조의 軍權이 대선우에 의해 장악된 사실 그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야기된 문제로 보이며, 따라서 儲君이 대선우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제위에 순조롭게 오른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오호왕조의 군권을 장악하고 그 직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수월하게 제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서술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儲君이 대선우의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꼭 ‘왕조의 제2의 실력자’일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제위를 계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③ 劉乂와 石虎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선우에는 모두 오호왕조 君主의 아들이 임명되었다. 유충은 유연 사후 본인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서 승리한 다음 스스로 庶孽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제위에 오를 수 있느냐며 이를 異母弟인 單皇后의 嫡子 劉乂에게 양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예 본인과 公卿百官이 그럴 수 없다며 반대하자,<sup>21)</sup> 유충은 “유예 및 諸公들은 현재 禍難이 너무 심하니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제위에 올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帝位에 누가 오르느냐 하는 것) 家·國의 존립과 관계된 중차대한 일로 내가 어찌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유예가 성인이 된 후 大業을 그에게 넘길 것이다”<sup>22)</sup>라고 말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제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는

20) 石宣의 誅殺原因 및 그와 관련된 사실은 『晉書』 卷107 石季龍載記 下, 2784~2785쪽을 참고.

21)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58쪽, “[劉]乂與公卿泣涕固請.”

22) 『資治通鑑』 卷90 晉紀9 懷帝永嘉四年(310)條, 2751쪽, “[劉]乂及羣公正以禍難尙

바로 제위를 언젠가 유예에게 물려줘야 하며 자신의 제위가 한정적인 것임을 공언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충은 이상의 선언이 食言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유예에게 합법적인 저군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그를 皇太弟에 세우고 동시에 대선우를 겸임케 함으로써 그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sup>23)</sup> 이 밖에 석호의 대선우 임직과 관련해서는 石勒이 寢疾로 드러누워 일어날 수 없자, 석호는 詔命을 바꾸어 태자 石弘과 內外 大臣 간의 왕래를 금지시켜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 얼마 후 後趙의 국권을 손쉽게 장악한 석호는 석륵 사후 석홍의 제위승계를 인정했지만 제위찬탈에 대한 야욕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석호의 세력에 압도된 석홍은 부득불 그를 丞相·魏王 그리고 대선우에 封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얼마 후 석호는 魏王·都督中外諸軍事·大單于의 직책을 통하여 後趙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④ 漢人 冉閔은 '殺胡之令'을 전제조치로 하여 冉魏를 건국할 수 있었지만, 호인세력과의 관계유지와 지지획득의 차원에서 大單于職을 두었으며, 그리고 子 冉胤을 大單于·驃騎大將軍에 임명하고 그 휘하에 歸降해 온 1천여 胡人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sup>24)</sup> 염민의 이런 조치에 대하여 한인 光祿大夫 韋諷는 “지금 降胡 수천 인에 대하여 전례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招誘之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胡羯은 본래부터 [우리의] 仇敵으로 지금 그들의 歸附는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그중에 刺客(정탐하는 자)이 있다면 변란은 시시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것이] 재난으로 화한 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古人的 말 중에 한 사람에 대한 경계도 하지 못하면서 하물며 1천 명에 대한 것은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降胡를 誅屏하시고 單于之號를 없애시어 聖王의 苞桑之誠(有備無患을 통한 교훈, 만약의 사태에 대비

殷, 貪孤年長故耳。此家國之事, 孤何敢辭! 俟又年長, 當以大業歸之。”

23) 李椿浩, 2008, 4, 「匈奴漢國의 中央官制特點」, 『中國邊疆史地研究』, 88~89쪽.

24) 이춘호, 2010, 「五胡時期 漢人王朝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23, 132~133쪽.

하지 못함에 대한 경계)를 유념하십시오”라고 간언하였다.<sup>25)</sup> 韋謏의 간언이 채납되지 않아 대선우직은 폐지될 수 없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요 왕조 내에서 대선우가 가진 職能은 여타 오호왕조의 그것과 동일하며 또한 당시 호한 간의 민족모순이 대단히 격렬한 상태였음도 알게 된다.

⑤ 352년 정월 苻健은 제위에 오르면서 “선우란 百蠻을 통치하는 자로 天子가 이를 역임하지 않았다”<sup>26)</sup>라고 말하며 자신의 대선우직을 太子 苻萇에게 물려주고 ‘統壹百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苻萇이 東晉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어떤 인물이 대선우에 임명되었는지 심지어 대선우가 재차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다. 다만 苻健은 後趙의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漢晉之舊로 되돌아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듯이 이 單于號의 극복을 통한 胡漢分治의 철폐는 前秦이 차후 풀어야 할 과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sup>27)</sup> 여하튼 당시 前秦의 대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선우에 의해 통치된 關中の 百蠻은 前秦 苻氏에 귀속되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苻健이기에 遺言으로 태자 苻生에게 “六夷<sup>28)</sup> 酋帥와 권력을 가진 大臣 중 만약 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서서히 제거하라”<sup>29)</sup>고 분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大臣執權者’는 輔政大權을 행사하고 있던 太師 魚遵·丞相 雷弱兒·太傅 毛貴·尙書令 梁楞·尙書左僕射 梁安·尙書右僕射 段純·吏部尙書 辛牢 등을, 그리고 ‘六夷酋帥’는 氏族 苻氏와 함께

25) 『晉書』 卷91 儒林韋謏傳, 2361쪽, “[韋謏]好直諫, 陳軍國之宜, 多見允納……謏諫曰: ‘今降胡數千, 接之如舊, 誠是招誘之恩. 然胡羯本爲仇敵, 今之款附, 苟全性命耳. 或有刺客, 變起須臾, 敗而悔之, 何所及也! 古人有言, 一夫不可狃, 而況千乎! 願誅屏降胡, 去單于之號, 深思聖王苞桑之誡也.’ [冉]閔志在綏撫, 銳於澄定, 聞其言, 大怒, 遂誅之, 并殺其子伯陽.”

26) 『資治通鑑』 卷99 晉紀21 穆帝永和八年(352)條, 3122쪽, “[苻健]言單于所以統壹百蠻, 非天子所宜領.”

27) 박한제, 1988b, 앞의 글, 64쪽.

28) 黃烈은 “六夷란 ‘諸胡雜夷’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특정의 서로 다른 여섯 胡人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黃烈, 1987, 『中國古代民族史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2쪽.

29) 『資治通鑑』 卷100 晉紀22 穆帝永和十一年(355)條, 3147쪽, “六夷酋帥及大臣執權者, 若不從汝命, 宜漸除之.”

關中으로 이동하여 雜居한 ‘六夷’의 部落大人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六夷 酋帥는 자신들의 部民을 통솔하며 帝位에 오르기 전에는 대선우 苻萇의, 이후에는 대선우 苻萇의 통치를 받으면서 東晉을 포함한 기타 ‘反苻’ 세력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關中에서 前秦의 근거지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선우의 任職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하는 사서 상의 서로 다른 기재로 야기된 오해의 진위를 가리고 보다 정확한 사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匈奴漢 劉粲이 언제 대선우직을 역임하기 시작하였는가와 관련된 것이며, 둘째, 後趙 石勒의 태자 石弘과 子 石宏이 진정 대선우직을 역임했었는가, 그랬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後燕 慕容寶의 대선우 任職과 관계된 문제이다.

① 혹자는 341년 11월 유충이 子 劉粲을 相國·大單于에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百揆를 총괄하도록 했기 때문에 匈奴漢의 大權은 기본적으로 그에 의해 장악되었다. 따라서 원래부터 대선우를 역임한 皇太弟 劉乂의 권력은 이때 거의 박탈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유예가 유찬에 의해 살해된 317년 이전, 즉 유찬이 대선우직을 역임하기 전까지 유예는 대선우직을 계속 역임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였다.<sup>30)</sup> 이처럼 유찬이 언제 처음으로 대선우직을 역임하였는가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同口異聲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sup>31)</sup>

312년 유충은 魚蟹를 貢獻하지 않은 左都水使者 劉攄와 溫明殿·徽光殿을 제때에 완성하지 못한 將作大匠 靳陵을 斬하였고, 이어서 遊獵에 규칙이 없고 정치를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中軍大將軍 王彰이 직간하였다. 유충

30) 周偉洲, 1986, 앞의 책, 101, 186쪽.

31) 劉粲이 언제 처음으로 大單于에 임명되었는지의 문제는 혹자의 同口異聲한 주장 외에 순수 匈奴血統을 한 劉粲과 匈奴 반 氏族 반의 혈통으로 氏·羌族의 지지를 받고 있던 劉乂 간의 권력투쟁과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呂一飛는 劉聰 시기 匈奴漢 통치계층 내부의 관계를 순수 匈奴 혈통을 가진 자들과 저·강족을 세력기반으로 한 자들 간의 대립으로 이해하였다. 呂一飛, 2001, 2, 「匈奴漢國的政治與氏族羌」, 『歷史研究』, 171~174쪽.

은 이에 대노하며 그를 참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王夫人과 張太后, 그리고 “太弟 유예·선우 유찬은 棺을 들고 와 切諫하며”<sup>32)</sup> 왕창을 변호하고 있다. 이후 314년에 이르러 유충은 “晉王 유찬을 相國·大單于에 임명하고 百揆를 총괄하게 하였으며,”<sup>33)</sup> 또한 317년에 이르러서는 “晉王 유찬을 황태자에 세우고 相國·大單于를 겸임케 하고 朝政을 예전처럼 總攝토록 하였다.”<sup>34)</sup> 유찬의 대신 우 임직에 대한 史實을 『資治通鑑』에서는 이처럼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12년·314년, 심지어 317년 어느 해에 유찬이 처음으로 대신우직을 겸임하기 시작하였는지 확실치 않은데, 얼핏 보면 312년의 기사가 정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314년·317년의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다. 『자치통감』의 기사와 달리 『晉書』의 이 부분에서는 유찬이 대신우직을 역임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지 않고, 다만 “太弟 유예와 子 유찬은 함께 棺을 들고 와 切諫하였다”<sup>35)</sup> 혹은 “유충은 유찬을 相國에 임명하고 百揆를 총괄토록 하였다”<sup>36)</sup>고만 기재하고 있다. 『진서』와 『자치통감』의 유관기재를 상호 비교 대조할 때, 『자치통감』 상의 ‘單于’·‘大單于’는 衍文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유충은 제위에 오르면서 유예가 성인이 되면 바로 그에게 제위를 넘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제위에 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암묵적으로 순수 흉노 혈통을 한 子 유찬에게 제위를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아주 천천히 진행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sup>37)</sup> 따라서 유찬은 유충의 암묵 속에 유예와 모순관계에 있던 靳準·王沈 등을 통해 그를 모살할 계획에 착수하고 그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결국 유예의 휘

32) 『資治通鑑』 卷88 晉紀10 懷帝永嘉六年(312)條, 2779쪽, “太弟又·單于祭輿櫬切諫.”

33) 『資治通鑑』 卷89 晉紀11 愍帝建興二年(314)條, 2817쪽, “以晉王粲爲相國·大單于, 總百揆.”

34) 『資治通鑑』 卷90 晉紀12 元帝建武元年(317)條, 2847쪽, “漢主聰立晉王粲爲皇太子, 領相國·大單于, 總攝朝政如故.”

35)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61쪽, “弟又·子粲並輿櫬切諫.”

36)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66쪽, “聰以粲爲相國, 總百揆.”

37) 李椿浩, 2008, 4, 앞의 글, 88~89쪽.

하에 있던 氏·羌 酋長 10여 명을 사로잡아 모반계획을 거짓 자백토록 詰問하기에 이르렀다.<sup>38)</sup> 때는 317년으로, 저·강 추장들이 대선우 유예의 휘하에 있으면서 그의 통령을 받았다는 胡三省의 주해에서 알 수 있듯이<sup>39)</sup> 당시 유예는 皇太弟의 신분으로 여전히 대선우를 역임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는 유예가 유찬에 의해 살해되기 전까지 대선우직을 역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유찬이 처음으로 대선우를 역임한 시간은 312년·314년이 아닌 유예를 살해한 다음인 317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sup>40)</sup>

② 『晉書·石勒載記』에는 330년 석륵이 趙天王을 자칭한 후, “世子 石弘을 太子에 세우고 子 石宏을 持節·散騎常侍·都督中外諸軍事·驃騎大將軍·大單于 그리고 秦王에 封拜했다”<sup>41)</sup>고 기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석홍과 석굉이 서로 다른 인물이며, 게다가 석굉이 대선우에 임명된 史實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史實에 대하여 후자는 『晉書·石季龍載記』<sup>42)</sup>에 근거하여, 趙天王에 즉위한 석륵이 태자 석홍을 대선우에 임명했기 때문에 석홍과 석굉은 동일 인물이며 더 나아가 『石勒載記』의 위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3)</sup> 이런 주장 외에 대선우를 자칭한 석륵이 태자 석홍의 권력을 키워 주기 위해 單于元輔 石虎의 존재를 무시하고 驃騎將軍·門臣祭酒 王陽에게

38) 『資治通鑑』 卷90 晉紀12 元帝建武元年(317)條, 2845~2846쪽, “[劉]聰使[劉]粲以兵圍東宮, 粲使[靳]準·[王]沈收氏·羌酋長十餘人, 窮問之, 皆懸首高格, 燒鐵灼目, 酋長自誣與又謀反.”

39) 『資治通鑑』 卷90 晉紀12 元帝建武元年(317)條, 2846쪽, “[劉]又爲大單于, 氏·羌酋長屬焉, 故皆服事東宮.” 胡三省의 註釋에 의문이 없다면, 劉又是 310년부터 317년까지 계속해서 大單于職을 역임했다고 할 것이다.

40) 317년 劉粲이 劉又를 살해하고 大單于를 차지했음은 바로 순수 匈奴 혈통을 한一派가 氏族 반 匈奴 반의 혈통을 한 세력을 괴멸시키고 권력투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41) 『晉書』 卷105 石勒載記 下, 2746쪽, “……世子弘爲太子, 署其子宏爲持節·散騎常侍·都督中外諸軍事·驃騎大將軍·大單于, 封秦王.”

42) 『晉書』 卷106 石季龍載記 上, 2762쪽, “[石]季龍自以勳高一時, 謂勳卽位之後, 大單于必在己, 而更以授其子弘, 季龍深恨之, 私謂其子邃曰: ‘……成大趙之業者, 我也, 大單于之望實在于我, 而授黃吻婢兒, 每一憶此, 令人不復能寢食.’”(밑줄은 필자)

43) 周偉洲, 1987, 앞의 글, 107쪽의 注13.

‘六夷’를 관리하는 행정사무를 맡기고 석홍을 보좌토록 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석홍은 대선우였음에 틀림없다고 한 견해나,<sup>44)</sup> 혹은 대선우에 결코 다른 인물을 쉽게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석륵이 칭제한 후 태자 석홍에게 대선우직을 수여했음에 틀림없다고 한 주장 역시 제출되었다.<sup>45)</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論者들의 주장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석굉이 대선우직을 역임한 후 석홍 역시 대선우직을 역임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宏’이 바로 ‘弘’의 오류인지, 더 나아가 석굉이란 인물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된다.

333년에 이르면 석륵은 痲疾로 禁中에 칩거하며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석호는 詔命을 바꾸어 지방에 鎮守하던 석굉과 石堪을 都城 襄國으로 부르고 있다. 이때 석륵은 잠시 병이 호전되어 석굉의 朝見을 받자, “내가 너로 藩鎮에居하게 한 것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너는 누가 불러서 온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온 것인가? 만약 누가 불러서 왔다면 내가 그를 誅殺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석륵의 노기에 놀란 석호는 “秦王은 폐하를 양모하여 잠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곧 鄴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sup>46)</sup>라고 말하며 석륵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석호가 소환한 秦王이 바로 석굉으로, 그가 석륵과 나는 대화를 통하여 그는 당시 襄國이 아닌 일개 지방관으로 鎮守地 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sup>47)</sup> 그리고 이미 대선우직을 떠나 있었음이 확실하다. 비록 사서에서는 석굉이 330년 대선우를 역임하기 시작한 해부터 석호에 의해 襄國으로 소환된 333년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지만, 당시 後趙政局에서 석굉이란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석륵이 석홍을 태자에 세우면서 동시에 석굉을 대선우에 임명했다는 『晉書·石勒載記』의 기재를 사실

44) 谷川道雄, 1971a, 앞의 글, 51쪽.

45) 邱久榮, 1987, 3, 앞의 글, 45쪽.

46) 『資治通鑑』卷95 晉紀17 成帝咸和八年(333)條, 2986쪽, “[石]勒疾小瘳, 見宏, 驚曰, ‘吾使王處藩鎮, 正備今日, 有召王者邪, 將自來邪? 有召者, 當按誅之!’ 虎懼曰, ‘秦王思慕, 暫還耳, 今遣之.’”

47) 石宏의 鎮守地에 대하여 胡三省은 다음과 같이 註解하였다. 『資治通鑑』卷95 晉紀17 成帝咸和八年(333)條, 2986쪽, “勒以宏都督中外諸軍事, 蓋使之鎮鄴.”

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석륵이 석호를 제거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sup>48)</sup> 자신의 사후에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석굉을 지방관에 임명하여 鄴에 진수토록 명함과 동시에 徐光과 程遐의 간언대로 “태자 석흥으로 하여금 尙書奏事를 관장케 하고”<sup>49)</sup> 이어서 대선우직도 겸임케 하는 것이 당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의문이 없다면 석굉이 지방관에 임명되어 鄴에 진수하기 시작한 때와 석흥이 대선우에 임명되어 호인들을 관리·統領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일치하며, 이 시기는 최소한 333년 이전의 어느 때 적어도 332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③ 後燕 慕容寶의 大單于 任職과 胡人 통치방식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선 『자치통감』의 기재대로라면 모용보는 388년에 대선우를 겸임했고,<sup>50)</sup> 뒤이어 393년에 이르러 加官의 형식을 빌려 대선우직을 부여받은 것이 된다.<sup>51)</sup> 만약 『자치통감』의 기재에 오류가 없다면, 그는 388년 대선우에 임명되었다가 후에 離職하였고, 393년에 이르러 다시 대선우직을 갖게 된 것이 된다. 그러나 『晉書·慕容垂載記』의 기재를 보면, 『자치통감』의 기사가 꼭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復燕’의 기치를 들고 慕容氏 왕조의 재건을 위해 前秦 잔여세력과 군사투

48) 『晉書』 卷105 石勒載記 下 附石弘傳, 2752~2753쪽, “[石勒曰, ‘今天下未平, 兵難未已, 大雅(石弘)沖幼, 宜任強輔. 中山(石虎)佐命功臣, 親同魯衛, 方委以伊霍之任, 何至如卿言也. 卿當恐輔幼主之日, 不得獨擅帝舅之權故耳. 吾亦當參卿於顧命, 勿爲過懼也.’]……勒曰, ‘吳蜀未平, 書軌不一, 司馬家猶不絕於丹楊, 恐後之人將以吾爲不應符籙, 每一思之, 不覺見於神色.’” 이처럼 石勒은 石虎를 제거할 의지가 부족했고 또한 程遐·徐光의 수차례에 걸친 석호를 제거해야 한다는 간언을 ‘不聽’ 혹은 ‘默然, 而竟不從’으로 일관하고 있다.

49) 『資治通鑑』 卷95 晉紀17 成帝咸和七年(332)條, 2983쪽, “[石勒]始命太子省可尙書奏事.” 石弘이 정확히 언제 大單于를 역임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尙書奏事를 관장하기 시작한 때인 332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50) 『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三年(388)條, 3383쪽, “燕主[慕容]垂立夫人段氏爲皇后, 以太子[慕容]寶領大單于.”

51)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十八年(393)條, 3410쪽, “夏, 四月, 庚子, 燕主[慕容]垂加太子[慕容]寶大單于.”

쟁을 이어온慕容垂는 38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中山에 定都하며 세력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어서 다음 해 386년 2월 “公卿尙書百官을 두고 宗廟社稷을 세우는 등”<sup>52)</sup> 마침내 ‘復燕’을 달성하게 된다.<sup>53)</sup> 그런데 後燕의 건국과 같은 해 前秦 冀州牧 苻定·鎮東將軍 苻紹·幽州牧 苻謨·鎮北將軍 苻亮 등은 무리를 이끌고 歸降하였으며, 또한 丁零 豪酋 鮮于乞은慕容麟에게 패한 후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내부하고 있다. 이어서 387년에는慕容宙·慕容寶·慕容楷가 中山을 압박하던 丁零 豪酋 翟遙 등 5천여 명을 공격하여 모두 포획했으며,<sup>54)</sup> 그리고 劉顯을 격파하여 그 部衆과 천만 數의 말·소·양 등 가축을 얻고 또한 8천여 落을 모두 中山으로 천사시키고 있다.<sup>55)</sup> 이렇게 後燕 경내, 특히 都城 中山 주위에 적지 않은 호인들이 산재하기 시작하면서 모용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고심했었을 것이며,<sup>56)</sup>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 대선우의 설치와 임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57)</sup> 이와 더불어 모용수는 모용보를 위해 承華觀을 짓게 하고, 또한 일찍이 後趙 석릭이 태자 석홍의 권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게 그로 하

52) 『資治通鑑』 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一年(386)條, 3359쪽, “[慕容垂]置公卿尙書百官, 繕宗廟·社稷.”

53) 後燕의 建國과 관련된 내용은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231~252쪽; 이춘호, 2008, 「統府體制와 後燕·南燕의 建國」, 『東方學』 15를 참고하라.

54) 『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387)條, 3377쪽, “五月, 以章武王[慕容]宙監中外諸軍事, 輔太子[慕容]寶守中山, [慕容]垂自帥諸將南攻[翟]遼, 以太原王[慕容]楷爲前鋒都督, 遼衆皆燕·趙之人, 聞楷至, 皆曰, ‘太原王子, 吾之父母也!’ 相帥歸之, 遼懼, 遣使請降……井陘人賈鮑, 招引北山丁零翟遙等五千餘人, 夜襲中山, 陷其外郭. 章武王宙以奇兵出其外, 太子寶鼓譟於內, 合擊, 大破之, 盡俘其衆, 唯遙·鮑單馬走免.”

55) 『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387)條, 3379쪽, “悉收其部衆, 獲馬牛羊以千萬數……徙八千餘落于中山.”

56) 후연의 영토확장 및 대내안란 세력의 진압 그리고 행정제도와 군사제도의 확립에 대해서는 지배선, 1986, 앞의 책, 252~264쪽을 참고하라.

57) 지배선 교수는 “慕容垂가 자慕容寶를 大單于에 임명한 것은 漢族뿐만 아니라 遊牧諸族도 통치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하였다. 지배선, 1986, 앞의 책, 264쪽.

여금 錄尙書事를 겸임케 하여 정사를 주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58)</sup> 이상의 논지를 통해 모용보가 393년 처음으로 대선우를 역임했다고 하기보다는 388년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이는 中山 주위에 散居한 호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와 그리고 儲君의 권력을 강화시키려 한 모용수의 정치적인 배려가 함께 작용한 때문이다.

### Ⅲ. 單于臺의 설치

혹자는 單于臺란 五胡시기라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맞춰 六夷를 鎮撫하기 위해 舊匈奴 제도를 개조하여 설치된 통치기구로 민족관계가 비교적 복잡했던 당시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과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sup>59)</sup>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선우대, 사서에서 만약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보인다면 그 長官 대선우의 임직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대선우의 임직만 보인다면 선우대의 설치 가능성도, 다른 통치기구가 그 기능을 대신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胡三省은 “前趙·後趙 이래로 모두 선우대를 두어 雜夷를 통치했는데, 慕容盛 역시 이런 방식을 계승하여 선우대를 두었다”<sup>60)</sup>고 주해하였다. 그렇다면 劉淵이 선우대

58) 『十六國春秋輯補』卷44 後燕錄, 343쪽, “[慕容]垂爲其太子[慕容]寶起承華觀, 以寶錄尙書, 政事巨細皆委之.”慕容寶가 政事를 주관하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지배선 교수는 “太元十三年(388)慕容垂는 64세로 자신의 연령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後燕의 통치권 대부분을 모용보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북중국이 여러 세력으로 割據하고 있었기 때문에 中原의 통일을 모용보가 실천할 것을 바라며 권력의 대부분을 이양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였다. 지배선, 1986, 앞의 책, 258~259쪽.

59) 周偉洲, 1987, 앞의 글, 105~106쪽.

60) 『資治通鑑』卷111 晉紀33 安帝隆安四年(400)條, 3516쪽, “二趙以來, 皆立單于臺以統雜夷, 盛仍此立之.” “二趙”는 前趙와 後趙를 가리키며, 여기서 前趙는 匈奴漢

를 설치한 이래 거의 모든 오호왕조가 이를 설치했고, 後燕의慕容盛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서에는 匈奴漢·前趙·後趙(單于臺라고 하지 않고 單于庭이라고 했다) 그리고 後燕에서만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보이고 나머지 왕조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대선우의 임직을 통해 자연히 선우대의 설치문제에 관심이 가지만, 사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史實은 선우대의 기능을 다른 기구가 대신 수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하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오호왕조의 반 이상 되는 儲君이 대선우를 역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머물며 삶을 영유했던 ‘東宮’이 선우대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최소한 대선우의 임직만 보이고 선우대의 설치 기록이 보이지 않는 匈奴漢의 劉乂, 後趙의 石宣이 대선우를 역임한 때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사례 1〉

310년 帝位에 오른 劉聰은 異母弟 劉乂를 대선우에 임명한다. 이후 315년에 이르러 血雨가 東宮 延明殿에 내리자, 이를 이상히 여긴 유예가 太師 盧志·太傅 崔瑋 등을 찾아 策問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현상을 유충의 암묵 속에 세력을 키운 晉王 劉粲이 언젠가 유예를 공격할 징조로 풀이하고, 그로 하여금 선수를 쳐 유찬과 그의 후원세력이 되고 있던 諸王들을 제압해야 한다면 서, 그러기 위해서는 東宮 四衛의 精兵 5천과 대장군 劉敷의 정병 2만을 보충하여 이를 기반으로 거사하도록 간언했던 것이다. 이번 거사는 유예가 채납하지 않아 결국 실시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東宮舍人 荀裕는 유충에게 盧志 등이 유예에게 모반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上言했고, 그러자 유충은 冠威將軍 卜抽로 東宮을 監守케 하고 유예의 朝賀를 금지시키고

있다.<sup>61)</sup> 여기에서 ‘東宮四衛精兵不減五千’은 皇太弟 겸 大單于였던 유예가 직접 장악한 병력이며, 그리고 氏·羌 추장이 유예의 휘하에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들은 호인들로 구성되지 않았었을까 생각된다.<sup>62)</sup> 이후 317년에 이르면 유찬은 靳準과 王沈의 계획에 따라 유예가 모반을 도모했다고 음해하기 위해 그 휘하의 저·강 추장 십여 명을 포획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있는데, 그가 이들 저·강 추장을 사로잡은 이유를 胡三省은 “유예는 대선우였고, 저·강 추장들은 그에게 귀속되어 있었는데, 따라서 모두 東宮에서 服事(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sup>63)</sup> 때문이라고 주해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서상의 ‘故皆服事東宮’이란 구절로, 저·강 추장들이 대선우 유예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즉 그의 屬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東宮에서 호인들을 鎮撫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sup>64)</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찬은 유예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저·강 추장들을 포획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유찬은 유예가 모반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유찬에게 명하여 東宮을 포위케 하고 유예와 관계가 깊었던 大臣과 東宮官屬 수십 명을 주살하기에 이르렀

61)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67쪽, “東宮舍人苟裕告盧志等勸[劉]父謀反……[劉]聰使冠威卜抽監守東宮, 禁父朝賀.”

62) 東宮이 單于臺를 대신한 권력기구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大單于 劉父가 당시 장악한 병력이 모두 5,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찍이 大單于였던 劉聰이 都城 平陽 근교에서 10만의 勁卒을 용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劉聰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前歷이 있는데, 특히 劉父의 권력을 박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劉瓘은 이에 따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유찬이 유예로 하여금 平陽 근교에서 다수의 重兵을 장악케 하는 모험을 자초했을 리는 만무하다.

63) 『資治通鑑』 卷90 晉紀12 元帝建武元年(317)條, 2846쪽, “[劉]父爲大單于, 氏·羌酋長屬焉, 故皆服事東宮.”(강조는 필자)

64) 『毛詩正義』 卷3-2(『十三經注疏』 附校勘記 上冊), 54-上쪽, “正義曰: 太子居東宮, 因以東宮表太子.” 儲君(太子)이 ‘東宮’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東宮’으로 儲君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는데, 즉 동궁이 장소 혹은 기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저군 그 본래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匈奴漢·後趙에서는 적어도 이런 ‘東宮’이 저군 그 자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장소·기구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單于臺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sup>65)</sup> 결국 유충은 유예를 北部王으로 폐하고 얼마 후 그를 살해한다. 이어서 무리 1만 5천여 명이 坑殺하자 都城 平陽의 거리는 텅 빈 듯하였는데, 이렇듯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자 10여만 落의 氏·羌族은 유충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예와 그의 속관 저·강 추장들이 주살된 후 야기된 이상과 같은 역효과는 匈奴漢에 적지 않은 정치·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 없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저·강 추장은 대선우 유예의 휘하에서 六夷를 鎮撫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服事’하며 그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지고 실행되었던 곳이 東宮이지 않을까 추정되는 것이다.

#### 〈사례 2〉

335년 石虎는 石弘을 살해하고 居攝趙天王에 즉위한 후 石邃를 태자에 봉한다. 이때 석수는 일체의 尙書 업무를 관장하며 朝權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異母弟 石宣·石韜가 모두 석호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자, 父 석호를 살해한 후 帝位에 오를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에 옮기려 했지만 일이 발각되어 주살되고 만다. 이후 석선이 태자에 새로 봉해졌는데, 339년에 이르러 석호는 그를 대선우에 임명하고 天子의 旌旗를 세울 수 있게 배려하였다.<sup>66)</sup> 얼마 후 석호는 趙天王에 즉위하는데, 335년부터 趙天王 즉위 때까지 대선우를 누가 맡았는지 혹은 설치가 되었는지를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때에는 석호 자신이 석륵처럼 대선우를 직접 맡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석선은 대선우를 겸하고 얼마 후, 諸公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五兵尙書 張離를 통해 秦公 石韜·燕公 石斌·義陽公 石鑒·樂平公 石苞 등이 설치한 197명의 관리와 帳下兵 200명을 삼등분하고 이들이 지휘했던 5만의 병사를 모두 東宮으로 재배치토록 하는 上奏를 올리도

65)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75쪽, “[劉聰]使[劉]粲圍東宮……誅[劉]乂素所親厚大臣及東宮官屬數十人。”

66) 『資治通鑑』 卷96 晉紀18 成帝咸康五年(339)條, 3031쪽, “趙王[石]虎以太子[石]宣爲大單于, 建天子旌旗。”

록 하였다.<sup>67)</sup> 張離의 상주를 통해 나타난 석선의 의도는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인 石韜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sup>68)</sup> 더 나아가 후조왕조에서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한데, 환언하면 이는 동궁을 강화하여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344년에 이르면 석호는 동궁에 左·右統將軍을 둘 수 있게 하였는데,<sup>69)</sup> 그 설치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로 동궁이 더욱 안정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할 때, 張離의 상주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만은 확실하다 할 것이다. 이는 太子左·右·前·後衛率 위에 左·右統將軍을 둔 것이 그러하고, 게다가 左·右統將軍은 각각 左·右·前·後衛率과 함께 精兵을 이끌고 동궁을 숙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군사정벌에도 나섰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만의 병사를 모두 동궁에 배치하고 동시에 左·右統將軍을 설치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동궁이 儲君의 ‘宮’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아마도 다른 통치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기능이란 대선우를 겸한 儲君 石宣이 六夷를 鎮撫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된다.<sup>70)</sup>

이상의 〈사례 1·2〉에서처럼 당시 匈奴漢·後趙가 처한 상황에서 동궁은 儲君이 거주하는 장소라는 본래의 의미를 초월해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선우대 본래의 기능인 胡人을 통치하는 것이었다.

67) 『十六國春秋輯補』卷17 後趙錄, 133쪽, “右僕射張離領五兵尚書, 專總兵要, 而欲求媚於石宣, 因說之曰: ‘今諸公侯吏兵過限, 宜漸削弱, 以盛儲威.’ [石]宣素疾石韜之寵, 甚悅其言, 乃使離奏奪諸公府吏, 秦·燕·義陽·樂平四公, 聽置吏一百九十七人, 帳下兵二百人, 自此已下, 三分置一, 餘兵五萬, 悉配東宮. 於是諸公咸怨, 爲大釁之漸矣.”(밑줄은 필자)

68) 谷川道雄, 1971a, 앞의 글, 48쪽.

69) 『十六國春秋輯補』卷17 後趙錄, 135쪽.

70) 周偉洲는 “石勒은 國都 襄國에 單于庭을 설치하였으며, 石虎 시기에 이르러 鄴로 천도하였는데, 大單于 石宣이 鄴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선우정이 鄴에 설치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周偉洲, 1987, 앞의 글, 101쪽). 설사 석호가 襄國에 선우정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帝位를 찬탈한 石虎가 鄴으로 천도한 후 이와 똑같은 기구를 다시 두었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환언하면 현존하는 사료를 보면 石虎가 單于庭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鄴에 설치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현존하는 사료에 따르면 선우대의 설치와 관련된 史實은 匈奴漢·前趙·後趙 그리고 後燕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이들 왕조의 선우대 설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_ 匈奴漢·前趙

劉淵은 자립 후 304년 漢王을 칭하고 이어 308년에 이르러 帝位에 오름으로써 胡漢 兩人民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0년에 子 劉聰을 대선우에 임명하고<sup>71)</sup> 동시에 선우대를 平陽 以西에 설치하고 있다.<sup>72)</sup> 그리고 匈奴漢이 멸망한 후, 318년 유연의 族子 劉曜는 새로운 흉노왕조를 건국하여 국호를 趙로 바꾸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선우대를 설치하지 않은 듯하다.<sup>73)</sup> 이후 326년에 이르러 그는 子 劉胤을 대선우에 임명하고 동시에 선우대를 渭城에 설치하였다.<sup>74)</sup> 이렇게 9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선우대를 폐지한 채 지나오다가 326년에 이르러 비로소 설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前趙가 後趙와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호인들을 鎮撫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유요는 長安에 定都한 후 여러 차례 호인들을 關中으로 천사시키고 있는데, 이를테면 伊餘 형제와 그 부락 20여만 인을 천사시켰고,<sup>75)</sup> 楊韜 등 隴右의 만여 호를 천사시킨 경우

71) 박한제, 1988a, 앞의 글, 16~17쪽.

72) 『晉書』 卷101 劉元海載記, 2652쪽, “[劉]聰爲大司馬·大單于, 並錄尙書事, 置單于臺于平陽西.” 劉淵이 單于臺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지배선 교수는 “그가 유목 기마민이라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선우대의 설치로 말미암아 匈奴族은 물론이고 여타 유목민의 동요를 막아 자신의 사후 子 劉和에 대한 황제 즉위의 반발 세력들을 무마하겠다는 목적이 컸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배선, 1998, 앞의 글, 640쪽.

73) 周偉洲, 1986, 앞의 책, 186쪽.

74)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8쪽, “[劉]曜署劉胤爲大司馬, 進封南陽王, 以漢陽諸郡十三爲國, 置單于臺于渭城, 拜大單于.”

75)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87쪽, “[劉]曜分徙伊餘兄弟及其部落二十餘萬口于長安.”

도 있으며,<sup>76)</sup> 그리고 秦州 豪强 楊·姜氏의 族人 2천여 호를 천사시킨 것 등이 그것이다.<sup>77)</sup> 이렇듯 長安 주위에 호인들이 다수 散居하게 되었는데, 이후 326년에 이르러 後趙 石他가 前趙 安北將軍·北羌王 盆旬除를 격파하고 3,000여 落과 소·말·양 백여만을 노획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유요는 대노하며 곧 渭城에 이르러 石他에 대한 공격준비에 착수하는데, 이 渭城이 바로 선우대가 설치된 곳이다. 이어서 유요는 劉岳을 보내 석타를 공격하게 했으며, 또한 친히 富平에 이르러 유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sup>78)</sup> 이후 유요는 석타와 그의 병사 1,500여 명을 참하고 5,000여 명을 河水에 빠져 죽일 정도의, 그리고 그 나머지를 모두 포획하고 개선하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sup>79)</sup> 그러나 이후 後趙와의 전투 중<sup>80)</sup> 유약·呼延謨·王騰 등이 모두 패하는 등 前趙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sup>81)</sup> 이러한 史實은 군사적인 패배로 인해 그 폐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 동요할지도 모를 關中의 호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鎮撫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우대는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선우

76)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1쪽, “[劉曜]使侍中喬豫率甲士五千, 遷[楊]韜等及隴右萬餘戶于長安.”

77)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4쪽, “[劉曜]徙秦州大姓楊·姜諸族二千餘戶于長安.”

78)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7쪽, “石勒將石他自雁門出上郡, 襲安國將軍·北羌王盆旬除, 俘三千餘落, 獲牛馬羊百餘萬而歸. [劉曜]大怒, 投袂而起, 是日次于渭城, 遣劉岳追之, 曜次于富平, 爲岳聲援.”

79)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7쪽, “斬[石]他及其甲士一千五百級, 赴河死者五千餘人, 悉收所虜, 振旅而歸.”

80) 前趙는 後趙와의 전쟁 중 비록 劉岳이 後趙의 盟津·石梁 등 군사요새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5,000여 級을 虜獲하는 국부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지만(『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8쪽, “[劉]岳攻石勒盟津·石梁二戍, 克之, 斬獲五千餘級.”), 이런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이후 유약은 石虎에 패한 후 사로잡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81) 『資治通鑑』 卷93 晉紀15 明帝太寧三年(325)條, 2936쪽, “[石]虎拔石梁, 禽[劉]岳及其將佐八十餘人, 氏·羌三千餘人, 皆送襄國, 阮其士卒九千人. 遂攻王騰於并州, 執騰, 殺之, 阮其士卒七千餘人. 曜還長安, 素服郊次, 哭, 七日乃入城, 因憤恚成疾.”

대의 설치와 함께 劉胤의 대선우 임직은 바로 유요의 그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배려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운은 원래 유요의 卍子로 일찍이 斬準의 亂 때 黑匿郁鞠部에 몸을 피한 적이 있다. 이후 前趙의 건국이 있을 즈음 郁鞠은 劉胤의 신분을 확인하고 유요에 정성을 다해 衣馬와 함께 그를 보내왔다.<sup>82)</sup> 유운이 長安으로 되돌아 온 후 유요의 총애를 한몸에 받자 前趙의 朝臣들이 모두 그의 밑으로 줄을 서며 그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운의 존재를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유요는 群臣들에게 “義光이 비록 이미 태자에 책봉되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유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황제 계승자로서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을까 염려된다. 위로는 社稷을 공고히 할 수 없을까, 밑으로는 [내가] 義光을 총애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義孫은 연장자이며 明德하고 일찍이 卍子이지 않았던가 …… 諸卿들의 의견은 어떠한가?”<sup>83)</sup>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左光祿 卜泰 · 太子太保 韓廣과 유운 본인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자 유요는 부득불 劉熙로 하여금 儲君의 지위를 계속 유지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달리 유운을 永安王 및 侍中 · 衛大將軍 · 都督 二宮禁衛諸軍事 · 開府儀同三司 · 錄尚書事 · 領太子太傅에 封拜하여 최대한 배려하였고,<sup>84)</sup> 그리고 얼마 후 유운을 대선우에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지에 의문이 없다면, 전조 건국이 있는 지 9년이 지난 326년, 長安 주위에 散居한 胡人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무해야 할 필요성과 유운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함께 고려되어 선우대의 설치, 그리고 유운의 대선우 임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82)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5쪽, “初, 斬準之亂, 曜世子胤沒于黑匿郁鞠部, 至是, 胤自言, 郁鞠大驚, 資給衣馬, 遣子送之.”

83)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6쪽, “義光(劉熙)雖先已樹立, 然冲幼儒謹, 恐難乎爲今世之儲貳也, 懼非所以上固社稷, 下愛義光. 義孫(劉胤)年長明德, 又先世子也 ……於諸卿意如何?”

84)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7쪽, “[劉曜]封[劉胤]爲永安王, 署侍中 · 衛大將軍 · 都督二宮禁衛諸軍事 · 開府儀同三司 · 錄尚書事 · 領太子太傅, 號曰皇子. 命[劉熙]於胤盡家人之禮.”

## 2\_ 後趙

319년 石勒이 趙王·大單于를 자칭한 후 石虎를 單于元輔·都督禁衛諸軍事에 임명하였는데, 이때 ‘鎮撫百蠻’의 임무는 대선우 석륵을 대신해 석호가 수행했을 것이다.<sup>85)</sup> 당시 單于臺(혹은 單于庭)의 설치 지역에 대하여 혹자는 後趙의 선우대는 아마도 鄴에 설치되었고, 석호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후조의 실질적인 軍事統帥였다고 하였다.<sup>86)</sup> 그러나 이와 달리 선우대는 六夷部落을 통치하는 일종의 군사기구로 都城이 위치한 곳 혹은 그 주위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都城 襄國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주장도 제출되었다.<sup>87)</sup> 현존하는 사서에 따르면 後趙에서 선우대란 이름을 가진 통치기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찍이 석륵이 洛陽의 晷影을 襄國으로 옮겨 이를 單于庭에 배치하도록 했다는 史實에서<sup>88)</sup> 당시 ‘鎮撫百蠻’했던 통치기구는 선우대로 불리지 않고 선우정이라 하여 襄國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아마도 석륵이 趙王의 신분으로 대선우를 자칭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鎮撫百蠻’의 기구를 도성 주위에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이후 석호가 帝位를 찬탈하고 襄國에서 鄴으로 천도한 후 이 기구는 자연히 鄴 주위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전술했듯 필자는 石宣이 대선우를 역임했을 당시, 선우대의 설치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東宮’의 기능 확대에 주목하여 선우대의 기능을 동궁이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바 있다.

85) 王仲犛, 1979, 『魏晉南北朝史』 上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47쪽; 김영환, 2005, 앞의 글, 233~234쪽. 이와 달리 박한제 교수는 “석륵은 大單于臺를 두어 스스로 大單于가 되어 ‘鎮撫百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한제, 1988a, 앞의 글, 27쪽.

86) 王仲犛, 1979, 앞의 책, 246~247쪽; 黃惠賢, 1997, 앞의 책, 74쪽.

87) 馬長壽, 1984, 『氏與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7~39쪽; 周偉洲, 1986, 앞의 책, 187쪽.

88) 『晉書』 卷105 石勒載記 下, 2742쪽, “[石]勒命徙洛陽晷影于襄國, 列之單于庭.”

### 3\_ 後燕

주지하듯 400년慕容盛은 燕臺<sup>89)</sup>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바로 ‘諸部雜夷’를 통령하는 선우대의 또 다른 명칭이다.<sup>90)</sup>慕容盛 사후慕容熙는 丁太后의 비호 속에 帝位에 오르고 얼마 후 北燕臺를 大單于臺로 바꾸고<sup>91)</sup> 尙書의 지위에 버금가는 單于左輔·右輔를 그 안에 두고 있다.<sup>92)</sup> 이렇듯慕容盛·慕容熙 시기에 燕臺 혹은 선우대의 설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어떤 인물이 대선우에 임명되었는지에 대해선 알 방법이 없다. 호인을 통치할 기구가 설치된 이상 당연히 그 長官인 대선우는 존재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인물이 이에 임명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태자慕容定이 대선우를 겸임했을 경우이다. 모용성이 燕臺를 설치한 바로 그해 子 모용정을 태자에 세우고 있는데, 비록 사서에 그를 대선우에 임명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儲君의 신분으로 대선우를 겸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용성 본인이 대선우직을 겸임했을 경우이다. 그는 燕臺를 설치하기 전 이미 皇帝의 號를 버리고 庶人大王<sup>93)</sup>으로 그 작위를 낮춘 바 있다.<sup>94)</sup> 서인대왕이라 함은 작위가 없는 상태

89) 洪亮吉의 見解를 통하여, 우리는 南燕의 ‘燕臺’가 東萊郡掖縣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十六國疆域志』 卷13 南燕疆域志, 404쪽, “掖, 有燕臺. 太平寰宇記, 在掖縣東北二里, 南燕慕容德, 以東萊掖城爲青州刺史治所築.”). 그런데 그 존재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洪亮吉은 이것이 後燕의 ‘燕臺’와 같은 기능을 했었는지 혹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90) 『資治通鑑』 卷111 晉紀33 安帝隆安四年(400)條, 3516쪽, “燕主[慕容]盛立燕臺, 統諸部雜夷.”

91) 지배선 교수는 “慕容熙는 北燕臺를 大單于臺로 바꾸었는데, 이는 그가 遊牧制의 인 명칭을 다시 사용하면서 對北方政策을 중요시하겠다는 암시를 내포하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배선, 1986, 앞의 책, 345쪽.

92)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5쪽, “[慕容熙]改北燕臺爲大單于臺, 置[單于]左右輔, 位次尙書.”

93) 『晉書』 卷124 慕容盛載記, 3103쪽. 이 밖에 다른 사서에는 ‘庶人大王’으로 기재하고 있다. 『資治通鑑』 卷111 晉紀33 安帝隆安四年(400)條, 3506쪽, “自貶號爲庶人大王.”

94)慕容盛이 황제에서 庶人大王으로 칭호를 격하시킨 이유를 지배선 교수는 “그 자신

에서 서인으로 정사를 처리하고, 대왕이었으므로 스스로의 貶損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통해서<sup>95)</sup> 바로 이런 이유로 모용성은 황제의 號를 버리고 稱王했으니, 자신이 경내의 호인들을 직접 통치하는 자로서 自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모용성·모용정을 제외한 다른 제3의 인물이 대선우를 역임했을 수도 있다. 이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선우에 임명된 자들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추정한 것으로 세밀한 분석은 이후 보다 많은 유관사료의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모용희는 선우대 내에 單于左輔·右輔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대선우의 속관으로 그를 보좌하며 경내의 호인들을 통령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들이라 할 것이다.<sup>96)</sup>

#### IV. 單于臺의 조직과 그 통치범위

주지하듯 대다수 오호왕조는 都城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에 정복전쟁을 통해 노획한 혹은 귀부한 다수의 호·한인을 집중 천사시키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7)</sup> 여기에서 오호왕조 국력의 강약에 따라 통치력이 직접 미친 지역의 대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도성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혹자는 이를 京畿라 했

---

이 慕容寶의 庶長子였기 때문에 庶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大王 혹은 天王의 칭호 사용은 慕容盛 재위시의 後燕 영역이 皇帝國家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인 듯싶다”고 설명하였다. 지배선, 1986, 앞의 책, 329~330쪽.

95) 呂思勉, 1983, 『兩晉南北朝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221쪽.

96) 後燕 慕容熙 시기의 單于臺는 다른 五胡王朝의 그것과 달리 境內 모든 胡人들을 그 統治對象으로 한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注122를 참고하라.

97) 史念海, 1992, 3, 「十六國時期各割據霸主的遷徙人口」, 『中國歷史地理論叢』, 91쪽.

고, 匈奴漢은 單于·都尉와 司隸·內史를 병립시켜 경기에서는 胡漢分治를,<sup>98)</sup> 畿外에서는 州郡制의 통치방식을 채용했다고 하였다.<sup>99)</sup> 그렇다면 匈奴漢의 胡人 통치방식을 계승한 다른 五胡王朝(적어도 선우대를 설치한 왕조) 역시 畿內와 畿外로 나누어 胡漢分治를 실시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대선우와 그 屬官을 통해 기내의 호인을, 그리고 部落酋長 혹은 州牧·太守 등을 통해 기외의 호인들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sup>100)</sup>

중국 내지로 이주한 후 고유의 ‘軍民合一’의 부락조직을 유지하며 잡거해 온 호인들이 특정 호인왕조의 경기로 遷徙된 후에도 이런 조직 속에서 생활했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경기에 거주하는 호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선우대는 일찍이 漠北에서 선우를 중심으로 한 통치제도가 그 독특한 유목 경제와 부락조직이 상호 결합되어 발전 변화해 온 것이 五胡시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결합되면서 출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1)</sup> 따라서 이 절에서는

98) 五胡王朝의 胡漢分治 실시와 관련하여 陳寅恪은 “‘胡’와 ‘漢’, ‘部落’과 ‘編戶’로 나누어진 두 개의 서로 다른 계통으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胡漢分治’로, 일반적으로 胡人部落 계통은 戰爭을 목적으로, 漢人編戶는 耕織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萬繩楠 整理, 1987,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合肥: 黃山書社, 109쪽), 이 외에 胡漢分治의 실시를 통하여 “어느 정도 胡漢 간의 民族矛盾을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胡漢 간의 衝突 역시 緩和시킬 수 있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李紅艷, 2008. 1, 앞의 글, 49쪽.

99) 高敏, 1998, 「十六國時期前秦·後秦的護軍制」,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225~226쪽.

100) 唐長孺, 1955, 「晉代北境各族‘變亂’的性質及五胡政權在中國的統治」, 『魏晉南北朝史論叢』, 北京: 三聯書店, 160쪽. 單于左·右輔에 의해 통치되는 六夷 10만 落은 平陽 주위 즉 畿內에 거주하며, 畿外에는 州牧·郡太守를 두어 다른 胡人들을 통치하였다.

101) 韓狄, 2001. 5, 앞의 글, 68쪽. 周偉洲는 “오호왕조의 君主는 한인을 통치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호인들을 관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漠北에 있었던 匈奴政治 ‘單于臺制’를 모방한 單于臺이다. 선우대는 군사적 색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家屬과 畜産이란 재산을 가진 부락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舊匈奴 사회조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다(周偉洲, 1992, 앞의 책, 60~61쪽). 匈奴漢·前趙·後趙 그리고 後燕을 제외하고 前秦·北燕에서는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없지만, 單于輔相·單于四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單于輔相·單于四輔는 대선우를 보좌하며 호인들을 통치하는 관리들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선우대 조직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없는 前

이러한 선우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서에서 그 설치와 대선우의 屬官이 확인되는 匈奴漢·前趙·後趙·前秦·後燕·北燕의 선우대의 조직과 그 통치권이 미쳤던 지역적 범위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1\_ 匈奴漢

표 A<sup>102)</sup>

大單于 - 單于左輔 - 二十都尉 - 약간의 部落酋豪 - 二十萬 部落  
單于右輔

표 B<sup>103)</sup>

大單于 - 單于左輔 - 十都尉 - 약간의 部落酋豪 - 十萬 部落  
單于右輔 - 十都尉 - 약간의 部落酋豪 - 十萬 部落

匈奴漢의 중앙통치권이 직접 미쳤던 곳은 都城 平陽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선우대가 설치되어 畿外에 거주하는 호인들과 다른 통치방식을 실시하였는데,<sup>104)</sup> 위 표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흉노한의

秦·北燕이지만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2) 邱久榮, 1987. 3, 앞의 글, 45쪽.

103) 黃惠賢, 1997, 앞의 책, 79쪽.

104) 馬長壽는 “平陽은 匈奴漢의 單于臺가 위치했던 곳이며, 사서상의 ‘巴帥及諸羌羯降者十餘萬落(『晉書』 卷104 石勒載記 上, 2728쪽)은 당연히 선우대의 통치하에 있던 六夷 10만 落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馬長壽, 1984, 앞의 책, 39쪽). 게다가 萬繩楠 역시 “單于臺가 설치된 곳은 바로 平陽과 그 주변지역으로, 匈奴族을 포함한 胡人들을 통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萬繩楠, 1983, 『魏晉南北朝史論稿』,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36쪽). 그렇다면 匈奴漢의 京畿 面積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직접적인 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廷尉 陳元達가 劉聰에게 간언했을 때의 말 중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즉 陳元達는 “……陛下는 荒亂의 때를 이어받아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漢朝 太宗 시기의 두 개 郡에 불과합니다”라고 간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胡三省은 “劉聰 시기 장악했던 지역은 漢朝 河東·西河의 두 개 郡이다”라고 주해하였

선우대 조직에 대해서는 위 표에서처럼 두 가지의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즉 표 A는 單于左·右輔의 구분 없이 그 밑으로 모두 20인의 都尉를 두는데, 도위는 部落豪酋를 통하여 만여 落의 호인들을 통치하는 경우이며, 그리고 표 B는 單于左·右輔 밑으로 각각 都尉 10인을 두는데, 각 도위는 部落酋豪를 통해 각각 1만 落의 호인들을 통치하는 경우이다.<sup>105)</sup> 한인을 통치하는 左·右司隸校尉를 별도로 두어<sup>106)</sup> 單于左·右輔와 그 아래의 都尉部司에 의해 통솔되는 호인의 통치조직과 竝立 이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sup>107)</sup> 이 밖에 사서에서는 310년 劉聰이 대선우에 임명되었을 때, 그 밑으로 單于左輔 劉曜와 單于右輔 喬智明을 두었고, 이들은 각각 征討大都督과 冠軍大將軍을 겸임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sup>108)</sup>

다(『資治通鑑』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313)條, 2792쪽, “陛下承荒亂之餘, 所有之地, 不過太宗二郡地.” [胡注曰]: 時聰所有之地, 漢河東·西河二郡耳”). 胡三省의 주해에 따르면, 漢朝 太宗(文帝) 시기의 ‘河東·西河二郡’이라 한 곳이 바로 당시 匈奴漢의 ‘所有之地’한 지역으로, 이는 바로 匈奴漢이 장악한 中央統治力이 직접 미쳤던 京畿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唐長孺는 平陽과 그 주변지역은 바로 劉聰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게다가 右司隸校尉部는 아마도 河東에, 左司隸校尉部는 平陽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唐長孺, 1955, 앞의 글, 159쪽.

105) 單于左·右輔가 장악한 20만 落의 六夷와 左·右司隸校尉가 그 밑으로 內史 43人을 두어 장악한 40여만 人戶와 관련하여, 王育民은 “이들 六夷와 人戶는 匈奴漢의 통치자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천사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戶口의 실제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王育民, 1987. 2, 「十六國北朝人口考索」, 『歷史研究』, 75쪽.

106) 『晉書』卷102 劉聰載記, 2665쪽, “置左右司隸, 各領戶二十餘萬, 萬戶置一內史, 凡內史四十三.”

107) 박한제, 1988a, 앞의 글, 17쪽.

108) 『資治通鑑』卷87 晉紀9 懷帝永嘉四年(310)條, 2749쪽, “……始安王曜爲征討大都督·領單于左輔, 廷尉喬智明爲冠軍大將軍·領單于右輔…….”

## 2\_ 前趙

大單于 - 左賢王 - 六夷豪傑 - 약간의 部落酋豪 - 六夷部落  
右賢王

前趙의 京畿에 거주하는 호인들에 대한 통치방식은 같은 흉노족이 세운 匈奴漢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조의 통치지역과 그 경내의 민족성분, 그리고 민족구성원에서 匈奴漢과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흉노한의 멸망을 경계로 다수의 흉노인이 살해되는 등 이들의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이 있었다.<sup>109)</sup> 劉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앞에서 언급했듯 後趙에 대패하면서 동요할지 모를 關中の 호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대순우 밑에 單于左·右輔를 두는 방식을 피하고 六夷의 豪傑을 직접 左·右賢王 및 그 밑의 屬官에 임명하는 선우대 조직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0)</sup> 이러한 선우계통은 都城 長安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호인들을 그 통치대상으로 하였고, 선우대는 바로 長安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渭城에 설치될 수 있었다.<sup>111)</sup>

## 3\_ 後趙

大單于 - 單于元輔 - 胡人 部落酋長 - 胡人部落

109) 匈奴漢은 平陽을 중심으로 한 현재 山西省 이남 지역을 그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건국된 왕조이다. 이후 靳準의 정권찬탈로 멸망하고 다수의 匈奴人이 살해되었다. 이때 匈奴漢 都督陝西諸軍事로 長安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劉曜는 이를 기반으로 제2의 匈奴王朝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곳은 대체로 현재 陝西省 關中 지역에 해당한다.

110) 邱久榮, 1987, 3, 앞의 글, 46쪽.

111) 周偉洲는 “單于臺는 長安 부근의 渭城에 설치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陝西省 咸陽市の 渭城公社 지역이다”라고 하였다. 周偉洲, 1986, 앞의 책, 187쪽.

위 표는 319년 趙王·大單于를 자칭한 石勒이 石虎를 單于元輔에 임명했던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때 襄國에 설치된 單于庭은 畿内の 호인들을 그 통치대상으로 하였다.<sup>112)</sup> 이는 匈奴漢 말기 平陽 주위(匈奴漢의 畿内)에 거주하던 巴帥 및 諸羌·羯 10여만 落이 後趙에 귀항하자, 석륵은 이들을 司州 지역으로 천사시켰는데, 이로써 이들은 單于庭에 속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혹자의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13)</sup> 이후 석륵은 石宏과 石弘을 先後로 대선우에 임명하였으며, 이때 이상과 같은 조직이 계속해서 존속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석굉과 석홍이 대선우으로써 京畿의 호인들을 통치했었을 것만은 확실하다. 이후 석홍의 제위를 찬탈한 石虎는 鄴으로 천도하고 동시에 태자 石宣을 대선우에 임명하고 있는데, 이때 선우대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특별히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필자는 이 기능을 東宮이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바 있다. 그러나 이때 역시 都城 鄴과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던 호인과 한인에 대한 통치는 각각 單于계통과 司隸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胡漢分治의 실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서에서 경기지역으로 천사되었던 한인 ‘徙戶’와 氏·羌·胡·蠻 등 호인들을 서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sup>114)</sup> 혹자는 당시 ‘徙戶’와 호인들을 합해 본거지로 돌아가려 했던 자들이 수백여만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115)</sup>

112) 黃惠賢은 “적지 않은 胡人和 漢인들이 後趙 都城 襄國 주위에 분포하여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管理와 法禁에 있어서 상호 엄격한 구별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였다. 黃惠賢, 1997, 앞의 책, 80쪽.

113) 馬長壽, 1984, 앞의 책, 39쪽.

114) 『資治通鑑』卷99 晉紀21 穆帝永和七年(351)條, 3115~3116쪽, “初, [冉]閔之爲[後]趙相也, 悉散倉庫以樹私恩, 與羌·胡相攻, 無月不戰. 趙所徙青·雍·幽·荊四州之民及氏·羌·胡·蠻數百萬口, 以趙法禁不行, 各還本土, 道路交錯, 互相殺掠, 其能達者什有二·三.”; 『晉書』卷107 石季龍載記下 附冉閔傳, 2795쪽, “自[石]季龍末年而[冉]閔盡散倉庫以樹私恩, 與羌胡相攻, 無月不戰. 青·雍·幽·荊州徙戶及諸氏·羌·胡·蠻數百餘萬, 各還本土, 道路交錯, 互相殺掠, 且饑疫死亡, 其能達者十有二·三.”

115) 袁祖亮은 “사서상의 ‘數百餘萬’을 만약 200만 人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 戶數는 40만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袁祖亮, 1991, 5, 「十六國北朝人口蠡測

#### 4\_ 前秦

大單于 - 單于輔相 - 胡人 部落酋長 - 胡人部落

350년 苻洪은 大都督·大將軍·大單于·三秦王을 자칭한 후, 氏族 酋長 毛貴를 單于輔相에 임명하고 있는데, 위 표는 이러한 史實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sup>116)</sup> 이 조직은 苻氏가 關中으로 이주하기 전 後趙 말의 혼란을 이용해 자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휘하에 있던 本族 氏人을 포함한 호인들을 효과적으로 統御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sup>117)</sup> 이후 苻洪의 유언대로 關中을 차지한 그의 자 苻健이 352년에 대선우직을 태자 苻萇에게 물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상과 같은 선우대의 설치와 조직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5\_ 後燕

표 A

大單于 - 單于左輔 - 單于 八部豪酋 - 胡人部落  
 單于右輔

표 B

大單于 - 單于左輔 - 單于 四部豪酋 - 胡人部落  
 單于右輔 - 單于 四部豪酋 - 胡人部落

- 與王育民同志商榷, 『k22 魏晉南北朝隋唐史』, 44쪽.

116) 『資治通鑑』 卷98 晉紀20 穆帝永和六年(350)條, 3102쪽.

117) 지배선 교수는 “350년 윤 정월 苻洪은 大單于·三秦王이라고 칭하면서 氏族의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후조와 대립관계에 있던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원을 얻고자 하였다. 게다가 輔國·前·後·左·右將軍과 左·右長史, 左·右司馬, 從事中郎, 單于輔相 등의 관직을 설치하고 胡·漢人들을 이에 각각 임명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의 관료체계를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지배선, 2008, 앞의 글, 414~415쪽.

위 표는 後燕 말 慕容盛·慕容熙 때의 선우대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慕容寶가 대선우를 역임했었을 때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선우대 조직을 위 표에서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면, 표 A는 單于左·右輔의 구분 없이 그 밑으로 호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單于八部 酋豪를 둔 경우이며, 표 B는 單于左·右輔 밑에 각각 單于四部 酋豪를 두고 이에 상당하는 호인들을 통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이 실제 상황에 근접하는지는 알 수 없다.

國都 龍城에 燕臺<sup>118)</sup>를 설치한 모용성은 형벌에 엄하고 의심이 많았기에 반란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한다며 실시한 공포정치로 결국 이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sup>119)</sup> 이후 帝位에 오른 모용희는 燕臺를 北燕臺로, 그리고 北燕臺를 다시 大單于臺로 바꾸었으며, 이를 北平郡 내에 두고 있다.<sup>120)</sup> 동시에 대선우 밑으로 尙書 직위에 상당하는 單于左·右輔를 두고 있다. 주지하듯 後燕은 모용보의 통치시기를 지나면서 통치계층의 분열과 北魏의 수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모용성·모용희 때에 이르면 그 國勢와 疆域은 일찍이 慕容部落聯盟 때의 그것과 별반 차이 없이 쇠퇴하고 축소되었다. 이러한 後燕의 강역 축소는 모용희 때 幽·冀·營州 등의 세 개 州를 모두 遼西郡 내에 두었다는 史實<sup>121)</sup>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122)</sup>

이 밖에 우리는 여기에서 單于八部가 單于東·西·南·北部와 單于前·後·左·右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되는데, 이는 일찍이 모용희

118) 『十六國疆域志』卷12 後燕疆域志, 384쪽.

119) 『晉書』卷124 慕容盛載記, 3104쪽, “[慕容盛]懲[慕容]寶闇而不斷, 遂峻極威刑, 織芥之嫌, 莫不裁之於未萌, 防之於未兆, 於是上下振局, 人不自安, 雖忠誠親戚亦皆離貳, 舊臣靡不夷滅, 安忍無親, 所以卒于不免.”

120) 『十六國疆域志』卷12 後燕疆域志, 387쪽, “北平, 領縣七, 有大單于臺.”

121) 『十六國疆域志』卷12 後燕疆域志, 387쪽, “[慕容]熙時幽冀營三州, 皆在遼西一郡.”

122) 後燕 말에 이르면 축소된 疆域과 北魏의 계속된 침공으로 畿內와 畿外의 지리적 구분을 두고 胡·漢人을 통치하던 방식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慕容熙는 都城인 龍城에 大單于臺를 설치하지 않고 북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北平郡에 둘 수 있었다. 龍城 서쪽에 위치한 북평군은 북위의 침공이 있을시 이를 우선 막아야만 했을 것인데, 이때 대선우대 관할하의 胡人들이 이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도성을 비우고 北原에서 수렵했을 때, 石城令 高和가 司隸校尉 張顯을 죽이고 모반을 도모했지만 실패하였고, 반란을 평정한 그가 곧이어 州郡의 豪强과 單于八部 酋帥를 東宮에서 맞이하고 이들의 疾苦를 위무했다는 記載가 보이기 때문이다.<sup>123)</sup> 사서상의 ‘耨舊’를 사전적인 의미로 부락민 중 연령이 많은 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서는 部大·酋大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은 모용희가 高和의 亂으로 동요했었을 境內의 胡·漢人들을 위무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後燕의 호인부락과 관련하여 ‘北部司馬孫護,<sup>124)</sup> 그리고 ‘昭文帝(慕容熙時, 左部民得紫壁以獻<sup>125)</sup>’이란 기사가 출현하고 있으므로 單于八部를 單于東·西·南·北·前·後·左·右部로 보는 데에는 큰 의문이 없을 것이다.<sup>126)</sup>

## 6\_ 北燕

單于左輔  
 單于右輔  
 大單于 - 胡人 部落酋長 - 胡人部落  
 單于前輔  
 單于後輔

123)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5쪽, “[慕容熙]引見州郡及單于八部耨舊于東宮, 問以疾苦.”(밑줄은 필자)

124) 『晉書』 卷125 馮跋載記, 3127쪽. 주지하듯 建安年間(196~220) 曹操은 匈奴部衆을 통치하기 위해 左·右·南·北·中 五部로 나누고 동시에 漢人을 各部의 司馬에 임명하여 이들을 감독케 하였다(『晉書』 卷97 北狄匈奴傳, 2548쪽, “建安中, 魏武帝始分其衆爲五部, 部立其中貴者爲帥, 選漢人爲司馬以監督之.”). 이로써 左部司馬·右部司馬·北部司馬 등의 명칭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後燕의 北部司馬가 建安年間の 그것과 성격 면에서 같을지 여떨지는 알 수 없으나, ‘北部’가 單于八部 중의 北部를 가리키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125) 『太平御覽』 卷806 珍寶部5, 引范亨『燕書』, 3584-上쪽.

126) 지배선 교수는 “單于八部制는 遊牧制의 遺制로서 이후 北魏 道武帝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는 八國(部)을 두어 胡人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북위의 八部制는 후연의 제도를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배선, 1986, 앞의 책, 346~347쪽.

주지하듯 北燕의 馮跋은 昌黎에 오래 머물며 慕容鮮卑와의 접촉이 잦아 이미 夷俗化(慕容鮮卑化)된 한인으로 알려져 있다.<sup>127)</sup> 따라서 그가 한인출신이라 해도 선우대를 설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선우대 조직과 관련해서 胡三省은 “태자로 하여금 대선우를 겸임케 한 것은 匈奴漢 때부터 시작되었고 경우에 따라서 單于左·右輔를 두었다. 馮跋은 이를 增置하여 單于前輔·後輔를 두었다”<sup>128)</sup>라고 주해하였다. 그의 견해대로라면, 北燕의 호인에 대한 통치문제가 後燕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單于屬官이 후연 때의 單于左·右輔에서 單于左·右·前·後輔로 增置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單于前輔 萬陵은 300騎를 이끌고 일찍이 北燕에 투항한 적이 있던 柔然主 斛津을 호송하여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수행했으며 그리고 單于右輔 古泥는 北魏의 공격이 있자 기병을 이끌고 이를 정탐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sup>129)</sup>

## V.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大單于의 任職과 그 有關問題, 그리고 單于臺의 설치와 그 지배력이 미쳤던 지역적 범위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대선우의 임직과 그 유관문제와 관련하여, ① 儲君이 일반적으로 대선우를 역임한다는 후자의 주장은 꼭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② 儲君이 대선우의 직위를 가지고 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함으로

127) 『魏書』卷97 馮跋傳, 2126쪽, “既家昌黎, 遂同夷俗.”

128) 『資治通鑑』卷116 晉紀38 安帝義熙七年(411)條, 3647쪽, “太子領大單于始於劉漢, 時置[單于]左·右輔而已, [馮]跋增置[單于]前輔·後輔.”

129) 『晉書』卷125 馮跋載記, 3132~3133쪽.

써 帝位에 보다 쉽게 오를 수 있었으며, ③ 劉乂와 石虎를 제외하면, 대선우에 모두 오호왕조 군주의 아들들이 임명되고 있다. 그리고 ④ 漢人王朝 冉魏에서 대선우의 직능은 여타 오호왕조의 그것과 동일하며, ⑤ 前秦 苻健의 언급을 통해 대선우의 ‘鎮撫百蠻’이란 본래의 직능은 보다 분명해졌으며 동시에 한 왕조의 황제가 이 직능을 맡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자는 더 나아가 ① 지금까지 匈奴漢의 劉粲이 언제 대선우직을 역임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었던 차에, 순수 匈奴血統을 한 劉粲이 匈奴 반 그리고 氏族 반의 혈통을 가지며 氏·羌族의 후원을 받았던 대선우 劉乂를 살해하고 난 다음인 317년을 그가 대선우에 임명된 가장 합당한 시간으로 파악하였다. ② 後趙 石勒의 儲君 石弘이 대선우에 임명되었는지와 관련해 필자는 趙天王을 칭한 石勒이 곧이어 子 石宏을 대선우에 임명했고, 그리고 그가 지방관에 임명되어 都城 襄國을 떠날 때까지 대선우를 역임했으며, 이후 대선우의 후임으로 儲君 石弘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조치는 石虎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던 차에 이를 제거하려 하지 않은 석륵이 儲君 석홍에게 정식으로 京畿의 호인들을 통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尙書奏事를 관장케 함으로써 석호의 세력을 능가하고 그 사후에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한 석륵 나름대로의 고민이 엿보이는 그만의 최선책이었다고 생각된다. ③ 지금까지 後燕의 慕容寶 역시 언제 대선우에 임명되었는지와 관련해 통일된 견해가 없었는데, 都城 中山 주위로 적지 않은 호인들이 천사되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388년이 바로 그가 대선우에 임명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慕容垂가 後趙 石弘의 경우에서처럼 모용보로 하여금 尙書政事를 주관토록 했던 사실과 관계되어 주목되는 것이다.

둘째, 현존하는 사료의 부족으로 대선우의 任職과 선우대의 설치 史實을 모든 오호왕조 내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료의 한계 속에서 필자는 만약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보인다면 그 長官 대선우의 임직은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대선우의 임직만 보인다면 선우대의 설치 가능성도 혹은 다른 통치기구가 그 기능을 대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따라서 오희왕조에서 반 이상의 儲君이 대선우에 임명되고 있으므로 그  
 가 거주한 ‘東宮’이 선우대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면서 다음과 같  
 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胡三省의 주석으로도 알 수 있듯이, 氐·羌族 추장  
 들은 匈奴漢 劉聰 때의 儲君이었던 대선우 劉父에 귀속되어 그를 위해 ‘皆服  
 事東宮’했던 자들이다. 이후 劉粲이 이렇게 氐·羌族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  
 었던 유예를 제거하자 10여만落的 苻·강족이 匈奴漢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  
 었는데, 이런 사실은 苻·강족 추장이 東宮에서 ‘服事’하며, 동궁이 선우대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② 石弘의 帝位를 찬탈  
 한 石虎는 襄國에서 鄴으로 천도하고 얼마 후 子 石宣을 대선우에 임명하고  
 있다. 대선우에 임명된 석선은 五兵尙書 張離로 하여금 잠재적인 경쟁자들인  
 자신의 동생 幕府에 속한 관리와 병사들을 모두 ‘東宮’으로 재배치토록 하는 上  
 奏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石虎는 동궁의 안정을 위해 左·右統將軍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치 역시 동궁이 일반적인 ‘宮’으로서의 의미를 뛰어  
 넘어 아마도 다른 통치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기능은 바로 선우대 본래의 기능인 ‘鎮撫六夷’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필자는  
 선우대의 설치기록이 보이는 匈奴漢·前趙·後趙 그리고 後燕을 대상으로 유  
 관문제를 분석하였다. ① 匈奴漢 멸망 후, 318년 長安을 수도로 새로운 흥노왕  
 조 前趙를 건국한 劉曜는 326년까지 대선우의 임직과 선우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石氏 後趙와 가졌던 전쟁에서 패하면서 점차 장안  
 주위로 천사된 호인들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  
 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 劉曜의 原世子였던 劉胤이 이  
 때 生還하고 있는데, 유요는 이미 태자였던 劉熙를 폐하고 유운으로 새로 책봉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유운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로 그를 대선  
 우에 임명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 ② 後趙 石勒이 대선우를 자칭했었을  
 시기에 호인들을 鎮撫하던 기구는 선우대가 아닌 單于庭으로 불리었다. 그리  
 고 石虎가 鄴으로 천도한 후에도 이런 기능을 가진 기구는 있었을 것이 확실  
 하다. ③ 400년에 이르러 後燕의 慕容盛은 燕臺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기구  
 가 바로 이름만 다를 뿐 선우대이다. 燕臺가 설치되었으므로 그 長官인 대선

우는 존재했었을 것이 분명한데, 필자는 儲君 慕容定이나, 君主 慕容盛 본인, 혹은 제3의 인물 중 어느 누군가가 이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선우대의 조직과 그 지배력이 미친 지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선우는 황제에 의해 임명되어 非漢人 즉 호인들을 통치하는 관리이며, 동시에 이른바 선우대는 그 구체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통치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우대는 자연히 都城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필자는 匈奴漢·前趙·後趙·後燕·北燕 등의 왕조에서 상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개 왕조의 특징을 반영한 선우대 조직을 도표화할 수 있었다. 그중 匈奴漢의 單于·都尉 계통은 前趙에 이르면 흉노인이 다수 살해되고 통치지역과 그 경내의 민족성분 그리고 민족구성원에 큰 변화가 일어나 六夷 豪傑을 직접 左·右賢王 및 그 밑의 屬官에 임명하는 형태의 선우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後燕 말 慕容盛·慕容熙 때 대선우 밑으로 직위가 尙書에 상당하는 單于左·右輔를 두었으며, 이들은 대선우를 보좌하며 호인들을 통령한다. 後燕 慕容熙 시기에는 여타 오호왕조와 달리 선우대가 도성 주위가 아닌 北平郡에 설치되고 있는데, 이때 대선우는 아마도 京畿의 호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내의 그들을 직접 통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北燕에서는 호인들에 대한 통치문제가 後燕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單于左·右輔에서 單于左·右·前·後輔로 增置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오호왕조의 京畿에서 이루어진 통치방식, 즉 胡漢分治를 그 실질적인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京畿 외의 지역에서의 호한분치는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오호시기 각 왕조에서 호인들의 부락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각개 오호왕조들은 이들 부락에 대해 그 부락의 酋長·大人 혹은 군주의 자제를 地方官 혹은 軍事長官에 임명하여 통치하도록 했는데, 즉 後趙 石勒에 의해 關東으로 천사된 苻氏를 위시한 氏族과 姚氏를 위시한 羌族은 각각 枋頭와 灑頭에 집중 배치되어 苻洪은 龍驤將軍·流人都督에,<sup>130)</sup> 그리고 姚弋仲은 持節·十郡六夷大都督·冠軍大將軍에<sup>131)</sup> 임

130) 『晉書』 卷112 苻洪載記, 2867쪽.

명되어 자신들의 部衆을 통령하고 있다. 동시에 西秦 乞伏乾歸는 鮮卑僕渾部를 대상으로 秦興郡을 그리고 羌句豈部를 대상으로 興國郡을 설치하고 秦興·興國太守에 각각 자신의 자제를 임명하였고,<sup>132)</sup> 또한 後涼의 西平郡<sup>133)</sup>과 南涼의 樂都·湟河·澆河郡의 설치<sup>134)</sup> 역시 모두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듯 전적으로 호인을 대상으로 한 郡縣의 설치와 그 부락 추장을 地方官 혹은 軍事長官으로의 임명은 京畿 외의 지역에서 호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채용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史實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31) 『晉書』 卷116 姚弋仲載記, 2960쪽.

132) 『資治通鑑』 卷116 晉紀38 安帝義熙七年(411)條, 3643~3646쪽, “河南王乾歸徙鮮卑僕渾部三千餘戶于度堅城, 以子敕勃爲秦興太守以鎮之……河南王乾歸徙羌句豈等部衆五千餘戶于壘蘭城, 以兒子阿柴爲興國太守以鎮之.”

133) 『晉書』 卷122 呂光載記, 3057~3058쪽, “[呂]光西平太守康寧自稱匈奴王, 阻兵以叛, 光屢遣討之, 不捷.” 西平太守 康寧이 匈奴王이라 자칭한 후 郡民을 이끌고 後涼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그가 흉노 출신으로 그 郡民은 흉노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134) 『晉書』 卷126 禿髮烏孤載記, 3142쪽, “[禿髮烏孤]降[呂]光樂都·湟河·澆河三郡, 嶺南羌胡數萬落皆附之.”

## 참고문헌

- 『漢書』·『晉書』·『魏書』·『資治通鑑』(역대 中國正史와 『資治通鑑』은 모두 北京, 中華書局 출판의 標點校勘本을 이용하였다.)
- 『十三經注疏』 上冊 所收, 『毛詩正義』 卷3-2, 中華書局影印本, 1983.
- 『十六國疆域志』,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1936.
- 『十六國春秋輯補』,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1936.
- 『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98.
-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 高敏, 1998,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築摩書房.
- 邱久榮, 1987. 3, 「十六國時期的胡漢分治」, 『中央民族學院學報』.
- 김영환, 2005, 「五胡十六國時期 後趙 동치자 石虎의 文化變容 연구」, 『中國學報』 51.
- 內田吟風, 1975, 『北アジア史研究-匈奴篇』, 京都: 同朋舍.
- 唐長孺, 1955, 『魏晉南北朝史論叢』, 北京: 三聯書店.
- 馬長壽, 1984, 『氏與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萬繩楠, 1983, 『魏晉南北朝史論稿』,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 史念海, 1992. 3, 「十六國時期各割據霸主的遷徙人口」, 『中國歷史地理論叢』.
- 呂思勉, 1983, 『兩晉南北朝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呂一飛, 2001. 2, 「匈奴漢國的政治與氏羌」, 『歷史研究』.
- 王仲榮, 1979, 『魏晉南北朝史』 上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袁祖亮, 1991. 5, 「十六國北朝人口蠶測-與王育民同志商榷」, 『k22 魏晉南北朝隋唐史』.
- 陸思賢, 1985. 3, 「撐犁孤塗單于」詞義反映的‘纛鞬氏’族源」, 『內蒙古大學學報』.
- 이춘호, 2008, 「統府體制와 後燕·南燕의 建國」, 『東方學』 15.
- 李椿浩, 2008. 4, 「匈奴漢國的中央官制特點」, 『中國邊疆史地研究』.
- 이춘호, 2010, 「五胡時期 漢人王朝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23.
- 李紅艷, 2008. 1, 「關於十六國胡漢分治問題的思考」, 『山東教育學院學報』.

- 林幹, 1986, 『匈奴通史』, 北京: 人民出版社.
- 周偉洲, 1986, 『漢趙國史』,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周偉洲, 1987, 『西北歷史研究』, 西安: 三秦出版社.
- 周偉洲, 1992, 『中國中世西北民族關係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 周一良, 1997, 『魏晉南北朝史論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 一潮閣.
- 지배선, 1998, 「永興元年 이후의 前趙」, 『中國學報』 38.
- 지배선, 2008, 「前秦 苻堅에 대하여-358년까지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44.
- 澤田勳, 1978, 「匈奴君長權の性格-匈奴遊牧社會の歴史的規定をめぐって」, 『駿台史學』 43.
- 韓犇, 2001. 5, 「十六國時期的‘單于’制度」, 『內蒙古大學學報』.
- 黃烈, 1987, 『中國古代民族史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黃惠賢, 1997, 『中國政治制度通史』 第4卷 『魏晉南北朝』, 北京: 人民出版社.

**[ABSTRACT]**

The controlling mode for Hu nationality and its na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Sixteen Kingdoms: The appointment of DaChanYu and the founding of the ChanYuTai

Lee, Chunho

DaChanYu is a military commander, controlling Hu nationality. Its control of the organization is the ChanYuTai. I will try to explain DaChanYu for holding a post and the questions concerned. I will make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founding of the ChanYuTai and the area being ruled by it. The aim of this explanation i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political institution of Hu Kingdoms.

First, there is the appointment of DaChanYu and the questions concerning it. Someone say the crown prince was appointed as DaChanYu in general, but the opinion isn't necessarily accurate. The crown prince has the post of DaChanYu, according to its ability; to be able to ascend as Emperor easily. In addition, except for LiuYi and ShiHu, DaChanYu is appointed by the Emperor's son during the period of the Sixteen Kingdoms. As a Han Kingdom, RanWei, its Emperor RanMin appointed RanYin his son to be DaChanYu, the same as Hu kingdoms's. Through FuJian's language, we have known DaChanYu must control the Hu nationality, and the Emperor cannot work from it. At the same time, three facts follow: ① After LiuCan killed LiuYi in 317 years, he appointed DaChanYu. ② In HouZhao, after ShiLe ascend as

Emperor, appointed ShiGuing his son to be DaChanYu. After ShiGuing became the local official, ShiLe appointed ShiHong the crown prince DaChanYu. ③ In HouYan, at 388 years, MuRongChui didn't appoint DaChanYu. At that time, he appointed MuRongBao his son to be DaChanYu. This matter was closely related to the rule of Hu nationality and increased to MuRongBao's power.

Secondly, because of the lack of historical data, we aren't able to find out more about the appointment of DaChanYu and the founding of the ChanYuTai in all of Hu Kingdoms. Limited to the lack of historical data, if the ChanYuTai was founded, DaChanYu as a military commander should have been appointed. On the contrary, if we only found that DaChanYu was appointed, the ChanYuTai maybe was founded, or another organization maybe replaced the functions of the ChanYuTai. In such circumstances, 'Eastern Palace' where the crown prince lives, replaces the functions of the ChanYuTai. To illustrate this problem, I will present two examples. ① In XiongNuHan, during LiuYi as the crown prince, served as DaChanYu. 'Eastern Palace' maybe replaced the functions of the ChanYuTai. ② In HouZhao, ShiXuan as the crown prince, served as DaChanYu. He would strengthen 'Eastern Palace'. However, we know the Emperor of HouZhao, ShiHu should also strengthened 'Eastern Palace'. So in HouZhao, ShiXuan as DaChanYu, 'Eastern Palace' maybe replaced the functions of the ChanYuTai. Also, I have analyzed XiongNuHan, QianZhao, HouZhao and HouYan, they have been founded the ChanYuTai. ① In QianZhao, from 318 years to 326 years LiuYao had not founded the ChanYuTai. We know to 326 years, QianZhao defeated HouZhao. This matter closely relates how to rule Hu nationality in the GuanZhong area. However, at this time, LiuYin as the original prince of LiuYao, came back to the QianZhao.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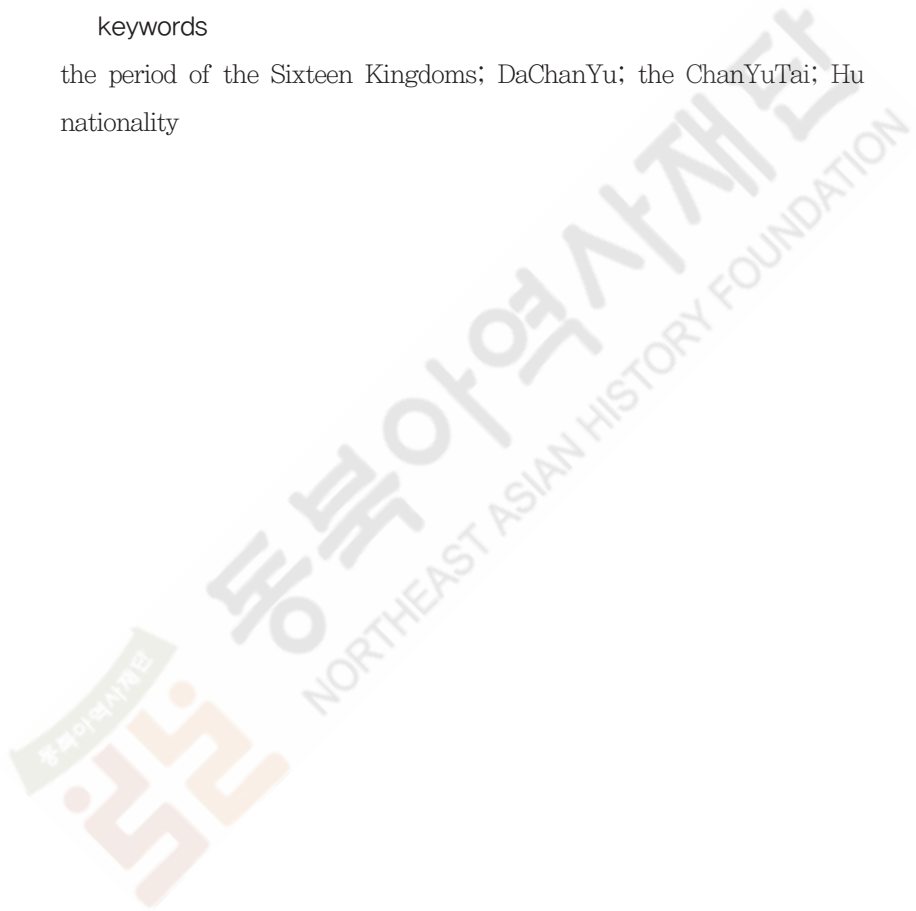
LiuYao had to make LiuYin prince in the face of such a problem. In such circumstances, LiuYao considered what to do. There he founded the ChanYuTai and appointed LiuYin DaChanYu. ② In HouZhao, the organization of ruling Hu nationality is not called the ChanYuTai, be called the ChanYuTing. But, after ShiHu moved the capital to Ye city, the organization was founded. ③ In HouYan, to 400 years MuRong-Sheng founded the YanTai that its name was different from other organizations, but the same as the functions of the ChanYuTai.

Third, about the ChanYuTai and its area controlled, DaChanYu was appointed by the Emperor, it was also the official Hu nationality commander. The so-called the ChanYuTai is an organization controlled Hu nationality. Therefore, in general, the ChanYuTai was founded in the capital or the vicinity of the capital. On the ChanYuTai of XiongNuHan, QianZhao, HouZhao, QianQin, HouYan, and BeiYan, I made each char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ingdom. Among them, after the fall of XiongNuHan, the ChanYuTai was changed. The ChanYuTai of QianZhao established by the XiongNu nationality was different from XiongNuHan's, because the number of XiongNu nationalities was reduced, and each ethnic composition was changed, so corresponding changes happen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ChanYuTai. In addition, in HouYan, MuRongSheng and MuRongXi placed ChanYuZuoFu and ChanYuYouFu of corresponding to the ShangShu positions under DaChanYu. They advised DaChanYu, to rule Hu nationality in JingJi area. DaChanYu of HouYan is different from other Hu kingdoms's, he didn't rule Hu nationality in JingJi area. Because the ChanYuTai was founded by the local(the country of BeiPing), so it was likely to rule all Hu nationality of the kingdom. In BeiYan, the ruling Hu nationality was important than HouYan, ChanYuZuoFu and

ChanYuYouFu additionally ChanYuQianFu, ChanYuHouFu, were all four assistants of DaChanYu.

keywords

the period of the Sixteen Kingdoms; DaChanYu; the ChanYuTai; Hu nationality



# 대한제국기 순종의 西巡幸 연구

- 『西巡幸日記』를 중심으로 -

이왕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소 전임연구원

## I. 머리말

대한제국 최후의 황제인 순종이 한반도의 남북 국경지대인 부산과 신의주를 순행한 것은 1909년 1월과 2월이었다. 순종이 京城에서 부산까지 순행한 것을 남순행이라고 하며, 신의주에 간 것을 서순행 혹은 서북순행이라고 하였다. 순종이 한반도의 국경지대에 순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조선시대 국왕은 물론 고종도 선대왕의 능침이 있는 경기지역을 위주로 행차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경우는 최초이며 최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대미문인 순종의 순행은 어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거행된 것인가? 기존 선행 연구<sup>1)</sup>에서 언급했듯이 순종의 순행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통감부, 그리고 그들의 상위 조직인 일본 정부에 의해 치밀하게 사전 모의되어 진행되었다. 일본은 고종의 양위를 강압적으로 이룬

※ 투고일: 2010년 7월 7일, 심사일: 2010년 10월 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1) 李旺茂, 2007,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107.

다음 순종 치하의 대한제국을 군대라는 무력적 방법과 병행하여 유화적인 방법으로 식민지화할 정책의 연장선에서 순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격화되던 의병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상황에서 국내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친일로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순행을 기획한 것이다.<sup>2)</sup>

필자가 순종의 순행이 일본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사전 모의되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한제국의 일본 식민지화라는 결과론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明治維新을 거치면서 메이지 천황의 순행을 이용하여 일본의 국내 여론을 모으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행이라는 국가의례를 통해 대한제국민의 황실에 대한 충성과 민심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시발점을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국가로 올수록 의례는 권력에 의해 가장 조작하기 쉬운 수단의 하나이며 근대 일본이 국가적인 공식의례를 통해 국민통합을 성공하였던 사례가 있다.<sup>3)</sup> 당시 일본은 메이지 천황의 순행을 통해 일본 각지에 천황상을 심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막부세력, 반천황파, 반유신파 등으로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는 효과를 누린 경험이 있었다.<sup>4)</sup>

메이지 천황의 순행은 1872년 5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순행이 거행되기 이전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이미지가 막부의 장군은 물론 지방의 다이묘보다도 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 간격을 없애기 위해 천황이 일본 열도의 유일한 군주라는 이미지를 확인시키며 전국의 관료와 민인의 협력을 이끄는 유인책으로 대중에게 천황이 보여지는 순행 의례를 거행하였다. 따라서 천황의 순행은 새로운 일본

2) 「韓帝の巡幸と其影響」, 『朝鮮』 2, 皓星社, 1998, 43~44쪽.

3) 박진우, 1999, 「천황 巡幸의 전개와 민중」, 『부대사학』 23.

4) 佐佐木克, 2002, 「明治天皇のイメージ形成と民衆」,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原武史, 2002, 「근대 일본의 교코케이(行幸啓)에 관한 고찰」,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아연.

제국을 위한 분열된 지방민의 통합과 정치적 구심점의 창출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구현되었다고박에는 볼 수 없겠다.<sup>5)</sup>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식민화 과정에서 군대와 경찰을 통한 무력 진압과 함께 순종의 순행을 통해 자신들의 통치권을 정당화하고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대미문의 황제 순행으로 각 지방의 유교적 가부장제에 젖어 있던 다수의 유생과 민인들은 순종의 행동거지가 옳은 것은 물론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때 순종을 보좌하여 순행의 전체 진행을 지휘한 통감 이토와 다수의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이 호의는 아니라도 더 이상 적의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순종이 순행의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반포하였던 명령에 늘 이토에 대한 치사와 일본 천황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은 한인들에게 자의적으로 일본제국 체제를 받아들이는 유도적인 선전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sup>6)</sup> 이는 남순행시 지방의 한인들에게 문명화된 일본제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순종이 상경하면서 대전역에서 마주친 전직 관료들에게 내린 諭示와 이토가 대구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더라도 입증된다.<sup>7)</sup> 그러므로 순종의 순행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인들의 마음을 통감부 체제로 끌어냄과 동시에 그들의 충성이 곧 순종의 상위에 존재하는 일본제국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겠다.

이와 같이 일제의 대한제국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한 순종의 순행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대한제국기 황제의 순행이 일제 통치책의 연장선에서 연구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주 사료로 인용하는 『西巡幸日記』와 『남순행일기』에 대한 해제에서 순종의 순행을 언급한 것과 남순행 연구가 있으나 이는 초보적인 연구라고 하겠다.<sup>8)</sup> 그리고 최근에 순

5) 小路田泰直, 1998, 『國民(喪失)の近代』, 吉川弘文館, 76~88쪽.

6)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사상과 행동』, 한길사, 419쪽.

7) 이왕무, 2007, 앞의 글, 75~80쪽.

8) 李章熙, 1973, 『남순행일기』, 『국학자료』 9, 장서각, 문화재관리국. 이 외에 순행 사

종의 순행을 통해 한국인들이 통감부의 의도와는 달리 애국심을 형성하는 기류가 조성되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 순행을 분석하는 틀이 정치 지배 구조의 시각에서 한국인들을 순종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이 연구는 순행을 기도하던 권력층 내부의 분열과 한국인들의 다양한 반항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9)</sup> 다만 이 연구는 통감부 문서와 신문자료만을 주로 사용하여 순행의 당사자였던 대한제국 황실과 궁내부, 내각의 의도가 담긴 순행 일기류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서순행일기』를 바탕으로 궁내부와 내각의 자료를 이용하여 순종의 서순행을 설명하고자 한다. 순종의 서순행에 관련해서는 연대기 사료, 신문과 잡지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서순행일기』와 같이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서순행의 전체 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일기를 제작한 곳은 대한제국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던 관료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모색할 수 있으며, 신문·잡지와 같이 일정한 시각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료보다 순행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sup>10)</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서순행일기』를 바탕으로 순종의

---

료는 규장각의 『남서순행일기』(규17846), 장서각의 『남순행일기(K2-182)』, 『남순행관계서류(K2-4684)』, 『서순행일기(K2-222~223)』, 『내각일기(K2-188)』,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통감부일기』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순행에 관련된 황제 의례와 典範, 동원 인원과 물자, 지방의 준비 상황, 궁내부와 통감부 그리고 일본 정부에 왕래한 전보, 민심의 동향 등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순종의 순행 연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그 학술적 가치도 밝히지 못한 실정이다.

9) 김소영, 2010,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忠君愛國論」, 『한국사학보』 39.

10) 이 글에서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작성한 일기를 중심으로 황제의 순행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순행 관련 신문 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일기 이외 자료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내각과 통감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 이는 일기 자료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과 동시에 황실과 내각의 시각에서 순행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기에 대한 설명을 제2장에 삽입하였다. 이 글은 순행을 연구 주제의 중심으로 두었으며, 그 핵심적 자료가 『서순행일기』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차후 순종의 순행 전체를 다루게 되면 당대의 한일 양국에서 간행한 신문자료도 인용하고자 한다.

서순행을 일본 제국주의의 보이지 않는 통치술의 하나로 인식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감부를 위시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순종의 순행을 통해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강압적이 아닌 유희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서순행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설명하여 대한제국 황실 순행 의례의 실체를 정리하고자 했다.

## II. 『서순행일기』의 구성과 특징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서순행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서순행과 관련된 자료는 장서각에 소장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중에서 『서순행일기』가 일자별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일기는 1909년 1월 27일~2월 3일까지 순종이 통감과 궁내부·통감부의 직원들을 대동하고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궁정열차로 순행한 일정을 기록한 궁내부의 자료이다.

현재 순행 관련 자료는 궁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서순행일기(K2-222~223 장서각)』, 『남순행일기』(K2-182 장서각), 『남순행시일기(K2-183 장서각)』와 內閣의 『內閣日記(K2-188 장서각)』, 통감부의 순행 관련 보고서(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9), 그리고 작자 미상인 『남순행관련서류』(K2-4684 장서각)와 『南西巡幸日記』(규17846 규장각) 등이 있다. 이 중 『서순행일기』와 『남순행시일기』, 『남순행일기』, 『남순행관련서류』는 장서각에만 소장된 유일본이다.

이 글의 주 자료로 사용하는 『서순행일기』는 궁내부에서 1909년 서순행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심에 궁내부라고 인쇄된 용지에 세로로 기록한 1책의 필사본이다. 국어와 한문의 혼용체이며 일본어가 조금 이용되었다.

『서순행일기』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글을 보면 이 책의 작성 배경

이 되는 서순행의 목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일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囊日 聖駕南巡<sup>하</sup>사 各地의 治績을 下察<sup>하</sup>옵시고 聖意가 稍舒<sup>하</sup>옵시나 億兆를 綏撫<sup>하</sup>옵시는 宸憂는 尙<sup>하</sup> 此<sup>뿐</sup>으로써 滿足히 아니<sup>하</sup>사 再次 西方에 巡幸<sup>하</sup>옵시기를 宸念<sup>하</sup>옵시더니 一月 十九日 統監公爵 伊藤博文이 陛見<sup>할</sup>時에 巡幸<sup>하</sup>옵신 果로 地方行政의 刷新과 民心의 啓發에 多大<sup>한</sup> 影響이 及<sup>하</sup>고 事와 又統監이 不日間歸朝의 途에 就<sup>함</sup>을 上奏<sup>하</sup>오니 陛下께서는 西方巡幸<sup>하</sup>옵실 聖意가 滋滋有之<sup>하</sup>옵서 統監의 歸朝前에 再次 其轉導에 의<sup>하</sup>야 西方各地에 巡幸<sup>하</sup>사 親히 民庶의 疾苦를 下詢<sup>하</sup>옵시기를 促<sup>하</sup>옵시니(중략) 今維新이 日淺<sup>하</sup>야 民庶가 尙未安堵<sup>하</sup>니 寧히 西陲의 風雪을 親冒<sup>하</sup>야 聖躬으로써 民庶를 安撫코자 하시와(중략) 地方父老縉紳을 召<sup>함</sup>서 親히 彼等一派의 懷抱한 昏迷의 舊思想이 時勢의 進運에 相背<sup>하</sup>야 國家와 休戚이 不同<sup>하</sup> 所以로 要義를 告諭<sup>하</sup>옵시고.(후략)

위의 인용문에서 순행의 주목적이 지방의 여론 주도층의 후진적인 사고를 깨우쳐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심의 향방이 대부분 반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그 민심을 혼미하고 시대에 뒤쳐졌다고 보는 인식은, 곧 반일의식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통감 이토는 서순행 이전에 거행한 남순행에서 순종의 권위와 자신의 연설을 통해 한국인의 항일의식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sup>11)</sup> 서순행도 같은 취지에서 거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종의 용모를 통해서도 지방민의 변화가 있었는데, 황제가 단발을 하고 양복을 착용하는 것을 본 지방민들이 다투어 그 모습을 따라가려 한 것이다.<sup>12)</sup> 순종의 순행 이전에는 단발과 양복 차림이 고유의 풍속과 민족적 자긍심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된 것에 반해

11) 이왕무, 2007, 앞의 글, 79~83쪽.

12) 메이지 천황의 순행에서도 '開化君主'를 표방하며 양복을 착용하였다. 야스다 히로시, 하중문·이애숙 역, 2009, 『세 천황 이야기-메이지, 다이쇼, 쇼와의 정치사』, 역사비평사, 52~53쪽.

순행을 통해서 황제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는 긍정적인 여론으로 변화였다.<sup>13)</sup>

이 외에 『서순행일기』는 일자별로 기록하고 있어서 순행의 시간별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서순행의 전 과정을 일정에 맞추어 정리한 것은 이 자료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가 지니는 가치는 책의 말미에 실린 부록으로 다른 서순행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부록에는 서순행을 위한 「地方鹵簿式」, 「地方陞見式」, 「宮廷列車拜塵略圖」, 「供奉員氏名表」, 「下賜金明細表」 등이 있어서 서순행의 제반 규정과 실제적으로 운영된 모습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地方鹵簿式」과 「地方陞見式」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 순행의 의례 절차와 威儀를 알 수 있다. 대한제국 황제의 순행 의례는 『대한예전』<sup>14)</sup>에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이처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순행일기』가 순행의 일정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순행의 주요한 내용을 일자별로 본다면 순행의 전 과정과 방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기상 주요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09년 1월 19일(화요일)

순행 발표, 통감부와 준비사항 협의.

• 1월 27일

오전 6시 30분 창덕궁 출발, 오후 4시 35분 평양 도착.

• 1월 31일

오후 4시 15분 평양 도착, 정주역에서 勅語 반포와 伊藤博文의 訓諭.

• 2월 1일(월요일)

平遠堂 관람, 관찰사에게 칙어, 檀君陵 治山, 乙支文德 등의 묘지 차례, 箕子陵 봉심.

• 2월 2일

黃州驛에서 황해관찰사와 지방관 및 縉紳父老에게 칙어를 布諭.

• 2월 3일

13) 김소영, 2010, 앞의 글, 171~172쪽.

14) 『대한예전』, 장서각 K2-2123.

滿月臺 관람, 학교생도에게 勅諭 선포, 穆淸殿 봉심, 강원도 지방공공  
사업비 하사.

• 2월 4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내외국인과 奏任官 등의 문안.

• 2월 6일

統監官邸 방문, 伊藤博文이 서순행을 호종하여 愚昧한 人民을 일깨워  
주어 감사한다는 勅語.

이와 같이 『서순행일기』는 순종의 한반도 서북부 순행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여 주요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순종의 기거를 중심으로 순행에 참여하는 인물들, 교통기관과 기물, 숙소와 방문지, 동원된 환영객과 시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당시 순종의 정책 내지 활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순행보다 더 큰 일이 없었으며, 순행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사료로 이 일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본다. 다만 이 책에는 순행을 촬영한 필름과 사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음에도 그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순종이 각 지역에 내린 勅諭와 통감 이토의 연설문이 실려 있어서 서순행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으며, 이를 대하는 각 지역 환영객의 모습을 통해 당시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 일기는 순종의 서순행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보다도 다양하고, 상세하게 정리한 종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순행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이용되어야 할 사료이다. 또한 고종이 강제로 순종에게 讓位한 이후 통감 정치기에 일제가 대한 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순종을 이용한 정책과 그에 따른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 Ⅲ. 서순행의 배경과 과정

순종의 서순행은 1909년(융희 3) 1월 19일 관보와 호외로 공포하면서 결정되었

다.<sup>15)</sup> 순행은 정월 초의 매서운 겨울 날씨<sup>16)</sup>임에도 불구하고 서북부 의주까지 왕복하는 여정이었다. 순종이 최선의 안락한 궁정열차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순행한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장거리 여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남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의 여정이었으므로, 서순행은 남순행을 마친 지 보름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도 순종이 순행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순행은 京城에서 부산까지의 남순행과 마찬가지로 순행지 선정, 시위군 병 동원, 순행로 정비 등의 사안을 순종과 대신들이 협의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정 전반을 좌우한 것은 통감부였으므로 다분히 통감인 이토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순종은 남순행의 전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 이토의 동행과 노고를 치하하며 한인들에게 그의 공적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순종의 자발적인 의도였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연대기 자료는 물론 통감부의 문서에까지 순종이 한반도 내의 소요를 안정시키고 우매한 인민들을 啓導하기 위해 이토를 위시한 통감부의 도움으로 순행에 임했다고 하였다.

순종의 개인적 의지는 궁내부와 내각의 친일관료는 둘째치더라도 일본인 관료들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종이 보위에 오른 것은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일제의 강제적인 고종의 양위로 이루어졌으므로 내각은 물론 궁내부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sup>17)</sup> 이를 반영하듯이 남순행에서 통감 이토가 군함을 이용하여 순종을 일본으로 拉去한다는 소문이 민간에 돌았으며, 순행 당시에는 경상도 지역 유생들이 철도

15) 『순종실록』 권3, 융희 2년, 1월 19일; 『서순행일기』 1월 19일, 순행 반포건, 장서각 K2-223.

16) 행재소 내의 실내 온도는 난방을 하지 않으면 영하 9도 전후였다. 『서순행일기』 1월 23일, 전보.

17) 서영희, 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60~362쪽.

노선에 누워 上訴號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sup>18)</sup>

그러면 서순행 지역이 동북부가 아닌 서북부로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반도 동북부인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이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보다 都會가 발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도 있겠지만, 남순행과 마찬가지로 순행에 이용되는 교통기관인 특별열차가 지나가는 경부선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조건보다 남순행의 실시 이후 해당 지역의 민심이 안정되고 지방행정이 쇄신된 결과가 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통감부에서 순종의 순행을 한반도 일정지역에 실시해 효과를 본 이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순종은 통감 이토가 일본으로 歸朝하기 전에 재차 서순행도 보좌하기를 원했다. 이때 이토는 날씨가 불순하여 연기할 것을 諫奏하였으나, 오히려 순종이 지방 인심의 維新과 按撫를 위해 강행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하였다.<sup>19)</sup>

순종이 서순행을 강행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현전하는 연대기 자료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순종실록』을 비롯한 순종대 기록 작성이 일본인과 친일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통감부에서 작성한 문서와 내각 자료의 비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통감부와 내각은 대한제국의 내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종의 순행 관련 기사를 가감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순행일기』가 통감부 자료보다 작성 시기가 뒤쳐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기의 내용이 크게 가감 없이 당시의 일을 기술했음을 알 수 있다.

통감부 자료에 따르면, 순종의 서순행은 남순행과 마찬가지로 통감부에서 사전에 계획한 일이었다.<sup>20)</sup> 통감부에서는 1월 19일 오후 9시 30분 통감의 명의

18) 「西南巡幸」, 『新民』 14, 1925; 국사편찬위원회, 1999, 『伊藤統監 演說後の 韓民의 反響 및 奉迎狀況』, 『통감부문서』 9.

19) 『서순행일기』 서문, 장서각 K2-223.

20) 1907년 순종의 즉위 이후 궁내부와 내각에 일본인이 관료로 임명됨에 따라 통감부 직원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통감부의 기능을 축소할 정도였다. 따라서 순

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에게 순종의 서북 순행 계획 안건을 전보로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을 보면, 이날 이토가 신임 군사령관 오쿠보[大久保]를 대동하고 순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순종이 순행에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서 이토가 귀국하기 전에 서순행에 동반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서순행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다음 날 아침에 공포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오후에 통감관사에서 대신회의를 열어 27일 서순행의 출발시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고 20일부터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토는 순종이 자신과 동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남순행으로 지역 인심이 감동하고 화합되었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이 순행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은 남순행에서도 보인다. 순종은 지방을 시찰하여 백성의 고통을 알아보려는 것이 남순행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토가 순행에 배종하는 것이 자신을 돕고 난국을 수습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의병에 의한 지방의 소란함이 안돈될 것을 바란다’는 내용에서 순행 결정이 누가 어떻게 진행하였다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당시 정세상 필연적으로 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다고 하겠다.<sup>22)</sup>

특히 통감부는 남순행에서 순종의 순행을 맞이하기 위해 지방의 한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奉迎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3)</sup> 통감부의 의도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직접 통치에 소요되는 과도한 통치비용의 부담 때문에 상당기간 대한제국 황제라는 정치적 상징을 식민지 간접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

---

행이 통감부에 의해 기획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궁내부와 내각의 일본인 관료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칙령과 법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통감이 동의해야 황제에게 상주할 수 있었으므로 순행이 통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21) 국사편찬위원회, 1999, 『皇帝陛下 統監同伴 西北巡幸 計劃 件』, 『통감부문서』 9; 『서순행일기』 1월 19일, 회의.

22) 『內閣日記』 융희 3년, 1월 4일(양력).

23) 국사편찬위원회, 1999, 『韓皇 地方巡幸에 따른 地方日韓人의 民情 報告 件』, 『통감부문서』 9.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이런 상황에서 남순행이 진행되었고, 그 반응이 좋아서 재차 서순행이 이어지게 되었다.

서순행은 1909년 1월 27일~2월 3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남순행보다 1일이 더 많았다. 서순행은 京城의 남대문역에서 임시로 편성한 궁정열차로 출발하여 평양→의주→신의주→평양→개성 등지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서순행 일정은 순행이 대내외에 公布된 다음 날인 1월 20일에 확정되었으며, 관보와 호외로 반포되었다. 당시 정해진 일정은 인쇄되어 호종원에게 배포되었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순종의 서순행 일정】<sup>25)</sup>

- 1월 27일 오전 6시 30분 창덕궁 敦化門 出御  
罷朝橋 → 鐵橋 → 鍾路 → 黃土峴 → 新橋 → 布德門前路 → 大漢門  
(덕수궁 문안)
- 1월 27일 오전 7시 45분 대한문 出御
- 1월 27일 오전 8시 南大門驛 御發車
- 1월 27일 오후 3시 45분 平壤驛 御着 經宿
- 1월 28일 오전 9시 평양역 御發車
- 1월 28일 오후 3시 45분 新義州驛 御着 御經宿
- 1월 29일 신의주 御發車(御發着時刻 임시 마련)
- 1월 29일 의주 御着 御經宿
- 1월 30일 의주 御發車
- 1월 30일 신의주 御着 御經宿
- 1월 31일 오전 9시 신의주역 御發車
- 1월 31일 오후 12시 20분 定州驛 御着
- 1월 31일 오후 1시 20분 정주역 御發車
- 1월 31일 오후 4시 45분 평양역 御着 御經宿
- 2월 1일 평양 御駐蹕
- 2월 2일 오전 9시 30분 평양역 御發車

24) 김백영, 2009,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인천학연구』 11, 64쪽.

25) 『南西御巡幸日程』; 『내각일기』 장서각 K2-188; 『서순행일기』 1월 19일, 宮庭列車 發着日時件奏裁.

- 2월 2일 오전 10시 35분 黃州驛 御着
- 2월 2일 11시 35분 황주역 御發車
- 2월 2일 오후 3시 55분 開城驛 御着 御經宿
- 2월 3일 오후 1시 개성역 御發車
- 2월 3일 오후 3시 10분 남대문역 御着

위의 순행 일정은 1월 23일 호종원에게 모두 배포되었다. 순행 일정을 알리는 인쇄물에는 西巡日程, 供奉員氏名, 地方鹵簿式, 西巡幸時禮式上注意件, 在地方陛見式, 宮庭列車配寘畧圖, 事務分擔表 등의 7개 사항이 기재되었다. 호종원에게 배포한 순행인쇄물은 안내서이면서 각자의 행동양식을 통제하고 통일하기 위한 규범서의 역할을 하였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한 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행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대책임과 동시에 순행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자들을 위한 방도였다.<sup>26)</sup>

그리고 순종의 호종원 중에서 궁정열차에 탑승하는 자들에게는 순행이 있기 전인 1월 25일 乘車證票가 미리 발급되었다. 승차증표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流用하는 폐단을 방지함과 동시에 경호를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호종원에게는 승차표와 함께 궁정열차의 시간표도 함께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움직임과 순행 호종원의 통일적인 움직임을 이루기 위한 의도였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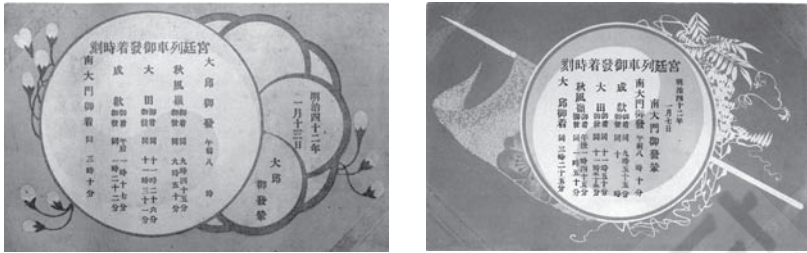
순행의 호종원은 궁내부, 내각, 통감부의 3개 부처에서 선발되었다. 호종원은 모두 279명으로, 궁내부 201명, 내각 49명, 통감부 29명이었다. 이 중 한국인은 198명이며 일본인은 81명으로 순행에 동반한 일본인의 수치가 1/4 정도였다.<sup>28)</sup>

호종원에서 주요 인물을 보면, 完順君 李載完, 宮內府大臣 閔丙奭, 侍從院卿 尹德榮, 掌隸院 禮式官 玄百運, 奎章閣典製官 尹喜求, 典膳司掌膳 安

26) 『서순행일기』 1월 23일, 巡幸印刷物配付.

27) 『서순행일기』 1월 25일, 乘車證配付.

28) 『내각일기』 권7, 1월 27일.



〈그림 1〉 궁정열차 시간표<sup>29)</sup>

淳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中樞院顧問 朴齊純, 內部大臣 宋秉峻, 軍部大臣 李秉武, 法部大臣 高永喜, 學部大臣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趙重應, 侍從武官 砲兵正領 魚潭, 步兵正尉 李秉規, 한성 고등학교 교수 呂圭亨, 內閣書記官長 韓昌洙 등이 있다. 일본인으로는 宮內府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 內藏院理事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大韓醫院 의관 겸 전의 스키 겐노스케[鈴木謙之助], 대한의원 기사 겸 藥劑官 고지마 스케노리[兒島高里], 勸業模範場長 혼다 고스케[本田幸介], 주차한국군사령관 육군대장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sup>30)</sup>

한국인 호종원에는 女官 5명이 있었는데,<sup>31)</sup> 이들은 궁정열차에서 순종의 화장실을 담당할 정도로 황제의 기거를 담당하였다. 순종의 기거를 담당하는 것은 여관만이 아니라 의사와 이발원에 이르기까지 궁궐 생활에서 필요한 인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sup>32)</sup> 다만 열차와 행재소에서 식사를 담당할 典膳司의 膳手와 廚手 7명은 孫澤호텔의 조리사 10명으로 교체되었다.<sup>33)</sup> 그렇지만 순종의 식사를 온전히 서양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순행을 하기 전인 1월 25일에 평양, 의주, 신의주의 행재소를 설치할 때 여관 2명 및 膳手와 婢子 1명씩

29) 현재 서순행 궁정열차 시간표가 발견되지 않아 남순행시의 시간표를 참고하였다. 민속원,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30) 『순종실록』 순종 2년, 1월 21일.

31) 여관들은 순행지에서 가마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서순행일기』 1월 25일, 전보.

32) 『순종실록』 순종 2년, 1월 21일.

33) 『서순행일기』 1월 23일, 陪乘膳職의 개정.

을 파견한 것을 보면 행재소의 식사는 한국식과 서양식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서순행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이 서구식 교통기관인 궁정열차의 이용이었다. 순종은 기차, 마차, 인력거, 가마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궁정열차였다.<sup>35)</sup> 순종은 1월 27일 남대문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순행길에 나섰다. 서순행은 원거리 행차인 동시에 한파가 몰아치는 정월에 거행되었으므로, 근대 교통기관인 궁정열차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서순행을 공포한 1월 19일 이후 1주일 만에 순행이 가능했던 것도 선발 인원이 열차를 이용하여 순행지로 가서 제반 사항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궁정열차는 특별 임시열차로 순행에 맞추어 임시로 편성되었다. 궁정열차는 기관차=緩急車=1등·2등=식당·1등·2등·1등=玉車=3등=화차 등으로 7량의 객실로 편성되었다. 열차의 선두부터 탑승자들을 보면, 1등에 判任官, 2등에 음악대, 1등과 2등에 勅奏任官, 1등에 親勅任官, 3등은 員役과 수행원 등이 탑승하였다. 玉車 내에는 궁내부대신, 시종원경, 시종무관장, 총리대신, 각부대신, 궁내차관, 시종, 시종무관, 예식관, 女官, 통감비서관 등이 탑승하였다. 玉車에 탑승한 관원들은 모두 대례복을 착용했으며, 순종의 위치에서 우측에 親勅任官과 통감, 좌측에 시종과 시종무관, 완순군이 위치하였다.<sup>36)</sup>

그림 2의 궁정열차 내부는 탑승원의 지위에 따라 배정되었으며, 식사도 지위별로 시간을 정해 제공되었다. 고등관 이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회에 걸쳐 제공되었는데, 각자 지정된 시간이 승차권 후면에 표시되었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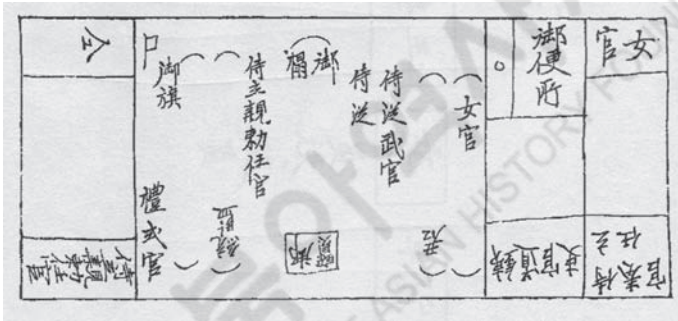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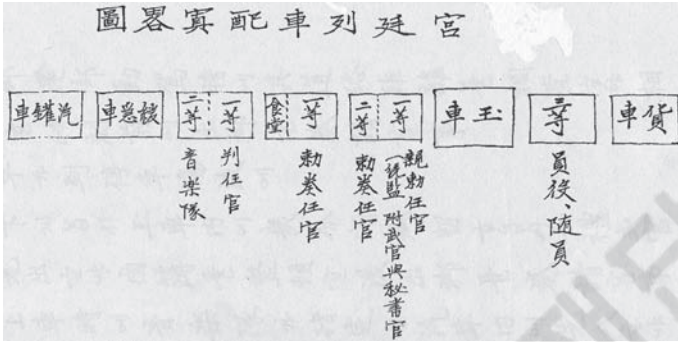
서순행은 남순행보다 사전 준비가 더 세밀하고 철저히 이루어졌다. 순행 호종원 이외에 선발원이 먼저 순행지에 도착하여 경호 문제부터 열차가 정차하는 역들과 환영 장소의 정비 및 행재소의 선정과 마차, 인력거의 준비 등을

34) 『서순행일기』 1월 25일, 先發員發程.

35) 메이지 천황이 이용한 열차는 御召列車라고 하였다. 原武史, 2002, 앞의 글, 58쪽.

36) 『내각일기』 권7, 1월 27일, 宮庭列車配置畧圖.

37) 『서순행일기』 1월 22일, 車中午餐次第.



〈그림 2〉 궁정열차의 배치와 순종의 玉車<sup>38)</sup>

사전에 조율하였다.<sup>39)</sup> 남순행도 겨울에 진행한 것이지만, 서북지방이 위도상 지형적으로 훨씬 더 추운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였다. 경호 문제도 만주와 대륙에 연결된 서북지방이 더 민감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방한구의 장만에 서 각 지역에 파견되는 경찰병력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행재소 경호는 한국과 일본의 경찰이 담당하였는데, 평양과 의주는 警視 黃信泰, 신의주와 개성은 일본인 경시 渡邊宇太郎이 담당하였다. 행재

38) 『서순행일기』 부록, 玉車에 奉侍官員.

39) 『서순행일기』 1월 21일, 儀仗警衛 기타 奉迎에 관한 절차.

소에 배치된 경찰은 평양 19명, 신의주 12명, 의주 7명, 개성 12명이었다.<sup>40)</sup> 그리고 평양에서 순종이 방문할 箕子陵 주변의 도로가 불량하여 마차 사용이 어려워 가마나 인력거를 사용하고자 했으며,<sup>41)</sup> 개성 행재소의 경우 마차가 통과할 대문의 폭을 7척으로 산정<sup>42)</sup>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할 정도로 순행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조사하고 결정지었다.

이 외에 서순행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사진사 3명과 村上 사진점 점원 2명이 궁정열차에 탑승하였다. 이들은 평양에 선발대로 파견되어 합류하였다.<sup>43)</sup> 그리고 순행 지역의 우편국에서는 순종의 열차가 도착하는 날이나 머무는 시기에 대한제국 황실의 紋章을 기념스탬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활동사진과 기념스탬프의 사용은 순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순행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념비적인 방법이었다.

이처럼 순행 과정을 궁내부와 내각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과정을 지휘한 것은 일본 측이었다. 도로의 이동거리를 표시하는 단위를 일본식의 町을 사용하고, 물건의 수치도 일본 척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4)</sup> 또한 일본 측이 순행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순행 참여 인원에 대한 처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순종을 지근거리에서 배종하던 호종원에게 주의사항을 지정해서 따르게 한 것이다. 주의사항은 16개로서, 개인의 행동거지에서 열차 내 이동, 의례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16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 鹵簿를 整齊하여 인민에게 엄숙함을 보임.
- ② 출발과 도착지 사이의 거리를 미리 예정하여 움직임.
- ③ 기차역에 도착하면 노부식을 먼저 설치한 후 폐하를 모심.

40) 『서순행일기』 1월 22일, 행재소의 警衛.

41) 『서순행일기』 1월 22일, 전보.

42) 『서순행일기』 1월 25일, 전보.

43) 『서순행일기』 1월 24일, 전보.

44) 『서순행일기』 1월 23일, 개성 행재소 설비.

- ④ 순종이 기차에 오르기 전 음악대가 열차 내에 탑승하여 애국가 연주.
- ⑤ 순종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 음악대가 하차하여 순종이 내릴 때 애국가 연주
- ⑥ 순종이 기차역의 휴게실에 들어가신 후 음악대는 노부 내 배열.
- ⑦ 기차가 수분간 정차할 때는 예식관이 陞見할 명부를 수취함.
- ⑧ 순종을 폐현할 때는 예식관이 조사한 후 차관, 대신, 통감에게 經議한 후에 상주함.
- ⑨ 호종원이 청탁에 의해 임의로 폐현하게 하는 것을 금함.
- ⑩ 玉車에 외부 찬공기 차단을 위해 예식관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금함.
- ⑪ 玉車 내에서 오찬이나 다과를 할 때 통감 옆에 통역 1인이 侍立함.
- ⑫ 순종이 열차에 승하차하거나 노부식에 나갈 때 예식과장이 선도함.
- ⑬ 각지의 陞見者 명단은 지방에서 미리 작성하여 예식관에게 제출함.
- ⑭ 행재소에 문안 서명록을 비치함.
- ⑮ 매일 거행할 의식은 관보에 게재함.<sup>45)</sup>

호종원에게 주어진 주의사항은 대부분 궁정열차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순종과 玉車の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鹵簿는 제1 公式이었으며, 기차 내에서는 시종무관 1명이 교대로 禦旗를 담당하였다.<sup>46)</sup> 기차 외에 마차와 인력거로 이동할 때의 의장병에서 기병은 모두 일본군이였다. 이들은 기병 제6연대 제1중대 소속으로 육군 기병 1等卒 林久明과 육군기병 2등졸 8명이였다.<sup>47)</sup> 위와 같은 서순행 제반절차는 동경의 영친왕에게도 보내어 재가를 받았다.<sup>48)</sup>

위의 주의사항에서 순종이 궁정열차에 승하차할 때마다 음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의장대를 갖추어 출발한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서구제국의 궁정 의식을 도입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관보를 통해 서순행의 진행 과정

45) 『서순행일기』 부록, 西巡幸時禮式上注意件.

46) 『내각일기』 권7, 1월 27일.

47) 『통감부문서』 9, 皇帝의 南巡 및 西北巡幸時 儀仗隊 服務者名單 報告.

48) 『서순행일기』 1월 25일, 서순행절차 諸表進供.

을 관보에 게재한 것도 흥미롭다. 순종의 거동을 대외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거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순행이라는 국가의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행차를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 IV. 서순행의 영향과 한국인의 반응

1월 27일 수요일, 오전 7시 45분, 순종은 다갈색 군복 차림으로 덕수궁의 고종에게 문안을 올리고 남대문역에서 궁정열차를 이용하여 서순행에 오른다. 순종의 마차는 남대문역전에 한일 양국의 국기<sup>49)</sup>가 게양된 綠門을 통과하며 연도에 도열한 학교 생도들과 한일 민관인들의 환송을 받았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으며, 일본거류민단에서는 煙花를 발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남대문역에는 承寧府侍從長 金春熙, 完興君 李載冕, 永宣君 李峻鎔, 궁중 顧問 李允用, 中樞院顧問 李址鎔, 奎章閣祇候官 閔泳徽와 閔泳韶, 表勳院總裁 李載克 등의 고관과 각국 영사의 하직 인사를 받았다. 궁정열차는 통감부 철도 관리국장의 선도로 출발하여, 8시 6분 용산역에 기차가 머물며 警視總監 와카바야시 라이조[若林資藏]가 하직 인사를 받고는 서북쪽으로 향하였다.<sup>50)</sup> 순종은 서순행을 시작하면서 남순행과 같이 과거 역사의 위인과 성인들에게 致祭<sup>51)</sup>하도록 했다. 치제를 통한 의례의 시행이 지방 선비들에게

49) 각 지방에서 봉영시 한국 국기 외에 일본 국기를 교차 게양한 것은 순종에 버금가는 통감의 지위를 상징하며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國旗問題』, 『朝鮮』 2, 皓星社, 1998, 76쪽.

50) 『순종실록』 융희 2년, 1월 27일; 『내각일기』 1월 27일.

51) 순행 지역 내 인물에 대한 치제는 조선왕조의 국왕들이 행행시 일반적으로 거행하던 일이며, 특정한 인물을 선정하여 행행과 연결시키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왕 私親의 유적에 대해서는 행행에 결부하여 치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모범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sup>52)</sup>

순종의 첫 번째 기착지는 평양이었다. 순종은 평양에 도착하기 이전에 개성역에서 황해도와 평안남도 관찰사, 한성부윤과 경기관찰사, 일본 理事廳 理事 事官을 만났다. 순종이 해당 지역의 관원을 만나는 의식은 궁정열차가 도착하는 지역마다 반복적으로 거행되었다. 행재소가 가설된 평양, 신의주, 의주, 개성의 역전에는 緋門이 가설되고 한일 양국의 학생과 민관민이 도열하여 양국의 국기를 들고 만세로 순종의 행렬을 맞이했다. 순종의 행렬이 지나가는 지역의 民戶들에는 한일 양 국기가 게양되었고, 10~20리 간에는 순사와 헌병보조원이 배치되어 경호에 임했다. 또한 야간에도 제등행렬과 만세소리로 순종의 지역 방문을 환영하였는데, 환영 행사는 사전에 조율한 것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sup>53)</sup> 순종의 평양 도착을 환영한 인파는 무려 60,000여 명에 달하여 이들의 환영 행사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sup>54)</sup>

1월 28일 순종 일행은 오전 8시 50분 평양을 출발하여 오후 3시 45분 신의주에 도착했다. 신의주역에서는 수많은 폭죽과 불꽃을 쏘았으며, 역전에서 행재소로 향하는 연로에는 3개의 대녹문과 永門이 줄을 이었다. 대녹문과 영문에는 전등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신의주에서는 한국인 10,000여 명, 일본인 2,000여 명, 청국인 1,500여 명<sup>55)</sup>이 운집하였다. 『내각일기』의 저자는 신의주에서 한일 양국민이 화합하여 순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양국의 친목이 돈독함을 볼 수 있다고까지 평가하였다.<sup>56)</sup> 『내각일기』의 내용이 비약적이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 이전에 당시 궁내부의 공식기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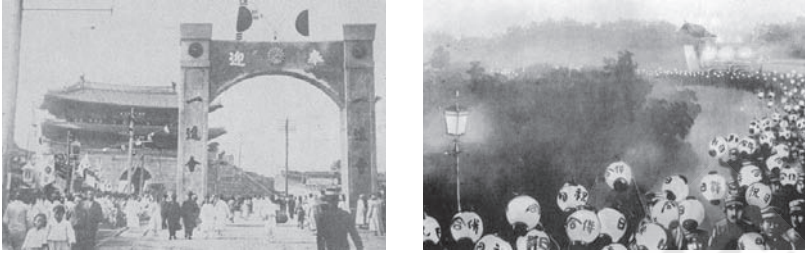
52) 『순종실록』 융희 2년, 1월 27일.

53) 『순종실록』 융희 2년, 1월 27일; 『내각일기』 1월 27일.

54) 『서순행일기』 1월 27일, 沿路 및 평양의 逢迎送.

55) 청국인이 순종 순행에 참여한 것은 순행에 사용한 물자의 운반과 공사에 동원된 인원, 안동[단동]과 무역하는 지역민들을 통감부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감부에서 한중일 삼국민의 화합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려는 의도에서 동원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관광을 위한 자발적 모임이라는 자료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56) 『내각일기』 권7, 1월 28일.



〈그림 3〉 奉迎 綠門과 提燈행렬<sup>57)</sup>

는 서순행의 결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월 29일 오전 10시, 순종은 마차로 신의주를 출발하여 12시 30분에 의주의 행재소인 관찰도청에 도착하였다. 의주에서는 한일 양국인 15,000여 명이 모였으며, 녹문의 가설과 관민의 환영도 타 지역과 동일하였다. 특히 이날은 삭풍이 휘몰아치는 와중임에도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야간에는 제등행렬과 폭죽, 만세소리가 행재소 주변에 그치지 않았다.<sup>58)</sup>

이날 순종은 이동 중 威化島에 행차를 세우고 태조가 위업을 시작하던 곳에 지방 관리를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統軍亭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때 순종은 聚勝堂에서 선대 위인과 충신들의 절개와 충정을 기리며 致祭하도록 했다.<sup>59)</sup>

순종의 순행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선대 충신에 대한 宣揚과 치제였다. 조선시대부터 군주의 행행에서 지역 충신을 선양하는 것은 관례였다. 순종이 방문한 취승당은 선조가 임진왜란시 머물던 곳으로서 그 뒤에 영조가 현판을 달았던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이었다. 순종은 선조가 왜군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도성을 비우고 의주로 몽진했을 때의 扈聖諸臣들을 기

57) 인용한 그림에서 녹문은 일본 황태자 방문시 세운 것이며, 제등행렬은 함방시 모습이지만, 두 그림 모두 서순행 시기에 이용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문헌상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승례문복원자료집』; 민속원,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58) 『순종실록』 융희 2년, 1월 29일; 『서순행일기』 1월 29일.

59) 『내각일기』 권7, 1월 29일; 『서순행일기』 1월 29일.

리며, 지역에 거주하는 그들의 후손들을 취송당에 불러서 술을 내려주도록 했다.<sup>60)</sup>

순종의 순행 일정이 사전에 통감부에서 조율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할 만한 행사를 개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순행 도중 인근에 있는 과거 충신열사들의 유적을 통해 군주에 대한 충성을 되새기게 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은, 곧 통감부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감 치세 하에서 일본인들은 통치 전면에 순종을 내세워 한국인들의 적개심을 반감시키면서, 오히려 순종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시키려는 다소 이중적인 정책을 서순행에 적용한 것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감부가 순행을 통해 지방 민심을 회유하려는 정책은 이미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의주에서는 순행의 소식을 접하면서, 순종이 단발하고 신식 군복 차림에 온다는 것을 알고는 구식을 고수하면서 황제를 逢迎하는 것은 臣民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일제히 단발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 단발령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의병 발발의 빌미가 되었던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통감부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통감 이토도 공립보통학교 구내에서 개최된 환영회석상에서 일본이 한국에 통감 통치를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국력이 미약하여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과 순종의 서순행이 지방민을 위한 고심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다.<sup>61)</sup> 따라서 순종의 순행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통감부의 정치적인 고심에서 시행된 것이며, 특히 지방민의 회유를 목적에 두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sup>62)</sup>

이렇듯 대한제국 황제를 이용한 일본인들의 우회적인 회유정책은 순종이 각 지방의 관원과 민간에 내린 칙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주에서 순종은 평안북도 관찰사와 각 군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60) 『서순행일기』 1월 29일, 전보.

61) 『내각일기』 권7, 1월 29일.

62) 박양신, 2005,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72~73쪽.

짐이 지난번에 남쪽 지방을 순찰할 때에 백성들을 가까이하는 관리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지시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 서쪽 지방을 순찰하는 것도 첫째도 백성들을 위해서이고 둘째도 백성들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너희들 관찰사와 수령 및 각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것도 오직 백성들에 대한 일뿐이다. 현재 수습할 계책과 인도할 방도가 허다하지만 그 요령은 단지 새롭게 일신[維新]하는 것과 실지에 힘쓰는 것[懋實]뿐이다. 짐은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지시하니 여러 신하들은 모두 다 명심하여 힘쓰고 또 힘써서 날로 진보하여 백성들을 근심하는 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짐이 보건대 지금 두 나라 백성들이 서로 잘 타협하여 점차 진보할 가망이 보이므로 짐은 매우 좋게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시종 잘 지도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하기 바란다.<sup>63)</sup>

순종의 칙유에서 ‘維新’이라는 말과 한일 양국민이 돈독하게 지낼 것이라는 내용은 듣기에 따라서 친일적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순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감부 관리와 친일 관료가 합심하여 서순행의 기록을 일본 통치에 유리하게 기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큰 가감 없이 당시의 상황을 기재했다고 본다.

오히려 순종과 대한제국의 관료들은 당시 정국을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고 제국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남순행과 서순행 이후 순종이 그 결과에 만족하고 통감에게 치하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감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지역의 관민이 순종을 陞見할 때에도 잘 드러났다. 다음의 그림 4를 보면 순종이 행재소 등의 실내에서 관민을 폐현할 때 좌우에 시립하는 관원들의 위치를 정한 것이다. 그림 4의 陞見式에서 통감은 순종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며 비서 1명과 무관 2명을 앞세우고 있다. 통감이 순종을 보호하는 위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순종의 위치를 감안

63) 『순종실록』 융희 2년, 1월 30일; 『내각일기』 권7, 1월 29일; 『서순행일기』 1월 29일.



깨우쳐주지 못하지만 너희들 모두가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먼저 깨우쳐주는 것이다.<sup>65)</sup>

순종의 칙서에 정주의 진신 중에는 叩頭敬體한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sup>66)</sup> 이러한 순종의 칙유는 서순행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다. 남순행에서도 귀경시 대전역에서 賜謁한 전직 관료들이 상투에 구관복을 착용한 것에 대해 구습에 젖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과 함께 단발하고 서양식 [일본식] 관복 차림의 자신을 본받도록 칙유한 적이 있었다.<sup>67)</sup>

위의 정주역에서 내린 칙유도 대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대한제국의 군주가 단발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조선식 문화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식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지방민에게 전파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순종이 정주역에서 내린 칙유는 2월 2일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던 도중 11시 35분 역 구내의 假便殿에 모인 황해도와 전현직 관리와 진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다.

정주역에서는 통감 이토도 訓諭를 내렸다. 이토는 자신도 孔孟을 공부한 사람으로 유학을 한 사람은 국가의 흥망을 잘 판단해야 하며, 지금은 부국강병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은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한국을 흥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68)</sup> 이토의 말에 정주의 진신들은 일제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sup>69)</sup>

물론 순종이 유신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평양에 도착한 순종은 箕子陵, 東明王陵, 檀君陵 등의 유래를 강조하며 그 관리를 새롭게 하도록 했다. 또한 서북 지역이 고구려의 옛 강토이며, 을지문덕이 외적을 물리친 곳이라는 과거 역사의 위대함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순종은 2월 1일 오전 10시 평안도의 관

65) 『내각일기』 권7, 1월 31일; 『서순행일기』 1월 31일, 勅語.

66) 『내각일기』 권7, 1월 31일.

67) 이왕무, 2007, 앞의 글, 75쪽.

68) 『서순행일기』 1월 31일, 伊藤統監訓諭要旨.

69) 『내각일기』 권7, 1월 31일.

리들에게 勅語를 내리면서, 민생을 구하고 정국을 전환할 방법은 ‘維新懋實’에 달렸음을 재차 강조하였다.<sup>70)</sup>

평양의 한일관민 환영회는 오후 3시 箕陽俱樂部에서 열렸다. 총리대신 이완용의 선창에 따라 순종과 일본 천황에 대한 만세삼창으로 행사는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토의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의 미약한 처지를 일본이 부조하여 문명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동양평화의 견지를 위해서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특히 이토는 순종 즉위 이후에 국가 조세 총액이 증가되었고, 殖産興業에 주력하여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였다는 것을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이때 이완용도 순행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일본 거류민을 선진국의 선각자라면서 한국을 잘 지도해주길 바란다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 이때 평양의 진신과 민인들이 순종의 행렬을 맞이하며 조선식 예복을 입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수천 명이 단발을 감행하고 양복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sup>71)</sup> 이처럼 서북지역 인심의 대부분은 통감부에서 원했던 것과 같이 조선의 과거 문화를 일신하고 일본의 근대적 문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통감부에서 서순행에 임하는 지방민의 동정을 감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순행 외중에도 통감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순행을 저해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여론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의주의 일본기 훼손 사건이었다. 일본기 훼손 사건은 의주의 환영회가 개최되었던 百市院 보통학교 내의 宴會場表門에 게양되었던 일본기를 야간에 1/3가량 칼로 찢어 버린 일이다.<sup>72)</sup> 이 학교는 사립학교로 원래 일본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이를 보고받은 경무국장이 이토에게 알려서 결국 이완용을 통해 학부에서 한국기와 일장기를 게양했었다. 그런 외중에 일본기가 절단된 사건이었다. 일본기 훼손은 평양과 개성에서도 있었는데, 유독 의주의 사건이 크게 알려진 것은 학교에 게양한 것

70) 『서순행일기』 2월 1일, 勅語.

71) 『내각일기』 권7, 2월 1일.

72) 『통감부문서』 9, 韓國皇帝陛下 義州巡幸時 日章旗 毀損事件 內查 件.

이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일본기의 훼손을 매우 무례하다고 평했다. 한국은 피보호국으로 종주국인 일본의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통감의 상징인 일본기를 훼손한 것은 국제적 관례를 어긴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학부에서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학교에서 일본기를 계양하지 않았던 것은 통감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도 강조하였다.<sup>73)</sup> 따라서 일본기 훼손 사건은 이토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으나,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고 미증유의 사건으로 끝났다.<sup>74)</sup>

그런데 일장기 훼손을 제외하면 실제로 순행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사건은 없었다.<sup>75)</sup> 이는 통감부의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순종에게 통감 통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행 기간 한국인의 반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궁내부와 통감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기보다는 당시 신문과 잡지를 보더라도 일장기 사건을 제외하면 조직적인 반발은 물론 순행을 저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을 통감부에서 순행을 기도한 의도라고 하겠다. 일본과 통감부에 저항하는 모습이 황제의 순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한국인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사가 조선왕조를 잇는 대한제국기로 왕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에서 황제의 순행에 반하는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순종은 별 탈 없이 2월 3일, 개성 滿月臺 고려 옛 궁궐 터전을 돌아보고, 義親王과 漢城府民會長 유길준을 만나 뒤 개성역을 출발하여 3시 30분 100,000여 명의 인파가 환영 나온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73) 「韓帝の巡幸と其影響」, 『朝鮮』 2, 皓星社, 1998, 76쪽.

74) 『통감부문서』 9, 皇帝 義州巡行時 日章旗 切斷事件 調査 件. 당시 한반도 내 일본인들은 통감부에서 일본기 훼손 사건을 해결하지 않아서 오히려 통감부에서 일본기 모욕을 목인해주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時事評論」, 『朝鮮』 2, 皓星社, 1998, 111쪽.

75) 『통감부문서』 9, 皇帝西巡幸時 平壤義州 地方韓人의 태도 보고.

서순행의 일정을 마쳤다.<sup>76)</sup>

귀경한 순종은 덕수궁 고종에게 문안하고는 창덕궁 인정전 동쪽 행각에 나가 서순행에 참여한 관원들과 만찬회를 가졌다. 그리고 2월 6일 순종은 통감 관저를 방문하여 오찬을 하면서, 이토의 노고를 치하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이 이번엔 지방 백성들의 실정을 친히 살피기 위하여 서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각지를 순행할 때에 이토 통감은 앞뒤에서 많은 나이와 병든 몸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위를 무릅쓰고 호위하고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열심히 깨우쳐주어 우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환히 풀려서 누구나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류하고 있는 일본의 관리들과 백성들도 함께 달려와서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여 화락한 기운이 무르녹게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가 이등 통감이 평소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한 결과이다. 그래서 짐이 오늘 방문하여 수고한 것을 위문하고 겸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바이다.<sup>77)</sup>

위의 인용문에서 순종이 통감 관저에서 한 말은 순행의 향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토는 68세의 고령으로 기차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엄동설한에 한반도 서북부를 왕복한 것이다. 또한 주요 도시마다 환영회에 참석하여 한일 간의 우호를 외치며 통감부 통치를 미화하면서도 순종의 권위도 늘 강조하였다. 더욱이 일본인 거류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환영식이 거창하였으므로, 순종의 입장에서 통감을 치하하고 서순행의 결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순종의 만족은 황제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한 것에서부터 통감부 치하에서 통감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 일본인들은 통감부 치하에서 통감이 순종을 황제로 모시면서 우대하

76) 『내각일기』 권7, 2월 3일.

77) 『서순행일기』 2월 6일, 御訪臨.

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이 통감부 치하에서 반식민지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통감의 지위가 한국 황제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78)</sup>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순종의 입장에서 이토의 모습은 황제를 보위하는 충신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순행에 대한 순종의 입장이 우호적이라는 점은 위의 치사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순종의 의사 때문인지 통감부에서도 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sup>79)</sup>

이상으로 서순행 전 과정을 기록한 『서순행일기』와 『내각일기』, 『통감부문서』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기록과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특히 순종의 칙유와 각 지역의 반향 등은 3개 자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서순행일기』 등을 작성한 대한제국 관료나 통감부의 일본인이 동일한 시각으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순종의 서순행은 통감부에서 노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고 본다. 서순행도 남순행과 같이 순종이라는 대한제국 황제의 威儀를 이용하여 한국민의 통감부 정책에 대한 회유 내지는 적어도 항일의 입장을 버리는 것을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종의 서순행은 그 시작부터 통감부가 의도한대로 한국민들의 자발적 복종은 물론 순종을 비롯한 황실의 협력까지 이끌어내는 교묘한 정책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서순행의 배경과 결과는 다음 3명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통감 이토는 서순행

78) 「國旗 問題」, 『朝鮮』 2, 皓星社, 1998, 76~77쪽.

79) 『통감부문서』 9, 皇帝陛下 南北巡幸을 輔翼한 統監의 致辭 등 상황.

동안 공개적으로 수차례의 연설을 한국인들에게 하였다. 그는 시종일관 일본 제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동양 평화와 한일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개성의 환영식에서는 쇠약한 한국을 방임하는 것은 곧 일본의 국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이 일본국의 보호 하에서 문명진보하면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총리대신 이완용이 이토를 이어 연설하기를, 한국인들은 통감을 師表로 삼아야 일이 잘될 것이라고 하면서 구습을 폐하고 새로운 유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경기관찰사는 순행을 맞이하는 봉영 절차와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열심히 지도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sup>80)</sup>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지위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전위인 통감부의 수장, 내각의 대표인 총리대신, 지방관료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경기도백 등으로 1909년 당시 대한제국의 향운을 좌우할 인물들이다. 이들은 순종의 순행을 통해 반일적인 지방 인심을 돌리고 동양 평화의 수호자인 일본의 도움을 받아 문명개화로 나아가는 길이 대한제국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감부의 보호정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필연적인 것이며, 한국인들의 국내외 정세판단이 미숙하여 그릇된 반일관을 가졌다고 해석하기에 이른다.

바로 여기에 순종의 서순행이 지나는 맹점이 숨어 있다고 본다. 3명의 논리가 당시 서구의 사회진화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문명화되지 못한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전락한 것은 한국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순종의 순행에서 지방민들은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은 황제의 외관과 의례들을 통해 문명화=일본화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구식을 버리고 통감부 정책에 부응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81)</sup> 결국 통감부에서는 반일

80) 『내각일기』 권7, 2월 2일.

81) 이 글은 순종의 순행일기 해석에 주안점을 두어 남순행과 천황의 순행을 비교하여 서술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순종의 순행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로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의 서술방향이 친일 내지는 대한제국 황제의 무능이라는 면이 부

세력을 막대한 예산과 인명을 손상하는 무력 탄압보다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자발적으로 체제 내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파악하였으며, 그 정책의 전면에 순종을 이용하게 되었고, 황제를 이용한 정책이 순행이었던 것이다.

---

각되는 점이 없지 않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순행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南西巡幸日記』, 규장각 규17846.
- 『남순행관련서류』, 장서각 K2-4684.
- 『남순행시일기』, 장서각 K2-183.
- 『남순행일기』, 장서각 K2-182.
- 『內閣日記』, 장서각 K2-188.
- 『대한예전』, 장서각 K2-2123.
- 『서순행일기』, 장서각 K2-222~223.
- 『순종실록』, 『(순종)승정원일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승례문복원자료집』.
- 국사편찬위원회, 1999, 『통감부문서』 9.
- 김백영, 2009,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인천학연구』 11.
- 김소영, 2010,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忠君愛國論」, 『한국사학보』 39.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 민속원,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 박양신, 2005,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 박진우, 1999, 「천황순행의 전개와 민중」, 『부대사학』 23.
- 小路田泰直, 1998, 『國民(喪失)の近代』, 吉川弘文館.
- 原武史, 2002, 「근대 일본의 교코케이(行幸啓)에 관한 고찰」,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아연.
- 이왕무, 2007,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107.
- 李章熙, 1973, 「남순행일기」, 『국학자료』 9, 장서각, 문화재관리국.
- 佐佐木克, 2002, 「明治天皇のイメージ形成と民衆」,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 『朝鮮』 1~3, 1998, 皓星社.

**[ABSTRACT]**

A Study on the Emperor's Parade his Majesty of Sunjong(純宗) in Northern province of Daehan Empire(大韓帝國)

Lee, Wangmoo

This thesis is to study of the Emperor's parade his Majesty of Sunjong(純宗) in Daehan Empire(大韓帝國). As we know the Emperor's parade is very politic's, symbolize, and visuality, mobilize. And that Emperor's Movement, we called Sunhaeng(巡幸), this movement belonged Korea and China's the part of Royal ruler system. It just happen like Ritual action, therefore it makes people believed, the Royal class was been long period in father land. And therefore, there is no one doubt about Emperor's power and exist. It happened every each Kings period in Joseon Dynasty. And it's same happened in Daehan Empire. People simply depend on there own eyes. Those rituals had massive significance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in which the Emperor, the subjects, and the commoners participated together. It was happen all the time in Kingdom of confucian, we called Joseon Dynasty and Daehan Empire. Royal Ceremony is very fixed to continue forever. The one of the best ceremony was the parade of Emperor's. The Emperor's parade, it's highest ritual action in Kingdom of confucian society. Because the Emperor's parade was an assembly system with Royal ceremonies. And it was ritual thing, not just Emperor's played. As we know, ritual is most powerful thing in human society, and most Emperor's power depends on that, also the Emperor's political power

proceeding and make more powerful hands. Emperor Sunjong(純宗) ruled for 4 years(1907~1910). He was the 2th Emperor of the Daehan Empire(大韓帝國). In 1907 the first Emperor of the Daehan Empire his Majesty of Gojong(高宗) abdicated by Japanese. Then the Daehan Empire colonialized by Japanese. At that time uprising and against the people who live in Daehan Empire.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 changed there ruling hands, Japanese government using a ritual action,

Specially Emperor's Movement, we called Sunhaeng(巡幸). Japanese government believed people of the Daehan Empire, when they find the Emperor Sunjong(純宗) followed Japanese ruling system, they should be changed there mind. And they realized the Oriental world protect from western power's by Japanese government. And those Japanese government police reveal in Sunhaeng(巡幸) and concentrate to the Emperor Sunjong(純宗).

#### keywords

Parade, Sunhaeng(巡幸), Sunjong(純宗), Daehan Empire(大韓帝國), confucian society, ritual

# 자료 소개

1





## 몽골국 내 발해 고고유적

A. 오치르 | 몽골국제유목문명연구소

L. 에르넨볼드 | 몽골사회과학대학

### I. 유적 소개

몽골국 ‘볼강 아이막’과 ‘투브 아이막’(Bulgan and Tuv aimag) 지역에서 거란국(10~12세기) 군대가 주둔했던 일부 성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2004~2008년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톨(Tuul)’ 강 중류지역의 10~11세기에 해당하는 일부 성터에서 발해식 고고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현 러시아연방 극동 지역 및 연해주,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했던 발해인의 고고유적과 유물이 멀리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몽골에서 발견된 것은 학술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흥미를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몽골국 중부지역인 항가이 산맥 동부에서 발견된 발해인과 관련 있는 이들 유적과 유물의 발견 장소, 형태와 유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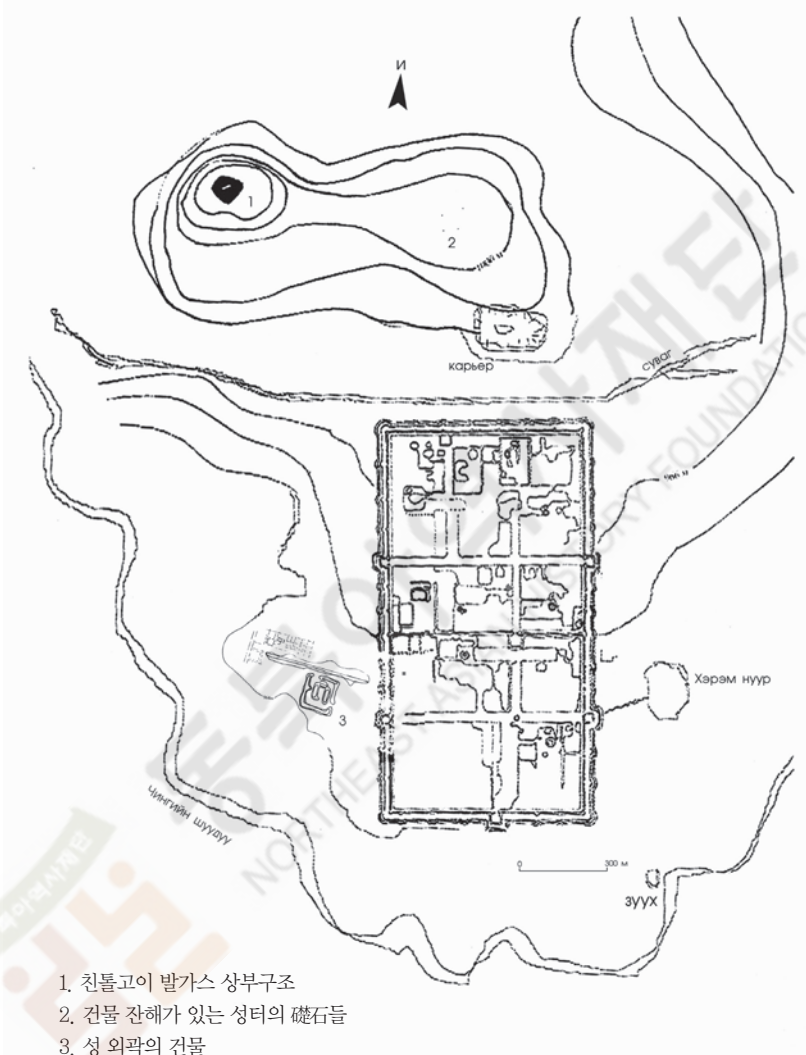
〈그림 1〉 몽골국 내 발해 유적지 위치

## II. 발해 유적과 유물

### 1\_ 친톨고이 성터 유물

친톨고이 성터는 울란바타르 시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볼강’ 아이막(한국의 행정단위 ‘道’에 해당)의 ‘다싱칠렝’ 솜(한국의 행정단의 ‘읍’에 해당) 지역, 좌표는 북위 47°05′28″, 동경 107°01′46″이며 해발고도는 977m에 위치한다. 친톨고이 성터는 흙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축조된 네모구조의 성곽이 있는 토성이다. 이 토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260°로 향하는 배치이다. 성의 북벽과 남벽은 각각 680m, 서벽과 동벽은 각각 1,260m이다. 이 토성 안쪽에 있었던 많은 건물 흔적을 지금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토성 바깥에도 어떤 구조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

몽골-러시아 공동조사단은 2006~2008년에 친톨고이 성터 내 두 군데에 대한 소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발굴조사 과정에서 위구르와 거란식 유물 이외에 발해식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1. 친톨고이 발가스 상부구조
2. 건물 잔해가 있는 성터의 礎石들
3. 성 외곽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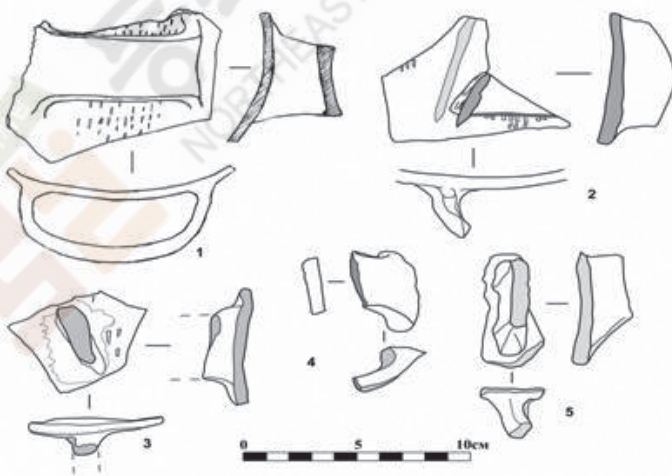
〈그림 2〉 친톨고이 성터 평면도

1) 본 조사단에는 몽골 측에서 오치르(A. Ochir) 교수, 에르텐볼드(L. Erdenebold) 박사, 앙흐바이르(B. Ankhbayar) 석사,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의 크라딘(N. N. Kradin) 교수, 이블리예프(A. L. Ivliyev) 박사, 니키티(Yu. A. Nikitin) 박사, 또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몽골티베트불교학연구소 다닐로프(S. V. Danilov) 박사가 참여하였다.

## 1) 토기의 손잡이

친틀고이 성터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발해 형태의 수평식 손잡이와 그러한 손잡이 조각들이 발견되었다(그림 3, 첨부 사진 1). 이러한 종류의 토기 손잡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해시대 성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다. 위구르 및 거란시대의 이러한 수평식 손잡이가 달린 토기는 몽골 땅에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손잡이 한 점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손잡이는 길이 82mm, 너비 34mm이다. 이 토기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것으로, 손잡이 아래에 너비 2mm의 수직선이 그려져 있다. 이 선을 그린 다음에 도장을 찍고 손잡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토기 안쪽 벽에도 문양이 그려져 있다. 손잡이 양쪽은 토기에 붙어있는 부분이 약간 넓어졌다. 이 손잡이는 직경이 약 0.4mm의 석영 부스러기가 섞인 진흙 반죽으로 만들었다. 토기 벽 두께는 손잡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4~4.2mm이다.



〈그림 3〉 친틀고이에서 발견된 토기 손잡이 파편

## 2) 장기알(놀이말)

토기 파편들은 둥근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장기알(놀이말)이 거의 모든 토층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말을 만들 때 주로 거란시대 물방울 문양이 그려진 토기 파편을 사용했으며, 또한 아무 문양도 없는 토기 파편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일부 말들은 너무 오래 사용되어서 많이 마모된 상태이다. 발견된 말의 일부는 한가운데에 뚫은 구멍이 있고, 어떤 말은 그러한 구멍이 없다. 이들 말은 직경이 평균 2.6~7cm이다(그림 4, 첨부 사진 2).

2006년도 발굴조사 과정에서는 흰색의 얇은 범랑칠을 한 도자기 파편으로 만들어진 장기알(놀이말)도 발견되었다. 상기 말과 동일한 점토로 만든 장기알(놀이말)들은 몽골 땅에 있는 하르 보흐(Kharbukh), 헤르멩 덴지(Khermen denj), 울란 헤렘(Ulaan kherem) 등 요나라(거란) 군대가 주둔했던 성터에서 발견된다.<sup>2)</sup>



〈그림 4〉 친톨고이에서 출토된 점토로 만든 장기알(놀이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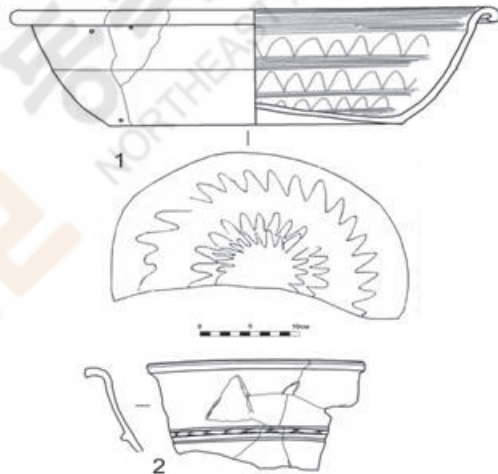
2) A. 오치르, N. N. 크라단, A. L. 이블리예프, S. V. 다닐로프, L. 에르텐볼드, Yu. 니키틴, A. 앵흐투르, B. 양흐바야르, G. 바트볼드, 2008, 『친톨고이』 몽골-러시아공동학술조사보고서(2004~2007)』, Ulaanbaatar, 61~63, 80~82, 133~135, 266쪽.

한국과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러시아연방 극동지역과 동북아시아 발해인의 성터에서 상술한 말과 동일한 말들이 흔히 발견된다.<sup>3)</sup>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물레 돌림판으로 보고 있다.

필자들도 거란시대 성터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유물들을 장기알(놀이말)로 보고 있다. 우리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이러한 종류의 유물들 가운데 거의 반 정도에 구멍이 없다는 점은 그것들을 물레 돌림판으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크기(2.6~7.0cm)는 대부분의 경우 물레 돌림판보다 작다. 이러한 장기알(놀이말)의 말들은 처음에는 발해에서 발생했고 후에는 거란과 여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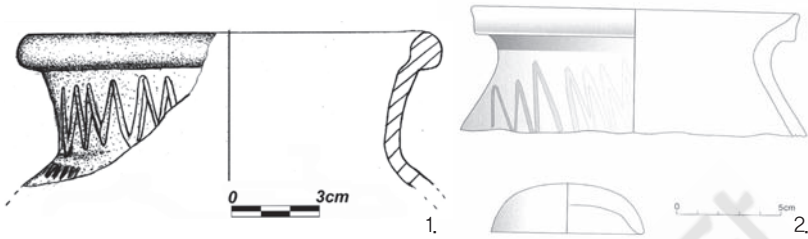
### 3) 발해식 문양이 그려진 토기 파편

친틀고이 성터 유적에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 중에 발해인의 토기 형태와 문양을 연상케 하는 유물들이 있다. 예를 들면, 물결무늬가 그



〈그림 5〉 친틀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

3)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157쪽.



〈그림 6〉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

(1. 친톨고이 성터에서 출토된 토기편, 2.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출토된 토기편<sup>4)</sup>)

려진 구연부가 밖으로 크게 벌어져 있고, 대야처럼 생긴 용기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해 성터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동일하다(그림 5, 첨부 사진 4). 또한 경부 및 어깨에 물결무늬가 그려진 토기편도 발견되었다. (그림 6). 경부와 어깨 부분에 손으로 붙인 토기 구연부 편이 발견된 것은 발해인의 토기 제작기술과 동일하다(첨부 사진 3).

#### 4) 혼합 형태와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해식 수평 손잡이가 달린 것이지만, 거란시대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물방울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일부 토기의 형태와 문양이 다양한 동시에 같은 토기에 그려진 문양이 다양하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그림 7). 또한 거란식 문양이 그려진 토기 어깨에 발해식 수평 손잡이가 달린 경우도 있다(그림 8).

친톨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일부 건물의 온돌시설과 연기(온기)가 순환하도록 파놓은 여러 개의 연도 구조는 어떤 면에서는 동아시아의 발해와 여진 성터에서 발견되는 난방시설과 유사하다(그림 9).

또한 친톨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격자문이 그려진 토기편들이 러시아 극동

4)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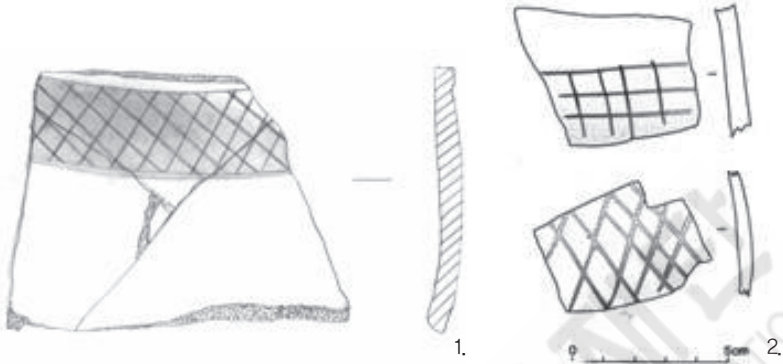
〈그림 7〉 혼합형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



〈그림 8〉 거란식 문양이 그려진 토기 배에 붙여진 수평식 손잡이



〈그림 9〉 친틀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난방용 연로·연도유구



〈그림 10〉 격자문이 그려진 토기편 (1. 친톨고이 성터, 2. 크라스키노 성터<sup>5)</sup>)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그림 10).

친톨고이 성터에서는 단지 거란과 발해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위구르와 거란시기의 문양을 같은 토기에 함께 그린 특이한 유물도 새로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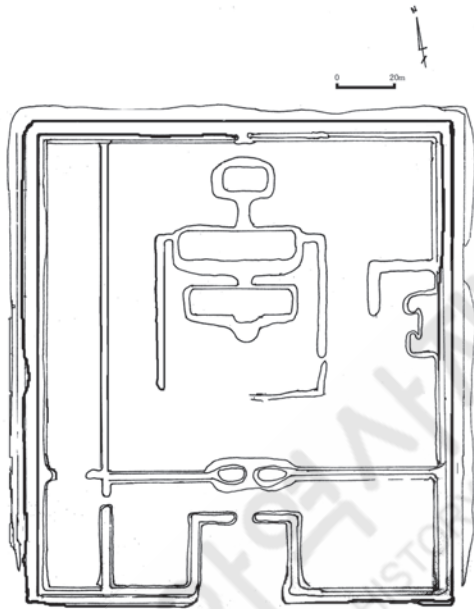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10~11세기에 몽골 땅에 거란, 위구르, 발해의 문화 요소들이 서로 융합되어 공통적인 문화 형태를 이루어갔던 흥미로운 과정을 볼 수 있다.

## 2\_ 차강 덴징 성터

이 토성은 ‘볼강 아이막’의 ‘바양노오르 솜’ 내 ‘톨’ 강 서남안 언덕에 있다. 좌표는 북위 47°05′214", 동경 104°039′918"이고, 해발 978m에 위치한다. ‘차강 덴징’ 성터는 네모꼴이다. 흙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이 성을 축조하였다. 이 성의 구조 특징 중 하나는 대형 외성 안쪽에 내성이 있다는 점이다(그림 11).

대형 외성의 서벽과 동벽은 각각 200m, 북벽과 남벽은 각각 165m 길이다. 이 성의 평균 높이는 0.6~1.2m, 기단은 9~10m, 상단은 3m 너비이다. 성곽 남쪽의 가운데 부분에는 문이 있으며, 문의 간격은 약 33m이다. 이 문은 안

5)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157쪽.



〈그림 11〉 차강 덴징 성터 평면도

쪽으로 30m 들어간 두 치성이 있다. 안쪽으로 낸 이 치성의 두 끄트머리를 토성으로 가까이하였으며, 약 7m 간격을 두고 입구를 내었다. 안쪽으로 낸 치성 내에는 약 5m 간격으로 역시 가로지르는 토성이 있다. 그 높이는 외성과 거의 동일하다. 이 내성 중간 부분에 바깥으로 낸 치성 주변에 양쪽을 높인 웅장한 문이 있었던 듯하다. 이 문이 있었던 부분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치성 양쪽의 문짝 자리였을 법한 곳에는 네모지게 손질한 하얀 화강암 두 개가 있다. 외성 서벽 안쪽 8m 거리에 내성인 토성을 구축하여, 남쪽의 내성과 연결하였다. 이 성곽은 기본 성곽보다 야트막하고 또한 약간 좁았던 것 같다.

차강 덴징 성터의 중앙부에는 흙 구조물 3기가 있다. 이 남측과 가운데 구조물은 똑같이 길이 30m, 너비 10m, 높이 0.6m로 네모꼴이다. 북쪽 구조물은 약간 작다. 그 길이는 12m, 너비 10m이며, 높이는 다른 두 구조물보다는 약간 높다. 이 세 구조물은 흙으로 조성하였으며 윗부분은 평평하다. 그 사이를 목덜개처럼 좁고도 긴 토대가 잇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토대 역시 내성의

로서 방형 토성이었던 것 같다. 대형 외성의 동측에는 어떤 흙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인 토대가 있다. 실제 어떤 형태였으며, 구조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대형 외성 북쪽 가운데가 약간 벌어져 있는데, 입구 흔적인지 아니면 쓸리면서 생긴 공간인지는 불분명하다. 차강 텐징 성터 근처에서는 건축자재, 갖가지 토기 파편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성벽 안의 구조물들을 서로 긴 토대로 연결한 형태와 쌍성벽 구조는 발해 성 구조를 연상케 한다.

### 3\_ 엠겐팅 헤렘

이 성터는 ‘볼강 아이막’ ‘부렉항가이 솜’ ‘하르 보흐’ 강 기슭에 위치한다. 이 성은 처음 Kh. 페를레가 발견하였으며 그는 평면도를 제작하였다.<sup>6)</sup>

이 성곽은 북위 48°05'146", 동경 106°08'931" 지점, 해발 973m에 위치한다(그림 12). 성곽은 대체로 네모난 구조이다. 성곽의 유구는 현재 약 1.2~0.9m 높이이다. 성의 북쪽과 남쪽 두 곳이 3×3.5m로 트여 있는데, 문이었던 것 같다. 성곽의 동벽과 서벽은 각각 390m, 북벽과 남벽은 각각 370m이다. 성벽 너비는 기단이 약 10m이다.

몽골-러시아 공동조사단은 2009년도에 엠겐팅 헤렘에 대한 소규모 시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sup>7)</sup> 본 조사는 이 성터의 문화층과 거주자, 해당연대 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성터 서북벽 바깥쪽에 있는 뚜렷하지 않은 도랑으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성벽을 넘도록 너비 2m, 길이 25m의 트렌치를 파서 발굴을 실시하였다. 트렌치

6) X. Пэрлээ, 1961,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он*(Kh. Perlee, 『몽골인민공화국의 고대 및 중세 성진의 略史』), Ulaanbaatar, 61쪽.

7) 본 조사단에는 몽골 측에서 오치르(A. Ochir) 교수, 에르텐볼드(L. Erdenebold) 박사,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의 이블리예프(A. L. Ivliyev) 교수, 크라딘(N. N. Kradin) 교수, 케메레와(Kemerova) 대학교와 슈틴(S. A. Vasyutin) 교수가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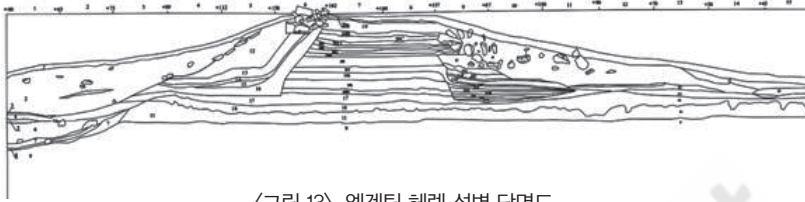


〈그림 12〉 엠겐팅 헤렘 평면도

의 성벽 밖 길이는 7m, 성안 길이는 18m로 하였다. 트렌치의 오른쪽 부분인 1×25m를 A, 왼쪽 부분인 1×25m를 B로 각각 부르기 하였다. 발굴층 깊이는 평균 10~15cm로 하였다.

성안에는 어떠한 건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성터 문화층 깊이는 최소 50~60cm, 최대 1.5m였다. 실험 발굴 과정에서 저장고 5곳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저장고에 곡물과 음식을 저장하였으며, 후에 쓰레기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곡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성벽을 잘라본 단면도에서 보면 이 성을 축조할 때 먼저 지표에서 높이 60~70cm의 진흙을 다진 후에 그 위에는 두 줄의 벽을 평행을 이루어 돌로 쌓고, 두 줄의 돌벽 사이에는 황토와 흙을 잘 다지는 공법으로 성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두 줄의 돌벽 너비는 각각 60cm로 서로 200cm 간격을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벽 너비는 기단이 약 3.2m 정도이다. 성 돌벽 높이는 약 0.9~1m이며, 성곽의 유구는 현재 약 2.2m 높이이다. 돌벽 밑에 있는 기단을 만들 때 9~10개의 층으로 흙을 다져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엠겐팅 헤렘 성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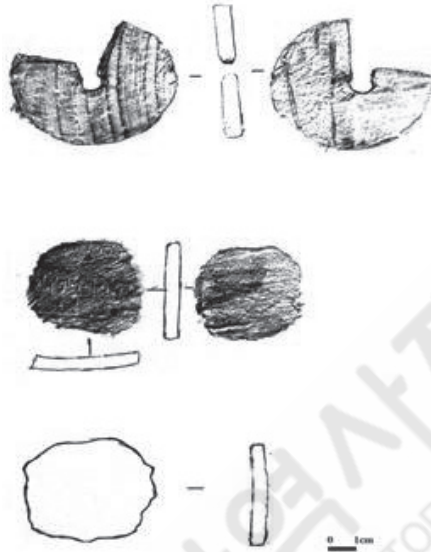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토기편을 보면, 색깔은 남색이고 배 부분이 주로 튀어나온 것으로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어깨와 목, 그리고 배에 물방울 모양이 그려져 있다. 출토 토기들은 액체와 음식을 담는 것으로 모두 다 거란시대에 해당된다. 또한 세발[三足] 솥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목과 어깨 둘레에 평행선의 띠가 있고, 그 사이에는 물결 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 외에 물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문양 각도가 예각으로 되어 있는 토기 구연부도 발견되었다. 토기 밑바닥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다 둥글고 평평하며, 물레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직경은 11~18cm이다.

격자문이 묘사된 토기편 1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크기는 4.5×2.0×0.5cm이다. 토기 표면에는 격자문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내면에는 아무 문양도 없고 매끈하다.

금번 발굴에서 반원형이면서 서로 막는 듯이 묘사된 위구르식으로 보이는 문양이 그려진, 크기 4.5×4.2×0.5cm의 토기편 2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위구르의 토기제작 기술이 거란시대에도 전해져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일 것이다.

또한 몽골 내 거란시대 성터에서 발견되는 장기알(놀이말)의 말들이 엠겐팅 헤렘에서도 출토되었다. 이것들은 토기 파편들을 둥근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것으로 한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과 구멍이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직경은 5~7cm이다. 장기알(놀이말) 일부에는 거란시대 물방울 모양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14).

엠겐팅 헤렘은 축조법과 구조에서 이전에 몽골 땅에서 발견된 거란시대 다른 성과는 다르고 특이하다.



〈그림 14〉 엠겐팅 헤렘 출토 장기알(놀이말)

두 줄로 쌓은 돌벽 사이에 흙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축조된 성터는 러시아연방 연해주, 극동, 중국 동북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그러한 성터는 발해유적이란 사실이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sup>8)</sup>

발굴조사 결과 엠겐팅 헤렘은 발해식 도시건설 방법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성터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성 안쪽에 어떠한 건물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문화층이 얇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성안에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성에는 게르(몽골 전통가옥)나 텐트를 쳐서 소수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엠겐팅 헤렘은 거란(요나라) 말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성은 발해식 건축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축조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의 성터는 몽골국에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8) Н. Г. Аргемьева, 1998, *Демонстрация жилищн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XII~XII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 [연해주 지역 여진족 주거 건축(12~13세기), Vladivostok, Dal'press], 84~94쪽.



〈그림 15〉 엠겐팅 헤렘 예비조사 발굴에서 출토된 토기 다리 조각

### Ⅲ. 맺음말

고대에 동해와 발해만 서안, 동아시아에 거주했던 발해인의 고고 유적지와 유물이 몽골 땅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이유로 발해 고고 및 건축 유적이 몽골 땅에 전래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 이것은 사실 요나라 군사·정치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12세기 초에 요나라는 현 몽골 국토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하여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거란 병사들과 함께 당시에 거란 지배를 받았던 발해와 여진족들이 몽골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遼史』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鎮州, 建安軍, 節度. 本古可敦城. 統和二十二年皇太妃秦置. 選諸部族二萬餘騎充屯軍, 專捍禦室韋, 羽厥等國. 凡有征討, 不得抽移. 渤海, 女直. 漢人配流之家七百餘戶, 分居鎮, 防, 維三州.<sup>9)</sup>

위 기록에서 언급된 진주는 현재의 친통고이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요나라 지배층은 10세기 말부터 12세기 초까지 오늘날 몽골 국토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채들을 축조하여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킬 때 다수의 발해, 여진, 한족 家戶를 몽골 땅에 이주시켰다. 그들 가운데 또한 위구르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 군대를 따라 몽골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민족 가호들은 식량으로 쓸 곡물과 야채를 재배하거나, 무기를 제작하거나, 성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몽골 땅에 와서 거주했던 발해인은 자신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토기를 제작하거나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발해 문화의 특징을 갖는 고고유적과 유물이 툽 강 유역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몽골 땅에 살았던 발해인은 군인보다는 대부분이 수공업업자나 농민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했던 물품, 그리고 수공업품과 농법이 당시 현지 몽골인에게 영향을 주어, 몽골인들도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몽골 땅에서 발견된 발해 유적과 유물은 몽골인과 동아시아의 거주민, 그 중에서 한국인의 조상들과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예상했던 시기보다 몇 세기나 앞당길 수 있게 해준다. 한편으로는 고비사막 이북에서 최초로 발견된 발해 유적과 유물은 발해 고고유적 및 유물 분포의 서쪽 경계를 항가이(Khangai)산맥까지 넓혀주는 것으로서 새로운 학술 성과이기도 하다. 몽골 땅에서 발견된 상기 유적과 유물은 고대 몽골인과 한국인들의 교류를 고고학적 측면에서 추적해볼 새로운 방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툽 강 유역에서 확인된 20여 곳의 거란시대 성터 가운데 다만 세 곳에 대한

9) 脫脫撰, 1993, 『遼史』 第二册, 中華書局, 450~451쪽.

소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해볼 때 그중 두 곳에서 발해식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앞에서 서술하였다. 톨 강 유역 이외에 헤를렝 강 유역의 몇 곳에서도 거란 성채 유적이 확인되었지만 아직도 그들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 몽골 땅에 있는 거란시대 성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발해와 여진 문화 자취가 더 많이 발견되어 고대 몽골인과 동아시아 거주민의 교류가 더욱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시한 일차적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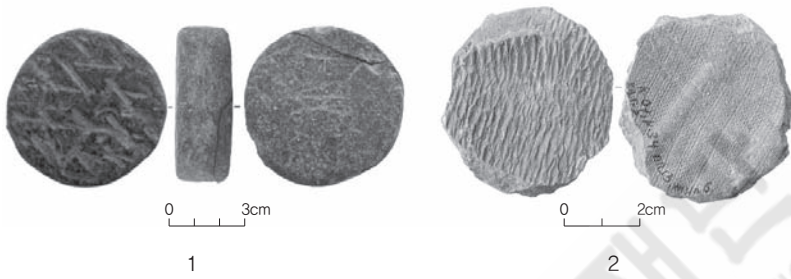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 민족의 선조인 발해인과 몽골인의 고대 문화·경제 교류를 밝히는 것은 두 민족 간의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한 가지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번역: T. 체렌도르지(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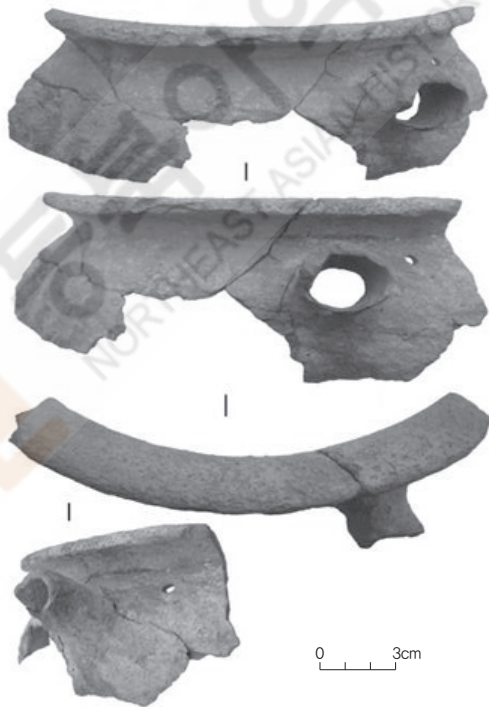
〈첨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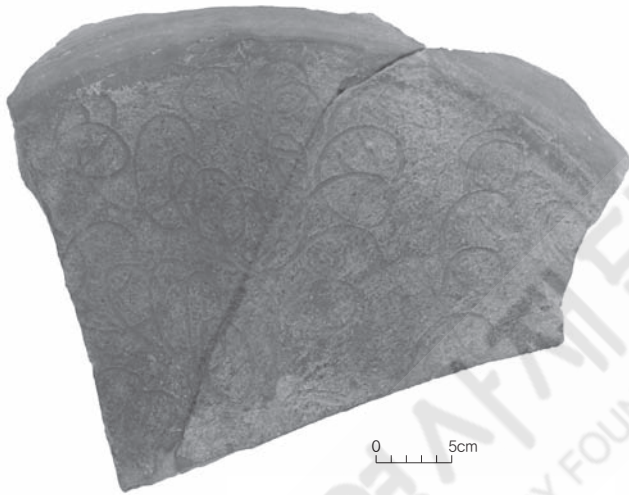
〈사진 1〉 수평식 토기 손잡이 파편 (1. 친통고이 성터, 2.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사진 2〉 점토로 만든 장기알(놀이말) (1. 친톨고이 성터, 2.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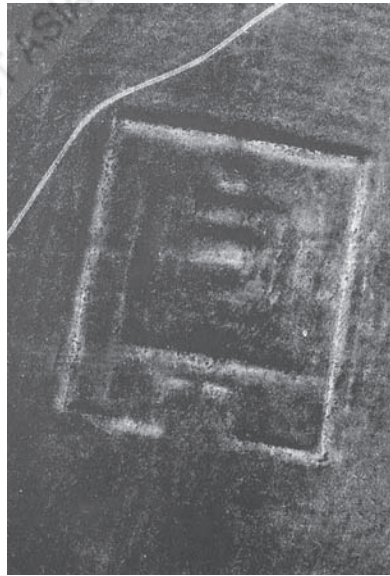
〈사진 3〉 친톨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주둥이가 달린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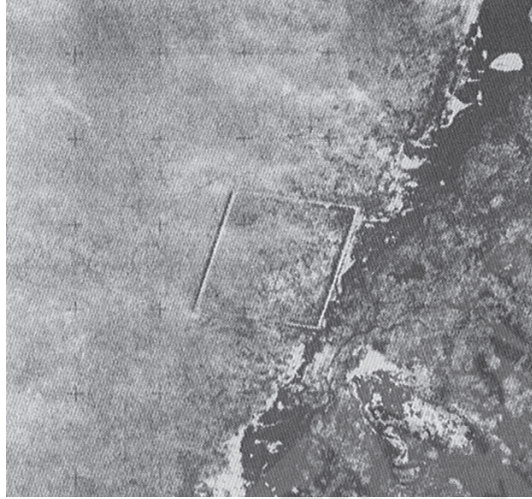
〈사진 4〉 친돌고이 성터에서 발견된 문양이 그려진 토기편



〈사진 5〉 친돌고이 성터 항공사진



〈사진 6〉 차강 덴징 성터 항공사진



〈사진 7〉 엠겐딩 헤림 성터 항공사진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Артемьева, Н. Г., 1998, *Домо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журчженей Приморья(XII-XII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연해주 지역 여진족 주거 건축(12~13세기), Vladivostok, Dal'press].
- Kradin, N. N., Ivliev, A. L., Ochir, A., Danilov, S. V., Erdenebold, L., 2008, Bohai population in Mongolian exile, *Cultural exchange in East-sea and the Primorye region of Russia-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Busan.
- Очир, А., Энхтөр, А., Эрдэнэболд, Л., 2005, *Хар бух балгас ба Туул голын сав дахь хятаны хот, суурингууд*, УБ. (오치르, А., 에르텐볼드, L., 영호투르, А., 『하르보흐 성터와 톨 강 유역 거란시대 성터』), Ulaanbaatar.
- Очир, А., Крадин, Н. Н. ба бусад, 2008,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судалгаа*, УБ. (오치르, А., 크라딘, N. N. 등 저, 『친톨고이 성터 조사』), Ulaanbaatar.
-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оссии в 2007 г.*, Сеул, 2007(『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2007).
- Пэрлээ, Х., 1961,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 он*, УБ. (Perlee, Kh., 『몽골인민공화국의 고대 및 중세 성진의 略史』, Ulaanbaatar).
- 오치르, А., 다닐로프, S. V., 에르텐볼드, L., 「몽골의 거란시대 성진 연구」, 『시대의 프리즘을 통해 본 러시아와 몽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Ulan-Ude.
- 오치르, А., 에르텐볼드, L. 등 편, 2008, 『‘친톨고이’ 몽골-러시아 공동학술조사 프로젝트 몽골측 보고서(2004~2007)』, Ulaanbaatar.(몽골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보관)
- 오치르, А., 에르텐볼드, L., 영호투르, А., 2005, 「몽골국내 거란시대 성진 및 시설」, 『중세 동북아시아 인물 및 물품과 기술 다이내믹스』,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Vladivostok.
- 크라딘, N. N., 이블리에프, A. L., 오치르, А., 에르텐볼드, L., 2005, 「2004년 친톨고이 성터의 개략적인 연구 성과」, *Sociogenesis in North Asia* 제1부, Irkutsk.
- 脱脱撰, 1993, 『遼史』第二册, 中華書局.

**[ABSTRACT]**

## Archaeological Sites of Balhae in Mongolia

A. Ochir

L. Erdenebold

Since 2004 Mongolian–Russian joint expedition have been carried out archaeological excavation of the some Qidan(契丹) settlements, fortresses in the area of Bulgan and Tuv aimag in Mongolia. During the expedition in Tuul river valley from ruins of the 10–11 century settlement sites were found some archaeological finds associated with Balhae(渤海) culture. Practically and scientifically very interesting that found Balhae period archaeological discovery on the territory of Mongolia. As we know Balhae settled in present–day Russia’s Far East, Primorskii territory and eastern China.

In this article we concluded materials, artifacts from Chin tolgoi, Tsagaan denjiin balgas and Emgentiin herem,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Balhae culture.

We have a question: When and why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settled Balhae people. This is due to military policy of Qidan. From 10th to the 12th century into the territory of present–day Mongolia housed many Qidan soldiers, established their own military district and formed own policy. In “History of the Liao dynasty(遼)” mention, that on the territory of Mongolia however Qidan settled Balhae and Zurchid people. In Tuul river valley until nowadays preserved cultural monuments with a special Balhae ornament and decoration. Balhae people, who migrated

to the territory of Qidan and build houses, palaces, produced pottery and etc., on their own technology. Most Balhae people were craftsmen, blacksmiths and of course peasants. And their knowledge of agriculture and craft is bearing on the Mongols.

Cultural relation between Balhae or Korean and Mongolian people have not been clarified. Balhae archaeological finds from the territory of Mongolia confirmed that Mongolia had a significantly long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 wi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astern boundary of culture Balhae becomes Gobi and the Khangai mountains, thus limit the spread of culture Balhae much wider.

These sites confirm that the archaeological side, you can update the date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ancient Mongolia and Korea.

#### keywords

Qidan, Balhae, Zurchid, Chin tolgoi, Tsagaan denjiin balgas, Emgentiin herem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癯,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1호(2011. 3)

초판 1쇄 인쇄 2011년 3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3월 31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